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 촌 진 흥 청 소관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전 문 위 원 임 재 금

목 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1

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총괄 ····· 1

1.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 1

2. 세입·세출 개요 ····· 3

가. 세 입 ····· 3

나. 세 출 ····· 4

3. 기금 개요 ····· 6

가. 수 입 ····· 6

나. 지 출 ····· 7

4. 예비비 지출 ····· 9

5. 재무회계 ····· 10

가. 재정상태 ····· 10

나. 재정운영 ····· 11

다. 순자산변동 ····· 12

Ⅱ. 회계·기금별 검토의견 ····· 14

1. 일반회계 ····· 14

가. 개 요 ····· 14

1) 세입결산 ····· 14

2) 세출결산 ····· 16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 18

1) 공통 :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를 통한 우량농지 조성·보전 필요 ····· 18

2) 공통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원회 ····· 23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원회 정비 방안 및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26

(2) 위원회 민간위원 수당에 대한 원천징수 업무 시 「소득세법」 준수 필요 ····· 30

3) 공통 : 장애인 고용 촉진 제도 관련 ····· 33

(1)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 노력 필요 ····· 36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비율 준수 필요 ····· 41

4) 공통 : 성인지 예결산의 내실화 필요 ····· 43

5) 국제농업협력(ODA) :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53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60

가. 개 요 ····· 60

1) 세입결산 ····· 60

2) 세출결산 ····· 63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 65

1) 재해대책비 : 공공시설 피해 복구 공사의 조속한 착수 필요 …· 65
2)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의 수요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69
3) 농촌고용인력지원 :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리·감독 철저 필요 …… 73
4)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 78
(1) 사업다각화 사업의 집행 관리 철저 필요 …… 79
(2) 내역변경 시 변경절차 준수 필요 …… 84
5) 스마트팜 조성 사업 : 예산집행의 비효율성 해소 필요 …… 86
6)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 : 곤충·양잠산업거점단지 조성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시 사업비 추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등 …… 93
7) 전통발효식품육성 : 김치원료공급단지구축 사업의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 98
8)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 기업 분양률·준공률 제고 및 연구시설 확보방안 마련 필요 …… 104
9) 농업관측 : 출연금 인건비의 연례적 이월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110
10) 농식품 소비정책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 : 중소유통경로에 대한 사업비 집행 비중 제고 필요 …… 116
11)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 : 보조금 교부 및 재이월 등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고, 사업집행관리 및 성과평가를 강화할 것 …… 122
(1) 보조금 교부, 재이월 등과 관련한 지침 준수 및 집행관리 강화 필요 …… 123
(2) 성과지표 개선 필요 …… 129
12) 농업유산발굴 및 보전관리지원 사업 : 농업유산발굴 및 보전관리지원 사업의 신청률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130

13)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 일자리연계 사업에 맞춘 공정관리 및 유사 사업과의 차별화 등 필요 ····· 136
(1) 일자리연계 사업의 일정에 맞춘 공정관리 필요 ····· 137
(2) 지방자치단체 이양사업 등과의 차별화 필요 ····· 141
(3) 성과지표 개선 필요 ····· 142
14)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 : LMO 종자 불법수입 및 유통방지 대책의 신속한 추진 필요 ····· 144
15) 과수 무병묘목 생산·공급지원 : 과수 작물별 공급 불균형 해소 필요 ····· 154
16)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 : 온실가스 감축실적 정부구매방식(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사업내용 변경 방안 검토 필요 ····· 160
17)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성과목표 및 성과측정 방식 개선 필요 ···· 166
18)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의 효과성 검증 방안 마련 필요 ····· 174
19) 가축방역대응지원 : 공중방역수의사 등 가축방역 인력 충원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179
20) 동물복지축산인증제 활성화 : 인센티브 확대 방안 검토 및 제도의 실효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필요 ··· 186

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가. 개 요 ····· 194
1) 세입결산 ····· 194
2) 세출결산 ····· 195

4.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가. 개 요 ····· 196

1) 세입결산 ····· 196
2) 세출결산 ····· 196

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97

가. 개 요 ····· 197
1) 세입결산 ····· 197
2) 세출결산 ····· 198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 199
1) 일반농산어촌개발(자율) : 신규사업의 필요성·추진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계속사업 사업진행 상황 모니터링 강화 필요 ····· 199
2) 반려동물인프라구축(자율) : 사업관리 강화를 통한 실집행 개선과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대응책 마련 필요 ····· 206

6. 양곡관리특별회계 ····· 211

가. 개 요 ····· 211
1) 세입결산 ····· 211
2) 세출결산 ····· 213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 215
1) 수입양곡대 : 쌀 TRQ 물량 수입과정에서의 문제점 개선 필요 ·· 215
2) 식량작물 소비기반구축 : 행사 추진 방식의 적절성 등을 고려한 집행 관리 필요 ····· 223

7.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228

가. 개 요 ····· 228
1) 수입결산 ····· 228

2) 지출결산 ····· 231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 233
1) 비축지원 : 저장품매입비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집행 필요 ·· 233
2) 농산물온라인거래활성화 :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237
8. 농지관리기금 ····· 242
가. 개 요 ····· 242
1) 수입결산 ····· 242
2) 지출결산 ····· 246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 248
1) 맞춤형농지지원(융자) : 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 사업의 청년농업인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등 필요 ····· 248
2) 농지이용관리지원 : 조사원 인력 수급 원활화 노력 등 필요 ··· 252
9.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 255
가. 개 요 ····· 255
1) 수입결산 ····· 255
2) 지출결산 ····· 257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 258
1) 공익기능증진직불 : 전략작물직불제의 미비점 보완 필요 ··· 258
2) 친환경농업 관련 사업 ····· 264
(1) 친환경농업직불 제도개선 필요 ····· 266
(2) 친환경농업 관련 법령 정비 필요 ····· 275
10.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281
가. 개 요 ····· 281

1) 수입결산 ····· 281
2) 지출결산 ····· 285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 286
1)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실제 집행소요를 고려한 예산 편성 및 국고보조금 정산 철저 필요 ····· 286
(1) 실제 집행소요를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 288
(2) 국고보조금 정산 철저 필요 ····· 292

11.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 295

가. 개 요 ····· 295
1) 수입결산 ····· 295
2) 지출결산 ····· 298

12. 축산발전기금 ····· 299

가. 개 요 ····· 299
1) 수입결산 ····· 299
2) 지출결산 ····· 302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 304
1) 축산발전기금 소관 사업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의 수납관리 철저 ····· 304
2) 말산업육성지원 사업: 보조금 관련 법령 준수 필요 및 예산 조정을 통하여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용역 사업 집행 부적절 등 ····· 310
(1) '말산업역량강화지원 사업'의 보조금 관련 법령 준수 필요 … 311
(2) 연도 중 예산 조정을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316
(3) 「국가재정법」 등 이월원칙 준수 필요 ····· 319

(4) 연구용역 계약 지연에 따른 연례적인 이월 방지 필요 ···· 323
3) 공동자원화시설 사업: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므로 사업관리 철저 및 보조금 관련 법령 준수 필요 ····· 326

4) 가축위생방역지원 : 가축방역사업 효율 향상을 위한 드론 방역 사업의 체계적 운영 필요 ····· 333

13. 양곡증권정리기금 ····· 342

가. 개 요 ····· 342
1) 수입결산 ····· 342
2) 지출결산 ····· 344

[농촌진흥청 소관] ····· 345

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총괄 ····· 345

1.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 345

2. 세입·세출 개요 ····· 347

가. 세 입 ····· 347
나. 세 출 ····· 348

3. 재무회계 ····· 349

가. 재정상태 ····· 349
나. 재정운영 ····· 351
다. 순자산변동 ····· 353

Ⅱ. 회계·기금별 검토의견 ····· 354

1. 일반회계 ····· 354

가. 개 요 ····· 354

1) 세입결산 ····· 354

2) 세출결산 ····· 356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 358

1) 공통 : 낙찰차액을 이용한 계약 체결 문제 주의 ····· 358

2) 치유농업연구소기반구축 : 철저한 사업 공정 관리 필요 ··· 363

3) 축산시험연구 : 시험연구비의 목적외 사용 지양 필요 ····· 372

4) 신기술보급사업 : 식량자급률 향상 모델 기반조성 사업 일부 부실 추진 문제 ····· 377

5)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 : 농업용 로봇 실증지원 사업의 전반적인 개선 필요 ····· 386

6)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 행정절차 이행 기간 단축 및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 필요 ····· 395

7)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 :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적정예산 확보 및 농업기상재해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사업 성과 제고 필요 ····· 402

(1)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적정 예산 확보를 통한 연례적인 대규모 이·전용 지양 ····· 403

(2) 광역단위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 성과 제고 필요 ····· 412

8) 농업전문인력양성 : 구축된 협업기반의 다양한 활용방안 강구 ····· 419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426

가. 개 요 ····· 426

1) 세입결산 ····· 426
2) 세출결산 ····· 427

3.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428

가. 개 요 ····· 428
1) 세입결산 ····· 428
2) 세출결산 ····· 428

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429

가. 개 요 ····· 429
1) 세입결산 ····· 429
2) 세출결산 ····· 430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총괄

1.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 2023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일반회계 등 6개 회계의 세입 예산액 및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7개 기금의 수입 계획액은 27조 6,982억원이며, 28조 8,740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27조 8,108억원이 수납되고, 미수납액 1조 633억원이 발생하였음.

【 2023회계연도 세입(수입) 결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수입계획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대비 수납증감 (B-A)
예 산	15,985,371	16,710,126	16,687,746	-	22,377	702,375
기 금	11,712,820	12,163,899	11,123,012	-	1,040,887	△589,808
총 계	27,698,191	28,874,025	27,810,758	0	1,063,264	112,567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세출예산(지출계획) 규모는 총계 기준 32조 4,126억원이며, 사업 집행과정에서 전년도 이월 등에 따른 예산(지출)현액은 33조 5,344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31조 9,571억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6,815억원과 불용액 1조 1,963억원이 각각 발생하였음.

【 2023회계연도 세출(지출) 결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출 예산액 (지출 계획액)	예산(지출)결정 후 증감액				예 산 (지출) 현 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이·전용	기타 증감				
예산	20,699,787	932,558	189,088	209,704	21,411	21,821,437	20,834,119	672,694	314,620
기금	11,712,820	178	-	-	-	11,712,997	11,123,016	8,797	881,634
총계	32,412,607	932,736	189,088	209,704	21,411	33,534,434	31,957,135	681,491	1,196,254
총지출	17,357,345	435,051	94,544	209,704	21,411	17,950,265	17,032,647	500,452	417,163

* 총지출: 총계-내부거래(회계간・회계기금간・회계내계정간 거래)-여유자금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 세입·세출 개요

가. 세 입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일반회계 등 6개 회계의 2023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15조 9,854억원이고, 16조 7,101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16조 6,877억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224억원이 발생하였음.

【 2023회계연도 세입 결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회계명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감 (C-A)
일반회계	21,170	13,483	7,509	-	5,971	△13,661
농특회계[1]	13,582,092	14,257,752	14,242,220	-	15,532	660,128
에특회계[2]	42,929	5,516	5,504	-	12	△37,425
혁특회계[3]	-	236	235	-	-	235
지특회계[4]	14,332	4,032	3,243	-	789	△11,089
양특회계[5]	2,324,848	2,429,107	2,429,035	-	73	104,187
계	15,985,371	16,710,126	16,687,746	-	22,377	702,375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농특회계의 농어촌특별세가 당초 예산액보다 4,251억 9,300만원 적게 수납되었으나, 전년도 세계잉여금 증가 등으로 전체 수납

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3)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 양곡관리특별회계

액이 7,023억 7,500만원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23억 7,700만원으로, 발생 사유는 체납자 재력 부족 등에 따른 보조금 반납 체납 및 납기 미도래 등임.

나. 세 출

□ 2023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계 기준 20조 6,998억원이며, 집행과정에서 전년도 이월액 9,326억원, 예비비 1,891억원 등 1조 1,217억원이 증가하여 예산현액은 21조 8,214억원임.

【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회계명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이·전용	기타 증감				
일반회계	5,537,241	10,957	94,544	3,365 △3,365	2,970 △2,970	5,642,746	5,493,925	9,716	139,101
농특회계	12,096,305	813,916	94,544	73,264 △73,264	7,077 △7,077	13,004,765	12,268,558	561,430	174,777
에특회계	15,150	-	-	-	-	15,150	15,150	-	-
혁특회계	-	-	-	-	-	-	-	-	-
지특회계	726,243	107,685	-	-	-	833,928	731,728	101,493	707
양특회계	2,324,848	-	-	133,075 △133,075	11,364 △11,364	2,324,848	2,324,758	55	35
총계	20,699,787	932,558	189,088	209,704 △209,704	21,411 △21,411	21,821,437	20,834,119	672,694	314,620
총지출	9,214,238	434,873	94,544	209,704 △209,704	21,411 △21,411	9,743,659	9,210,120	491,655	41,880
내부거래	11,485,549	497,685	94,544	-	-	12,077,778	11,623,999	181,039	272,740

* 총계: 총지출 + 내부거래(회계간·회계기금간·회계내계정간 거래액)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이·전용액은 정부양곡관리비, 살처분보상금, 가축방역대응지원 등으로 기정예산에서 충당하였음.

□ 예산현액 21조 8,214억원 중 20조 8,341억원을 지출하고, 농특회계 자금부족, 공사시기 조정 및 계약기간 미도래 등으로 6,727억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146억원은 불용처리하였음.

3. 기금 개요

가. 수 입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7개 기금의 2023 회계연도 총 수입계획액은 11조 7,128억원이며, 12조 1,639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11조 1,230억원을 수납하였고, 농지보전부담금(농지기금) 납부기한 미도래 등으로 1조 409억원은 미수납하였음.

【 2023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금 수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기 금 별	수입계획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계획대비 수납증감 (B-A)
	당초	변경 (A)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327,368	2,327,368	2,188,836	2,188,578	258	-	△138,790
농지관리기금	3,721,984	3,721,984	4,179,324	3,153,289	1,026,035	-	△568,695
농업·농촌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기금	2,857,596	2,857,596	2,795,394	2,781,691	13,704	-	△75,905
양곡증권정리기금	1,141,884	1,141,884	1,056,262	1,056,262	-	-	△85,622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510,734	510,734	426,199	426,199	-	-	△84,535
축산발전기금	1,062,803	1,062,803	1,117,734	1,116,843	891	-	54,040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90,451	90,451	400,150	400,150	-	-	309,699
합 계	11,712,820	11,712,820	12,163,899	11,123,012	1,040,888	-	△589,808
사업운용수입	5,342,263	5,342,263	5,573,122	4,532,235	1,040,888	-	△810,028
정부내부수입	5,802,363	5,802,363	5,506,060	5,506,060	-	-	△296,303
여유자금회수	568,194	568,194	1,084,717	1,084,717	-	-	516,523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수납액은 변경 계획보다 5,898억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농지관리기금의 농지보전부담금 감소 등이 주요인임.

나. 지 출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7개 기금의 총계 기준 지출계획액(여유자금운용 제외)은 10조 9,223억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억원을 포함한 지출계획현액은 10조 9,225억원인데, 이 중 10조 321억원을 지출하고 88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816억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 2023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금 지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기 금 별	지출계획		전년도 이월액	지출 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 초	변 경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327,368	2,327,368	-	2,327,368	2,188,578	5,285	45,393
농지관리기금	3,721,984	3,721,984	-	3,721,984	3,153,289	500	404,057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2,857,596	2,857,596	178	2,857,774	2,781,691	36	219,525
양곡증권정리기금	1,141,884	1,141,884	-	1,141,884	1,056,262	-	103,589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510,734	510,734	-	510,734	426,199	-	26,288
축산발전기금	1,062,803	1,062,803	-	1,062,803	1,116,843	2,976	12,902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90,451	90,451	-	90,451	400,150	-	69,881
총 계	11,712,820	11,712,820	178	11,712,998	11,123,012	8,797	881,635
일 반 지 출	8,143,107	8,206,428	178	8,206,606	7,822,527	8,797	375,283
정부 내부지출	2,715,882	2,715,882	-	2,715,882	2,209,531	-	506,352
합 계	10,858,989	10,922,310	178	10,922,488	10,032,058	8,797	881,635
여유자금 운용	853,831	790,510	-	790,510	1,090,954	-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이월은 농안기금 식품외식종합자금 사업 중 일부 공사지연 등으로 88억원이 발생하였고,

□ 불용은 농지기금 공자기금예탁금 4,000억원,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집행잔액 2,195억원, 양곡증권정리기금 공자기금예수금 원금상환 1,000억원 등에서 8,816억원 발생하였음.

4. 예비비 지출

□ 2023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비비 배정액은 농어촌 구조개선특별회계 945억 4,400만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음.

지출내역을 보면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위하여 225억원, 미승인 LMO 피해지원 38억원, 긴급 가축방역지원 278억원, 살처분보상금 404억원을 배정받아 전액 지출하였음.

【 2023회계연도 예비비 결산 】

(단위 : 백만원)

집 행 내 역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농특회계	농축산물 할인지원	22,500	22,500	-	-
농특회계	미승인 LMO 피해지원	3,795	3,795	-	-
농특회계	긴급 가축방역지원	27,800	27,800	-	-
농특회계	살처분보상금	40,449	40,449	-	-
합 계		**94,544**	**94,544**	**-**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5. 재무회계

가. 재정상태

【 2023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상태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2년	증 감	
			금 액	비 율
자 산	78,877,842	79,383,715	(505,873)	(0.6 %)
부 채	9,879,552	9,385,713	493,839	5.3 %
순자산	68,998,290	69,998,002	(999,712)	(1.4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2023년말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산은 78조 8,778억원으로 전기 대비 5,059억원 감소(△0.6%)하였는데, 단기금융상품, 미수채권 등의 감소에 따른 유동자산 감소(△4,495억원) 등이 주요 요인임.

□ 2023년말 현재 부채는 9조 8,796억원으로 전기 대비 4,938억원 증가(5.3%)하였는데, 격리곡 및 이월예산 미지급금 등 기타유동부채 증가(1조 2,562억원)가 주요 요인임.

□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023년 말 현재 68조 9,98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97억원 감소(△1.4%)하였음.

나. 재정운영

【 2023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운영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2년	증 감	
			금 액	비 율
Ⅰ. 프로그램순원가	12,106,814	10,094,768	2,012,046	19.9 %
Ⅱ. 관리운영비	412,547	399,854	12,693	3.2 %
Ⅲ. 비배분비용	687,226	1,216,391	(529,165)	(43.5 %)
Ⅳ. 비배분수익	167,778	295,749	(127,971)	(43.3 %)
Ⅴ. 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13,038,808	11,415,265	1,623,543	14.2 %
Ⅵ. 비교환수익 등	1,099,875	1,114,704	(14,829)	(1.3 %)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11,938,933	10,300,561	1,638,372	15.9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2023년 중 프로그램 순원가는 프로그램 총원가 14조 925억원에서 프로그램 수익 1조 9,856억원을 차감한 12조 1,068억원으로 전기 대비 2조 120억원 증가(19.9%)하였음.

□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2,485억원과 그 밖의 경비 1,640억원으로 전기 대비 127억원(3.2%) 증가하였음.

□ 비배분비용은 평가손실 3,010억원, 이자비용 2,357억원 등 총 6,872억원이며,

□ 비배분 수익은 자산처분이익 176억원, 기타수익 498억원 등 총 1,678억원임.

□ 비교환수익은 1조 999억원으로 전년 대비 148억원 감소함.

□ 재정운영순원가는 13조 388억원이고 여기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차감한 최종 재정운영결과는 전기 대비 1조 6,384억원 증가(15.9%)한 11조 9,389억원임.

다. 순자산변동

【 2023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순자산변동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2년	증 감	
			금 액	비 율
Ⅰ.기초순자산	69,998,002	70,704,023	(706,021)	(1.0 %)
Ⅱ.재정운영결과	11,938,933	10,300,561	1,638,372	15.9 %
Ⅲ.재원의조달및이전	11,298,223	9,727,505	1,570,718	16.1 %
Ⅳ.조정항목	(359,001)	(132,965)	(226,036)	(170.0 %)
Ⅴ.기말순자산 (Ⅰ-Ⅱ+Ⅲ+Ⅳ)	68,998,290	69,998,002	(999,712)	(1.4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기초순자산은 전기말 순자산 대비 7,060억원 감소한 69조 9,980억원으로 인식하였으며, 2023회계연도 재정운영표의 재정운영결과는 11조 9,389억원임.

□ 재원의조달및이전은 11조 2,982억원으로 전기 대비 1조 5,707억원 증가하였고, 조정항목은 △3,590억원으로 전기 대비 2,260억원 감소하였음.

□ 기초순자산에서 재정운영결과를 차감하고 재원의조달및이전과 조정항목을 더한 기말순자산은 68조 9,983억원임.

2023년 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요약

연번	회계 구분	세부사업명	'23년 예산 (백만원)	제목	지적사항	국회 지적
1	공통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를 통한 우량농지 조성·보전 필요	농식품부는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를 통해 우량농지 조성·보전에 힘쓸 것	
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원회 정비 방안 및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농식품부 소관 위원회 중 일부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는바, 소관 위원회 정비 방안과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3				위원회 민간위원 수당 지급 시 「소득세법」 준수 필요	농식품부는 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면서 비과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잘못 원천징수하였는바, 향후 원천징수 업무 시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4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 노력 필요	농식품부는 장애인 고용 의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농협 등 소관 기관들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	
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준수 필요	농식품부는 예산 집행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농협 등 소관 기관들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	
6				성인지 예결산의 내실화 필요	농식품부는 성인지 대상 사업이 여성농업인들의 정책 수요에 부합하도록 개편하고,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에 대한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하는 한편, 성인지 대상 사업 선정 시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7	일반 회계	국제농업협력(ODA)	91,691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WFP 식량원조 사업의 부대비용 소요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바, 농식품부는 물류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	
8	농특 회계	재해대책비	200,000	공공시설 피해복구 공사의 조속한 착수 필요	농식품부는 공공시설의 피해 복구 공사의 착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	'22년 시정요구 (제도개선)
9		농업농촌 교육훈련지원	50,674 (1,340 컨설팅)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의 수요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의 컨설팅 효과를 적극 홍보하거나 자부담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사업 수요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0		농촌고용 인력지원	12,722 (4,220 기숙사 건립)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리·감독 철저 필요	농식품부는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단계별 장애요소를 고려하여 지자체의 사업 수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기숙사 건립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22년 시정요구 (주의)
11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27,233 (8,183 사업다각화)	사업다각화 사업의 집행관리 철저 필요	사업다각화 사업은 건축공사 인허가 지연, 지방비 확보 지연, 사업계획 변경, 계약체결 지연 등으로 인해 보조금 이월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보조금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검토하여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할 것	
12				내역변경 시 변경절차 준수 필요	농식품부는 내역변경 시 관련 절차를 준수할 것	
13		스마트팜 조성 사업	64,500 (임대형) 5,700 (노지형)	예산집행의 비효율성 해소 필요	스마트팜 조성 사업에서 과도한 이월액이 발생하였는바, 농식품부는 향후 이와 같은 비효율적 예산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1·'22년 시정요구 (제도개선) '20·'21년 시정요구 (제도개선)
14		곤충미생물 산업육성지원	13,822 (5,250 곤충산업거점)	곤충·양잠산업거점단지 조성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시 사업비 추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곤충·양잠산업거점단지 조성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시 사업비 추산 등에 대한 면밀한 선행 검토를 하고, 사업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번	회계 구분	세부사업명	'23년 예산 (백만원)	제목	지적사항	국회 지적
15	농특 회계	전통발효 식품육성	17,246 (5,800 김치원료 공급단지)	김치원료공급단지구축 사업의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김치원료공급단지구축 사업비가 이월되는 등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바, 농식품부는 실집행부진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	'22년 시정요구 (주의)
16		국가식품산업 클러스터	37,532	기업 분양률·준공률 제고 및 연구 시설 확보방안 마련 필요	농식품부는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의 분양률 및 입주율을 제고 및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마련할 것	
17		농업관측	16,931 (15,331 농업관측)	출연금 인건비의 연례적 이월 방지 대책 마련 필요	농업관측을 위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교부한 출연금의 인건비가 연례적으로 이월되고 있으므로, 농식품부는 예상되는 집행잔액 만큼 출연금을 배정하지 않는 등 연례적인 인건비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18		농식품 소비정책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	114,732 (108,000 할인지원)	중소유통경로에 대한 사업비 집행 비중 제고 필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대형유통경로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상대적으로 중소유통경로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농식품부는 향후 중소유통경로에 대한 사업비 집행 비중을 제고할 것	'20, 21년 결산 지적사항
19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	4,168	보조금 교부 및 재이월 등에 관한 지침준수 및 사업집행관리·성과평가 강화 필요	농식품부는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보조금 교부, 보조사업자의 재이월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내역사업을 포괄하고 성과를 명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성과지표로 개선할 것	
20		농업유산발굴 및 보전관리지원 사업	2,629	농업유산발굴 및 보전관리지원 사업의 신청률 및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 등 마련 필요	농식품부는 농업유산발굴 및 보전관리지원 사업 대상지를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신청률 및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21		청년농촌 보금자리조성 사업	4,800	일자리연계 사업에 맞춘 공정관리 및 유사사업과의 차별화 필요	농식품부는 수요자의 편의를 고려해 청년농촌보금자리 완공 일정을 일자리 연계사업과 맞출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방이양 사업 등 유사 사업과의 차별화를 도모하며, 신규사업 공정률·주민만족도 등을 포괄하는 성과지표를 마련할 것	
22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	16,180	LMO 종자 불법수입 및 유통방지 대책의 신속한 추진 필요	「LMO 종자 불법수입 및 유통방지 대책」을 발표한 지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대책의 추진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바, 농식품부는 관련 대책을 조속히 완료할 것	
23		과수무병 묘목 생산·공급지원	2,205	과수 작물별 공급 불균형 해소 필요	과수 작물별로 무병묘목 공급 실적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바, 농식품부는 무병묘목이 과수 작물별로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24		저탄소 농림축산식품 기반구축	5,821	온실가스 감축실적 정부구매 방식(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사업내용 변경 방안 검토 필요	농식품부는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 대신, 온실가스 감축실적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반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5		농촌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4,142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성과목표 및 성과측정 방식 개선 필요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한 분석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사업과정 및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 및 성과측정 방식을 개선할 것	'22년 결산 지적사항 (예결위)
26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12,328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의 효과성 검증 방안 마련 필요	농림축산식품부는 길고양이의 개체수 측정, 서식형태, 주변환경 등의 조사를 통하여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의 효과를 파악하고 지역별 중성화 사업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연번	회계 구분	세부사업명	'23년 예산 (백만원)	제목	지적사항	국회 지적
27	농특회계	가축방역대응 지원	99,463	공중방역수의사 등 가축방역 인력 충원 확대 방안 마련 필요	농식품부는 공중방역수의사, 가축방역관 등 가축방역 인력의 필요인원 확보를 위하여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가축방역 인력의 적극적인 충원을 위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수립할 것	
28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활성화	980	인센티브 확대 방안 검토 및 제도의 실효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필요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축산인증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증농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	'22년 시정요구 (예결위, 제도개선)
29	지특회계	일반농산어촌 개발(자율)	547,918	신규사업의 필요성·추진가능성에 대한 선행검토 및 계속사업 사업진행 상황 모니터링 강화 필요	농식품부는 일반농산어촌개발(자율) 신규사업의 필요성 및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속사업의 추진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30		반려동물인프라구축(자율)	7,041	사업관리 강화를 통한 실집행 개선과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대응책 마련 필요	농식품부는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개별 사업별로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구체적인 집행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추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	
31	양특회계	수입양곡대	555,096	쌀 TRQ 물량 수입과정에서의 문제점 개선 필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양곡대 사업 예산 편성 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유보한 예산액,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 추이 등을 고려하여, 적정 유보액 규모 및 각 연분 수입 쌀의 계약·도입 시기와 가격 예측 등의 체계적 쌀 수입 관리를 위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할 것	
32		식량작물 소비기반구축	6,812	행사 추진 방식의 적절성 등을 고려한 집행관리 필요	농림축산식품부는 타 사업에서 식량작물 소비기반구축 사업으로 20억원을 전용하여 행사를 추진하였는데, 사업의 중복성 및 사업 추진 방식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이와 같은 집행이 없도록 노력할 것	
33	농안기금	비축지원	686,750	저장품매입비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집행 필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비축지원 사업의 저장품매입비(430-02목) 예산을 통하여 납품단가 지원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동 비목 편성 목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바,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납품단가 지원 사업 추진 시 저장품매입비 예산을 통한 집행을 지양할 것	
34		농산물 온라인거래 활성화	4,862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운영 방식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충돌하는 부분이 존재하여 현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의 지정기간 내에 관련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5	농지기금	맞춤형농지 지원(융자)	857,726	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사업의 청년농업인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등 필요	농식품부는 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사업에 청년농업인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	
36		농지이용 관리지원	27,539	조사원 인력 수급 원활화 노력 등 필요	농식품부는 조사원의 업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고 사업의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	'21년 시정요구 (제도개선)

연번	회계 구분	세부사업명	'23년 예산 (백만원)	제목	지적사항	국회 지적
37	무역기금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48,525	실제 집행소요를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동 사업의 경우 집행 실적이 전무하여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으므로, 농식품부는 향후 사업 추진 시 실제 사전수요 조사 등을 철저히 할 것	
38				국고보조금 정산 철저 필요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기한 내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농식품부는 향후 반납절차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할 것	
39	축발기금	축산발전기금 소관사업	379,413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의 수납관리 철저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납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농식품부는 향후 보조금 정산관리를 철저히 할 것	
40		말산업육성 지원 사업	19,725	예산조정을 통하여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용역 사업 집행 부적절 등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보조금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부적절한 보조금 교부로 인하여 예산이 이월 또는 불용되는 등 동 사업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할 것	
41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마사회는 향후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본예산 편성 당시 반영하지 않고 연도 중 예산 조정을 통해 추진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42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금 교부 관련 예산교부시스템 전용 절차에 대한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예산집행 시 「국가재정법」 등의 이월 원칙을 준수할 것	
43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마사회는 향후 연구용역 수요를 사전에 발굴하여 계획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과도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44	축발기금	공동자원화 시설 사업	22,811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므로 사업관리 철저 필요	동 사업의 보조금 예산이 연례적으로 이월되고 있으므로, 농식품부는 향후 보조금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 후 보조금 교부를 실시할 것	'20년 결산 (상임위) '22년 결산 (예결위)
45		가축위생방역 지원	68,782	가축방역사업 효율 향상을 위한 드론 방역사업의 체계적 운영 필요	농식품부는 드론 방역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적 인력·장비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업무절차별로 필요한 방역이력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할 것	
46	직불기금	공익기능 증진직불	2,726,884	전략작물직불제 운영 미비점 등 보완 필요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이나 지적사항 등을 보완함으로써 전략작물직불 사업이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라는 목표 달성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것	
47		친환경농업 관련 사업	22,832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농업직불 제도개선 필요	농식품부는 친환경직불금의 지급상한(5ha)을 타 직불금 수준(30ha~50ha)으로 상향하고, 유기지속 직불금의 단가가 보다 완만히 조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면서 그 단가를 상향하는 한편, 친환경인증 쌀 생산 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 단가를 현실화할 것	
48				친환경농업 관련 법령 정비 필요	농식품부는 현행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련 사항 중 친환경농업인들의 권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Ⅱ. 회계·기금별 검토의견

1. 일반회계

가. 개 요

1) 세입결산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는 경상이전수입 169억원,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21억 8,700만원, 재산수입 8억 2,100만원 등 211억 7,000만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은 기타경상이전수입액 감소 등으로 76억 8,700만원이 감소한 134억 8,300만원임.

□ 징수결정액 134억 8,300만원 중 경상이전수입으로 38억 4,800만원,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으로 20억 2,900만원, 재산수입으로 8억 3,900만원 등 총 75억 900만원을 수납하였고, 체납자 재력부족 등으로 인해 59억 7,1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 경상이전수입의 경우 169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감소 등으로 예산액 대비 77.2% 감소한 38억 4,800만원을 수납하였음.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감 (C-A)
재산수입	**821**	**981**	**839**	**-**	**142**	**18**
토지대여료	508	457	318	-	138	△190
건물대여료	210	162	159	-	3	△51
기타관유물대여료	10	10	10	-	0	-
기타재산이자수입	93	352	352	-	1	259
경상이전수입	**16,900**	**9,615**	**3,848**	**-**	**5,766**	**△13,052**
벌금및과료	-	5	-	-	5	-
과태료	1,456	2,082	1,367	-	715	△89
징계부과금		2	2	-	0	2
과징금	619	4,794	740	-	4,054	121
변상금	672	76	3	-	73	△669
위약금	206	17	15	-	1	△191
가산금	25	392	28	-	363	3
기타경상이전수입	13,922	2,247	1,693	-	555	△12,229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187**	**2,091**	**2,029**	**-**	**61**	**△158**
면허료및수수료	2,000	1,930	1,868	-	61	△132
입학금 및 수업료	38	2	2	-	-	△36
실습수입	14	4	4	-	-	△10
기타잡수입	135	155	155	-	-	20
수입대체경비	**1,201**	**770**	**767**	**-**	**2**	**△434**
수업료	428	330	330	-	-	△98
기타잡수입	773	440	437	-	2	△336
관유물매각대	**61**	**26**	**26**	**-**	**-**	**△35**
기타고정자산매각대	50	-	-	-	-	△50
토지매각대	1	23	23	-	-	22
재고자산매각대	10	3	3	-	-	△7
합 계	**21,170**	**13,483**	**7,509**	**-**	**5,971**	**△13,661**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 세출결산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당초 세출 예산액은 5조 5,372억 4,1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09억 5,700만원과 예비비 945억 4,400만원 등으로 예산현액은 5조 6,427억 4,600만원으로 증가함.

□ 농업인력육성및창업지원 330억 1,500만원, 농업신산업육성 180억원, 농업생산기반정비 1,609억 800만원, 국제협력협상 1,166억 5,500만원, 농림축산검역검사 923억 9,700만원, 종자관리 164억 3,100만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교육운영 38억 7,900만원, 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 2,968억 1,200만원 등 총 5조 4,939억 2,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농림축산검역검사 78억 800만원, 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 6억 6,300만원 등 총 97억 1,6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내부거래 1,227억 4,000만원, 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 108억 2,000만원, 농림축산검역검사 22억 1,000만원, 농업인력육성및창업지원 20억 6,900만원 등 총 1,391억 100만원을 불용처리함.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이·전용	기타증감				
농업인력육성및창업지원	35,428	433	-	245 △246	591 △591	35,861	33,015	777	2,069
농업신산업육성	18,000	-	-	-	-	18,000	18,000	-	-
농업생산기반정비	160,908	-	-	-	-	160,908	160,908	-	-
국제협력협상	116,930	405	-	160 △160	41 41	117,335	116,655	468	212
농림축산검역검사	93,423	9,542	-	836 △1,386	624 △624	102,415	92,397	7,808	2,210
종자관리	17,144	-	-	164 △164	177 △177	17,144	16,431	-	713
농식품공무원교육원교육운영	4,216	-	-	100 △100	-	4,216	3,879	-	337
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	307,168	577	-	1,860 △1,310	1,537 △1,537	308,299	296,812	663	10,820
회계간거래(전출금)	4,623,122	-	94,544	-	-	4,717,666	4,594,926	-	122,740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160,902	-	-	-	-	160,902	160,902	-	-
합 계	**5,537,241**	**10,957**	**94,544**	**3,365 △3,365**	**2,970 △2,970**	**5,642,746**	**5,493,925**	**9,716**	**139,101**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공통 :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를 통한 우량농지 조성·보전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에 관한 기본방침 수립 시 농지 관리의 방향 및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등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를 통해 우량농지 조성·보전에 힘써야 할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량농지를 조성·보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및 농지관리기금 사업으로 친환경농자재지원,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융자), 맞춤형농지지원(융자) 등 8개 사업에 2023년 총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집행하였고,

2024년에는 6개 사업에 총 1조 7,9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등 매년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

【 2023회계연도 농지 조성·보전 관련 일반회계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친환경농자재지원 (토양개량제지원)	55,502	-	-	-	55,502		-	-
토양개량제사업(제주)	2,137	-	-	-	2,137		-	-
합 계	**57,639**				**57,639**		**-**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2023회계연도 농지 조성·보전 관련 농지관리기금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계획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불용액	
	당초	수정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융자)	290,700	290,700	290,700	290,700	-	233,700
맞춤형농지지원(융자)	857,726	844,915	844,915	844,915	-	1,241,260
농지관리기능강화구축	40,418	40,418	40,418	40,396	22	39,059
농지연금(융자)	228,237	263,060	263,060	263,060	-	242,309
농지이용관리지원	27,539	27,539	27,539	27,539	-	15,091
농지종합정보화	2,694	2,694	2,694	2,694	-	2,910
합 계	1,447,314	1,469,326	1,469,326	1,469,304	22	1,774,329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농지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면적도 줄어들고 있음.

【 농지면적 현황 】

(단위 : 천ha)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20	2021	2022	2023
전체 농지면적	1,889	1,824	1,715	1,679	1,565	1,546	1,528	1,512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면적	919	919	807	810	777	773	769	조사 중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면적이 감소하는 원인으로는 도시의 개발, 교통 인프라 등을 위한 농지 전용, 농가 인구의 감소[6] 등이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농업소득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농지를 유지하기보다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여짐.

6) 농가인구(명): 2010년 306만→ 2015년 257만→ 2020년 231만→ 2023년 209만

【 농업소득 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2008	2013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농업소득	9,654	10,035	12,920	10,261	11,820	12,961	9,485	11,143
농외소득	11,353	15,705	16,952	17,327	16,608	17,884	19,202	19,999
이전소득	5,289	5,844	9,891	11,230	14,263	14,809	15,245	17,188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이러한 농지면적 감소는 식량자급률 저하라는 식량안보 문제와 직결될 수 있는 사항임.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까지의 식량자급률 목표를 55.5%로 설정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농지는 150만ha라고 밝힌 바 있음[7].

그런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5년간 연평균 농지 감소율(1.2%)을 적용해 추산한 2027년 예상 농지면적은 144만 2,000ha로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므로, 농지면적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식량자급률 현황 】

(단위 :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51.9	53.2	53.5	54.1	21.9	50.3	49.3	49.3	44.4	49.3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7) 농림축산식품부,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 2022.12.

□ 다만, 일부에서는 농지 규제를 완화하자는 목소리도 존재하고 있는데, 산업발전과 개발, 주거지 확보 등을 위하여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따라서 농지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양쪽의 시각을 모두 고려하여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즉, 지속 가능한 농업과 식량안보 측면에서 농지 전용 허가 절차의 엄격한 관리나 농업 인구에 대한 지원, 후계 농업인 육성 및 유휴 농지 활용 등 농지 보전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되, 산업발전을 위하여 대규모 부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농지 규제의 완화도 검토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로드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24년 1월 「농지법」이 개정(2025년 1월 24일 시행 예정)됨에 따라 정부는 10년마다 농지 관리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10년 단위 기본계획과 5년 단위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상황임.

따라서 기본방침에 들어가는 세부항목[8] 설정 시 농지 관리의

8) **제47조(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0년마다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② 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방향 및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우량농지의 조성·보전에 힘써야 할 것임.

---

1.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2. 농지 면적의 현황 및 장래예측
3.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4.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설정 기준
5.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기준
6. 농지의 전용 등으로 인한 농지 면적 감소의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⑤ (생 략)

2) 공통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원회 중 일부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는 바,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관 위원회 정비 방안과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면서 비과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잘못 원천징수하였는 바, 향후 원천징수 업무 시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 29개의 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원회로 두고 있음. 2023회계연도에 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으로 52억 7,400만원을 편성하여 47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음[9].

【 2023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원회 예산 편성액 및 집행액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계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관 위원회 관련 예산	779	1,764	2,731	5,274	473	1,680	2,606	4,759

9)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운영(7034-341)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농어업인삶의질향상정책협업지원(7033-321) 등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관 위원회】

구 분	설치근거 및 설치목적	위원 구성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본회의			분과위원회			총계		
			출석	서면	계	출석	서면	계	출석	서면	계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농어업과 농어촌의 중장기 정책방향 협의	- 공무원 5인 - 민간위원 24인	10	2	12	33	3	36	43	5	4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복지증진, 교육 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 정책 총괄·조정	- 공무원 16인 - 민간위원 9인	0	3	3	0	6	6	0	9	9
간척지 운영위원회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 공무원 4인 - 민간위원 10인	0	3	3	0	0	0	0	3	3
경마감독위원회	-「한국마사회법」 -경마장·장외발매소 설치·이전·변경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공무원 1인 - 민간위원 6인	0	0	0	0	0	0	0	0	0
국가식생활 교육위원회	-「식생활교육지원법」 -국가 식생활교육 정책에 관한 사항의 심의	- 공무원 11인 - 민간위원 14인	0	0	0	0	0	0	0	0	0
농림식품과학 기술위원회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농림식품 R&D 종합계획, 평가, 예산 투자방향 등 심의	- 공무원 4인 - 민간위원 22인	10	2	12	0	0	0	10	2	12
농림종자위원회	-「식물신품종보호법」 -품종보호제도 자문,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조정 등	- 공무원 4인 - 민간위원 11인	0	12	12	3	2	5	3	14	17
농수산물품질 관리심의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공무원 16인 - 민간위원 38인	0	0	0	23	1	24	23	1	2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직불제 운영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공무원 6인 - 민간위원 14인	0	0	0	0	0	0	0	0	0
농업기계화정책 심의회	-「농업기계화촉진법」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 촉진에 관한 정책 심의	- 공무원 3인 - 민간위원 12인	0	1	1	3	0	3	3	1	4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에 관한 사항의 심사 및 결정	- 공무원 15인 - 민간위원 3인	0	16	16	0	0	0	0	16	16
농업재해보험 심의회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재해재보험에 관한 사항 심의	- 공무원 7인 - 민간위원 14인	1	9	10	0	0	0	1	9	10
농지관리위원회	-「농지법」 -농지정책 등에 관한 사항 자문	- 공무원 6인 - 민간위원 14인	15	0	15	0	0	0	15	0	15
농협경제사업 평가협의회	-「농업협동조합법」 -농협경제지주가 수행하는 경제사업의 평가·점검 등에 대한 자문	- 공무원 1인 - 민간위원 14인	3	1	4	1	2	3	4	3	7

구 분	설치근거 및 설치목적	위원 구성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본회의			분과위원회			총계		
			출석	서면	계	출석	서면	계	출석	서면	계
도시농업협의회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	- 공무원 7인 - 민간위원 3인	0	3	3	0	0	0	0	3	3
동물복지위원회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복지정책 등에 관한 사항 자문	- 공무원 5인 - 민간위원 15인	7	0	7	0	0	0	7	0	7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국가시험 시행 관련 중요 사항 심의	- 공무원 2인 - 민간위원 13인	4	10	14	0	0	0	4	10	14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공무원 5인 - 민간위원 25인	1	7	8	3	1	4	4	8	12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여성농업인육성정책에 관한 자문	- 공무원 2인 - 민간위원 13인	3	0	3	0	0	0	3	0	3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농업 등의 경쟁력 제고 및 피해 최소화 관련 사항 심의	- 공무원 4인 - 민간위원 16인	2	7	9	0	0	0	2	7	9
중앙가축방역심의회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방역·검역 등에 관한 사항 자문	- 공무원 17인 - 민간위원 66인	0	0	0	5	97	102	5	97	102
중앙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주요정책 심의	- 공무원 1인 - 민간위원 18인	0	6	6	0	0	0	0	6	6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 지리적 표시에 관한 심판 및 재심	- 공무원 4인 - 민간위원 6인	1	0	1	0	0	0	1	0	1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의 분쟁조정	- 공무원 1인 - 민간위원 8인	0	0	0	0	0	0	0	0	0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축산법」 -가축 및 축산물의 수급조절 등 중요사항 자문	- 공무원 3인 - 민간위원 12인	2	0	2	20	4	24	22	4	26
축산발전심의위원회	-「축산법」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수급조절 등 축산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심의	- 공무원 6인 - 민간위원 19인	0	2	2	0	0	0	0	2	2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식물신품종보호법」 - 품종보호에 관한 심판 및 재심	- 공무원 7인 - 민간위원 1인	10	5	15	0	0	0	10	5	15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심의회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해외농업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심의	- 공무원 5인 - 민간위원 10인	0	2	2	0	0	0	0	2	2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23 신설)	-「농약관리법」 -농약으로 인한 피해 관련 분쟁 조정	- 공무원 7인 - 민간위원 22인	0	0	0	0	0	0	0	0	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원회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농림축산식품부)를 재구성

(나) 검토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원회 정비 방안 및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정책에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 29개의 위원회를 소관 위원회로 두고 있음.

동 위원회들의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4개 위원회는 3년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6개 위원회는 3년 평균 연 1회 이하의 회의만 개최하는 등[10] 일부 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당초 위원회 설치 목적에 따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7개 위원회는 3년간 출석회의를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고 서면회의로만 운영되었는 바, 회의 안건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측면도 있어 보임.

10) 2023년에 신설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제외한 수치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원회의 최근 3년간 운영 실적】

구 분	위원회 명
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 (4)	- 경마감독위원회 -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회의개최 실적이 연 평균 1회 이하인 위원회 (6)	- 간척지운영위원회 - 도시농업협의회 -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 축산발전심의위원회 -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심의회
서면회의로만 운영된 위원회 (7)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 간척지운영위원회 -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 도시농업협의회 - 중앙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 축산발전심의위원회 -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심의회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 이와 관련하여 정부 측은 행정부 소관 위원회에서 운영실적 저조, 유사·중복된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과 같은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22년 7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22년 9월 246개 정부위원회를 통합·폐지하거나 비상설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안」 27건을 국회로 제출하였는 바,

동 개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6개 위원회를 3개로 통합하고, 2개 위원회를 폐지하며, 12개 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음[11].

그러나 해당 개정안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①위원회 통합으로 위원회 위원 수가 과다하게 늘어나는 위원회의 경우[12]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 ②비상설위원회로 전환되는 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개최 횟수가 현행보다 더욱 축소되어 농업 정책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 ③타 위원회로 통합되는 위원회의 경우 해당

1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7682, 정부 제출, 2022.09.30.)

[통합 3건]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로 통합
- 중앙가축방역심의회,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로 통합
-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농림종자위원회 →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로 통합

[폐지 2건]
- 축산발전심의위원회
- 농업기계화정책심의회

[비상설전환 12건]
- 간척지운영위원회
-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 도시농업협의회
-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심의회
-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12) 정부 제출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와 통합되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위원 수가 현행 30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나게 됨.

위원회의 본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의견 등이 제기됨에 따라 제21대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음[13].

□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원회의 경우 정부 측에서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비효율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위원회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인 바,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21대국회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여 소관 위원회가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14],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위원회가 당초 설치 목적에 따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13) 제21대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27건의 일괄개정안 중 13건의 일괄개정안만 처리되었으며, 14건의 일괄개정안은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14)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4년 7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행정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였음.

(2) 위원회 민간위원 수당에 대한 원천징수 업무 시 「소득세법」 준수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관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회의비·사례금 등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15],

위원회 수당 지급 시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음.

□ 「소득세법」제12조제5호자목에 따르면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소득임에도 불구하고[16],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잘못 원천징수하였는 바,

---

15)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152쪽)

> 차. 위원회 참석비
> ○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내(서면심사 100,000원내)에서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220목) 또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 또한,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현지조사·기술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계상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전문가 자문료 또는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등을 일반수용비(210-01목)로 지급할 수 있다.

16)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최근 5년간 1억 1,249만원의 기타소득세를, 1,123만원의 지방소득세(6,651건)를 잘못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5년간 민간위원에 대한 수당지급액(소득세를 공제한 지급 건)】

(단위 : 천원)

구 분	건수	지출액 (A)	소득세 (B)	지방소득세 (C)	실지급액 (D=A-B-C)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5,394건	1,158,112	90,008	8,998	1,059,10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2건	1,800	144	14	1,642
농림식품과학 기술위원회	274건	80,230	6,418	642	73,170
농림종자위원회	17건	2,850	228	23	2,599
농수산물품질 관리심의회	242건	51,440	4,140	415	46,885
농협경제사업 평가협의회	31건	5,050	404	41	4,605
동물복지위원회	1건	1,400	123	-	1,276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252건	42,650	3,412	341	38897
식품산업진흥심의회	79건	12,150	972	97	11,081
여성농업인육성 정책심의회의	49건	6,450	516	52	5,882
자유무역협정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51건	14,640	1,171	117	13,352
중앙가축방역 심의회	7건	9,300	744	73	8,483
지리적표시심판 위원회	3건	1,012	80	8	923
축산물수급조절 협의회	228건	43,866	3,509	351	40,006
품종보호심판 위원회	16건	5,400	432	43	4,925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심의회	5건	2,400	192	19	2,189
계	**6,651건**	**1,438,750**	**112,493**	**11,234**	**1,315,021**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원천징수 업무 시 이와 같은 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공통 : 장애인 고용 촉진 제도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는 장애인 고용 의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농협 등 소관 기관들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 집행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농협 등 소관 기관들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및 제32조의2[17]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정원의 일정 비율[18]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면서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1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제3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의 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18) 장애인 의무 고용률

구 분		'19~'21	'22~'23	'24~
국가	공무원	3.4%	3.6%	3.8%
	민간근로자	3.4%	3.6%	3.8%
공공기관		3.4%	3.6%	3.8%
민간기관		3.1%	3.1%	3.1%

※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3회계연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7개 기관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총 53억 3,142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였음[19].

【 2023회계연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내역 】

(단위 : 천원)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96,705	11,486	23,509	211,104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국식품산업 클러스터진흥원**	**농협**	**계**
7,801	14,892	4,965,923	**5,331,420**

※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 기준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20]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농업협동조합중앙회 포함)이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연간 구매액의 1% 이상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는데, 2023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288억 8,496만원임.

---

19)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기본경비(운영지원과 등)(7011-250) 등

2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중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100분의 1을 초과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을 말한다)이 되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2023회계연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 】

(단위 : 천원)

구 분	총 구매액	우선구매액	우선구매비율
농림축산식품부	160,427,054	1,209,502	0.75%
한국마사회	75,209,350	1,868,368	2.48%
한국농어촌공사	1,185,839,664	22,174,110	1.8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6,979,132	708,002	1.51%
축산물품질평가원	28,662,281	1,407,838	4.91%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5,080,060	58,748	1.16%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72,100,893	806,174	1.12%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2,096,172	291,347	2.41%
농업정책보험금융원	3,704,185	41,757	1.13%
국제식물검역인증원	987,188	14,663	1.49%
한식진흥원	5,585,572	68,667	1.23%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18,588,768	74,194	0.40%
축산환경관리원	257,396	8,918	3.46%
농협중앙회	50,237,511	152,677	0.30%
계	**1,665,755,226**	**28,884,965**	**1.73%**

※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 기준

(나) 검토의견

(1)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 노력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관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을 살펴보면, '20년 기준 36억 8,330만원이었던 부담금 납부 총액이 '23년 기준 53억 3,142만원까지 증가(+44.7%)하는 등 장애인 고용 의무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계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0	0	0	0	0	0
	민간근로자	**185,224**	**141,585**	**166,288**	**111,476**	**96,705**	**701,278**
한국마사회		0	6,532	5,176	0	11,486	23,194
한국농어촌공사		219,032	349,272	0	0	0	568,30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66,076	79,250	10,848	0	0	156,174
축산물품질평가원		6,099	0	0	0	0	6,099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0	0	12,734	0	0	12,734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0	0	0	2,229	23,509	25,738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2,556**	**76,538**	**118,152**	**172,418**	**211,104**	**600,768**
농업정책보험금융원		0	0	0	0	0	0
국제식물검역인증원		0	0	42,481	10,771	7,801	61,053
한식진흥원		0	0	0	0	0	0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0	0	14,559	10,298	14,892	39,749
축산환경관리원		0	0	0	0	0	0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계
농협	농협중앙회	265,871	75,287	174,033	222,598	255,232	993,021
	농협경제지주	372,833	370,205	462,313	583,612	692,311	2,481,274
	농협금융지주	18,298	1,046	22,285	26,749	28,099	96,477
	농협은행	2,743,011	2,139,074	2,553,411	3,094,091	3,419,058	13,948,645
	농협생명	300,089	276,054	305,620	307,610	354,047	1,543,420
	농협손해보험	170,604	168,463	208,052	206,714	217,176	971,009
	소 계	3,870,706	3,030,129	3,725,714	4,441,374	4,965,923	20,033,846
총 계		4,369,693	3,683,306	4,095,952	4,748,566	5,331,420	22,228,937

※ 자료 : 각 기관별 제출자료

□ 다만, 대부분의 기관들이 일시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장애인 고용 의무 준수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임에 따라 연례적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지는 않은 반면,

농림축산식품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농협은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도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농협의 장애인 고용률】

(단위 : %)

구 분		'19년말	'20년말	'21년말	'22년말	'23년말
농림축산식품부 (민간근로자)		2.68 (-172인)	2.93. (-110인)	2.77 (-152인)	3.20 (-96인)	3.31 (-72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3.15 (-3인)	2.67 (-9인)	2.47 (-11인)	2.64 (-11인)	2.37 (-15인)
농협	농협중앙회	2.80 (-8인)	2.70 (-11인)	2.52 (-16인)	2.56 (-14인)	2.44 (-19인)
	농협경제지주	1.84 (-29인)	1.85 (-28인)	1.67 (-35인)	1.61 (-42인)	1.54 (-44인)
	농협금융지주	4.23 (+2인)	3.33 (+1인)	1.84 (-2인)	1.74 (-2인)	1.65 (-2인)
	농협은행	1.90 (-196인)	2.13 (-159인)	1.89 (-197인)	1.73 (-223인)	1.67 (-223인)
	농협생명보험	1.30 (-19인)	1.27 (-18인)	1.09 (-20인)	1.22 (-18인)	1.00 (-21인)
	농협손해보험	1.49 (-11인)	1.35 (-12인)	1.20 (-14인)	1.33 (-13인)	1.37 (-13인)

※ 자료 : 각 기관별 제출자료

□ 특히, 농협은 중앙회・지주회사・농협은행 등 모든 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약 200억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에 상당 규모의 농협 예산을 지출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례적으로 이와 관련된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이 납부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20년)약 30억원 → ('23년)약 49억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 장애인 특별채용을 실시하였고,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임.[2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조치사항】

구 분	대상기관	세 부 내 용
2019년 국정감사	농협중앙회	**[2019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3.1% 달성을 위해 장애인 채용방안을 마련할 것 **[2019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한 채용 진행 ○ '19년 장애인 특별채용 실시 - 채용인원 : 167명 - 고 용 률 : 1.6% → 2.26% □ 고용률 확대 지속 추진 ○ (특별채용) 중앙회 및 계열사 장애인 특별채용 추진 ○ (일반직) 구분 채용 및 우대 적용 - 장애인 구분 채용 진행 - 일반전형 지원시 우대 적용
2021년 국정감사	농협중앙회	**[2021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장애인 고용 및 여성 관리자 확대 등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것 **[2021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 의무고용률(3.1%) 달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19년 장애인 특별채용을 실시하여 169명을 채용 □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적합 직무 발굴 노력 ○ 의무고용률 달성 위해 지속 노력

21)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부 본부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현장조사, 가축방역지원 등 출장 업무가 많아 장애인 고용에 어려움이 있으나 고용률은 지속 개선 중이고, 농협은 지도·감독 부서를 통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2022년 국정감사	농협중앙회	**[2022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 **[2022년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 □ (현황) '19년 장애인 특별채용을 통해 총 167명을 채용하는 등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 (계획) 적합 직무 발굴, 채용절차 운영, 적응교육 실시 등을 통해 의무고용률(3.1%) 달성 추진 중
2023년 국정감사	농협중앙회	**[2023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바,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장애인 고용정책을 개선하여 보고할 것 **[2023년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 □ '19년도 총 167명 장애인 특별채용 및 신규채용 시 지속적인 장애인 우대가점 적용을 통하여 현재 범농협 장애인 고용률 1.84%로, 타 금융기관 대비 높은 장애인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음 □ 향후 적합 직무 발굴, 장애인 가점우대, 채용 후 적응교육 등을 통해 의무고용률(3.1%)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22년·'23년은 농해수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의결되지 아니하였음
※ 자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및 국정감사 회의록

□ 장애인 고용 의무 미준수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 증가는 장애인들의 고용 촉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농업 분야에 지출할 수 있었던 상당 규모의 농업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바,

농림축산식품부는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소관 기관들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비율 준수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관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을 살펴보면, '23년 기준 농림축산식품부·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농협중앙회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단위 : %)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농림축산식품부	1.15	1.01	1.11	1.04	**0.75**
한국마사회	4.43	2.13	1.30	2.19	2.48
한국농어촌공사	2.80	2.50	2.38	2.12	1.8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88	1.72	2.44	2.82	1.51
축산물품질평가원	6.54	5.91	5.62	6.27	4.91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1.30	1.63	1.41	1.72	1.16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82	1.93	1.79	1.27	1.12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3.53	8.87	7.09	5.30	2.41
농업정책보험금융원	1.10	**0.40**	**0.62**	1.21	1.13
국제식물검역인증원	1.03	**0.22**	3.57	1.49	1.49
한식진흥원	**0.24**	7.18	**0.16**	**0.49**	1.23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1.28	**0.90**	**0.53**	1.39	**0.40**
축산환경관리원	-	8.87	11.96	8.62	3.46
농협중앙회	**0.03**	**0.03**	**0.07**	**0.14**	**0.30**

※ 자료 : 보건복지부

□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일반 제품과 품질 차이가 거의 없으며 관련 쇼핑몰[22]이 운영되고 있어 비교적 용이하게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관은 구매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인 바,

특히, 농협중앙회는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도 1%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한 적이 없었으며, 구매비율도 타 기관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바, 예산 집행 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 집행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농협중앙회 등 소관 기관들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2) 꿈드래 쇼핑몰(https://www.goods.go.kr)

4) 공통 : 성인지 예결산의 내실화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인지 대상 사업이 여성농업인들의 정책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농업인을 위한 복지시설 및 복지제도 확대와 농촌 필수 서비스 확충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에 대한 원인 분석이 매우 미진해 보이는 바, 농림축산식품부는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을 실시하여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지원 사업”과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 활성화 사업”이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적합한지 재검토하는 한편, 성인지 대상 사업 선정 시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정부는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 분석 등을 포함한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등 13개 재정사업이 여성농업인에게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한 성인지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음(「국가재정법」 제57조)[23].

23) **「국가재정법」 제57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①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2023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①농기계 임대	24,800	-	-	24,800	24,752	-	48	32,740
②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55,106	-	-	55,106	55,106	-	-	95,724
③농업·농촌 교육훈련지원	50,674	9	-	50,683	50,673	9	1	31,590
-농업·농촌교육훈련	42,405	-	-	42,405	42,405	-	-	25,232
④농촌고용인력지원	12,722	-	-	12,722	12,722	-	-	21,911
⑤농식품벤처창업 활성화지원	34,518	-	-	34,518	34,518	-	-	47,166
⑥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21,254	-	-	21,254	21,254	-	-	7,734
-귀농귀촌 교육	7,134	-	-	7,134	7,134	-	-	6,584
⑦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8,000	-	-	8,000	8,000	-	-	8,000
⑧농업인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	401,754	-	-	401,754	401,754	-	-	348,396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169,616	-	-	169,616	169,616	-	-	149,320
⑨농업농촌 사회적 가치확산 지원	36,683	-	△300	36,383	35,041	-	1,342	-
⑩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1,990	-	-	1,990	1,990	-	-	4,300
⑪농촌유휴시설 활용지역 활성화	1,300	-	-	1,300	1,300	-	-	2,770
⑫농식품 모태펀드출자	40,000	-	-	40,000	40,000	-	-	55,000
⑬농식품유통 교육훈련	1,976	-	-	1,976	1,883	-	93	-
계	690,777	9	△300	690,486	688,993	9	1,484	655,331

(나) 검토의견

□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이 농사일 중 평균 50.2%를 담당하고 있고, 하루 평균 노동시간도 남성보다 길게 나타나는 등[24] 여성농업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바,

특히, 농업인력 부족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우리 농촌 현실을 감안할 때, 주로 기계화가 낮은 노동집약적 영농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농업 예산도 여성농업인의 영농 환경 개선과 성차별적 요소 제거를 위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바,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예산안 편성 시에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성인지예산서를, 결산 시에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24)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4.04.15.)

[하루 평균 총 노동시간]
□ 농번기 : (여성) 8시간 42분, (남성) 7시간 54분
□ 농한기 : (여성) 5시간 42분, (남성) 4시간 24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한 성인지결산서를 각각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를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성인지 대상 사업이 여성농업인의 정책 수요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보이고, 성인지결산서의 세부 내용도 부실하게 작성되어 국회로 제출되었는 바,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첫째, 농업인을 위한 복지시설 및 복지제도 확대와 농촌 필수서비스 확충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임.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농업인들은 여성농업인을 위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복지시설 및 복지제도 확대”(25.9%), “농촌 필수서비스 확충”(21.2%)을 꼽고 있음.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여성농업인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구 분	응답률
복지시설 및 복지제도 확대	25.9%
농촌 필수서비스 확충	21.2%
노동부담 경감	18.8%
영농·경영교육 강화	11.6%
지위 관련 법·제도 개선	11.3%
창업 지원	5.4%

※ 자료 :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 성인지 대상 사업은 노동부담 경감[25], 영농교육[26], 창업지원[27] 사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성인지 대상 사업이 여성농업인들의 정책 수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 보임.

성인지 예결산이 여성농업인의 영농환경 개선 및 성차별적 요소 제거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 사업도 실제 여성농업인들의 정책 수요에 맞추어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바,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들의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추가 발굴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둘째, 농림축산식품부는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성인지 대상 사업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어 보임.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회계연도에 13개 성인지 대상 사업 중 4개 사업은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는 바,

이와 관련하여 「2023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 매뉴얼」은 각 부처가 성인지 대상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 성과목표 미달성 원인 등을 분석하고 이를 성인지결산서에 기재하도록

25) 농기계 임대, 농촌고용인력지원
26) 농업·농촌교육훈련, 귀농귀촌 교육, 농식품유통 교육훈련
27)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지원,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농식품 모태펀드출자

하고 있음[28].

【농림축산식품부 성인지 대상 사업 중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

구 분	성과목표	'23 목표치	'23 실적치	달성여부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여성농업인 국민연금 지원 비율(%)	58.5	55.8	미달성
농업농촌사회적 가치확산지원	사회적 농업 사업대상자 여성 대표(명)	9	8	미달성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검진율(%)	2.9	2.79	미달성
농식품벤처창업 활성화지원	농식품벤처육성지원 참여 업체의 여성대표자 비율(%)	27.8	26.9	미달성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성과 목표 미달성 원인을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홍보를 통한 사업대상자 발굴"로 분석하는 등 성과목표 미달성 4개 사업 중 3개 사업은 성과목표 미달성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국회로 제출하였음.

28) 「2023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 매뉴얼」 41쪽(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 2023.12.)

III. 『2023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방법

□ 자체평가

○ 결과에 대한 원인

≫ 성과목표를 달성한 경우 달성을 가능하게 한 주된 요인, 미달성한 경우 달성을 어렵게 만든 주요 장애요인 등 원인분석을 사업담당자의 관점에서 기술

- 제도적인 측면이나 당해 사업의 성격 및 특성 등의 측면에서 분석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체평가】

구 분	성과목표 달성여부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체평가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미달성	□ 자체평가 ○ 결과에 대한 원인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관련 홍보 추진으로 사업 대상자 발굴
농업농촌사회적 가치확산지원	미달성	□ 자체평가 ○ 결과에 대한 원인 - 사회적 농업 사업대상자 선정시 여성이 조직 대표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여, 사업 참여 유도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미달성	□ 자체평가 ○ 결과에 대한 원인 - 해당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을 위해 기존 일반건강검진이 제공하지 않던 여성농업인에게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여 의료복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3년은 여성농업인 검진호응도가 높아져 수검률이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농식품벤처창업 활성화지원	미달성	□ 자체평가 ○ 결과에 대한 원인 - 동 사업은 농식품 분야의 우수 아이디어 및 기술을 가진 벤처창업 기업을 육성 하는 사업으로 기업 대표의 성별 제한이 없고, 특정 성별 우대시 사업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성인지 사업으로서의 목표치에 미달성함. 하지만 전년 대비 1.5%p 증가한 수치임

※ 자료 : 2023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성인지결산은 성인지 대상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에 대한 원인 분석이 미진할 경우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는 바,

농림축산식품부는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서의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셋째, 일부 사업의 경우 성인지 대상 사업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임.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성인지 결산서에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지원 사업”과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 사업”이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동 사업을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있는 바, 2024년도 성인지 예산에도 동 사업들을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포함시켰음[29].

【2개 사업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체평가】

구 분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체평가
농식품벤처창업 활성화지원	’21 결산	○ 향후 개선사항 - 여성 벤처창업가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기관 대상으로 사업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음 - 하지만 현 지표는 노력에 따른 성과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없으며 사업의 목적상 동 사업의 성인지 사업 해당여부 재검토 필요
	’22 결산	○ 향후 개선사항 - 여성 벤처창업가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기관 대상으로 사업 홍보를 적극 추진, 현지표는 노력에 따른 성과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없으며 사업의 목적상 동 사업의 성인지 사업 해당여부 재검토 필요

29)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 절차
-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 및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성인지 대상사업을 발굴
- 성인지 예·결산협의회가 각 부처의 성인지 대상사업에 대해 적절성 평가
- 각 부처는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성인지 대상사업을 최종 선정

	'23 결산	○ 향후 개선사항 - 여성 벤처창업가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 관련 기관·협회(한국여성벤처 협회) 등 대상으로 사업 홍보를 적극 추진, 현 지표는 노력에 따른 성과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없으며 사업의 목적상 동 사업의 성인지 사업 해당여부 재검토 필요
농촌유휴시설 활용지역 활성화	'21 결산	○ 향후 개선사항 - '20년 예정처 성인지결산 분석서에서 동 사업은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부적절하므로 성인지 사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여성의 참여를 제약하는 어떠한 요소도 없으므로 향후 성인지 예산사업에서 제외할 필요
	'22 결산	○ 향후 개선사항 - '20년 국회 예정처 성인지결산 분석서에서 동 사업은 성인지 대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23년부터는 성인지 사업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함 - 동 사업은 여성의 참여를 제한 또는 제약하는 요소가 없음
	'23 결산	○ 향후 개선사항 - '20년 국회 예정처 성인지결산 분석서에서 동 사업은 성인지 대상으로 부적절 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24년부터는 성인지 사업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함(동 사업은 여성의 참여를 제한 또는 제약하는 요소가 없음)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3 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즉 성인지결산서에는 정부 측에서 선정했던 2개 사업이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한 후,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에는 해당 사업들을 계속해서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것인데,

성인지 대상 사업 선정 시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전년도 대상 사업을 관례적으로 재선정하는 등 성인지 예결산이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 보임.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사업들의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서의 적합성을 재검토하는 한편, 성인지 대상 사업 선정 시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임.

5) 국제농업협력(ODA) :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WFP 식량원조 사업이 식량 위기국에 쌀을 현물로 원조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 러-우 전쟁, 인플레이션 및 환율 상승 등으로 원곡대보다 물류비 등 부대비용의 소요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바,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물류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국제농업협력(ODA) 사업은 농림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수원국이 필요로 하는 물적·인적자원의 교류, 농업정책과 관련한 공동 조사 및 연구, 국제기구 등과의 파트너십 구축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임. 2023회계연도 예산 916억 9,1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 3,3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920억 2,400만원 중 915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3,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3,500만원을 불용하였음[30].

【 2023회계연도 국제농업협력(ODA)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국제농업협력(ODA)	91,691	333	-	92,024	91,556	333	135	162,128
- WFP 식량원조	51,857	-	-	51,857	51,857	-	-	111,960

30)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국제농업협력(5031-300)

(나) 검토의견

□ 국제농업협력(ODA) 사업의 내역사업 중 “WFP[31] 식량원조 사업”은 식량 위기국[32]을 대상으로 쌀을 원조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가 식량원조협약에 가입한 2018년부터 매년 쌀 5만톤을 원조하여 왔으며, 금년부터는 원조 물량을 두 배로 확대하여 쌀 10만톤을 원조하고 있음.

【WFP 식량원조 사업 추진 현황】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예 산(억원)		460	460	460	503	519	519
물 량(톤)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국가별 지원물량 (톤)	예 멘	17,000	19,000	19,000	18,000	18,686	18,000
	에티오피아	15,000	16,000	16,000	13,680	13,000	13,000
	케 냐	13,000	10,000	10,000	9,500	11,000	11,000
	우간다	5,000	5,000	5,000	4,500	6,000	2,492
	시리아	-	-	-	3,000	-	3,006
	라오스	-	-	-	1,320	1,314	-
	아프가니스탄	-	-	-	-	-	2,502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31) UN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 전 세계 기아 퇴치를 위해 설립된 UN 산하의 식량원조기구로 202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함

32)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계획(WFP), 유럽연합, 미국 국제개발처 등이 협력하여 구성한 식량안보정보네트워크(FSIN)는 세계 식량 상황을 관측하여 매년 「세계 식량 위기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동 보고서의 내용에 식량위기국이 포함되어 있음.

□ 동 사업은 ’18년부터 ’23년까지 쌀 원조 물량 5만톤을 기준으로 매년 500억원 내외의 예산이 편성되어 왔는데,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사업 예산 전액을 WFP에 공여하고 있으며, WFP가 해당 예산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정부관리양곡을 구매한 후 이를 식량 위기국으로 운송한 후 수혜자에게 직접 분배하는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는 바,

WFP가 지급한 원곡대는 다시 정부 수입액(양곡관리특별회계 미곡판매수입)으로 수납되고, 그 밖의 비용은 WFP가 해상·내륙 운송비, 창고 보관비, 분배비용, 사업수행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음.

□ 그런데, 동 사업이 식량 위기국에 쌀을 현물로 원조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초기와 비교해 볼 때, 원곡대 보다는 물류비 등 부대비용의 소요가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WFP 식량원조 사업 예산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지원국가			4개국	4개국	4개국	6개국	5개국	6개국
지원물량			5만톤	5만톤	5만톤	5만톤	5만톤	5만톤
예산 집행 내역	원곡대		20,731 (45.1%)	22,401 (48.7%)	19,921 (43.3%)	18,022 (35.8%)	11,439 (22.1%)	19,974 (38.5%)
	물류비 및 기타 사업수행비		25,269 (54.9%)	23,599 (51.3%)	26,079 (56.7%)	32,301 (64.2%)	40,418 (77.9%)	31,883 (61.5%)
		해상물류[33]	5,796 (12.6%)	4,583 (10.0%)	5,285 (11.5%)	6,480 (12.9%)	16,982 (32.7%)	9,292 (17.9%)
		내륙운송 및 창고[34]	10,996 (23.9%)	11,758 (25.6%)	13,578 (29.5%)	16,819 (33.4%)	15,404 (29.7%)	15,688 (30.3%)
		분배 및 모니터링 등[35]	8,477 (18.4%)	7,258 (15.8%)	7,216 (15.7%)	9,002 (17.9%)	8,032 (15.5%)	6,903 (13.3%)
	계		46,000	46,000	46,000	50,323	51,857	51,85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물류비 등 부대비용 소요의 증가는 '21년부터 식량원조 국가 수를 확대(4개국→6개국)함에 따른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

33)(해상운송비)
- ○ 한국 선적항부터 수원국 하역항까지의 해상운송비, 항구, 통관 등에 사용하는 비용으로 UN의 물류를 담당하는 WFP가 선박을 수배하여 해상운송 진행
- ○ WFP는 물류 비용 최소화 및 분쟁으로 인한 선사 기피 지역의 신속한 운송을 위해 대형 선사들과 글로벌 MOU를 체결하고 있음
- ○ 국가들과의 협정을 통해(예: EU 협정) 위험지역(예: 소말리아 해상)에서 군병력 호위 받음

34)(내륙운송비 및 창고 보관비)
- ○ 도착항에서 창고까지의 운송, 분배를 위한 분배지로의 운송, 품질관리비, 창고보관 비용
- ○ 수원국이 내륙국인 경우(예: 우간다, 라오스) 도착항에서 수원국 국경까지의 내륙 운송비용도 포함됨

35)(모니터링 및 국가 사무소 운영비)
- ○ 분배 및 분배 모니터링 등 사업수행비
- ○ 식량원조 수원국 사무소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간접비용 (WFP국가사무소 운영 지원: 직원관련, 자동차/사무실 비품/건물(사무실)유지 등)

(행정비)
- ○ 본부, 지역본부 등에 지원되는 운영비로 모든 국가의 WFP 공여액의 6.5%*로 동일 적용

* '17년 11월 WFP 집행이사회에서 7.0%에서 6.5%로 하향조정 의결, UN 기관 중 가장 낮은 수준

’22년의 경우 해상 물류비 급등,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식량원조 국가 수가 줄어들었음(6개국→5개국)에도 불구하고 부대비용 지출액이 크게 증가한 측면이 있음.[36)]

【물류비 등 부대비용 편성액 및 집행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2018년	편성액	23,908	당초 편성액 대비 **13억 6,100만원** 초과지출
	집행액	25,269	
2019년	편성액	23,972	-
	집행액	23,599	
2020년	편성액	22,170	당초 편성액 대비 **39억 900만원** 초과지출
	집행액	26,079	
2021년	편성액	31,104	당초 편성액 대비 **11억 9,700만원** 초과지출
	집행액	32,301	
2022년	편성액	32,064	당초 편성액 대비 **83억 5,400만원** 초과지출
	집행액	40,418	
2023년	편성액	30,647	당초 편성액 대비 **12억 3,600만원** 초과지출
	집행액	31,883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또한, 동 사업의 원곡대는 국제 쌀 가격 등을 참고하여 매년 WFP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고 있는바, 사업 예산이 약 500억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원조물량을 5만톤으로 고정하여 집행하는 구조에 따라 ‘물류비 등 부대비용’의 소요가 증가할수록 ‘원곡대’는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음.

36) 농림축산식품부 및 WFP는 물류비 등을 WFP 본부, 이사회 승인을 받으며, WFP 집행이사국인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등 전세계 모든 공여국에 동일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이에 따라, 양곡관리특별회계 미곡판매수입 중 원조용 쌀 판매수입액은 2020년부터 매년 당초 예산액 대비 과소 수납되고 있는 실정임.

【원조용 쌀 세입예산 편성액 및 수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2018년	편성액	미편성	-
	수납액	21,585	
2019년	편성액	20,000	-
	수납액	23,599	
2020년	편성액	20,000	당초 편성액 대비
	수납액	19,292	**△7억 800만원** 과소수납
2021년	편성액	20,000	당초 편성액 대비
	수납액	18,380	**△16억 2,000만원** 과소수납
2022년	편성액	21,114	당초 편성액 대비
	수납액	12,414	**△87억원** 과소수납
2023년	편성액	23,320	당초 편성액 대비
	수납액	19,232	**△40억 8,800만원** 과소수납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부터 당초 1톤당 400,000원 내외 수준으로 편성하던 원조용 쌀 판매수입을 1톤당 360,000원으로 계상하여 편성하였는 바, 이는 2024년 세입예산 기준 주정용 쌀 판매수입 단가(364,000원)보다 낮은 수준임[37].

37) 양곡관리특별회계 미곡판매수입(41-411) 세입예산

▪ 군수용: 28천톤 × 2,608천원=73,024백만원	▪ 무료급식: 0.5천톤 × 313천원=157백만원
▪ 관수용: 7천톤 × 2,608천원=18,256백만원	▪ 경로당: 10천톤 × 2,608천원=26,080백만원
▪ 급식용: 0.2천톤 × 2,608천원=522백만원	▪ **원조: 102천톤 × 360천원=36,720백만원**
▪ 생계의료: 110천톤 × 261천원=28,710백만원	▪ 가공용: 360천톤 × 404천원=145,440백만원
▪ 차상위: 31천톤 × 1,043천원=32,333백만원	▪ 주정용: 140천톤 × 364천원=50,960백만원
▪ 시설: 1천톤 × 1,304천원=1,304백만원	

【원조용 쌀 세입예산 편성액 현황】

구 분	세입예산 편성액 세부내역	비 고
2019년	- 50,000톤 × 400,000원 = 20,000백만원	
2020년	- 50,000톤 × 400,000원 = 20,000백만원	
2021년	- 50,000톤 × 400,000원 = 20,000백만원	
2022년	- 54,000톤 × 391,000원 = 21,114백만원	
2023년	- 55,000톤 × 424,000원 = 23,320백만원	
2024년	- 102,000톤 × 360,000원 = 36,720백만원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금년부터 쌀 원조물량이 10만톤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원국가 수도 현행 6개국에서 11개국[38]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지원국가 수가 확대될수록 물류비 등 부대비용의 소요는 더욱 증가할 유인이 있어 보임.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물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동 사업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임.

38) 방글라데시,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아프가니스탄, 기니비시우, 모리타니, 시에라리온, 케냐, 우간다, 예멘, 에티오피아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가. 개 요

1) 세입결산

□ 2023회계연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농어촌특별세 6조 9,880억원, 경상이전수입 등 989억 6,700만원 등 13조 5,820억 9,2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은 세계잉여금 증가 등으로 6,756억 6,600만원이 증가한 14조 2,577억 5,200만원임.

□ 징수결정액 14조 2,577억 5,200만원 중 농어촌특별세로 6조 5,628억 700만원, 전년도 세계잉여금으로 8,154억 3,600만원,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수입으로 503억 7,300만원 등 총 14조 2,422억 2,000만원을 수납하였고, 지자체 예산부족 및 기간미도래 등으로 인해 155억 3,2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예산액은 6조 9,88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수납액은 6조 5,628억 7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4,251억 9,300만원 감소하였음.

□ 경상이전수입의 경우 예산액은 989억 6,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수납액은 826억 9,2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62억 7,500

만원이 감소하였음.

□ 전년도이월금은 2022회계연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월액으로서, 4,665억 2,700만원이 2023회계연도로 이월되었음.

【 2023회계연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감 (C-A)
농어촌특별세	**6,988,000**	**6,562,807**	**6,562,807**	**-**	**-**	**△425,193**
재산수입	**14,990**	**9,164**	**8,923**	**-**	**241**	**△6,607**
토지대여료	0	1	1	-	-	1
기타민간이자수입	11,097	1,440	1,440	-	-	△9,657
기타재산이자수입	3,893	7,723	7,482	-	241	3,589
경상이전수입	**98,967**	**97,964**	**82,692**	**-**	**15,271**	**△16,275**
과태료	3	11	11	-	0	8
징계부과금	-	35	35		0	35
위약금	112	31	31	-	0	△81
법정부담금	1,411	-108	-108	-	0	△1,519
가산금	-	4	-	-	4	-
기타경상이전수입	97,441	97,991	82,723	-	15,268	△14,718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610**	**256**	**237**	**-**	**20**	**△1,373**
면허료및수수료	1,383	194	194	-	-	△1,189
기타잡수입	227	62	43	-	20	△184
관유물매각대	**229**	**2**	**2**	**-**	**-**	**△227**
기계기구매각대	8	-	-	-	-	△8
기타고정자산매각대	12	-	-	-	-	△12
토지매각대	191	-	-	-	-	△191
재고자산매각대	12	2	2	-	-	△10
유동자산매각대	6	-	-	-	-	△6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92,039**	**50,373**	**50,373**	**-**	**-**	**△41,666**

전년도이월금	-	466,527	466,527	-	-	466,527
전년도세계잉여금	434,539	815,436	815,436	-	-	380,897
일반회계전입금	2,730,382	2,824,926	2,824,926	-	-	94,544
계정간전입금	3,049,539	3,258,500	3,258,500	-	-	208,961
기금전입금	171,797	171,797	171,797	-	-	-
합 계	13,582,092	14,257,752	14,242,220	-	15,532	660,128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 세출결산

□ 2023회계연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당초 12조 963억 5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8,139억 1,600만원, 예비비 945억 4,400만원이 반영되어 예산현액은 13조 47억 6,500만원으로 증가함.

□ 예산현액 중 농업생산기반정비로 1조 3,729억 7,900만원, 농가경영안정으로 1조 6,108억 7,900만원, 농업신산업육성으로 5,142억 3,800만원, 농촌복지및지역활성화로 6,041억 3,000만원, 가축방역및축산물안전관리 3,208억 4,400만원 등 총 12조 2,685억 5,800만원을 지출하였고, 농가경영안정 1,193억 100만원, 농업생산기반정비 2,551억 5,700만원, 내부거래 1,810억 3,900만원 등 총 5,614억 3,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내부거래 1,500억원, 농가경영안정 집행잔액 117억 6,800만원, 농업생산기반정비 27억 6,100만원 등 총 1,747억 7,700만원을 불용처리함.

【 2023회계연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이·전용	기타증감				
농가경영안정	1,643,086	129,321	-	33,621 △64,079	-	1,741,949	1,610,879	119,301	11,768
농업인력육성 및 창업지원	181,206	9	-	-	-	181,215	181,204	9	2
양곡관리	51,059	-	-			51,059	51,059	-	-
농업신산업육성	516,494	-	-	1,400 △2,430	294 △294	515,464	514,238	1,207	19
식품외식산업육성	281,638	-	-	1,640 △1,640	-	281,638	281,570	59	9
농산물수급안정 및유통효율화	201,672	-	22,500	△425	549 △549	223,747	223,729	14	5
축산업진흥	12,728	-	-	-	-	12,728	11,176	-	1,552
가축방역 및 축산물안전관리	219,874	1,624	68,249	35,889 △3,519	4,284 △4,284	322,117	320,844	-	1,273
농업생산기반정비	1,456,897	174,000	-	-	-	1,630,897	1,372,979	255,157	2,761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	607,349	133	-	300 △300	-	607,482	604,130	-	3,352
농산물품질관리	93,841	-	-	-	867 △867	93,841	92,079	179	1,584
농림축산검역검사	41,881	8,902	-	230 △230	522 △522	50,783	46,124	4,004	655
종자관리	33,617	1,646	3,795	184 △641	497 △497	38,601	36,878	136	1,586
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	53,438	596	-	-	64 △64	54,034	53,498	325	211
회계간거래(전출금)	684,614	107,685	-	-	-	792,299	792,299	-	-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2,967,372	-	-	-	-	2,967,372	2,817,372	-	150,000
계정간거래(전출금)	3,049,539	390,000	-	-	-	3,439,539	3,258,500	181,039	-
합 계	**12,096,305**	**813,916**	**94,544**	**73,264 △73,264**	**7,077 △7,077**	**13,004,765**	**12,268,558**	**561,430**	**174,777**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재해대책비 : 공공시설 피해 복구 공사의 조속한 착수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시설의 피해 발생 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국비 교부, 지방비 편성 등의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공공시설 피해 복구 공사의 착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재해대책비 사업은 자연재난으로 농작물 및 가축, 수리시설 등 농업 분야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농가 경영안정 및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 농업인·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복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으로 2,00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이·전용으로 감액된 299억 7,700만원을 제외한 예산현액 1,700억 2,3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39].

【 2023회계연도 재해대책비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재해대책비	200,000	-	△29,977	170,023	170,023	-	-	280,000

39)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재해대책비(1033-302)

(나) 검토의견

□ 재해대책비 사업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및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난지원금(기타보전금, 310-04)을 지급하거나 공공시설 복구비(지자체 자본보조, 330-03)를 지원[40]하고 있음.

그런데 2023회계연도 공공시설 복구비의 실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본예산 대비 실집행률이 4.6%에 불과함.

【 2023회계연도 공공시설 복구비(지자체자본보조) 실집행 내역 】

(단위 : 백만원, %)

부처		사업시행주체								
본예산 (A)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예산 현액	집행액 (C)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40,000	6,860	6,860	-	6,860	1,835	6,860	1,835	5,005	20	4.6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자체에 교부한 금액인 68억 6,000만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도 실집행률은 26.7%에 불과하여 매우 낮은 수준임.

40) 재난지원금 및 공공시설 복구비 지자체 자본보조비율은 각각 24.5~70%, 50~100%임.

【 2023회계연도 지자체별 공공시설 복구비(지자체자본보조) 실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이월액	불용액
대구	32	31	97.6	-	1
세종	84	-	-	84	-
강원	64	-	-	64	-
충북	795	264	33.2	513	19
충남	4,328	1,373	31.7	2,955	-
전북	952	131	13.7	821	-
경북	605	36	6.0	568	-
계	6,860	1,835	26.8	5,005	2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시설은 집중호우와 태풍 발생 시기인 6~9월에 홍수로 피해가 발생하며,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약 3~4주) 후 국비를 교부하고, 지자체는 지방비 편성·국비 매칭 후 10~11월부터 예산의 집행이 가능한데,

2023년의 경우 6~7월 호우 및 8월 태풍으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 복구를 위해 2023년 9월 12일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복구계획을 수립·심의하였고, 10월 4일에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을 지자체로 교부하였으며,

이후 저수지·배수장 등 공공시설 피해 복구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 하천 점용 허가, 공사입찰·계약 등 절차가 수반됨에 따라 당해연도 실집행률은 설계용역비 수준(10~20%)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 다만, 동 사업은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공공시설의 피해 복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집중호우나 태풍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다음 해 6~8월 이전에 해당 시설이 복구되지 않을 경우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41].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시설의 피해 발생 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국비 교부, 지방비 편성 등의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공공시설 피해 복구 공사의 착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필요가 있어 보임.

41)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1월 488억 8,600만원을 추가 배정하여 2024년 6월까지 243개소 중 222건을 복구 완료하였으며, 절대 공기 부족(배수장 대형펌프 조달청 납품기한 6개월 소요), 영농기 용수공급시설(저수지·취입보) 활용 후 비영농기 복구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늦어지는 21건은 '24.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2)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의 수요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의 컨설팅 효과를 적극 홍보하거나 자부담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사업 수요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사업은 청년농업인, 후계농업인, 전문농업경영인[42]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인프라 구축비를 지원하는 등 농업·농촌의 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농촌교육훈련,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여성농업인역량강화, 농업경영활성화, 한-뉴FTA협력사업 등 5개의 내역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23회계연도 예산으로 506억 7,400만원이 편성, 전년도 이월액 900만원을 합한 예산 현액 506억 8,300만원 중 506억 7,300만원을 집행하고, 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00만원을 불용하였음[43].

42) 전문농업경영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전문적인 농업경영·기술 교육 또는 컨설팅 등을 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중에서 지정한 자를 말함.

43)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1130-331)

【 2023회계연도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50,674	9	-	50,683	50,673	9	1	31,590
- 농업경영활성화	1,340	-	-	1,340	1,340	-	-	670

(나) 검토의견

□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농업경영활성화 사업은 농업경영체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인력 등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주거나(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업), 농업경영체의 역량진단 등을 통한 민간전문가의 맞춤형 농업경영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인데,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인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의 실집행률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2023회계연도 실집행률은 46.9%에 불과함.

【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의 최근 5년간 실집행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예산	1,032	640	661	480	480
실집행	651	539	483	333	225
실집행률	63.1	84.2	67.0	69.4	46.9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최근 동 사업의 예산 편성 당시 계획 개소수와 실제 컨설팅 진행 개소수를 비교해 보면, 매년 실제 컨설팅을 진행한 개소수가 계획 개소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차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의 계획 개소수와 실제 컨설팅 진행 개소수 비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획 개소수	162	93	92	76	80
실제 진행 개소수	137	86	81	55	35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의 경우에도 사업 계획량을 16개소로 대폭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실적은 11개소로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2024회계연도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추진 현황 】

(단위 : 백만원, 개소)

사업예산액	'24년 사업계획 및 실적		
	사업계획	사업신청	사업실적
120	16	15	11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의 경우 사전 수요(80개소)보다 실제 신청 수(51개소)가 적었고, 사업 신청 후에 사업 참여를 포기(15개소)한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실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2023회계연도 농업경영컨설팅 사업포기 상세 내역 】

구분		개소 수
사전수요		80
사업신청(A)		51
선정 심사(B)	신청 후 포기	1
	서면 탈락	1
	선정 후 포기	9
컨설팅 추진(C)	매칭 후 포기	5
사업완료 (A)-(B+C)		35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이는 동 사업이 '청년농 2040 심층컨설팅'과 유사함에도 자부담 비율은 50%에 달하여 동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크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유사 컨설팅 사업 비교 】

구 분	사업대상	컨설팅 유형 및 분야	사업비 구성(%)
농업경영컨설팅	개별·법인경영체	경영전략, 창업지원, 생산역량, 유통활성화, 가공·제조, 농촌관광산업화	국비30, 지방비20, 자부담 50
청년농 2040 심층컨설팅	개별·법인경영체 (다만, 연령 50세미만)	경영전략, 경영·생산·유통 관리, 6차산업화	국비90, 지방비0, 자부담 1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의 컨설팅 효과를 적극 홍보하거나 자부담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사업 수요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농촌고용인력지원 :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리·감독 철저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단계별 장애요소를 고려하여 지자체의 사업 수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기숙사 건립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은 농업분야의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 문제의 완화 및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에 127억 2,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음[44].

【 2023회계연도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농촌고용인력지원	12,722	-	-	12,722	12,722	-	-	21,911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4,220	-	-	4,220	4,220	-	-	860

44)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촌고용인력지원(1140-333)

(나) 검토의견

□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의 내역사업 중 하나인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은 농업 분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건립 지원을 통하여 농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농촌 고용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동 사업은 2022년에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1차 사업은 2개년('22~'23년) 사업으로서 기숙사 10개소를 선정[45]하여 농업 근로자 주거시설의 신축비 또는 개·보수비를 지원하였음.

【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 지원 규모 】

구분	내용
거점형 (2개소, 48억원)	○ 시군 단위, 100명 내외 수용 기숙사 ○ 개소당 24억원(국비50%, 지방비50%)
마을형 (8개소, 120억원)	○ 마을 단위, 50명 내외 수용 기숙사 ○ 개소당 15억원(국비50%, 지방비5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그런데 2023회계연도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의 예산 중 실제 기숙사 건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예산의 실집행률은 20.4%로, 10곳의 지차체 중 5곳은 예산을 전액 이월하였고, 전북 고창과 경남 거창을 제외한 지자체의 실집행

45) 거점형 2개소(해남, 영양) / 마을형 8개소(청양, 부여, 진안, 고창, 담양, 영암, 무안, 거창)

률도 각각 0.5%, 4.3%, 23.7%에 불과하여 실집행 실적이 매우 부진함.

【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 지자체별 실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

지자체	유형	2023년 농식품부 교부				사업시행주체				
		1차		2차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전남 해남	거점형	-	-	'23.11.29	600	600	-	600	-	-
경북 영양		'23.9.26	600	-	-	600	3	597	-	0.5
충남 부여	마을형	-	-	'23.11.29	375	375	-	375	-	-
충남 청양		-	-	'23.11.29	375	375	-	375	-	-
전북 진안		-	-	'23.11.29	375	375	16	359	-	4.3
전북 고창		-	-	'23.11.29	375	375	375	-	-	100
전남 담양				'23.11.29	375	375	-	375	-	-
전남 영암		-	-	'23.11.29	375	375	-	375	-	-
전남 무안		'23.9.26	375	-	-	375	89	286	-	23.7
경남 거창		'23.9.26	375	-	-	375	375	-	-	100
총계		-	1,350	-	2,850	4,200	858	3,342	-	20.4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실집행 부진 사유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반대 등으로 부지 변경이 발생하거나 지방비 추가 편성 등으로 사전 절차(공공건축 기획, 심의)의 지연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

별로 착공이 지연되었고, 2024년 중에는 10개소 모두 준공될 예정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또한, 2024년부터 신규 10개소의 농업 근로자 기숙사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024년 3월에 보조금의 1차 교부가 이루어졌으나 7월 현재까지 지자체에서 예산을 집행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46].

【 2차 사업 지자체별 실집행 현황('24년 7월 기준) 】

(단위 : 백만원)

지자체	유형	농식품부		사업시행주체	
		예산액	1차 교부 ('24.3월)	예산현액	실집행액
경북 김천	거점형	120	60	60	-
경북 봉화		120	60	60	-
경기 안성	마을형	75	37.5	37.5	-
충남 당진		75	37.5	37.5	-
전북 남원		75	37.5	37.5	-
전북 완주		75	37.5	37.5	-
경북 문경		75	37.5	37.5	-
경북 고령		75	37.5	37.5	-
경남 밀양		75	37.5	37.5	-
경남 산청		75	37.5	37.5	-
총계		840	420	420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46)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신규 10개소에 대한 2차 사업('24~'26년)은 실제 사업소요 기간을 반영하여 사업기간을 2년차 사업에서 3년차 사업으로 조정하고, 지자체 부지 선정시 사전 주민동의 등 사업 대상자 선정조건을 강화하여 사업을 내실화하였으며, 현재는 1년차 사업으로 지방재정투융자 및 공유재산 심의, 공공건축·기획 단계로서 해당 절차가 완료되는 하반기에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힘.

□ 최근 농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47]에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 강화로 인하여 농가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단계별 장애요소를 고려하여 지자체의 사업 수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기숙사 건립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47) 농업분야 외국인력 배정규모: ('22) 2.6만명 → ('23) 5.0만명 → ('24) 7.7만명(고용허가 1.6만명 +계절근로 6.1만명)

4)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 사업다각화 사업은 건축공사 인허가 지연, 지방비 확보 지연, 사업계획 변경, 계약체결 지연 등으로 인해 보조금 이월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보조금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검토하여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할 필요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역변경 시 관련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사업은 논타작물 재배단지 확대, 밭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50ha 이상 들녘의 규모화·조직화·공동경영을 통해 생산비 절감 등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업다각화로 농가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액 272억 3,3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48].

【 2023회계연도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27,233	-	±1,499	27,233	27,233	-	-	-
- 사업다각화	8,183	-	△1,499	6,684	6,684	-	-	-
- 시설장비 지원	11,750	-	1,499	13,249	13,249	-	-	-

48)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2131-350)

(나) 검토의견

(1) 사업다각화 사업의 집행 관리 철저 필요

□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사업의 내역사업인 사업다각화 사업은 식량작물 생산과 연계한 선별·저장·가공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인정 기준과 사업 지원자격·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경영체 1개소당 시설·장비 5~50억원 내외로 보조금을 지원하며, 2023회계연도 예산액 81억 8,300만원 중 66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음.

【 2023회계연도 사업다각화 내역사업 개요 】

구 분	내 용
목적	논 타 작물 재배 단지를 집중지원하여 과잉 생산되는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50ha 이상 들녘(논+밭)의 규모화·조직화와 공동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내용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의 생산 또는 생산 이후 과정의 다각화를 위한 들녘(논+밭) 이용의 다양화, 논 타작물 및 밭작물 등의 가공·체험·관광과 같은 새로운 분야와 연계하는 사업계획에 대해 가공 시설 등을 지원
지원 자격 및 요건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인정 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지원내용	경영체당 시설·장비 5~50억원 내외(총 2회까지 지원)
지원 기준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예·결산	국비 예산 81억 8,300만원 중 66억 8,400만원 집행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동 사업의 2023회계연도 실집행률은 32.5%로 저조한데, 이는 6개 지방자치단체 중 4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률이 10.7%~60.0%로 낮게 나타났기 때문임.

【 202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별 사업다각화 사업 결산 현황 】

사업시행주체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A)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C/A)
							예산현액	집행액(C)			
합계	6,684	6,684	6,684	1,761	8,445	3,927	6,684	2,169	4,512	6	32.5
경기도	200	200	200	140	340	338	200	198	0	2	99.0
충청북도	0	0	0	99	99	96	0	0	0	3	-
충청남도	1,180	1,180	1,180	0	1,180	220	1,180	220	960	0	18.6
전라북도	2,224	2,224	2,224	0	2,224	890	2,224	890	1,334	0	40.0
전라남도	1,080	1,080	1,080	167	1,247	815	1,080	648	432	1	60.0
경상북도	2,000	2,000	2,000	1,355	3,355	1,568	2,000	213	1,787	0	10.7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구체적으로는 6개 공동경영체가 추진하는 사업다각화 사업에서 실집행이 부진하였는데,

주요 집행 부진 사유는 ① 건축공사 인허가 지연 ② 지방비 확보 지연 ③ 사업계획 변경 ④ 계약체결 지연 등으로 나타났음.

【 2023회계연도 공동경영체별 사업다각화 사업 실집행부진 현황 】

공동 경영체명	사업 기간	예산액 (A)	교부액	집행액 (B)	집행률 (B/A)	이월액	집행 부진 사유
충남 예담 영농법인	'23~'24	980	980	220	22.4	760	낙찰차액 등 잔여 사업비로 냉장설비를 추가하고 사업계획 및 건축허가 변경 승인을 요청('23.11.22.)하여 공사기간 부족
충남 상월농산	'23~'24	200	200	0	0.0	200	기 계약 체결한 설계사무소의 설계 능력 부족에 따른 포기('23.9.1)로 인해 설계업체 변경('23.9.19), 새로운 사업 설계도 제작('23.11.1)에 따른 인허가 지연('24.3.20)
전북 옥구농협	'23~'24	912	912	118	12.9	794	건축공사 인허가가 지연되었고 '23년 12월 착공 후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업체 보증보험 한도 부족으로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함
전북 정읍 명품귀리 사업단	'23~'24	340	340	0	0.0	340	-사전설계심사·입찰 지연, 사업계획변경 후 입찰('23.11.) -낙찰차액으로 바닥포장공사 및 배전반 공사 포함 변경신청서 제출('24.1.), 사업 변경계획 승인 및 사업 착공('24.2.)
전남 착한 영농법인	'23~'24	720	720	288	40.0	432	-계약체결과 기상여건 등으로 건축공사 지연, 콩 선별라인 계약 입찰 방식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해야 함에 따라 입찰기간 소요('23.9.~11.) -공사 완료 후 행정절차 기간 소요('23.11.~'24.4.)
경북 안동농협	'23~'24	2,000	2,000	213	10.7	1,787	'23년 국회 증액(20억원)으로 인한 사업대상자 추가 공모 사업 선정('23.4.28.)됨에 따라 지자체 예산 확보가 지연, 새로운 부지로 사업계획서 변경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우선, 건축공사 인허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 지연 문제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및 지방비 부담능력유무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토 후에 연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하여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였어야 하는데[49],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선정된 공동경영체에 대한 예산 전액을 교부하여, 연례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이월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세입 재원 없는 세출 이월[50] 문제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이 집행 가능성 없는 예산을 면밀한 검토 없이 교부하는 것은 신중을

49)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규정(발췌) 】

ㅁ 각 중앙관서의 장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보조금을 교부하고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방비 부담조건 등 자치단체의 신청내용이 예산으로 편성된 내용과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함으로써 보조금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유무,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토를 하여야 한다. 특히, 연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50) 세입 재원 없는 세출 이월이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상 세입 부족으로 당해 연도의 세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것을 의미한다. 세입 재원 없는 세출 이월은 당해 연도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음 연도의 세입이 이월사업에 우선적으로 배정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사업에도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다.

기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사업계획 변경 혹은 계약체결 지연[51] 문제는 당초에 사업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 건축 공사 인허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 지연 문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사전협의를 통하여 사전적으로 해결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종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보조금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검토하여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여 연례적인 예산 이월 문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51) 전남 착한영농법인 추진 사업의 경우 계약 종류 오인에 따른 지연이 발생함.

(2) 내역변경 시 변경절차 준수 필요

□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사업은 내역사업으로 사업다각화 사업과 시설장비 지원 사업이 존재하는데,

2023회계연도 사업다각화 사업 예산 81억 8,300만원 중 14억 9,900만원을 시설장비 지원 사업으로 내역변경하여 시설장비 지원 사업 예산현액은 132억 4,900만원으로 증액되었음.

【 2023회계연도 사업다각화 사업 및 시설장비 지원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사업다각화	8,183	-	△1,499	6,684	6,684	-	-	-
시설장비 지원	11,750	-	1,499	13,249	13,249	-	-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내역변경은 국가재정법에 규정하는 예산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경 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세출예산 집행지침 또는 다른 규정에 별도의 제한 또는 사전협의 규정이 없는 한 자체전용에 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승인하여 변경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면 예산 내역변경 등은 ‘국장’ 전결[52]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내역변경 시 자체전용에 준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절차 혹은 국장의 전결 절차 없이 내역변경(’23. 4. 28.)을 집행[53]하였는 바,

이는 예산 집행 관련 지침의 취지를 위반하는 측면이 있으며, 예산 변경 소요에 대한 체계적인 집행 관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향후 농림축산식품부는 편성된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할 때 관련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52) 주요사업비의 경미한 사항

53)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 추가 사업자 선정 결과(안)(‘23. 4. 28.)’에 해당 내역변경이 반영되어 국장의 전결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나, ① 동 결재 자료는 내역변경에 대한 것이 아니라 추가 사업자 선정 결과에 대한 내용이라는 점, ② 해당 자료 내에는 내역변경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 없이 단지 내역변경 후 변경된 예산현액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③ 타 세부사업의 내역변경 관련 국장의 전결 자료의 경우 내역변경 자체에 대한 별도의 보고 사항 등을 적시하고 있다는 점(자료명 : “2023년 ○○사업 예산 내역 변경(안)”) 등을 고려할 때 동 사업 내역변경 시 국장의 전결을 거쳤다고 보기 어려움.

5) 스마트팜 조성 사업 : 예산집행의 비효율성 해소 필요

○ 스마트팜 조성 사업에서 1,067억 9,4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는 바,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이와 같은 비효율적 예산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만 편성하여 한정된 농업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은 초기 진입장벽으로 스마트팜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스마트팜을 임대해주기 위한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 645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음[54].

□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은 관행농법[55] 위주의 노지재배 방식을 데이터 기반 영농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지작물 주산지에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시범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 57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음[56].

【 2023회계연도 스마트팜 조성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임대형 스마트팜	64,500	-	-	64,500	64,500	-	-	37,000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49,000	-	-	49,000	49,000	-	-	28,000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5,700	-	-	5,700	5,700	-	-	17,980

54)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임대형 스마트팜(2220-383)
55) 관행농법 : 화학비료와 합성농약 등을 사용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일반 관행적인 농업 형태를 뜻함
56)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노지스마트농업시범사업(2220-376)

(나) 검토의견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감소 및 고령화, 농가소득 정체 등 우리 농업이 직면해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업 분야에 빅데이터·인공지능·디지털기술 등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의 보급 및 확산에 주력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2023회계연도에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및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음.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및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 온실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원예 분야에 ICT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청년농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스마트팜을 임대 - 주요작물 :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멜론, 오이 등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 실외(ex.논·밭, 과수원)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노지농업 분야에 ICT 기술을 적용하는 것으로 국내 노지농업 여건이 취약(다품종·소규모 영농 등)하여 아직 시범사업 진행 단계 - 주요작물 : 콩, 양파, 마늘, 사과, 대파 등

2023회계연도 예산으로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에 국비 490억원(70억원×7개소), 지방비 210억원(30억원×7개소)이 편성되었으며[57],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에 국비 45억원(15억원×3개소), 지방비 19억원(6.5억원×3개소)이 편성되었는 바,

57) 7개소 : '22년 신규사업 4개소, '23년 신규사업 3개소

동 사업예산은 ①농림축산식품부가 지방자치단체로 국비를 교부하고 ②각 지방자치단체는 국비에 지방비를 매칭하여 다시 한국농어촌공사에 교부하며 ③최종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시설공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졌음.

【2023회계연도 스마트팜 조성사업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스마트팜 시설 공사비 편성 (한국농어촌공사로 교부된 금액)		
		국 비	지방비	계
임대형 스마트팜	'22~'23 사업 4개소 (양구·영천·신안·장수)	28,000	12,000	**40,000**
	'23~'24 사업 3개소 (삼척·김제·양구)	21,000	9,000	**30,000**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23~'25 사업 3개소 (태백·괴산·의성)		4,515	1,935	**6,450**
계		**53,515**	**22,935**	**76,45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그런데 동 예산의 최종 집행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실집행액을 살펴보면, 10개 지역 모두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과도한 이월액이 발생하는 등 매우 저조한 예산집행 실적을 보이고 있음.

임대형 스마트팜의 경우 '22년 신규사업 4개소에 2년간 800억원(국비 560억원, 지방비 24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집행액은 87억

8,100만원(실집행률 11%)에 그쳤고,

’23년 신규사업 3개소에 300억원(국비 210억원, 지방비 9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집행액은 8억 2,700만원(실집행률 2.8%)에 그쳤으며,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은 64억 5,000만원(국비 45억 1,500만원, 지방비 19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집행액은 4,800만원(실집행률 0.7%)에 그쳤음.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예산집행 현황(’22년 신규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양구	’22년	10,000 국 비 7,000 지방비 3,000	-	10,000	361	9,639	-	3.6%
	’23년	10,000 국 비 7,000 지방비 3,000	9,639	19,639	2,663	16,976	-	13.6%
영천	’22년	10,000 국 비 7,000 지방비 3,000	-	10,000	-	10,000	-	0%
	’23년	10,000 국 비 7,000 지방비 3,000	10,000	20,000	1,050	18,950	-	5.3%
신안	’22년	10,000 국 비 7,000 지방비 3,000	-	10,000	-	10,000	-	0%
	’23년	10,000 국 비 7,000 지방비 3,000	10,000	20,000	2,878	17,122	-	14.4%
장수	’22년	10,000 국 비 7,000 지방비 3,000	-	10,000	-	10,000	-	0%
	’23년	10,000 국 비 7,000 지방비 3,000	10,000	20,000	1,829	18,171	-	9.1%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예산집행 현황('23년 신규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실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삼척	10,000 국 비 7,000 지방비 3,000	502	9,498	-	5.0%
김제	10,000 국 비 7,000 지방비 3,000	322	9,678	-	3.2%
밀양	10,000 국 비 7,000 지방비 3,000	3	9,997	-	0.03%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예산집행 현황('23년 신규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실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태백	2,150 국 비 1,505 지방비 645	-	2,150	-	0%
괴산	2,150 국 비 1,505 지방비 645	48	2,102	-	2.2%
의성	2,150 국 비 1,505 지방비 645	-	2,150	-	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스마트팜 사업의 집행부진은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1·'22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스마트팜 관련 사업의 집행부진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임.

【 '21회계연도 결산 관련 】

'21회계연도 농해수위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지적사항]

○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사업의 실집행률이 매우 낮음('20년도 5%, '21년도 22.3%)

- 당초 계획보다 기본계획 수립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있고, 사업추진 중에 당초 계획이 변경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관련 사업의 집행부진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추진 방식을 개선하고,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 관리를 강화할 것

'21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노지스마트농업시범사업) '22년 사업 실집행률 제고 및 시범단지 완공을 위해 사업 추진현황 점검 회의를 2주 1회 실시하여 사업관리를 강화함

- '23~'25년 신규 대상지 선정 시 사업계획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선정하고, 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기간을 연장(3개월 → 7개월)하는 등 사업추진 방식 개선

○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사업자 선정시기 및 기본계획 수립 일정을 당겨 조기 착공토록 하는 등 철저한 공정관리 추진

- '23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자 선정('22.12월 완료), 기본계획 수립(~'23.3월)

○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현장(수시)·서면(매주) 점검 등 철저한 공정관리 추진

○ 조치완료일 : 2022년 12월 31일

【 '22회계연도 결산 관련 】

'22회계연도 농해수위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지적사항]

○ 임대형 스마트팜의 사업추진 지연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연례적인 이월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보조금 교부가 이루어지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간접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 가능성을 검토한 뒤 보조금을 교부하여 보조금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2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ㅇ '24년부터 사업기간 및 연부율 조정으로 예산 집행 현실화
* (당초) 2년(50%:50) → (변경) '23년 사업자 3년(50%:40:10) '24년 사업자 3년(20%:30:50)
ㅇ 지자체 및 유관기관 대상 격월 협의회 추진으로 예산 집행 및 조성 현황, 애로사항 파악 등 사업 관리 철저
* '23년 5회 실시(2월·4월·6월·8월·10월)
ㅇ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21일

□ 2023회계연도에 동 사업에서 발생한 이월액은 총 1,067억 9,400만원이으로, 결과적으로 동 이월액만큼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편성·활용될 수 있었던 대규모 농업예산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장기간 보유하게 되는 비효율을 초래한 것임[58].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이와 같은 비효율적 예산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만 편성하여 한정된 농업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58) 한국농어촌공사는 보유자금을 보통예금으로 은행에 예치하여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사업종료 후 자금 보유로 발생한 이자를 반납 처리하고 있음.

6)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 : 곤충·양잠산업거점단지 조성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시 사업비 추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등

○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곤충·양잠산업거점단지 조성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시 사업비 추산 등에 대한 면밀한 선행 검토를 하고, 사업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곤충미생물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곤충·미생물 등 그린바이오 등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포함하며, 2023회계연도 예산 138억 2,200만원 중 138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1,600만원을 불용하였음[59].

【 2023회계연도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곤충미생물산업 육성지원	13,822	-	-	13,822	13,806	-	16	26,332
-곤충·양잠산업 거점단지조성	5,250	-	-	5,250	5,250	-	-	5,750

59)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2271-303)

(나) 검토의견

□ 곤충·양잠산업거점단지 조성 사업은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 사업의 내역사업 중 하나로, 곤충·양잠산업의 거점화 및 규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곤충 생산, 전처리, 가공, 제품화, 유통, R&D 등을 위한 곤충·양잠산업거점단지를 구축·지원하는 사업이며,

각 개소별로 총사업비 200억원을 기준으로 50%를 국비로 지원하되, 1년차 5%, 2년차 47.5%, 3년차 47.5%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3년차 사업임.

【곤충·양잠산업거점단지 조성 부문별 지원내역】

❑ **(생산시설)** 임대형 곤충 스마트팜(ICT), 종충·먹이원 공급센터 등 구축 지원
❑ **(가공·유통지원)** 전처리 및 품질검사 시설, 소재 추출·가공 및 패키징 시설 등 구축 지원
❑ **(지원시설)** 곤충산업 전문교육 및 창업컨설팅, R&D 등 지원시설 구축 지원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이에 따라 현재 조성 중인 곤충·양잠산업거점단지는 '22년 선정된 경상북도와 '23년 선정된 강원도 2개소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실집행 현황, 사업진행 계획 및 계획 대비 실적은 다음과 같음.

【곤충·양잠산업거점단지 조성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단지명 (보조기간)	구 분	당초 계획 (사업최초연도)	변경 일정
경상북도 ('22.6. ~'25.12.)	계획수립	2022.10.~2022.12.	2023.4.~2023.12.
	실시설계	2022.12.~2023.2.	2024.1.~2024.8.
	공 사	2023.3.~2024.4.	2024.9.~2025.12.
강원도 ('23.5. ~'25.12.)	계획수립	2023.8.~2023.9.	동일
	실시설계	2023.10.~2024.3.	2024.1.~2024.7.
	공 사	2024.9.~2025.12.	동일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곤충양잠산업 거점단지 조성 사업 지역별 예산실집행 현황】

구분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교부액	실집행액 (C)	실집행률 (C/A)	위탁액			집행액 (E)	집행률 (E/D)
										위탁액	전년도 이월액	합계 (D)		
경상북도	'22	500	0				500	500	100	500	0	500		0
	'23	4,750	-	4,750	-	0.0	0	0	0	0	500	500		0
강원도	'23	500	-	500	-	0.0	500	500	100	500	-	500		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먼저 '22년 선정된 경상북도는 같은 해 12월에 기본계획을, '23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려는 계획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23년 12월에 이르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 진행이 1년 이상 지연되어,

간접보조사업자(한국농어촌공사) 수준에서의 예산 실집행은 0%인 실정이며, 이로 인해 2024년도 예산 심사시 당해연도 연부액이 당초 47억 5,0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조정되고 사업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 바 있음.

□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북의 경우 동 사업 기본계획을 ‘디지털혁신 농업타운 조성사업’ 기본계획(’23.4~12)으로 확대 변경함에 따라 실시설계 착수가 지연되었으며,

기본계획 변경의 주된 사유로 임대형 곤충 스마트 농장을 단순 사육 반자동 시설에서 완전자동화 사육시설로 고도화함에 따른 면적 축소 및 사업비 상승, 농가상생을 고려하여 생산된 곤충의 가공 및 제품화에 중점을 둔 가공지원센터 면적 확대 등을[60] 들고 있음.

□ 그러나 한정적 국가재정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 정확한 사업비 추산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비 추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선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편성 및 보조사업자 선정 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0) 임대형 곤충 스마트 농장 면적(5,550㎡ → 990㎡), 단가(1,441→6,060, 1천원/㎡)
곤충(갈색거저리 기준) 생산량 계획 : (‘29) 576톤 → (‘30) 100톤

□ 한편, ’23년 선정된 강원도 역시 1년 차에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한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과 달리, ’24년 1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같은 해 7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것으로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고 이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자(한국농어촌공사) 수준에서의 2023회계연도 실집행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예산 심사 당시 연부율조정 및 사업기간 연장을 한 경상북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강원도의 경우 이러한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지속적이고 면밀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7) 전통발효식품육성 : 김치원료공급단지구축 사업의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 김치원료공급단지구축 사업비가 이월되는 등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바, 농림축산식품부는 실집행부진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의 내역사업인 김치산업육성 사업은 김치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및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보전 및 계승·발전을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김치 원료공급단지 구축, 국산 김치 홍보 및 소비기반 확대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하며, 2023년도 예산 78억 8,5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61].

【 2023회계연도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전통발효식품육성	17,246	-	△60	17,186	17,124	59	3	18,476
- 김치산업육성	7,885	-	-	7,885	7,885	-	-	11,045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61)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전통발효식품육성(2832-310)

(나) 검토의견

□ 김치산업육성사업 중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사업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대규모 저온 저장시설, 절임 생산시설 및 절임염수 재활용 시설 조성 등을 통해 중소업체의 김치 원료를 안정적 조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비, 시설 건축 및 생산 설비·장비 등 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개소를 대상으로, 각 개소별로 총사업비 290억원을 기준으로 40%를 국비로 지원하되, 1년차 5%, 2년차 25%, 3년차 30%, 4년차에 4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며, 그 개요 및 연차별 예산소요액은 다음과 같음.

【김치 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목적	안전하고 위생적인 대규모 저온 저장시설, 절임 생산시설 조성 등을 통해 중소업체의 김치 원료 안정적인 조달시스템 구축지원
사업예산	580억원(농특회계, 국비 40% 지방비 60%)
사업 기간	'22~'25년(4년)
지원 내용	저온저장시설, 절임 등 가공시설, 절임염수 재활용 시설 등의 설계비, 시설 건축 및 생산 설비·장비 등 구축 비용 지원
추진 일정(계획)	('22~'23) 기본 및 실시설계 ('23~'25) 부지조성, 시설건축, 장비설치, 시범가동 등
지원 대상	충북 괴산군, 전남 해남군 ※ 최종사업자 선정(9.1)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 사업 연차별 예산 소요액 】

(단위 : 백만원)

구분	1년차('22) (총사업비의 5%)	2년차('23) (25%)	3년차('24) (30%)	4년차('25) (40%)	합계
국비(40%)	1,160	5,800	6,960	9,280	23,200
지방비(60%)	1,740	8,700	10,440	13,920	34,800
합계(100%)	2,900	14,500	17,400	23,200	58,000

* 총사업비 규모 내에서 사업대상 지자체의 여건 및 설계에 따라 지방비 소요 예산변경 가능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동 사업 예산으로 58억원을 편성하여[62] 충청북도와 전라남도에 각각 29억원씩 교부하였으나,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34억 8,000만원과, 34억 5,800만원 중 충청북도는 22.4%를, 전라남도는 10.2%를 실집행 하는데 그침.

【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 사업 연차별 실집행 실적 】

연도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A)								
2022	충청북도	580	580	580	580	-	580	-	580	-	0
	전라남도	580	580	580	580	-	580	22	558	-	3.8
2023	충청북도	2,900	2,900	2,900	2,900	580	3,480	648	3,162	-	22.4
	전라남도	2,900	2,900	2,900	2,900	558	3,458	296	2,832	-	10.2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62) 29,000백만원×2년차사업비25%×국비40%×2개소 = 58억원

□ 당초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동 사업 연차별 예산소요액(안)에 따르면, 동 사업은 '22년에 실시설계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3년 이후부터 부지조성, 시설건축, 장비설치, 시범가동을 실시하려는 계획이었음.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 연차별 예산소요액(안)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2년			2023년			2024~	
		예산	집행	불용	예산	집행	불용	'24 예산안	'24 이후
<총사업비(합계)>	58,000	2,900	2,900	-	14,500	11,600	-	17,400	23,200
1. 공사비	51,881	26	26	-	11,255	9,690	-	17,400	23,200
2. 토지보상비	-	-	-	-	-	-	-	-	-
3. 시설부대경비	4,784	2,874	2,874	-	1,910	1,910	-		-
○설계비	2,874	2,874	2,874	-	-	-	-	-	-
○감리비	1,195	-	-	-	1,195	1,195	-	-	-
○시설부대비(관리비)	715	-	-	-	715	715	-	-	-
4. 예비비	1,335	-	-	-	1,335	-	-	-	-
<재원분담(합계)>	58,000	2,900	2,900	-	14,500	11,600	-	17,400	23,200
○국고	23,200	1,160	1,160	-	5,800	4,640	-	6,960	9,280
○지방비	34,800	1,740	1,740	-	8,700	6,960	-	10,440	13,92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그러나 '24년 7월 현재 충청북도와 전라남도 모두 건설공사에 대한 기본·실시설계가 진행 중으로 사업추진 일정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고, 예산실집행 역시 부진한 상황임.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 사업 진행 경과】

구분	당초계획	전라남도	충청북도
사업자 선정	~'22	선정 완료('22.8.31)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22.12)	재검토('22.12) 조건부 승인('23.3)
공공 건축심의		심의 완료('23.6)	심의 완료('23.4)
설계 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23.7-9)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23.6)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23.10) 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24.2)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23.8)
		기본 및 실시설계(~'24.10)	기본 및 실시설계(~'24.8)
향후 계획	'23~'25	본공사 계약('24.10)	본공사 계약('24.8)
		시설구축 완료 및 사용승인('25.12)	시설구축 완료 및 사용승인('25.12)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는 체계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및 사업자 선정,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공공건축 심의 등 행정절차 수행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일정이 지연되었기 때문으로, 향후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하여 사업 일정을 단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일정 지연에 따라 변경된 계획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24년 10월, 충청북도는 '24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그 이후 본공사 및 장비도입에 착수하게 됨을 감안할 때, 당초 계획 대비 사업 진행이 1년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 및 실시설계의 지연 및 이후 절차의 연속적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 진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포함한 철저한 집행관리를 할 필요가 있으며, 집행 지연이 해소되지 못할 경우에 향후 예산 편성시 5개년 사업으로의 변경, 예산안 조정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업 재조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8)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 기업 분양률·준공률 제고 및 연구시설 확보방안 마련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의 분양율 및 입주율 제고와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사업은 식품산업과 관련된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집적된 식품전문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R&D와 수출 중심의 지원을 통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에는 총 예산 375억 3,200만원 중 7억 4,500만원을 전용하고, 367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음[63].

【 2023회계연도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국가식품산업 클러스터	37,532	-	△745	36,787	36,787	-	-	27,430

63)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2836-355)

(나) 검토의견

□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세계 식품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익산시에 조성·운영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는 2009년부터 부지조성을 시작하여 2017년에 완료하였음.

□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총 232만㎡의 산업단지[64]로서, 기업지원시설용지, 상업용지 주거용지, 기반시설용지 등을 제외한 순수 산업시설용지는 149만㎡로 2023년 12월 기준 현재 125개사에 분양하여 목표 대비 73.7%의 분양률을 달성함.

□ 그러나 부지조성 이후 '22년까지 지속적으로 분양률이 증가[65]되던 것과 달리 '23년에는 분양기업수가 감소(126개사→125개사)하고, 분양면적도 1% 증가(72.7%→73.7%)하는 데 그치는 등 기업투자 유치가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또한, 준공율의 경우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는 하나, '23년 기준 준공단계에 이른 기업은 78개사 이고, 분양면적 기준으로도 46.2%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64) 산업용지: 152만㎡, 기업지원시설용지: 9만㎡, 상업용지: 3만㎡, 주거용지: 8만㎡, 기반시설용지: 60만㎡로 구성되어 있음.

65) 7.2%(15년)→18.9%(16년)→27.9%(17년)→34.5%(18년)→40.9%(19년)→49.0%(20년)→65.2%(21년)→72.7%(22년)→73.7%(23년)

【국가식품클러스터 연도별 분양 및 준공현황】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분양면적(㎡)	108,097	282,873 (+174,776)	416,142 (+133,269)	514,810 (+98,668)	613,889 (+99,079)	731,669 (+117,780)	972,691 (+241,022)	1,085,144 (+112,453)	1,099,562 (+14,418)
분양기업수	6	26(+20)	50(+24)	69(+19)	90(+21)	96(+7)	114(+18)	126(+12)	125(-1)
분양	6	20	26	23	31	13	23	16	11
이탈	-	-	2	4	11	6	5	4	12
분양률(%)	7.2	18.9(+11.7)	27.9(+9.0)	34.5(+6.6)	40.9(+6.4)	49.0(+8.1)	65.2(+16.2)	72.7(+7.5)	73.7(+1.0)
준공기업수	-	-	9	20(+11)	34(+14)	46(+12)	61(+15)	72(+11)	79(+7)
준공율(%)	-	-	6.6	12.9(+6.3)	22.5(+9.6)	26.3(+3.8)	36.5(+10.2)	43.0(+6.5)	46.2(+3.2)

* '23년 분양(11): 신규 4, 기 분양부지 인수 7

** '23년 이탈(12): 양도양수 9, 계약해지 3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시설용지의 업종별 분양현황】

('23. 12. 기준)

구 분	전체면적		분양면적*		분양률(%)	기업수
	(㎡)	(평)	(㎡)	(평)		
산업시설용지	1,492,867	451,592	1,099,562	332,617	73.7	125
제조시설용지	1,366,994	413,516	1,037,783	313,929	75.9	121
식음료제조업	1,035,810	313,332	909,150	275,018	87.8	111
음료제조업	116,197	35,150	25,754	7,791	22.2	4
연관업종	98,988	29,944	79,744	24,123	80.6	5
외투지역	116,000	35,090	23,135	6,998	19.9	1
연구시설	40,381	12,215	-	-	-	-
물류시설	85,492	25,861	61,779	18,688	72.3	4

* 분양면적에 소스산업화센터, 농식품원료중개공급센터 포함(기업수에서는 제외)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분양율 정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수요가 저조한 음료제조업(분양률 22.7%) 대신 수요가 높은 식음료제조업(분양률 87.8%)으로 관련 법률[66]에 따라 토지 이용계획을 조정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대상 업종 내 비율 조정 뿐 아니라 식음료 산업 외에 성장성이 높은 펫푸드 등 유망산업으로 분양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24년 2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식물성대체식품 분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유치하고, '26년 완공 예정인 바, 향후 해당 분야 기업의 적극적 유치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투자기업이 분양계약 후 착공을 하지 못하거나, 착공은 하였으나 준공에 이르지 못하는 주된 이유를 사업계획 변경, 대출 등 애로, 경영난 등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

향후 농림축산식품부는 준공률 제고를 위하여 정책자금 연결 등 사후관리 컨설팅을 확대 운영하여 조기 착·준공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6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클러스터 부지를 이미 분양받았으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양도·처분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의 부지에 대하여 투자설명회 활성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체기업을 발굴하여 실제 입주 가능한 기업으로 교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연구시설 유치를 위해 조성된 부지는 총 40,381㎡이나 '23년 기준 민간 연구시설 유치실적은 전무한 실정임.

□ 연구시설 부지를 장기간 활용하지 않고 비워두고 있어 클러스터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된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은 동 부지의 일부(11,112㎡)에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를 유치하고 해당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도변경을 추진 중에 있음.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 개요】

○ **사업내용**
- 규 모: 2024년~2027년(총 4년) / 연면적 5,935 ㎡, 지상 3층 지하 1층
- 총사업비: 38,941백만원(부지 매입비: 익산시 제공, 건축: 국비70%, 운영: 국비100%)
- 대지위치: 연구시설(D2) 부지(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1458번지 외 2필지, 11,112㎡)

○ **공간구성(안)**

※ 1층(2,350㎡): 플레이푸드 킹덤, K-food 문화관, 식품문화 근현대 역사관, 라운지

※ 2층(1,671㎡): 그로서란트(팝업스토어,판매장), 식품판매관, 푸드스튜디오, 푸드테크 체험관

※ 3층(1,454㎡): 공유회의장/교육장, 컨퍼런스 룸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그러나,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조성 목적이 산·학·연 연계를 통한

상승효과 창출에 있고,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 인근지역에 2단계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과 국가산단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산·학·연 연계의 성과 입증의 측면에서도 민간 연구시설의 유치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지자체와 협력하여 '연구개발특구지정'을 검토중[67]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이를 위한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방안 또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7) 농림축산식품부는 민간 연구시설 유치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기존 전북연구개발특구(전주,완주,정읍)외에 국클내 연구시설부지 일부를 연구개발특구로 확대 지정 요청 예정('24.12월, 과기부)에 있음.

9) 농업관측 : 출연금 인건비의 연례적 이월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농업관측을 위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교부한 출연금의 인건비가 연례적으로 이월되고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지막 분기 또는 월에 예상되는 집행잔액 만큼 출연금을 배정하지 않는 등 연례적인 인건비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농업관측 사업은 주요 농축산물의 단기 및 중·장기 관측정보를 제공하고 국내외 농식품 소비동향 파악을 위한 통계조사 및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액 169억 3,100만원 중 세목조정(±5억원)을 반영한 예산현액 169억 3,1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68].

【 2023회계연도 농업관측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농업관측	16,931	-	±500	16,931	16,931	-	-	17,022
- 농업관측	15,331	-	±500	15,331	15,331	-	-	15,422

68)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업관측(3031-300)

(나) 검토의견

□ 농업관측 사업의 내역사업인 농업관측 내역사업은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에 대한 동향 및 전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 영농의사 결정 및 사전적 수급안정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농축산물의 단기 및 중·장기 관측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 153억 3,1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 2023회계연도 농업관측 내역사업 개요 】

구 분	내 용
목적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에 대한 동향 및 전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 영농의사 결정 및 사전적 수급안정 정책 수립 지원('99~)
주요내용	주요 농축산물의 단기 및 중·장기 관측정보 제공 * 관측품목 : 36개(엽근채소 5, 양념채소 5, 과일 6, 과채 7, 축산 6, 식량 3, 국제곡물 4)
세부내용	○ (단기관측) 1~2개월 후의 수급·가격 동향 및 전망 정보 제공 * 수집단계 : 표본농가(약 16천호) 대상 전화 및 실측조사, 전문가 조사, 원격탐사(항공촬영) 등을 통해 재배(의향)면적·생산량 등 전망 정보 수집 * 분석단계 : 품목별 재배면적 반응함수, 단수 예측모형 등을 활용하여 조사결과 분석, 중앙자문회의를 거쳐 관측결과 도출 * 확산단계 : 우편, 언론,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관측결과 제공 ○ (중기관측) 분기별 곡물(국제곡물), 채소, 과일, 과채, 축산 품목별 수급 동향과 전망 정보 제공 * 매분기(2·5·8·11월) 넷째 주에 「농업·농촌경제동향」 발간 ○ (장기관측) 매년 초 향후 10년의 국내외 경제 및 농업경제의 여건 변화와 동향, 품목별 수급동향 및 전망, 수출입 동향 등 제공 * 매년 1월 하순 "농업전망대회" 개최, 「농업전망(연보)」 발간
사업시행 주체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관측센터)
집행액	153억 3,100만원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동 사업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는데, 2023회계연도에는 출연금 152억 8,800만원이 전액 출연되어 이 중 143억 7,700만원이 실집행되고 9억 1,1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9억 1,100만원 중 상당부분(5억 9,200만원)이 인건비 부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2023회계연도 농업관측 내역사업 예·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	2023회계연도 실집행내역
○ **출연금 : 15,288** ① 인건비 : 3,368 ② 경상운영비 : 538 ③ 국내 관측사업비 : 10,909 1) 실측조사 데이터 수집 : 2,730 2) 저장 및 재배면적 선행정보 수집 : 1,737 3) 항공촬영 활용 재배면적 조사 : 1,760 4) 마늘, 양파 고정형 센서 활용 조사 : 93 5) 관측모형 개선 및 고도화 : 263 6) 정보화시스템 운영 및 성과확산 : 610 7) 사업운영비 : 3,716 ④ 국제곡물 관측사업비 : 473 ○ **직접운영비(농식품부) : 43**	○ **출연금 : 14,377** ① 인건비 : 2,776 ② 경상비 : 538 ③ 국내 관측사업비 : 10,590 1) 실측조사 데이터 수집 : 2,730 2) 저장 및 재배면적 선행정보 수집 : 1,737 3) 항공촬영 활용 재배면적 조사 : 1,565 4) 마늘, 양파 고정형 센서 활용 조사 : 93 5) 관측모형 개선 및 고도화 : 263 6) 정보화시스템 운영 및 성과확산 : 608 7) 사업운영비 : 3,594 ④ 국제곡물 관측사업비 : 473 ○ **직접운영비(농식품부) : 43**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출연한 인건비 집행실적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도에 2,700만원으로 나타났던 인건비 이월액은 매년 증가하여 2021년도에 9,600만원, 2022년도에 4억 7,100만원, 2023년도에 5억 9,200만원에 이르렀는데,

연례적으로 인건비 이월이 발생하는 주요 사유는 ① 전년도 인건비가 이월되고 ②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 연도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건비 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액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월사유 및 비고
		교부액	전년이월액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률(B/A)	이월액	
'20	3,368	2,588	320	2,908	2,881	99.1	27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출연금 중 인건비 예상 집행잔액 780백만원 미교부(불용), 정원 미충원으로 인한 인건비 등 집행잔액 이월
'21	3,368	3,368	27	3,395	3,299	97.2	96	'20년 인건비 전기이월분, 육아휴직(2인) 등 인건비 집행 잔액 이월
'22	3,368	3,368	96	3,464	2,993	86.4	471	'21년 인건비 전기이월분, 육아휴직(2인)·일반휴직(2인) 등 인건비 집행잔액 이월
'23	3,368	3,368	471	3,839	3,247	84.6	592	'22년 인건비 전기이월분, 육아휴직(3인)·일반휴직(3인) 등 인건비 집행잔액 이월
'24	3,693	1,847	592	2,439	1,280	52.5	-	

※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69]에 따르면 인력 미충원에 따른 인건비 잔액은 기존 직원의 인건비 인상액, 연구개발적립금, 성과급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인건비 이월액은 실인건비 목적으로만 지출되어야 함.

현재와 같이 동 사업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70] 인건비 정원이 42명[71]에서 크게 증가하지 않는 이상, 이와 같은 인건비 잔액이 연례적으로 누적되어 인건비 이월액은 매년 증가될 것으로 보임.

특히, 2023년 기준 휴직 6인이 1년을 모두 근무한다는 가정하에서도 정규직 1인당 인건비 기준단가(8,020만원)를 고려한 인건비 총액은 4억 8,120만원으로 2023회계연도 이월액 5억 9,200만원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2023회계연도에 휴직이 발생하지 않아도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음을 의미함.

---

69)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인건비는 인건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일반출연금(350목) 세부지침 : 출연기관의 기관운영 출연금(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의 경우에는 기관 세입에 계상하되, 필요시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 인건비의 경우 인건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인력 미충원 등으로 발생한 인건비 잔액은 기존 직원의 인건비 인상액, 연구개발적립금, 성과급 등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70)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분류됨.

71) 최근 5년간 인건비 예산반영 인원은 42명으로 유지되고 있음

□ 미집행된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것은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다른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었던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사후정산 및 반납 의무가 없는 출연기관이 누적된 출연금을 정산 및 반납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자수입을 확보[72]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지막 분기 또는 월에 예상되는 집행잔액 만큼 출연금을 미배정하는 등, 연례적인 인건비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73]가 있음.

72) 2020년~2023년 연도별 이자수입 내역(인건비 이월액 관련 이자수입)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금액	346,765원	41,342원	322,438원	1,687,828원

73)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인력 미충원 등으로 발생한 인건비 잔액은 기존 직원의 인건비 인상액, 연구개발적립금, 성과급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주무부처는 마지막 분기 또는 월에 예상되는 집행잔액 만큼 배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10) 농식품 소비정책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 : 중소유통경로에 대한 사업비 집행 비중 제고 필요

○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대형유통경로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상대적으로 중소유통경로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 추진 시 중소유통경로에 대한 사업비 집행 비중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농식품 소비정책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 사업은 식생활 교육 및 우수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바른 식문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기반을 확보하고 소비자 교육·홍보·정보제공 등을 통해 농식품 소비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액 1,147억 3,200만원 중 이용액(△4억 2,500만원) 및 예비비(225억원)을 반영한 예산현액 1,368억 7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74].

【 2023회계연도 농식품 소비정책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이전용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농식품 소비정책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	114,732	△425	22,500	136,807	136,807	-	-	123,649
- 농축산물 할인지원	108,000	-	22,500	130,500	130,500	-	-	108,000

74)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식품 소비정책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3041-385)

(나) 검토의견

□ 농식품 소비정책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 사업의 내역사업인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위해 국내산 농축산물 구매 시 할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비자가 온·오프라인 유통경로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 시 1주일 1인 1만원 한도로 20%의 할인(전통시장은 2만원 30%)을 지원하였으며,

동 사업의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예비비 225억원을 포함한 1,305억원으로, 이 중 1,284억원을 사업비로, 21억원은 운영비로 전액 집행하였음.

【 2023회계연도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개요 】

구 분	내 용
사업 목적	국산 농축산물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
사업 내용	소비자가 온·오프라인 유통경로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 시 1주일 1인 1만원 한도로 20% 할인(전통시장 2만원 30%) 지원 * 할인품목에 유통업계 자체할인 의무화(10~20%)하여 실제 소비자 지불 가격은 30~40% 저렴 * 할인행사 주요시기: 설, 추석, 김장철
집행액	1,305억원(사업비 1,284.4억원, 운영비 20.6억원)
할인 품목	평년 대비 가격이 높아 소비자 부담 경감이 필요한 국산 신선 농축산물 및 설·추석 성수품, 김장재료 등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5">내 용</th></tr>
<tr><td>참여
업체</td><td colspan="5">총 16,529개소
(대형마트 1,497개소, 지역농협 2,175개소, 전통시장 11,684개소 등)</td></tr>
<tr><td>참여
요건</td><td colspan="5">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차별 없이 국산 농축산물을 판매하며 행사주기별 1인당 할인 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 모든 유통업체</td></tr>
<tr><td>할인
방식</td><td colspan="5"><table>
<tr><th colspan="2">구분</th><th>할인율</th><th>한도</th><th>할인 방식</th></tr>
<tr><td rowspan="4">오프라인</td><td>대형·중소형마트</td><td rowspan="5">20%</td><td rowspan="5">1만원
(설·추석 2만원)</td><td rowspan="4">구매·계산시 자동 할인</td></tr>
<tr><td>지역 하나로마트</td></tr>
<tr><td>친환경매장</td></tr>
<tr><td>로컬푸드직매장</td></tr>
<tr><td>온라인</td><td>온라인 쇼핑몰</td><td>쇼핑몰 내 할인쿠폰 발급 및 적용</td></tr>
<tr><td rowspan="4">전통시장</td><td>제로페이</td><td rowspan="4">30%</td><td rowspan="3">2만원
(설·추석 3만원)</td><td>모바일상품권 선할인 구매</td></tr>
<tr><td>전통시장 배달앱</td><td>앱에서 할인쿠폰 발급 및 적용</td></tr>
<tr><td>전통시장 온라인몰</td><td>온라인몰 내 할인쿠폰 발급 및 적용</td></tr>
<tr><td>명절 현장 환급행사</td><td>설·추석 2만원</td><td>구매 영수증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 지급</td></tr>
</table></td></tr>
</table>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 추진계획(2022. 11.)」에 따르면,

동 사업은 사업 참여 대상을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차별 없이 국산 농축산물을 판매하며 행사주기별 1인당 할인 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 모든 유통업체'로 규정하여 중소유통업체뿐만 아니라 대형유통업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대형유통경로에 예산이 집중되는 집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소유통경로에 대한 배정비율(총 사업비의 50%)을 전년 대비[75] 강화하여 배정할 계획이었음.

□ 그러나 2023회계연도 경로별 예산 실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대형유통경로 실집행액은 계획액 대비 31.7% 증가한 773억 9,100만원으로 총 사업비 중 6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유통경로 실집행액은 계획액 대비 7.9% 증가한 509억 8,000만원으로 총 사업비 중 39.7%에 불과함.

【 2023회계연도 경로별 예산 배정 계획 및 실집행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배정 계획		실집행		증가율 (B-A)/A
		금액(A)	비중	금액(B)	비중	
대형 유통 경로	대형마트	48,700	45.9	75,201	58.6	32.1
	대형 온라인 쇼핑몰	4,300	4.1	2,190	1.7	18.3
	소계	53,000	50.0	77,391	60.3	31.7
중소 유통 경로	중소오프라인매장	24,800	23.4	22,828	17.8	13.9
	중소형 온라인 쇼핑몰	9,000	8.5	7,876	6.1	9.7
	전통시장	19,200	18.1	20,276	15.8	1.3
	소계	53,000	50.0	50,980	39.7	7.9
계		106,000	100.0	128,371	100.0	21.1

※ 주 : 1. 배정 계획은 예산 확정 후 당초 수립한 경로별 배정 계획을 기준으로 작성
2. 중소오프라인매장은 중소형마트, 지역농협, 친환경매장, 로컬푸드직매장을 포함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75) 2022회계연도 집행액 기준 중소유통경로 비중 39.2%, 대형유통경로 비중 60.8%

동 사업 지원이 대형유통경로에 집중된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당초 중소유통경로에 배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대형유통경로로 재배정하여 집행하고,

추가로 배정한 예비비 225억원의 대부분을 대형유통경로를 통해 집행하였기 때문임.

【 2023회계연도 경로별 실집행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소유통경로	대형유통경로
실집행 금액	50,980	77,391
비중	39.7	60.3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소유통경로의 집행 저조에 따른 전체 예산 집행률 제고 및 소비자의 할인지원 혜택 체감도 향상 등을 위하여 사업비를 대형유통경로로 재배정하였으며,

예비비는 사업 추진의 시급성 및 소비자의 할인지원 혜택 체감도 제고 등을 고려하여 대형마트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입장임.

□ 이와 같이 동 사업 예산 집행이 대형유통경로에 집중되는 경우, 전통시장, 중소형마트, 지역농협, 친환경매장 등 중소유통경로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되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향후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 추진 시 중소유통경로에 대한 사업비 집행 비중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11)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 보조금 교부 및 재이월 등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고, 사업집행관리 및 성과평가를 강화할 것

○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보조금 교부, 보조사업자의 재이월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내역사업을 포괄하고 성과를 명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성과지표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 사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노후 농공단지 대상으로 스마트그린 인프라 및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에는 총 예산 41억 6,800만원 중 40억 9,700만원을 집행하고 7,100만원을 불용하였음[76].

【 2023회계연도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	4,168	-	-	4,168	2,898	-	-	
-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	2,625	-	-	2,625	2,625	-	-	
- 농공단지형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도입 모델	1,543	-	-	1,543	1472	-	71	3,60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76)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4130-445)

(나) 검토의견

(1) 보조금 교부, 재이월 등과 관련한 지침 준수 및 집행관리 강화 필요

□ 농공단지는 산업단지의 4가지 유형(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 농공단지) 중 하나로 주로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며, 2023년 기준 481개가 지정되어 있음.

□ 농공단지는 1984년 처음 조성된 이후 농어촌 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제성장의 일익을 담당해 왔으나, 최근 20년이 넘는 노후단지 증가(노후단지 비율 62%), 농어촌 인구 유출, 낙후지역 위치 등으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

□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노후 농공단지를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단지, 에너지 고효율 단지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22년부터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수행해 오고 있음.

【 산업단지 및 노후 산업단지 수】

(2023년 4분기 기준)

구분	산단 수	노후산단 수	비중
국가산단	50	35	70.0%
일반산단	731	145	19.8%
도시첨단산단	44	1	2.3%
농공단지	**481**	**300**	**62.4%**
합계	1,306	481	36.8%

※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 사업은 ①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 사업(이하 “스마트그린 기술도입”)과 ② 농공단지형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도입 모델 사업(이하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도입”)의 2가지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개요는 다음과 같음.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 사업 】

구분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도입
사업목적	노후 농공단지에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 교통·안전, 친환경 인프라 도입을 지원	노후 농공단지에 농공단지형 에너지관리시스템[77]을 구축하여 에너지 사용 효율성 증대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
사업대상	농공단지가 조성된 지자체(시·군) -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 노후 농공단지 - 조성면적 25만㎡ 이상이고 고용인원 500명 이상인 농공단지	
사업기간	2개년('22~'23) (1년차 50%, 2년차 50%)	2개년('23~'24) (1년차 30%, 2년차 70%)
사업내용	스마트 교통, 스마트 안전, 그린 인프라 구축 지원	개별기업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농공단지형 에너지통합시스템, 전력제어 및 분산전원관리 솔루션 구축 지원
지원규모	개소당 35억원 (국비 50%, 지방비 50%)	개소당 24.5억원 내외 (국비 70%, 지방비 30%)
선정지자체	'22년 총 3개소 선정 (충남 공주, 전북 김제, 경북 영천)	'23년 총 3개소 선정 (전북 군산, 전북 김제, 전남 나주)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77)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 공장에 센서·계측장비, 분석SW를 설치하여 에너지사용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취득·분석하여 에너지 절약 최적의 솔루션 제공

□ ‘스마트그린 기술도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22년 공주, 김제, 영천 총 3개소를 사업자로 확정 통보하고 1년차 국고보조금을 각각 10억 7,500만원, 6억 7,500만원, 8억 7,500만원을 각각 교부하였음.

□ 이후 공주는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을, 김제는 2,200만원을 집행한 잔액 6억 5,300만원을 차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3년에도 전년과 같은 금액으로 2년차 보조금을 재차 교부하였으나, 1년차 보조금도 집행하지 못하고 다시 재이월하여, 실집행률이 3.9%와 26.3%에 그침.

【 2023회계연도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 사업 실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지방자치단체							
		예산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스마트 그린	공주	1,075	1,075	1,075	2,150	84	2,066	0	3.9
	김제	675	675	653	1,328	349	979	0	26.3
	영천	875	875	0	875	875	0	0	100.0
에너지 관리시스템	군산	515	515	0	515	0	515	0	0
	김제	468	468	0	468	0	468	0	0
	전남	489	489	0	489	486	3	0	99.4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그런데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예산의 재이월은 금지되고,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만 재이월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78]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특히 이미 한 번 이월된 보조금을 재이월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재이월 승인 사유로

ⅰ) 공공건축기획용역 심의 및 조치, 기본·실시설계 용역, 적정성 검토 등의 사전 행정절차에 시일이 소요되거나(공주), ⅱ) 관급자재 수급난, 국유재산 매입 협의 및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한전 협의 지연(김제) 등을 제시하면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장기간에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한다고 설명함.

---

78)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⑤ (생 략)

□ 다만, 보조금의 재이월은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재이월 사유를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 시 사전 행정절차 소요 시간을 미리 확인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국가재정법 또는 다른 법률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비를 재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4년 6월 기준, 공주는 일부 사업이 여전히 설계용역중이고, 김제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이 착공에 돌입하였음을 감안하면, 사업 진행 중 재재이월이 발생하여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사업 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23년에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도입' 사업 역시 군산, 김제의 경우 실집행률이 0%로 보조금이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는 바, 사업추진이 상당부분 지연되고 있어, 지속적이고 면밀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사업과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도입' 사업 모두 보조금의 실집행이 부진한 상황에서 보조금의 잔액

전부를 1차 또는 2차에 걸쳐 전액 교부하였는데, 이는 보조금의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그 연례적 이월을 최소화할 것을 규정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79]의 취지에도 맞지 아니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실집행 소요를 면밀히 확인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음.

【 2023회계연도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 사업 보조금 교부현황 】

(단위:천원)

구분		교부일			
		3.22.	6.9	6.13.	9.7.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공주	500,000	575,000		
	김제	350,000	325,000		
	영천	450,000	425,000		
에너지관리 시스템 기술도입	군산				514,500
	김제			234,150	234,150
	전남			244,500	244,50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79)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 성과지표 개선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의 성과를 내역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사업 공정률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사업은 내역사업으로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뿐 아니라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도입’ 사업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들 사업을 포괄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현재의 성과지표는 총사업비 대비 누적투자액 비율로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방자치단체로 보조금을 교부하면 성과를 달성하는 것으로 평가됨.

현재 ‘스마트그린 기술도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재이월까지 발생하고 있음에도 상기 지표에 따르면 성과목표를 100%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부적절한 지표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 사업 성과지표 】

성과지표	구분	'20	'21	'22	'23	'24	‘23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스마트그린 농공단지 조성 공정률 (단위:%)	목표	-	-	40	100	-	2년차 사업비 반영에 따른 누적투자액으로 목표치 산출	(누적투자액/ 총사업비)x100
	실적	-	-	50	100	-		
	달성도	-	-	125.0	100.0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12) 농업유산발굴 및 보전관리지원 : 농업유산발굴 및 보전관리지원 사업의 신청률 및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농업유산발굴 및 보전관리지원 사업은 국가중요농업유산이 지정되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바,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상 사업지를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신청률 및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농업유산발굴 및 보전관리지원 사업은 농촌의 토지이용을 통해 형성된 경관, 전통문화, 생물다양성 등 농촌의 고유한 농업유산을 복원·발굴하여 활용함으로써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증진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 26억 2,900만원 중 25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 1억원을 불용하였음[80].

【 2023회계연도 농업유산발굴 및 보전관리지원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농업유산발굴 및 보전관리지원	2,629	-	-	2,629	2,529	-	100	-
- 국가중요농업 유산발굴·보전지원	1,499	-	-	1,499	1,399	-	100	-
- 농업유산보전관리	1,130	-	-	1,130	1,130	-	-	

80)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업유산발굴 및 보전관리 지원(4160-411)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은 보전 가치 있는 농업자원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사업으로, ① 국가중요농업유산을 발굴·지정하고, 정비·개선사업·홍보·가치창조 활동을 하는 '국가중요농업유산발굴·보전지원'사업(이하 '발굴지원사업', 3개년, 국비 70%)과 ② 세계중요농업유산지역 관리(국비 70%), 국가중요농업유산지역 중 핵심보전구역 관리(국비 50%)를 수행하는 '농업유산보전관리' 사업(이하 '보전관리사업')으로 구성됨.

□ 동 사업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81]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8개의 국가중요농업유산이 지정되어 있고, 이 중 5개는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82]으로 등재되어 관리되고 있음.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현황 】

국가중요농업유산			세계중요 농업유산 등재
지정연도	지정번호	명칭	
'13	제1호	청산도 구들장 논	○('14)
	제2호	제주 밭담	○('14)

81) 제30조의2(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82) 세계 중요 농업 유산 시스템(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GIAHS)은 어떤 국가 또는 지역의 사회나 환경에 적응하면서 몇세기에 걸쳐 발달하고 형성되어 온 농업적 토지 이용, 전통적인 농업과 관련하여 육성된 문화, 경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세계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차세대에게 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2년에 식량 농업 기구 주관으로 창설한 제도임

국가중요농업유산			세계중요 농업유산 등재
지정연도	지정번호	명칭	
’14	제3호	구례 산수유 농업	
	제4호	담양 대나무 밭농업	○(’20)
’15	제5호	금산 인삼농업	○(’18)
	제6호	하동 전통 차농업	○(’17)
’16	제7호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	
’17	제8호	부안 유유동 양잠농업시스템	
	제9호	울릉 화산섬 밭농업시스템	
’18	제10호	의성 전통수리 농업시스템	
	제11호	보성 전통차 농업시스템	
	제12호	장흥 발효차 청태전 농업시스템	
’19	제13호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	
	제14호	고성 해안지역 둠벙 관개시스템	
	제15호	상주 전통곶감농업	
’21	제16호	강진 연방죽 생태순환 수로 농업시스템	
’22	제17호	창원 독뫼 감 농업	
	제18호	서천 한산모시 전통농업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최근 5년간 동 사업 예산은 70% 미만으로 실집행되어, 연례적 실집행 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3회계연도의 경우는 53.9%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실집행을 보이고 있고,

특히 ‘발굴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은 28.2%로 상대적으로 더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농업유산발굴 및 보전관리지원 사업 실집행내역(최근5년간)】

(단위: 백만원)

연도	부처		지방자치단체								
	본예산 (A)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 (C/A)
							예산현액	집행액 (C)			
2019	2,638	2,638	2,595	1,338	3,933	2,860	2,595	1,809	918	155	68.6
2020	2,410	2,409	2,371	918	3,289	2,289	2,371	1,371	949	51	56.9
2021	2,689	2,687	2,650	949	3,599	2,761	2,650	1,845	788	50	68.6
2022	2,501	2,477	2,455	788	3,243	2,312	2,455	1,671	860	71	66.8
2023	2,629	2,529	2,485	860	3,345	2,193	2,485	1,417	1,084	68	53.9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2023회계연도 내역사업별 실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내역 사업	부처		지방자치단체								
	본예산 (A)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 (C/A)
							예산현액	집행액 (C)			
발굴지원 사업	1,453	1,355	1,355	689	2,044	1,025	1,355	410	1,009	10	28.2
보전관리 사업	1,130	1,130	1,130	171	1,301	1,167	1,130	1,008	75	59	89.2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발굴지원사업’의 실집행 부진의 원인으로,

ⅰ)「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추진계획 수립」(‘23.2.3.) 이후, 2차례에 걸쳐 지정 신청 안내(’23.2.6., ’23.4.24.)를 하였음에도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지 않아 신규지정이 불발됨에 따라 1년차 사업비가 불용되었고,

ⅱ) ’21년과 ’22년 지정된 국가농업유산의 경우 2년차 및 3년차 보조금이 전액 교부되었음에도 기념관 등 부지매입 지연, 생태공원 조성 계획 지연, 농업유산 환경정비 공사 설계 지연,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 및 활용 계획 수립 지연 등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정신청 저조와 실집행 부진에 따라 ‘발굴지원사업’ 2024년도 예산을 ’22년에 선정된 지역에 대한 3년차 사업비만 편성하고, 신규사업 및 2년차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한 바 있고[83], ‘보전관리사업’의 경우는 직불금사업으로의 변경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편성되지 못하여, 2024년도 동 사업 예산은 2023년 예산 26억 2,900만원 대비 34%에 상당하는 8억 9,000만원으로 축소되었음.

83)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지연과 실집행부진을 해소하고자 보조사업자를 예비선정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2025년에 신규사업 예산을 다시 반영할 예정으로 설명함.

【 농업유산발굴 및 보전관리지원 사업 예산편성 현황 】

사업명	'23년	'24년
ㅁ 농업유산 발굴 및 보전관리지원	2,629	-
국가중요농업유산 발굴보전지원	1,499	-
농업유산 보전관리	1,130	-
ㅁ 농촌경제활성화지원	40,954	25,276
농촌 휴양서비스 산업 육성	19,561	11,827
농업유산발굴 및 보전	-	890 - 3년차 2개소×635백만×국비7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향후 농림축산식품부는 '발굴지원사업의' 신청률 및 실집행률을 회복하고 사업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선도적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대상지를 사전 발굴하고, 지정 신청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정신청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에 따른 지자체의 효용감 증대를 위하여 농촌관광활성화 사업, 농촌축제 사업,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지원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대상지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선정 등 관련 절차를 조기에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13)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일자리연계 사업에 맞춘 공정관리 및 유사 사업과의 차별화 등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요자의 편의를 고려해 일자리 연계사업과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의 일정을 맞출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방이양 사업 등 유사 사업과의 차별화를 도모하며, 신규사업 공정률·주민만족도 등을 포괄하는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농촌에 주거 안정, 육아부담 완화, 문화·여가 등 청년층의 정책수요를 고려한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청년층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 48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음[84].

【2023회계연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	4,800	-	-	4,800	4,800	-	-	15,20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84)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4160-433)

(나) 검토의견

(1) 일자리연계 사업의 일정에 맞춘 공정관리 필요

□ 동 사업은 만 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의 주거·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9년 선정된 4개 지역(충북괴산, 충남서천, 전남고흥, 경북상주)의 경우 이미 입주를 완료하였고, '22년 1개소(경남밀양), '23년 4개소(강원삼척, 충남공주, 충북음성, 전북김제), '24년 8개소(강원정선, 강원인제, 충북보은, 충남부여, 전북남원, 전북순창, 전남곡성, 경남하동)를 선정하여 조성사업을 진행중에 있음.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지구 현황】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신규지구수(개소)	4	-	-	1	4	8
예산규모(백만원)	6,420	3,920	5,710	800	4,800	15,20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그런데 '22년 및 '23년에 보조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내역을 보면, 충북보은을 제외한 4개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100% 실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한국농어촌공사로 교부한 보조금의 경우에는 5개 지방자치단체 모두 그 실집행률이 모두 6%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음.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 연차별 실집행현황】

구분		농식품부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액(A)	집행액	교부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B/A)
경남밀양	2022	800	800	800	800	800	-	800	22	778	-	2.75
	2023	1,600	1,600	1,600	1,600	1,600	778	2,378	93	2,285	-	5.81
강원삼척	2023	800	800	800	800	800	-	800	19	781	-	2.78
충남공주	2023	800	800	800	800	800	-	800	24	776	-	3.0
충북음성	2023	800	800	800	443	-	-	-	-	-	-	0
전북김제	2023	800	800	800	800	800	-	800	14	786	-	1.75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이러한 실집행부진은 사업 진행의 지연으로 인해 초래되고 있는데, 경남밀양('22년 선정)의 경우 당초 '24년 입주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24년 8월에 이르러서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강원삼척, 충남공주, 충북음성, 전북김제('23년 선정)의 경우도 실시설계 수립 및 착공일정이 순차적으로 지연되고 있음.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 추진현황】

지방자치단체	사업대상자 선정	기본계획 용역발주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수립	착공	준공
경남밀양	’22.4	’23.1	’23.7	’23.12	’24.8	’25.6
강원삼척	’23.2	’23.11	’24.7	’24.9	’24.11	’25.12
충남공주	’23.2	’24.5	’24.8	’24.10	’25.2	’25.11
충북음성	’23.2	’23.9	’24.7	’24.11	’24.12	’25.12
전북김제	‘23.2	’23.11.	’24.7.	’25.4.	’25.5.	’26.5.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사업지연의 원인을 매칭비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추경편성, 사업부지 확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정에서의 지연 등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추진중인 청년농촌보금자리사업 조성지의 대부분이 임대형 스마트팜 등 일자리와의 연계사업으로 선정된 만큼 해당 사업과 일정을 맞추어 완공되어야만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보다 면밀한 일정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충남 공주의 경우 청년농촌보금자리 준공 예정일(’25. 11)이 임대형스마트팜 준공 예정일(’25. 6)이 보다 늦어져 이주에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역시 실시설계 수립 자체가 ’24년 말 이후로 예측되는 바 착공 및 준공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 일자리연계형】

구분		선정유형	연계사업 준공예정일
2022	경남밀양	일자리연계(스마트팜 혁신밸리)	2025. 6
2023	강원삼척	일자리연계(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2025. 12
	충남공주	일자리연계(임대형스마트팜)	2025. 6
	충북음성	일자리연계(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2025.12
	전북김제	일자리연계(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2025.12.
2024	강원인제	일자리연계(재생에너지 활용 임대형 스마트팜)	2026.12
	강원정선	일자리연계(와와플러스 창업가공센터 조성, 영농기술 인큐베이팅 공동생산단지 조성)	2026. 3
	충북보은	생활인프라 활용(청년층 정주기반 조성)	-
	충남부여	일자리연계(임대형 스마트팜등)	2026.12
	전남곡성	일자리연계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허브센터 등 임대형 스마트팜)	2026. 8
	경남하동	일자리연계(농공단지 등 영농 관련 일자리 공급)	-
	전북순창	일자리연계(자체사업, 임대농지 활용, 40필지)	2026.12
	전북남원	일자리연계(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2026.12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 지방자치단체 이양사업 등과의 차별화 필요

□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농촌 임대주택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동 사업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유사업 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한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지방자치단체 추진 청년 임대주택사업(예시)】

구분	나주시 취업청년임대주택	전남형 만원주택	괴산 행복 보금자리주택	해남 청년공공임대주택	화순 만원 임대주택
시작 연도	2023	2023	2020	2023	2023
사업 내용	관내 아파트와 협약을 체결해 리모델링 후 청년층에 보증금·임대료 지자체 전액 지원	지자체에서 전세 계약 후 청년층에 전전세 보증금 無, 월 임대료 1만원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청년층에 보증금 無, 월 임대료 12만원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공임대 주택 건립 (12평형 8세대 18평형 24세대 24평형 28세대)	지자체에서 전세 계약 후 청년층에 전전세 보증금 無, 월 임대료 1만원
지원 대상	관내 사업장에서 일자리를 얻고 전입하는 18~45세 청년 무주택자	청년·신혼부부 무주택 가구 일하는 근로자 주민등록 가능한 자	관외거주자 또는 괴산군 전입 2년 이하 취학(예정) 아동을 둔 세대, 귀농 및 창업 청년세대	청년 및 신혼부부 예정 (미정)	청년과 신혼부부 세대(49세 이하), 관내 거주 무주택자, 근로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거주 기간	2년 (1회 연장 가능, 최장 4년)	청년 (최대 6년 4+2년) 신혼부부 (최대 10년: 4+3+3년)	최장 10년 (자녀 초등학교 졸업 시 연장)	미정	2년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재원 (국비 : 지방비)	'23년 15억원 '24년 35억원 (지방비)	2,843억원 (광역소멸기금 2,529, 기초소멸기금 등 314)	112억원 (지방비)	15,100백만원 (광역소멸기금 9,060, 군비 6,040)	192억원 (기초소멸기금)
주관	나주시	전라남도	괴산시	해남군	화순군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19년～’20년 다수의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과정에서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역시 지방사무로 이양[85]됨.

이후 농촌 인구소멸 방지 및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청년층 귀농귀촌이 장려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재원 또는 기금활용을 통해 수행 중인 청년 대상 임대주택 사업은 그 목적, 사업내용, 지원 대상 등이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일부 중복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의 차별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성과지표 개선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이 시작된 ’19년부터 ’21년까지는 보조사업자 선정 건수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해 오다가,

동 사업이 선정부터 준공까지 3개년에 걸쳐 시행됨을 고려하여, 준공완료 사업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22년부터는 준공완료 지방자치단체 수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해 오고 있음.

---

8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에 따르면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서 보조금 지급 제한사업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 성과지표】

성과지표	구분	'20	'21	'22	'23	'24	'23목표치 산출근거	측정 산식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수(누적)	목표	4	4	-	-	-	-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결과
	실적	4	4	-	-	-		
	달성도	100	100	-	-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준공 개소 수(누적)	목표	-	-	4	4	4	사업기간이 3년임을 감안하여 목표 준공 개소 수(누적) 산출	
	실적	-	-	4	4	-		
	달성도	-	-	100	100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런데 '22년, '23년, '24년의 경우 공통적으로, 누적 4개 지역을 성과평가지표로 상정하고 있는 바, '19년에 선정된 4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22년에 모두 준공이 완료되어 '22년이후 새로 선정된 지역의 조성사업 진척률 등과 무관하게 성과를 100% 달성하게 되는 왜곡현상이 나타나게 됨.

□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실시중인 사업의 경우 공정계획 달성률, 실시완료된 사업의 경우는 입주자 및 주민 만족도, 정주여건개선 정도 등을 포괄하는 보다 세밀한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4)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 : LMO 종자 불법수입 및 유통방지 대책의 신속한 추진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가 「LMO 종자 불법수입 및 유통방지 대책」을 발표한 지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현재까지 동 대책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바,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대책을 조속히 완료하여 LMO 종자로 인한 농가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 사업은 신품종에 대한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 민간육종가 지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비 지원, 종자유통조사 등을 위한 사업임. 2023회계연도 예산 161억 8,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억 4,100만원, 이전용액 △4억원, 예비비 37억 9,5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 198억 1,600만원 중 181억 3,1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3,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5억 4,900만원을 불용하였음[86].

【 2023회계연도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	16,180	241	400 △800	3,795	19,816	18,131	136	1,549	17,643
- 종자유통조사	938	-	44 △40	3,795	4,737	4,730	-	7	1,363

86)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품종심사 및 재배시험(6432-301)

(나) 검토의견

□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LMO[87]”라 함)는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삽입하여 DNA의 일부를 변형시킨 생물체로서,

농업 분야에서는 농작물의 생산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일부 활용되고 있으나, LMO가 인체 및 환경 등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현행 법령은 LMO를 생산·수입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해성 심사 및 생산·수입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88].

□ 그런데 2023년 3월 국내에서 생산된 일부 주키니호박의 종자가 승인되지 않은 LMO로 밝혀짐에 따라[89]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간

87) LMO : Living Modified Organism, 농식품 분야에서는 유전자변형작물·유전자변형농산물·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

88)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제8조, 제12조 및 제22조의4에 따른 승인을 받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해성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따라 수입 시에 위해성심사를 받은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조에 따라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
2. 제12조에 따라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하려는 자
3. 제22조의4에 따라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려는 자

제8조(수입승인 등) 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생산승인 등) 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9) LMO 종자 발견 경위(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3.03.26.)에서 발췌)

> 이번에 승인되지 않은 LMO 종자가 발견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작년 외국산 주키니 호박 종자 수입 검역 절차에서 LMO가 발견됨에 따라, 국립종자원은 국내에서 신품종 등록을 위해 출원되는 주키니 호박 종자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LMO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 A 기업이 신규 개발하여 출원한 주키니 호박 종자가 LMO로 판정되었으며, 해당 종자는 B 기업이 판매한 종자를 사용하여 육종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국립종자원이 주키니 호박 종자(121종)와

(2023.03.26.~04.02.) 주키니호박 농가의 출하를 잠정 중단시키고 전국의 주키니호박 재배농가(503개 농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18개 농가가 미승인 LMO 종자로 주키니호박을 재배 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LMO로 밝혀진 주키니호박은 전량 폐기 처분되었으나 주키니호박의 폐기 및 출하 중단 등으로 농업인들이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었으며,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예비비 37억 9,500만원을 배정받아 관련 농가 및 도매시장에 약 28억원을 지급하고 잔액 9억 8,440만원을 반납하였음.

【LMO 종자 발견 경위】

구 분	주 요 내 용
2023.03.02.	- A사 주키니호박 종자 생산·판매 신고 접수
2023.03.14.	- A사 주키니호박 종자 LMO 간이검정 결과 양성 판정
2023.03.20.	- A사 주키니호박 종자 LMO 정밀검정 결과 양성 판정 - A사 주키니호박 종자 모계로 B사의 “가야금” 사용확인 및 수거 - B사 현장조사 및 주키니호박 시료 3종 수거
2023.03.23.	- B사의 “가야금·대금” 양성 판정 및 폐기명령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주키니호박(121종), 애호박 종자(126종), 단호박(100종) 전체에 대해 LMO 검사를 실시한 결과 B 기업의 주키니 호박 종자 2종이 LMO로 확인되었고, 애호박 종자에서는 LMO가 검출되지 않았다. 해당 LMO 종자 2종은 B 기업이 미국에서 승인된 종자를 수입하여 국내 검역 절차 등을 밟지 않고 육종하여 판매한 것으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유통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예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예비비 배정액	집행액	반납액
3,795,000	2,810,599 ※ 피해농가 등 지원액 : 2,807,299 예비비 회계감사 : 3,300	984,40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업체가 2010년경 인터넷 구매를 통해 미승인 LMO 종자를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파악하였는 바,

「식물방역법」 제12조가 식물 등을 인터넷으로 구매한 후 국내로 반입(우편물 또는 탁송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90], 해당 업체가 검역을 받은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 국내 검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종자를 국내로 반입하였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음[91].

□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역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미승인 LMO의 국내 반입이 우리 농가에 막심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경각심과 재발 방지를 위해 면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는 바,

---

90) **「식물방역법」 제12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 ⑨ 제8항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는 그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91) 국립종자원 등은 해당 업체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신품종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공소시효 경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되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미승인 LMO의 국내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의 협의를 거쳐 2023년 6월 「LMO 종자 불법수입 및 유통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음.

그 주요내용은 ①종자의 수입과정에서 검역을 강화하고 ②종자의 출원·판매신고·유통 단계에서 LMO 검사를 강화하며 ③미승인 LMO 종자의 수입·유통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임.

【LMO 종자 불법수입 및 유통방지 대책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대 책(2023.06.)	추진 현황(2024.07.)
1 수입(통관) 단계	**① 모든 수입종자에 대해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 소량종자(소립종 100g, 중·대립종 500g)에 대해 검역증명서 제출 면제 해제(관련고시 개정)	종자류의 범위에 수분용 꽃가루를 추가하고, 모든 종자류 수입 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를 위한 고시 개정 추진중 * 고시 개정에 따른 이해관계자(종자협회 등) 의견수렴 완료 * 현재 국조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검토 중
	② 우편·특송을 통한 수입식물 검역미신고 시 제재 강화 * 과태료(1회 10만/2회 20만/3회 40만) → 벌칙(300만원 이하 벌금) 적용 (식물방역법 개정) ** 고의로 미신고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설 (식물방역법 개정)	정부 측의 「2024년도 법률안 국회제출 계획」에 따르면 2024년 9월 국회 제출 예정
2 국내 생산·유통 단계	**① 신품종 보호 출원 및 생산·수입 판매 신고 시 LMO 검사 확대** * ('23년) 8개 품목 → ('28년) 38개 품목[92]	'24년부터 국경검사 대상 38개 전체 품목으로 검사 추진 중

구 분	주 요 대 책(2023.06.)	추진 현황(2024.07.)
	② 종자원에 기 등록된 38개 품목에 대한 LMO 전수검사 실시	3개 품목(호박, 토마토, 멜론)의 전수검사를 추진 중이며, '28년까지 38개 품목 전수검사 완료 계획
	③ 신품종 보호 출원 및 생산·수입 판매 신고 시 LMO 검사결과서 첨부 의무화 * 대상 종자, LMO 민간인증기관 지정 및 LMO 검사 절차 등 신설	LMO 국경검역 대상 38개 작물은 신품종 출원 등록 및 생산·수입판매 신고 시 국가기관에서 무상으로 LMO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된 품종만 수리('24.3.~)
3 역량 강화·피해지원	① 종자 LMO 검사 전문성 제고 * 유통관리과·수도권 지원 신설, 국제종자검정센터 직제화, 조사·검사인력 확충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진행중
	② 수입식물 X-ray 검색역량 강화 * 통관단계에서 X-ray 검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비 확충 및 관세청과 협력 확대	우정사업본부와 협의하여 인천국제우편물류센터(IPO)에 검역 전용공간을 확대(400㎡)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우정사업본부의 IPO 증축 일정에 따라 예산 확보 및 검역 X-ray 설치 추진
	③ 피해지원 법적 근거 마련 및 필요예산 확보 * LMO법 개정을 위해 산업부와 협의	산업부 주관으로 LMO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23.8.~12.)하였으며,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 그런데, 「LMO 종자 불법수입 및 유통방지 대책」이 발표된 지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현재까지 동 대책의 추진이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이와 유사한 사례가 언제든지 재발할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

92) 전 세계적으로 LMO가 개발·승인되어 상업적으로 유통되거나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으로서, 종자용·사료용·농업가공용으로 수입되어 원형 상태로 환경 방출 우려가 있는 품목

○ 첫째, 농림축산식품부는 종자 수입 시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93]를 개정하여 소량 종자도 식물검역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식물방역법」을 개정하여 우편·특송을 통한 수입식물의 검역 미신고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나,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개정안의 경우 2024년 7월 현재까지 규제심사 등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정부 차원의 「식물방역법」 개정안은 국회로 제출되지 않은 상황임.[94]

○ 둘째, 농림축산식품부는 다른 나라에서 LMO가 개발·승인되어 상업적으로 유통되거나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38개 품목[95]의 LMO 여부 확인을 위해 국립종자원에 보관 중인 종자를 전수검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나[96],

2024년 7월 현재 3개 품목(호박·토마토·멜론)에 대해서만 LMO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진행률 8.4%), 인력 및 장비 부족

93)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및 승인 절차·방법」
94) 21대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식물방역법」 개정안이 의원발의(윤미향의원 '23.7, 이달곤의원 '23.11)되었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이병진 의원 '24.6)
95) 감자, 까마중, 담배, 렌즈콩, 멜론, 면화, 밀, 벤트그라스, 벼, 사과, 사탕무, 아마, 알팔파, 옥수수, 유채(Argentine Canola, Polish Canola), 자두, 장미, 치커리, 카네이션, 콩, 토마토, 파파야, 호박, 가지, 강낭콩, 겨자(갓), 사탕수수, 동부, 바나나, 밤, 유칼립투스, 카사바, 팔레놉시스(호접란), 페튜니아, 포플라, 피망/파프리카, 홍화
96) 국립종자원은 「종자산업법」 제46조 및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4조에 따라 품종보호권 설정등록품종, 국가품종목록 등재품종,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품종의 종자를 보관하고 있는 바, 이 중 LMO 검사대상은 38개 품목의 12,403점의 종자임.

등의 사유로 2028년에야 38개 품목에 대한 검사를 완료할 수 있다는 입장임.

○ 셋째, 농림축산식품부는 LMO 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립종자원의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원활히 완료되지 못하여 조직 및 인력 확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국립종자원 조직 및 인력 확충 필요성】

구 분	조직 및 인력 확충 필요성
유통관리과 신설	현재 1개 부서가 업체육성·수출지원 등의 육성업무와 유통조사·LMO관리·과수화상병·신품종 권리침해 등 규제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바, 유통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담부서 필요
수도권 지원 신설	종자·육묘업체의 수도권 집중, 반려식물 문화 확산에 따른 유통조사 증가, LMO관리·과수화상병 예찰·보급종 보증 및 품종보호 출원품종 신속심사 등 수도권지역 기능 강화 필요
종자검정연구센터 직제화	현재 종자의 유전자 분석 업무를 맡고 있는 종자검정연구센터가 임시직제로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정원 확충 및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직제에 반영할 필요 * 유전자 분석량 : ('19)255건 → ('20)541 → ('21)567 → ('22)1,016 → ('23)2,615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넷째, 농림축산식품부는 LMO로 인해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피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LMO로 인한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2024년 7월 현재까지 구체적인 개정안이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97]

□ 이와 같은 「LMO 종자 불법수입 및 유통방지 대책」의 미흡한 추진 실적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신품종 보호 출원 및 생산·수입·판매 신고 시 LMO 검사 확대(8→38개 품목), 신품종 보호 출원 및 생산·수입 판매 신고 시 LMO 검사결과서 첨부 의무화 등의 관련 대책의 추진은 완료했으나,

「식물방역법」 및 관련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개정은 아직 진행중으로, 종자 LMO 검사 전문성 제고 등의 관련 대책과 같이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 그러나, 「LMO 종자 불법수입 및 유통방지 대책」이 발표된 지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고, LMO로 인한 농가 피해와 그 파급효과가 매우 광범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대책의 추진 실적은 미진해 보이는 바, 농림축산식품부는

97)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법률의 주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하여 피해지원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23.8.~12.)하고, 구체적인 개정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입장임.

관련 대책을 조속히 완료하여 LMO 종자로 인한 농가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15) 과수 무병묘목 생산·공급지원 : 과수 작물별 공급 불균형 해소 필요

○ 과수 작물별로 무병묘목 공급 실적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 바, 공급률이 저조한 과수 작물은 농가 선호 품종을 사전에 파악하여 조기에 무병묘목 생산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무병묘목이 과수 작물별로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과수 무병묘목(無病苗木) 생산·공급지원 사업은 우리 과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무병묘목의 생산 및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 22억 5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98].

【 2023회계연도 과수 무병묘목 생산·공급지원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과수 무병묘목 생산·공급지원	2,205	-	4 △4	2,205	2,205	-	-	2,205

98)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과수 무병묘목 생산·공급지원(6432-305)

(나) 검토의견

□ 무병묘목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으로 과수의 생산성을 높이고 고품질의 과실을 생산하기 위하여 주로 과수작물의 묘목에 적용되고 있음[99].

과수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경우 생산성이 20~40% 감소되며, 당도가 낮아지고 기형과가 발생하는 등 과실의 품질저하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과수의 바이러스 감염률을 30~65% 정도로 추정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2004년부터 무병묘목을 생산·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왔으며, 2016년에는 「무병묘목 생산·유통 활성화 방안」을, 2019년에는 「과수묘목 산업 선진화 대책」을 수립하여 무병묘목 공급률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나, 무병묘목 공급기반 부족 등으로 인해 2021년까지 무병묘목 보급률은 1.7%에 그쳤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부터 동 사업을 신설하여 무병묘목 생산비 및 구입비 등을 지원[100]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2022년부터 무병묘목 공급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

99) 무병묘목 생산방법 : 어린 식물체를 열처리한 후 생장점을 잘라내어 항바이러스제가 포함된 배지에서 조직배양하여 생산한 묘목

100) 한국과수농협연합회,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무병묘목 생산·공급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30년까지 주요 5대 과수묘목(사과·배·감귤·포도·복숭아) 유통량의 60%를 무병묘목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임.

【무병묘목 공급목표 및 공급률】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6년	'30년
무병묘목 공급목표	-	-	-	5%	10%	20%	40%	60%
무병묘목 공급률	0.9%	1.0%	1.7%	6.6%	10.3%	-	-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의 주요 성과와 무병묘목 공급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2024년 1월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여 2023년 기준 주요 5대 과수작물의 무병묘목 공급률 10.3%를 달성하였다고 밝힌 바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3년 사과 등 5대 과수 무병묘 공급 10% 달성!

- 과수 무병묘 획기적 공급 확대로 과수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지다! -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 이하 종자원)은 국내 과수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5대 과수 작물에서 묘목 수요량의 10.3%를 무병묘로 공급하였다고 밝혔다.

* 5대 과수 작물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4.01.21.)

□ 그런데 5대 과수 작물별로 무병묘목 공급 실적을 살펴보면,

사과·배·감귤의 무병묘목 공급률은 각각 12.3%, 11.7%, 21.9%였던 반면, 포도는 2022년까지 무병묘목 공급 실적이 없다가 2023년에서야 7.1%의 공급률을 보였으며, 복숭아는 1주의 무병묘목도 공급하지 못하는 등 과수 작물별로 무병묘목 공급 실적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

【과수별 무병묘목 공급 실적】

(단위 : 주)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사과	62,000 (2.5%)	47,310 (1.9%)	57,550 (2.3%)	27,640 (1.1%)	31,301 (1.2%)	51,373 (2.0%)	227,050 (9.0%)	311,829 (12.3%)
배	-	-	1,000 (0.4%)	5,500 (2.2%)	1,000 (0.4%)	9,600 (3.9%)	13,500 (5.5%)	28,872 (11.7%)
감귤	-	943 (0.9%)	-	895 (0.9%)	4,825 (4.8%)	5,315 (5.3%)	18,020 (17.8%)	22,100 (21.9%)
포도	500 (0.1%)	600 (0.1%)	-	-	-	-	-	40,000 (7.1%)
복숭아	-	-	-	-	-	-	-	0 (0%)
계	**62,500 (1.6%)**	**48,853 (1.3%)**	**58,550 (1.5%)**	**34,035 (0.9%)**	**37,126 (1.0%)**	**66,288 (1.7%)**	**258,570 (6.6%)**	**402,801 (10.3%)**

* 공급률 : 해당 과수 무병묘 공급량 ÷ 과수별 묘목 유통량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특히, 포도의 연간 무병묘목 수요량은 56만 3,000주이고, 복숭아는 46만 4,000주로서, 과수시장에 포도·복숭아 무병묘목에 대한 수요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2가지 과수 작물은 저조한 공급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임.

【과수별 무병묘목 수요·공급량('23 기준)】

(단위 : 주)

구 분	사과	배	감귤	포도	복숭아
무병묘목 수요량	2,525,000	247,000	101,000	563,000	464,000
무병묘목 공급량	311,829 (12.3%)	28,872 (11.7%)	22,100 (21.9%)	40,000 (7.1%)	0 (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무병묘목 생산에 약 10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101], 포도·복숭아의 경우 농가의 품종 선호가 빠르게 변화하여 최근 선호되고 있는 품종[102]에 대한 무병묘목 생산이 없거나 부족하여 무병묘목 공급 실적이 저조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무병묘목 공급지원 사업은 FTA 등으로 인한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우리 과수산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101) 무병화 기간(10년) : 품종선발(1년) → 생장점 배양 및 바이러스 제거(2년) → 원원종 생산(2년) → 원종생산 및 특성조사(3년) → 모수생산(1년) → 무병묘 생산(1년)

102) 포도 : 샤인머스캣, 캠벨얼리, 거봉, 블루사파이어
복숭아 : 신비, 유명백도, 천중도백도, 경봉

무병묘목 공급이 특정 과수에만 편중될 경우 우리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바,

공급률이 저조한 과수 작물은 농가 선호 품종을 사전에 파악하여 조기에 무병묘목 생산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무병묘목이 과수 작물별로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한편, 동 사업의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동 사업은 5대 과수 작물의 평균 무병묘목 공급률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동 사업이 당초 성과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과수 작물별 무병묘목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 사업의 성과지표를 5개 과수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과수 무병묘목 생산·공급지원 사업 성과지표】

성과지표	구분	'20	'21	'22	'23	'24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무병묘목 공급률(%)	목표	-	-	5	9	20	'과수 묘목산업 선진화 대책' 계획 수립을 통한 연간 목표 설정	5대 과종의 유통량(390만주) 대비 무병묘목 공급량	무병묘목 관리기관의 무병묘 검사결과 수집
	실적	-	1.7	6.6	10.3	-			
	달성도	-	-	132.0	114.4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16)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 : 온실가스 감축실적 정부구매 방식(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사업내용 변경 방안 검토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 대신, 온실가스 감축실적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반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저탄소 농림축산식품 기반구축 사업은 저탄소 농업기술 활용,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 등을 통하여 농작물·가축 등 농업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58억 2,1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103]

【 2023년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아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저탄소농림 축산식품 기반구축	5,821	5,821	-	-	5,821	5,821	-	-	6,251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1,440	1,440	-	-	1,440	1,440	-	-	819

103) 회계(기금)-세부사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 (2240-312)

(나)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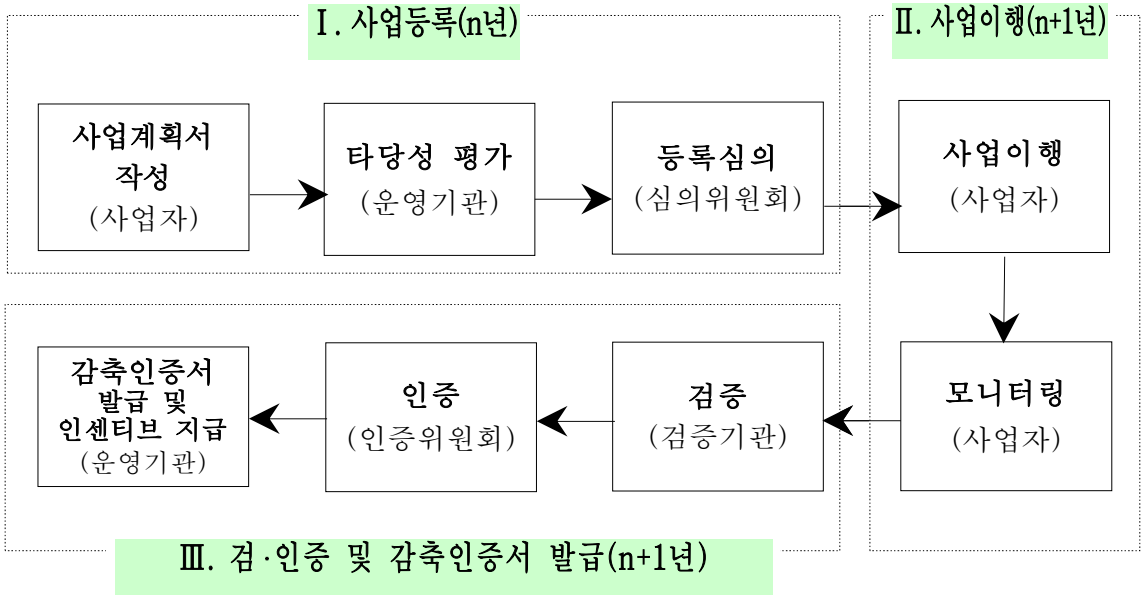
□ 저탄소 농림축산식품 기반구축 사업의 내역사업 중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농업인이 저탄소 농업기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우,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실적만큼 인센티브(1만원/tCO_2[104])를 제공하여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는 것으로서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농가가 저탄소 농업기술을 도입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게 되면 검증기관[105]의 검증과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심의위원회[106]의 인증을 거쳐 운영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온실가스 감축인증서를 농가에 발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104) 이산화탄소 1톤을 삭감한 효과를 나타내는 단위
105) 한국표준협회, 한국품질재단 등
106)「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제4조에 따라 기후변화 및 농업분야 관련 전문가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절차 】



□ 실제로 사업운영 기간('13~'23)의 연도별 감축실적 및 정부 구매 현황을 보면 총 156,370tCO$_2$의 탄소를 감축하여 15억 6,849만원의 감축실적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실적 및 인센티브 제공 실적 】

(단위: tCO$_2$, 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감축량	11,425	9,738	14,292	19,944	25,115
누적감축량('13~)	87,281	97,019	111,311	131,255	156,370
인센티브 지급액	11,425	9,738	14,292	19,868	25,115
누적 지급액('13~)	87,836	97,574	111,866	131,734	156,849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그런데 온실가스 감축실적과 인센티브 제공실적을 살펴보면 농업·농촌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은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고, 이에 따라 늘어나는 감축실적에 대해 정부가 직접 인센티브를 계속 지급할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이 갈수록 증가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사업이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음.

□ 이를 감안할 때 농식품부는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일부 감축실적은 탄소상쇄[107] 물량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탄소 크레딧 거래 시장 구분 】

▸ 탄소 크레딧(감축실적)[108]을 거래하는 탄소시장은 ① 규제시장과 ② 자발적시장으로 구분

- 규제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할당받은 규제기업 등이 배출허용량을 달성하기 위해 배출량 과부족분을 거래하는 시장 (예: 배출권거래제)
- 자발적 시장은 자체적인 배출목표를 설정한 기업 등이 배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량 과부족분을 거래하는 시장 (예: Verra(미국), Gold Standard(스위스) 등)

107) **탄소상쇄**란 기업이나 조직이 직접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고 외부 사업을 통해 감축하는 것을 말함.

108) **탄소 크레딧**이란 온실가스의 배출 삭감 또는 흡수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생성되는 배출 삭감·흡수량을 가치화한 것으로서 탄소 크레딧은 기업, 제품 등 탄소중립 대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탄소 배출의 감축노력에 부가적·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예) 애플워치(울트라2)의 경우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63.2kgCO_2eq 중 51.2kgCO_2eq은 직접감축, 12kgCO_2eq은 탄소 크레딧으로 상쇄

【 자발적 시장의 2023년 탄소 크레딧 가격 동향 】

(단위: 달러/톤)

발행사유	CO_2 제거기술	배출회피 기술	재생에너지
크레딧 가격	13~15	4~6	3~4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에 따르면, 규제 시장에서 배출권거래제 규제대상[109]이 아닌 자의 인증실적(KOC[110])은 2024년 기준 약 11,850원에 거래되고 있고, 자발적 시장에서 탄소 크레딧은 CO_2 제거 기술·배출회피 기술 등의 발행사유에 따라 일반적으로 2023년 기준 3~15달러(약 4,000~20,000원) 선을 유지하였음.

□ 현재 인센티브 지급 단가가 10,000원임을 고려할 때 사업내용 일부를 탄소 크레딧 발급으로 변경한다면 농업·농촌의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정부 재정부담을 일정 수준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10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은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속하는 온실가스 배출업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로 지정·고시한다.

1.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_2 -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_2 -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가. 직전 계획기간 당시 할당대상업체
   나.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관리업체 중에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한 업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110) Korean Offset Credit, 배출권거래제 규제대상이 아닌 자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인증 받은 실적

특히, 최근 ESG[111] 경영 실천 기업이 증가하면서 자발적 탄소 크레딧(감축실적) 수요가 증가하고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므로[112] 농업 분야에서도 소규모 개별농가의 감축량을 규모화하고 거래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따라서 자발적으로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하는 농가의 감축량을 인증해 탄소 크레딧을 발급하고 기업에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정부구매 방식 대신 탄소 감축실적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113]

111)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기업의 사회 · 환경적 활동까지 고려하여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기업성과지표를 뜻함.
112) 자발적 탄소 크레딧 거래량 : ('17) 47백만톤 → ('21) 239백만톤
113)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 실적·성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신규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방식을 일부 변경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다고 설명함.

17)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성과목표 및 성과측정 방식 개선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한 분석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사업과정 및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 및 성과측정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은 소규모 영농형태양광 시설을 구축하여 적정품목, 재배기법 등을 실증하고, 농촌 마을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충, 리모델링 등을 통해 농촌 마을 단위의 RE100 실증을 지원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41억 4,2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114]

【 2023년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4,142	4,142	-	200	4,142	4,142	-	-	2,816
농업·농촌 RE100실증지원	3,672	3,672	-	-	3,672	3,672	-	-	2,766

114) 회계(기금)-세부사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2240-401)

(나)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은 마을별 에너지 사용량을 진단하고 이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확충하며, 공동이용시설을 에너지 절감형으로 리모델링하여 농촌 마을 단위의 RE100[115]의 실현가능성을 보여주는 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의 마을법인에 ① 재생에너지 마을발전소[116] 건설, ② 주택 및 농업 생산·가공·유통시설 재생에너지 설치, ③ 공동이용시설 에너지절감형 리모델링, ④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의 총 4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임.[117]

---

115)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고 약속하는 글로벌 캠페인

116) 마을발전소의 운영주체는 발전시설 설치지역의 마을주민(단, 마을 가구의 과반수가 참여하여야 함)으로 구성된 마을법인으로, 이때 마을법인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나 「민법」상의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음.
한편, 마을법인의 정관에는 발전사업 시행에 관한 내용 및 수익금 분배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117) **【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 개요 】**

구 분	내 용
재생에너지 마을발전소 건설	농촌 마을에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국·공유지, 마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농촌 주민들이 공동 운영·관리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 (1개소당) 976백만원 × 국비 50% = 488백만원 (1년차 : 97.5 2년차 : 390.5)
주택 및 농업 생산·가공·유통시설 재생에너지 설치	농업인 등이 운영하는 생산·가공·유통시설의 건물 지붕, 유휴부지 및 주택 등에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 (1개소당) 450백만원 × 국비 50% = 225백만원
공동이용시설 에너지절감형 리모델링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에 재생에너지 설치 및 단열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 향상 건축물로 리모델링·개축 등 * (1개소당) 310백만원 × 국비 50% = 155백만원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마을별 에너지 사용량 진단, 최적 설치 방안·용량 등 도출, 마을법인 관련 지원, 사업 만족도 등 설문조사 지원 * (1개소당) 50백만원 × 국비 100% = 50백만원 (1년차 : 77.5 2년차 : 77.5)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동 내역사업의 패키지를 이루는 네 가지 사업 중 '재생에너지 마을발전소 건설'의 사업 추진절차를 살펴보면,

① 사업을 공모하여 지원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고, ② 컨설팅을 거쳐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서를 작성하며, ③ 작성된 기본계획서를 농식품부가 승인하고, ④ 마을발전소의 세부설계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시공하여 준공 후 전력수급계약 등의 절차를 거치는 형태로 이루어짐.

【 마을발전소 발전사업 추진 절차 】

추진절차		세부내용	추진(지원) 주체
①사업 공모		○사업 공모 → 사업 신청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선정심의회 → 사업수행기관 선정	농식품부/ 지자체
⇩			
②컨설팅	에너지 진단/ 건축물 현황조사	○지자체 사업계획서에따라 적정 용량 산출 ○공동이용시설 (기존)건축물 현황조사 ○건축물 안정성 등 검토 실시	컨설팅 업체
	⇩		
	기본계획 작성	○성과품을 토대로 지자체 기본계획서 작성	농어촌공사 →지자체
⇩			
③기본계획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	지자체→ 농식품부
⇩			
④마을발전소	세부설계	○세부설계 실시 ○세부설계 내용을 토대로 인허가 진행	농어촌공사/ 지자체
	⇩		
	착공	○세부설계에 따라 마을발전소 시공	농어촌공사/ 지자체
	⇩		
	준공	○사용 전 검사(한국전기안전공사) ○전력수급계약	농어촌공사/ 지자체

※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

□ 동 내역사업은 2022년부터 매년 4개 지자체를 사업대상으로 선정하여 2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 36억 7,200만원의 국비를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4년 5월 말 현재까지 계획된 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강원 춘천 1개소에 불과하고 춘천을 제외한 7개 지자체에서 '기본계획 수립 지연, 사업자 선정 문제, 전력계통[118] 여유용량 소진'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히 사업 지연사유에는 해당지역의 전력계통 여유용량 소진에 따라 사업 진행을 중단하는 상황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설령 마을발전소가 준공되더라도 한국전력공사에의 신청을 거쳐 전력계통에 연계·접속하는데 대기가 발생하고, 대기 과정에서 이미 준공된 발전소 시설의 내구도는 소모되기 때문에, 준공 이전에 일단 공사 진행을 중단하고 전력계통 보강공사 등을 통하여 여유용량의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생각됨.

118)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서는 전력계통을 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관리하는 체제로 정의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 전력용어사전에서는 전력계통을 전기를 생산하여 수용가까지 공급하는 설비로, 발전설비와 송전·변전·배전설비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시스템으로 소개하고 있음.

【 2023년 기준 RE100 실증지원 사업 추진현황 】

지 역 (선정연도)		예산액	집행액	추진현황	사업 지연사유
강원 (3개소)	춘천 ('22)	468	468	준공 완료	-
	강릉 ('23)	400	-	사업 추진중(컨설팅 완료)	해당지역 전력계통 여유용량 소진 (전력계통 보강 공사 중)
	정선 ('23)	400	200	①마을발전소: 태양광 설비 업체 선정 ②주택·가공유통시설: 태양광 설치 공사 중 ③리모델링: 세부설계 완료 후공사 중	사업자 선정이 늦어져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지연
충남 (3개소)	서천 ('22)	468	-	①마을발전소: 세부설계 업체 선정 ②주택·가공유통시설: 준공 완료 ③리모델링: 공사 중	해당지역 전력계통 여유용량 소진 (전력계통 보강 공사 중)
	홍성 ('22)	468	-	①마을발전소: 세부설계 완료 ②주택·가공유통시설: 주택 준공 완료, 가공시설 공사 중 ③리모델링: 공사 중	지자체 기본계획 변경,[119] 해당지역 전력계통 여유용량 소진 (전력계통 보강 공사 중)
	보령 ('23)	400	-	①마을발전소: 세부설계 업체 선정 중 ②주택·가공유통시설: 기본계획 변경 예정 ③리모델링: 세부업체 선정 중	사업자 선정이 늦어져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지연
전남 (2개소)	화순 ('22)	468	-	①마을발전소: 세부설계 미완료 ②주택·가공유통시설: 준공 완료 ③리모델링: 공사 중	해당지역 전력계통 여유용량 소진
	화순 ('23)	400	-	사업 추진중(컨설팅 완료)	해당지역 전력계통 여유용량 소진
합계	8개소	3,472	668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119) 토지소유자의 변심에 따른 사업부지 변경으로 인한 기본계획 변경

□ 그런데 이러한 지연 사유 역시 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들이므로 전체적으로 사업 준비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음.

□ 구체적으로, 농업기반시설·농촌 마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마을발전소 설치 사업의 경우[120] 세부설계 완료 이후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준공 후에는 한국전력공사에 계통연계를 신청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함.

□ 그러므로 '해당지역 전력계통 여유용량 소진'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사전에 사업 추진과정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와 전력계통 여유용량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인 한국전력공사 등과의 협조를 긴밀히 하는 등 충분히 대비하여야 했고,

기존의 사업 내용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자립마을별 전력생산량 분석 및 해당 농촌의 전력 수요를 분석하여 해당 마을에 맞는 대안을 마련하는 등[121] 사업추진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음.

---

120)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는 관련 인허가를 받은 후 발전소 건설공사를 진행, 이후 한국전력공사에 계통연계 신청, 설비에 대한 사용전 검사 및 신재생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를 발급받기 위한 확인 절차를 거쳐 사업을 개시함.

121) 예를 들면, 동 내역사업이 마을 단위의 RE100 실증사업이라는 점에서, 재생에너지 자가발전 유인책을 통한 자가소비 확대로 사업내용을 개편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 또한, 농식품부는 동 사업의 성과에 관하여 RE100 실증사업자를 매년 목표(4개소)만큼 지원하여 100% 실적 달성하였다고 국회에 보고하였는데, 이는 성과측정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보임.

□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의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농촌 공동이용시설 에너지 절감형 실증지원 개소'의 달성 여부를 시설의 준공 등 실증사업의 추진 정도와 무관하게, 단순히 당해 연도 예산을 반영한 RE100 실증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개수로 측정하였음.

【 '23년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성과지표 】

성과지표	구분	'20	'21	'22	'23	'24	'23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농촌에너지자립 모델실증지원 (개소)	목표	신규	2	4	4	4	'23년 예산을 반영한 실증지원 개소수	농촌 공동이용시설 에너지 절감형 실증지원 개소수	공동이용시설 에너지자립 리모델링 개소수
	실적	신규	2	4	4	-			
	달성도	신규	100%	100%	100%	-			

□ 이는 자료수집방법에서 에너지자립 리모델링 개소수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도 부합하지 않고, 예산집행의 성과나 사업의 추진 정도 역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 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측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122]

122) 기획재정부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서도 지표 설정은 가급적 프로그램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고, 결과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 과정지표와 산출지표를 병행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 특성상 결과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 단순산출량이 아닌 산출의 질(quality)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제시하고 있음.

농촌 마을에서 사용하는 화석에너지를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원으로 전환하고, 건물의 열 손실을 줄이는 에너지 효율화 등을 통해 지역의 에너지자립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 및 성과측정 방식을 설정할 필요가 있었음.

□ 따라서, 농식품부는 동 내역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사업과정 및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 및 성과측정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123)]

123) 한편, 동 내역사업의 사업지 대부분은 청정에너지원 중 태양광만을 활용하고 있는데, 농촌에서는 태양광 외에도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할 수 있고 동 내역사업이 태양광 실증사업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전반을 포함하는 RE100 실증사업이므로, 향후 농촌에서의 태양광 외 재생에너지원 활용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18)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의 효과성 검증 방안 마련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길고양이의 개체수 측정, 서식형태, 주변환경 등의 조사를 통하여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의 효과를 파악하고 지역별 중성화 사업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은 동물보호관련 교육·홍보와 민간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 등을 통해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 123억 2,800만원 중 107억 7,600만원이 집행되었고 15억 5,200만원은 불용되었음.[124)]

【 2023년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아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12,328	12,328	-	-	12,328	10,776	-	1,552	12,532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3,820	3,820	-	-	3,820	3,820 [3,606]	-	-	4,742

124)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동물보호 및 복지대책(3741-338)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은 길고양이[125] 개체 수 증가에 따른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길고양이의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국가 20%, 지자체 80%)하는 사업임.[126]

□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은 2018년 52,178마리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매년 꾸준히 사업량이 증가하였고 그 결과 2023년까지 6년간 총 106억 8,2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48만 9백여 마리의 길고양이를 중성화하였음.

【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연도별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액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사업량 (마리)	52,178	64,989	73,632	83,539	104,434	102,163	480,935
예산집행액 (백만원)	684	1,069	1,062	1,108	3,154	3,605	10,682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125) 길고양이는 도심지나 주택가에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말함(「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제2조)

126) 【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절차 】

민원 접수	⇨	포 획 (Trap)	⇨	중성화 수술 (Neuter)	⇨	후처치 (1~3일이상)	⇨	방 사 (Return)
계획 수립		위탁기관·단체		동물병원		동물병원		위탁기관·단체

○ (민원인) 신고 → (시·군·구) 접수, 위탁업체에 민원접수 사항 전달
→ (위탁업체) 포획인 동원, 민원인과 연락 후 현장 출동
○ (포획인) 현장 출동 → 사진 촬영 및 포획 → 지정 동물병원으로 이송
○ (동물병원) 중성화 수술, 후처치 및 회복 → (포획인) 포획장소에 방사

□ 그런데 중성화 사업으로 개체 수 증가를 막으려면 지역 내 중성화된 개체 비율이 75%를 넘으면서 매년 10% 이상을 추가적으로 중성화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수치는 한 번도 달성된 바 없다는 지적 등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음.[127]

□ 또한 ① 동물보호센터의 길고양이 구조 건수, ② 공중위생 문제·소음·기물파손 등 길고양이로 인한 민원 건수, ③ 길고양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등을 취재한 언론의 보도 건수 등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의 성과[128]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

【 길고양이 구조·민원·언론보도 현황 】

(단위 : 마리, 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동물보호센터 길고양이 구조	31,946	33,572	32,098	31,525	30,889[129]
길고양이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86	94	501	410	455

127) 관련기사①: '실효성 없는 길고양이 TNR 중단하라' 수의사회, 고시 개정 촉구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60741, 수의사신문 데일리벳, 2022.02.11.
관련기사②: '중성화' 효과는... "개체 수 감소 vs 효과 의문" https://v.daum.net/v/20230213070333890, 연합뉴스, 2023.02.13.

128)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은 길고양이 개체 수 증가로 인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중성화수술을 통하여 길고양이 개체수를 감소시킴으로써(수단), 길고양이로 인한 ①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② 공중위해를 방지하기 위한(목적) 것임.

129) 잠정 집계치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길고양이 관련 언론 보도	학대	299	411	593	769	383
	캣맘	165	228	217	273	191
	피해	108	110	179	201	259
	갈등	141	110	129	161	167
	중성화	315	266	383	418	477
	기타	90	94	315	242	512
	계	1,118	1,219	1,816	2,064	1,989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동 사업의 성과분석을 위하여 2022년에 연구용역[130]을 한 차례 실시한 바 있으나 해당 연구용역은 7개 특·광역시에 대하여만 길고양이 개체수(km^2당 마리수)를 조사하는 등 조사지역이 일부 지역에 그치고 세부지역별 조사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며,[131] 길고양이의 서식지 분포 등 사업의 효과성의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130) '22년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효과성 분석 및 서식현황 조사」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음.

용역명	주요내용	수행기관	기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효과성 분석 용역	광역권별 길고양이의 서식 현황을 파악하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 참고	서정대학교 산학협력단	'22. 7월 ~ 11월

* 조사지점 내 길고양이 개체수(km^2당) ('20) 27.3마리 → ('22) 23.3마리
자묘(새끼 고양이) 비율 ('20) 29.7% → ('22) 19.6%

131) 본 연구용역에서 조사의 범주는 자치구·동별이 아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도시지역의 4가지 지역구분(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별로 이루어짐.

□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매년 지역별로 길고양이의 개체 수 및 중성화된 개체 수를 측정하고, 서식형태 및 주변환경 조사 등을 통해 기초자료를 수립하여 지역별 중성화 사업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농식품부는 단순히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이 단순히 중성화수술 사업량 측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길고양이로 인한 사회갈등 완화, 길고양이와 지역 주민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매년 지역별 길고양이의 개체 수 및 중성화된 개체 수 측정, 서식형태 및 주변환경 조사등을 실시하고, 중성화 수술 전·후 지역 내 민원 발생 현황 및 지역별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다각도로 측정할 필요가 있음.

19) 가축방역대응지원 : 공중방역수의사 등 가축방역 인력 충원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중방역수의사, 가축방역관 등 가축방역 인력의 필요인원 확보를 위하여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가축방역 인력의 적극적인 충원을 위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가축방역대응지원 사업은 방역활동에 필요한 인력인 수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예방약품과 방역장비 등 방역에 필요한 물품 구매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는 본 예산액 994억 6,300만원에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소독자원의 임차비용 등으로 60억 3,100만원이 이·전용 증액된 예산현액 1,071억 1,800만원 중 1,069억 500만원이 집행되고 2억 1,300만원이 불용되었음.[132)]

132)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가축방역대응지원(3940-335)

【 2023년 가축방역대응지원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가축방역 대응지원	99,463	99,463	1,624	6,031	107,118	106,905	-	213	96,433
공중방역 수의사 직무교육 등	61	61	-	△28	33	33	-	-	53

(나) 검토의견

□ 가축방역대응지원의 내역사업 중 공중방역수의사[133] 직무교육 등 사업은 신규 공중방역수의사의 직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해 가축방역정책, 관계법령 및 그 밖의 가축방역행정 및 소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134]

133) **「공중방역수의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방역수의사"란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의7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을 말한다.
2. "가축방역업무"라 함은 가축방역기관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가축방역·동물검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업무를 말한다.

134) **「공중방역수의사법」 제6조(종사명령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 제2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수의사에 대하여 근무할 가축방역기관을 정하여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고, 이를 국가검역·검사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검역·검사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공중방역수의사를 소집하여 가축방역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방역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공중방역수의사 직무교육 등 내역사업 세부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항목	총액	공중방역수의사 직무교육비	공중방역수의사 여비비
집행액	33	24	9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공중방역수의사는 「병역법」 제34조의7[135]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의하여 임명되어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2023년 말 기준 농림축산검역본부 51명, 시·도 372명[136] 등 총 423명이 배치되어 있음.

□ 그런데 가축전염병의 확산과 가축방역업무의 지속적인 증가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신규로 임용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특히 2024년에는 필요인원 150명 대비 103명이 충원되어 충원률이 68.7%에 불과한 상황임.[137]

---

135) **「병역법」 제34조의7(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 ① 병무청장은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1.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2. 제5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3.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년간 복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136) 시·도에 배치된 공중방역수의사 372명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시·군·구의 축산과 등 가축방역관련 부서에 배치되어 있음.

137) 공중방역수의사 충원절차를 살펴보면, 농식품부에서 병무청으로 공중방역수의사 필요인원을 제출하면

【 최근 5년간 공중방역수의사 배치현황 및 충원율 】

(단위 : 명)

연도 / 배치기관	2020	2021	2022	2023	2024
서울	-	-	-	-	-
부산	-	1	-	-	1
대구	-	3	-	-	-
인천	3	1	2	-	-
광주	2	-	-	-	-
대전	1	-	1	-	-
울산	-	3	-	-	-
세종	-	-	2	1	-
경기	25	10	24	19	4
강원	16	13	14	12	11
충북	13	9	15	11	5
충남	16	17	13	17	15
전북	15	17	10	17	17
전남	13	13	12	22	22
경북	11	20	19	5	9
경남	16	7	16	12	6
제주	3	4	2	2	5
검역본부	16	28	19	9	8
충원(배치)(A)	150	146	149	127	103
필요인원(B)	150	150	150	150	150
충원율(A/B)	100%	97.3%	99.3%	84.7%	68.7%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공중방역수의사의 충원 미달로 인하여 가축전염병 감염검사, 백신 접종 등 가축방역업무의 차질이나 지연이 예상되는데, 이처럼 공중방역수의사 충원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는 현역병의 복무기간[138] 단축, 봉급 인상 등 현역 복무환경이 개선

병무청은 필요인원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있음.

필요인원 제출 <농식품부>	→	**필요인원 협의/동의** <병무청/국방부>	→	**지원접수 (역종분류)** <병무청>	→	**선 발** <병무청>	→	**배 치** <농식품부>
9월 중		10월 중		1월말~2.10. (2월 중)		3월 초		4월

138) 현행 각군 병 복무기간은 육군 및 해병대 병 18개월, 해군 병 20개월, 공군 병 21개월임.

되면서 현역병보다 2배 가량(37개월[139]) 더 복무해야 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선호도가 떨어졌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음.[140]

□ 한편, 지자체별 가축방역관 현황 자료를 보면 공중방역수의사뿐만 아니라 가축방역관[141] 역시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는데,

2023년 12월 말 기준 농식품부가 기준 업무량과 검사 및 역학조사 소요인력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축방역관의 적정인원[142]은 1,953명이나, 정원은 1,214명(적정인원 대비 62.2%)이고 실제 근무하고 있는 인원도 1,130명(적정인원 대비 57.9%)에 불과함.[143]

□ 2023년도 12월 말 기준 지자체별 가축방역관 현황을 살펴보면 적정인원만큼 가축방역관을 확보하고 있는 시·도는 한 곳도 없고, 대전광역시의 경우 적정인원 25명 중 9명

---

139)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은 3년(36개월)으로, 이때 현역병과는 달리 복무기간에 복무 전 기초군사훈련기간(약 4주)이 산입되지 않음.

140) '24년 1월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가 '공중방역수의사 미달의 근본적 원인은 현역병에 비해 과도하게 긴 복무기간' 이라고 밝힘.

141) 가축방역관은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사전 예방을 위한 시료채취·예찰활동 및 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 조치 등의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가축방역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에 가축방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은 수의사여야 한다.

142) 가축방역관 적정인원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 1](가축방역관 기준 업무량 및 적정인원 배치기준)에 따라 지자체별 가축 사육 두수 및 농가수, 검사 및 역학조사 등 소요인력을 감안하여 산정한 숫자임

143) 실제 가축방역관 근무인원 1,130명 중 공중방역수의사는 309명(27.3%)으로, 대체복무에 따른 기간제 인력인 이들을 제외하면 가축방역관은 821명(적정인원의 42.0%, 정원의 67.6%)에 불과함.

(36%)만이 배치되었고 2명의 공중방역수의사를 제외하면 가축방역관은 7명에 불과한 상황이며,

정원과 현원을 비교하더라도 정원을 충족한 규모의 가축방역관을 확보하고 있는 시·도는 4곳(서울·경기·충북·충남)에 불과하고, 공중방역수의사를 제외한다면 단 1개의 시·도만 정원을 충족한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시·도)별 가축방역관 현황('23.12월말 기준) 】

(단위: 명)

지자체	적정인원 (A)	가축방역관 현황		적정 대비 부족 정원 (A-B)	적정 대비 부족 현원 (A-C)	정원 대비 부족 현원 (B-C)
		정원(B)	현원(C)			
합계	1,953	1,214	1,130	739	823	84
서울	36	31	32(0)	5	4	-1
부산	35	13	10(1)	22	25	3
대구	42	32	30(4)	10	12	2
인천	52	37	28(3)	15	24	9
광주	22	20	15(0)	2	7	5
대전	25	10	9(2)	15	16	1
울산	28	16	15(2)	12	13	1
세종	18	15	13(2)	3	5	2
경기	276	164	166(41)	112	110	-2
강원	158	125	119(39)	33	39	6
충북	131	77	78(25)	54	53	-1
충남	221	139	140(39)	82	81	-1
전북	205	107	98(26)	98	107	9
전남	222	141	115(49)	81	107	26
경북	254	136	123(39)	118	131	13
경남	179	121	110(32)	58	69	11
제주	49	30	29(5)	19	20	1

1) ( ) 안의 수치는 공중방역수의사 인원을 의미

2) 가축방역관 현원은 수의직 공무원과 공중방역수의사를 합한 인원임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이와 같이 가축방역관의 충원이 어려운 이유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의 지속 발생 및 신규 유입 등에 따라 업무부담이 과중한 한편, 보수는 민간수의사 대비 낮고 승진 등의 처우도 만족스럽지 않아 충원이 원활하지 않다는 의견임.[144]

□ 가축질병의 예방과 방역이 축산농가와 지자체는 물론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축방역관의 업무분석을 통해 업무 경감 방안을 강구하여 가축방역관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방역인력 충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농식품부는 공중방역수의사 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공중방역수의사 필요인원 확보에 대해서 국방부·병무청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가축방역 인력의 적극적인 충원을 위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144) 관련하여 충청남도의회는 2023년 12월 15일에 '동물방역 최일선에서 분투하는 가축방역관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가축방역관의 미충원은 열악한 근무 여건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금전적 대우, 승진 지체 등에 대한 처우 개선책이 미비하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음.

20) 동물복지축산인증제 활성화 : 인센티브 확대 방안 검토 및 제도의 실효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축산인증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증농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동물복지축산인증제 활성화는 축산농장의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상담을 지원하고 동물복지축산물의 홍보 및 전시 판매 지원을 통하여 동물복지축산인증 상품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10억 900만원 중 9억 9,900만원이 집행되고 1,000만원이 불용되었음.[145]

【 2023년 동물복지축산인증제 활성화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아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동물복지축산 인증제활성화	980	980	29	21	1,009	999	-	10	802

145) 회계(기금)-세부사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동물복지축산인증제활성화 (6240-302)

(나) 검토의견

□ 동물복지축산인증제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소・돼지・닭・오리 등을 사육하는 축산농장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 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마크를 표시하는 제도로서,

기존의 관행적인 사육과 도축방식에서 탈피하고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농장동물의 사육여건을 개선하고자 2008년 「동물보호법」[146]과 하위법령의 개정・시행을 통해 도입되었음.

□ 농식품부는 2012년부터 '동물복지축산인증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농장의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상담을 실시하고 동물복지 축산물의 홍보 및 전시・판로를 지원하는 등 인증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곳이 2023년 기준 451개소까지 확대되었음.

□ 그런데 동물복지축산인증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146) **「동물보호법」 제5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하 "농장동물"이라 한다)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

□ 첫째, 동물복지축산인증 연도별 신규 인증 현황과 축종별 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동물복지축산인증 실적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축종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 동물복지축산인증제의 신규 인증농장 수를 살펴보면 2021년, 2022년은 각각 73개소, 67개소가 신규 인증을 받았으나 2023년의 경우에는 35개소에 그치고 있는데, 2023년을 기준으로 양돈은 5건, 젖소와 한육우의 경우에는 인증 실적이 한 건도 추가되지 않는 등 사업실적이 안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축종별 동물복지축산인증 농장 현황(신규 인증 기준)】

(단위 : 개소, 천마리)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인증 농장수			56	69	45	73	67	35
축종별	산란계	농장수	26	29	28	24	37	20
		사육두수	526	659	552	540	1,173	771
	육계	농장수	28	33	9	35	17	10
		사육두수	2,276	2,376	506	2,578	1,317	659
	돼지	농장수	1	5	4	-	2	5
		사육두수	2	11	9	-	5.8	46.3
	젖소	농장수	1	2	4	13	6	-
		사육두수	0.041	0.177	0.500	2.164	1.099	-
	한우	농장수	-	-	-	1	5	-
		사육두수	-	-	-	0.180	0.598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전체농장 대비 동물복지축산인증농장 수를 보더라도 산란계 농장은 944개 농장 중에서 25.5%에 이르는 241개소가 인증을 받은

반면에, 돼지는 5,634개 농장 중 22개소가, 한우는 83,628개 농장 중 6개소가 인증을 받아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0.39%, 0.01%에 불과하였고 염소와 오리 농가는 인증 농장이 한 곳도 없었음.

[2023년 동물복지축산인증농장 인증률 현황]

(단위 : 개소, 천마리, %)

구 분		가축사육농장[147] (A)	인증 농장(B)	인증률(B/A)
산란계	농장수	944	241	25.53
	사육두수	77,202	5,321	6.89
육계	농장수	1,546	153	9.90
	사육두수	94,115	11,486	12.20
돼지	농장수	5,634	22	0.39
	사육두수	11,089	97	0.87
젖소	농장수	5,553	29	0.52
	사육두수	387	4	1.03
한우	농장수	83,628	6	0.01
	사육두수	3,501	1	0.03
염소	농장수	10,073	0	0
	사육두수	433	0	0
오리	농장수	370	0	0
	사육두수	6,538	0	0
계	**총 농장수**	107,747	451	0.42
	총 사육두수	193,265	16,909	8.75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복지축산인증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동물복지축산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시설개선 투자 필요 및 사육

147) 가축사육농장 축종별 전체 농장수와 사육두수는 국가통계포털(KOSIS) 2023년 4분기 자료에서 인용

밀도 감소 등으로 농가의 생산비용 부담이 증가하지만, 인증을 받은 후 실질적으로 농장의 경제적 이익이 높지 않아 농장의 사업 참여가 저조하고 사업 신청 후에도 이를 유지하기 어려워 사업 포기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임.

【최근 5년간 동물복지축산인증제 자진 반납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자진 반납에 따른 인증취소 농장	5	9	6	8	7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따라서 농식품부는 사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설개선비용을 지원하는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148]가 있고, 가공·유통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등 인증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149]

□ 둘째, 동 사업의 예산이 동물복지축산인증 개소를 확대하는 데

148) 친환경 축산물(유기축산)은 일정기간 소득을 보전해주는 직불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동물복지축산 인증농장을 위한 지원제도는 없음.
※ 친환경축산직접지불제(공익직불제)
- 지원자격 : HACCP농장인증과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인증을 받은 축산농가
*유기인증농가 : 138농가(소 42, 돼지 2, 닭 4, 젖소 58, 산란계 19, 기타 13)
- 지원단가 : 한우(300천원/마리), 돼지(25천원/마리), 육계(440원/마리), 계란(13원/개)
- 지원한도 : 3천만원/5년/농가당

149)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기간을 단축(3→2개월)하고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이상)을 명확히 하여 복지축산물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음.

집중됨에 따라 동물복지축산 인증농장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여 동물복지축산인증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지는 측면이 있음.

□ 「동물보호법」 제65조 및 제66조[150]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인증농장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하고,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으나, 실제로 점검기준 위반으로 인증취소 및 과태료 부과를 받은 농가는 없음.

□ 매년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역본부별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역본부별 담당 공무원이 2명에서 8명 정도에 불과하고, 호남 지역본부의 경우에는 4개반(8명)의 인원이 178개 농장을 점검해야 하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150) **「동물보호법」 제65조(인증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59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인증농장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제66조(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인증농장이 제59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인증농장에 출입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23년 동물복지축산인증농장 사후관리 점검인원 및 점검기간 】

(단위: 개소)

지역 본부	조사농장	점검인원	점검기간
서울	53	8명(4개반)	'23.5.12~12.31.
중부	119	8명(4개반)	'23.6.14~'24.1.15.
영남	51	6명(3개반)	'23.5.12~12.31.
호남	178	8명(4개반)	'23.3.20~12.29.
제주	12	2명(1개반)	'23.5.12~12.31.
합계	413	32명(16개반)	'23.3.20~'24.1.15.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산란계농장의 경우 인증기준 점검 항목만 ① 일반기준, ② 관리자의 의무, ③ 닭의 건강 상태 등 점검, ④ 건강관리, ⑤ 급이, ⑥ 급수, ⑦ 준수사항, ⑧ 사육시설, ⑨ 사육밀도, ⑩ 사육환경 등 수십 가지 항목이고, 축종별로도 점검 기준이나 항목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항목을 철저히 점검하는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 동물복지축산인증제 사후관리 절차 및 점검 항목[151] 】

구 분	주요 내용
동물복지축산인증제 사후관리 절차	① 전년 기준 동물복지축산농장 대상 사후관리계획 수립 ②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을 방문하여 현장조사 실시 ③ 인증건별로 연 1회 이상 생산과정 조사 실시 ④ 조사과정 중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위반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확인서와 증거서류를 확보 ⑤ 조사완료 후 조사결과보고서 작성하여 보고

151)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8-20호)

동물복지축산인증제 사후관리 점검 항목	① 경영관련 자료를 기록여부 ② 농장의 출하내역 확인 ③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사항이 적합한 지 여부 ④ 금지물질의 구입, 보관 및 사용여부 ⑤ 항목별 인증기준의 준수여부 ⑥ 축산농장 운영현황서의 사실여부 확인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관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인증 농장수 증가, 일부 지역에의 인증 농장 편중, 점검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사후관리 업무 수행에 있어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입장임.

□ 그러나 동물복지축산인증이 대외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장들이 인증을 받은 후에도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농식품부는 전문인력을 통한 점검을 통하여 인증농장이 인증기준에 맞게 농장을 운영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며,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농장에 대해서 인증취소를 하는 등 실질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인증제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가. 개 요

1) 세입결산

□ 2023회계연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429억 2,9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융자금 원금회수 및 국고보조금 반납 등에 따라 55억 1,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5억 400만원을 수납하였음

【 2023회계연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감 (C-A)
재산수입	537	94	89	-	5	△448
기타민간이자수입	533	65	65	-	-	△468
기타재산이자수입	4	29	24	-	5	20
경상이전수입	20,911	468	461	-	7	△20,450
기타경상이전수입	20,911	468	461	-	7	△20,450
융자및전대 차관원금회수	21,481	4,954	4,954	-	-	△16,527
합 계	42,929	5,516	5,504	-	12	△37,425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 세출결산

□ 2023회계연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151억 5,0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음.

【 2023회계연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이·전용	기타증감				
농업신산업육성	15,150	-	-	-	-	15,150	15,150	-	-
합 계	**15,150**	**-**	**-**	**-**	**-**	**15,150**	**15,150**	**-**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4.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가. 개 요

1) 세입결산

□ 2023회계연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는 예산액은 편성되지 않았으며, 2억 3,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억 3,500만원을 수납하였음.

【 2023회계연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감 (C-A)
재산수입	-	**51**	**50**	-	-	**50**
건물대여료	-	51	50	-	-	50
관유물매각대	-	**185**	**185**	-	-	**185**
토지매각대	-	185	185	-	-	185
합 계	-	**236**	**235**	-	-	**235**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 세출결산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편성액 및 지출액은 없음.

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가. 개 요

1) 세입결산

□ 2023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143억 3,2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 및 국고보조금 예치이자 수입 등으로 40억 3,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2억 4,300만원을 수납하였고, 지자체 예산 부족 등으로 7억 8,900만원은 미수납하였음.

【 2023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감 (C-A)
재산수입	**241**	**396**	**154**	**-**	**242**	**△87**
기타재산수입	241	396	154	-	242	△87
경상이전수입	**14,091**	**3,636**	**3,089**	**-**	**547**	**△11,002**
기타경상이전수입	14,091	3,636	3,089	-	547	△11,002
합 계	**14,332**	**4,032**	**3,243**	**-**	**789**	**△11,089**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 세출결산

□ 2023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세출 예산액은 7,262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액 1,076억 8,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339억 2,800만원임.

□ 농업신산업육성으로 50억 7,100만원, 축산업진흥으로 63억 8,600만원,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로 7,202억 7,100만원 등 총 7,317억 2,800만원을 지출하였고,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에서 1,014억 9,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축산업진흥에서 6억 5,500만원,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에서 5,2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 2023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이·전용	기타증감				
농업신산업육성	5,071	-	-	-	-	5,071	5,071	-	-
축산업진흥	7,041	-	-	-	-	7,041	6,386	-	655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	714,131	107,685	-	-	-	821,816	720,271	101,493	52
합 계	**726,243**	**107,685**	**-**	**-**	**-**	**833,928**	**731,728**	**101,493**	**707**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일반농산어촌개발(자율) : 신규사업의 필요성·추진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계속사업 사업진행 상황 모니터링 강화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반농산어촌개발(자율) 사업을 신규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그 필요성 및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속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일반농산어촌개발(자율) 사업은 농촌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서비스의 확충을 통해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권역단위거점개발사업을 내역사업으로 하고, 2023회계연도 총 예산 5,479억 1,800만원 중 4,464억 2,500만원이 집행되고 1,014억 9,300만원이 이월되었음[152].

152) 회계(기금)-세부사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일반농산어촌개발(자율) (4180-360)

【 2023회계연도 일반농산어촌개발(자율)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일반농산어촌개발(자율)	547,918	107,442	-	655,360	553,867	101,493	-	565,350
·농촌중심지활성화	193,421	27,092	-	220,513	181,598	38,915	-	230,134
·기초생활거점조성	211,700	31,468	-	243,168	197,188	45,980	-	215,776
·시군역량강화	21,713	-	-	21,713	21,713	-	-	22,026
·농촌신활력플러스	77,420	46,704	-	124,124	107,526	16,598	-	57,405
·권역단위거점개발	43,664	2,178	-	45,842	45,842	-	-	40,009

(나) 검토의견

□ 일반농산어촌개발(자율) 사업은 농산어촌[153]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재원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재원한도 내에서 시·군·구가 자율적으로 세부내역을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6조[154]에 근거를 두고 있음.

153) "농산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함.

15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6조(포괄보조금의 지원)** ① 정부는 제78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도 및 시·군·구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이하 "포괄보조금"이라 한다)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에 여러 개의 세부 내역을 구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동 사업은 ⅰ) 계속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지출한도 내에서 시·군·구가 예산을 요구할 경우 기재부가 예산요구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조정하고,

ⅱ) 신규사업의 경우는 시·군·구가 예산을 요구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신규사업 지출한도 내에서 평가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하며,

ⅲ)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가 포괄보조사업의 전체 지출한도를 유지하며 사업내역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됨.

□ 그런데 동 사업의 최근 5년간의 자료를 살펴보면,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 실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74.9%→77.4%→74.3%→58.3%→55.2%)일 뿐 아니라, 간접보조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 단계에서는 실집행률이 더욱 낮아지는 결과(2023회계연도 기준 42.1%)를 확인할 수 있음.

□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한국농어촌공사로 재교부하기만 해도 농림축산식품부 결산서에 실집행된 금액으로 기재되고 있기 때문으로,

실질적인 사업 진척이 간접보조사업자 단계에서 이루어짐을 감안하면, 사업추진 일정이 매우 지연되고 있음을 보여줌.

【 일반농산어촌개발(자율) 사업 실집행현황(최근 5년간) 】

(단위 : 백만원)

연도	내역사업	부처		지방자치단체								
		예산현액(A)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C/A)
								예산현액	집행액(C)			
2019	농촌중심지활성화	478,294	419,314	419,314	92,161	511,475	439,427	419,314	361,818	66,575	5,473	75.6
	기초생활거점조성	34,814	29,474	29,474	-	29,474	26,546	29,474	26,546	2,829	99	76.3
	시군역량강화	30,357	30,357	30,357	13,711	44,067	32,846	30,357	21,728	10,094	1,128	71.6
	농촌신활력플러스	27,943	22,394	22,394	1,108	23,502	12,211	22,394	11,408	11,275	16	40.8
	권역단위거점개발	45,179	45,179	45,179	5,879	51,058	45,264	45,179	40,489	5,246	548	89.6
	소계	616,587	546,718	546,718	112,859	659,576	556,294	546,718	461,989	96,019	7,264	74.9
2020	농촌중심지활성화	350,079	350,079	350,079	66,575	416,654	342,782	350,079	285,129	73,434	437	81.4
	기초생활거점조성	103,983	103,983	103,983	2,829	106,812	90,543	103,983	88,317	16,268	2	84.9
	시군역량강화	14,123	14,123	14,123	-	14,123	10,796	14,123	10,796	2,936	391	76.4
	농촌신활력플러스	79,049	79,049	79,049	11,275	90,324	40,823	79,049	34,290	48,953	548	43.4
	권역단위거점개발	40,920	40,920	40,920	5,246	46,166	41,101	40,920	36,871	5,066	-	90.1
	소계	588,154	588,154	588,154	85,925	674,079	526,045	588,154	455,403	146,657	1,378	77.4
2021	농촌중심지활성화	244,613	239,424	239,424	73,434	312,858	249,719	239,424	194,517	62,691	448	79.5
	기초생활거점조성	197,088	192,955	192,955	16,268	209,223	175,688	192,955	166,499	33,460	75	84.5
	시군역량강화	17,233	17,233	17,233	2,936	20,169	15,984	17,233	13,958	3,345	840	81.0
	농촌신활력플러스	107,800	88,902	88,902	48,953	137,855	65,965	88,902	43,861	71,252	638	40.7
	권역단위거점개발	46,342	46,342	46,342	5,066	51,408	40,730	46,342	36,853	10,677	-	79.5
	소계	613,076	584,856	584,856	146,657	731,513	548,086	584,856	455,688	181,425	2,001	74.3
2022	농촌중심지활성화	182,542	155,450	155,450	62,963	218,413	140,063	155,450	101,256	77,675	675	55.5
	기초생활거점조성	219,043	187,575	187,575	33,188	220,763	189,575	187,575	162,695	30,851	337	74.3
	시군역량강화	16,802	16,802	16,802	3,345	20,147	17,524	16,802	14,821	1,832	791	88.2
	농촌신활력플러스	141,398	94,694	94,694	71,252	165,946	91,765	94,694	43,543	69,975	4,207	30.8
	권역단위거점개발	41,151	38,973	38,973	10,677	49,650	32,598	38,973	28,050	17,053	-	68.2
	소계	600,936	493,494	493,494	181,425	674,919	471,525	493,494	350,365	197,386	6,010	58.3
2023	농촌중심지활성화	220,513	181,598	181,598	77,675	259,274	161,745	181,598	116,214	97,231	297	52.7
	기초생활거점조성	243,168	197,188	197,188	30,851	228,039	170,833	197,188	152,272	56,671	534	62.5
	시군역량강화	21,713	21,713	21,713	1,832	23,545	21,440	21,713	19,981	1,398	707	92.0
	농촌신활력플러스	124,124	107,526	107,526	69,975	177,500	90,652	107,526	41,383	78,215	8,633	33.3
	권역단위거점개발	45,842	45,842	45,842	17,053	62,895	40,512	45,842	32,222	21,525	857	70.3
	소계	655,360	553,867	553,867	197,386	751,253	485,182	553,867	362,072	255,040	11,028	55.2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간접보조사업자 실집행현황(2023회계연도) 】

농식품부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주체(한국농어촌공사)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률(B/A)	교부액	실집행액(C)	실집행률(C/A)	위탁액			집행액(E)	집행률(E/D)
						위탁액	전년도 이월액	합계(D)		
655,360	553,867	84.5	553,867	362,072	55.2	338,992	515,668	854,660	360,226	42.1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의 실집행부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세부사업계획 수립 지연, 사업자 선정 지연, 사업계획의 변경 등, 사업계획이 면밀히 수립되지 못하였거나,
관계기관 협의, 토지보상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연, 민원 발생 등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일반농산어촌개발(자율) 사업 실집행 부진사유(2023회계연도) 】

내역사업	실집행 부진사유
· 농촌중심지활성화 · 기초생활거점조성 · 농촌신활력플러스	· 사업 대상지 인허가 등 행정절차 수행, 주민 민원 및 수시 요구사항 발생 등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지연
· 권역단위거점개발	· 「건축 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축공모 설계 및 인허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지연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이러한 집행부진을 방지하고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155]은 ⅰ) 포괄보조사업에 대해 세부적인 집행계획의 마련 여부 등 집행가능성을 점검하도록 하면서,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미이행사업은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ⅱ) 세출예산의 최대 이월가능 기간을 2회 계연도로 제한하면서, 다음 연도 이월한 예산을 다음 다음연도까지 집행하지 못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로 반환하도록 하는 등의 관리 규정을 두고 있음.

□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농산어촌지역 122개 시 · 군이 평균적으로 4~5개 사업을 추진 중인 바, 내역사업이 다수라는 점에서 사업관리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사업추진이 지연될수록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이 증가할 수 있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집행률에 연동하게 되는 인센티브의 적용으로 보조율이 감액되거나 연부율이 조정되는 등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만큼,

155) 2023년 이전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미함.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집행 현황 점검과 월별 현장점검 등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사업 진척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신규 예산확보가 지역주민에게 성과로 보여질 수 있는 점, 동 예산이 재이월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신청을 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으므로,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예산편성 전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예비계획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적시 추진 가능성 등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반려동물인프라구축(자율) : 사업관리 강화를 통한 실집행 개선과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대응책 마련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의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추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사업은 유기·유실동물의 보호 및 분양 여건 개선을 위해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의 신축 및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본예산 70억 4,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60억 6,8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 131억 900만원 중 42억 3,700만원이 집행되고 72억 6,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6억 500만원이 불용되었음.[156]

【 2023년 반려동물인프라구축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사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반려동물 인프라구축	7,041	7,041	6,068	-	13,109	4,237	7,267	1,605	6,023

156) 회계(기금)-세부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반려동물인프라구축(3740-310)

(나) 검토의견

□ 반려동물인프라구축 사업의 2023년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농식품부 교부액 63억 8,6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60억 6,8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124억 5,400만원 중 실집행액은 42억 3,700만원, 실집행률은 34.0%에 그치고 있는데,

동 사업은 2020년부터 매년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하여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고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반려동물인프라구축 사업 실집행 내역('20~'23) 】

(단위 : 백만원, %)

연도	농식품부		사업시행주체(시·도)						
	본예산	집행액	교부액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	4,644	4,644	4,644	1,990	6,634	1,440	3,383	1,811	21.7
'21	3,526	3,526	3,526	3,383	6,909	1,928	4,940	41	27.9
'22	4,693	4,693	4,693	9,633	9,633	2,262	6,068	1,303	23.5
'23	7,041	7,041	6,386	6,068	12,454	4,237	7,267	1,605	34.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이에 대하여 국회는 결산심사를 통하여 여러 차례 동 사업의 실집행 부진을 지적하고 제도개선 등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157] 여전히 저조한 실집행 상황은 개선되지

157)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제도개선), 202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제도개선) 등

않고 있는 실정임.

□ 동 사업의 집행이 부진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 진행 중 사업계획 및 설계 변경, 계약방법 변경, 동절기 작업 곤란, 관계기관 업무협의 지연, 인허가 지연, 지방비 미확보 등 대부분 사업관리 미흡에 따른 것임.

【 2023년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원 사업 추진현황 및 지연사유 】

지 역		예산액	집행액	사업 지연 및 포기사유
경기(2)	수원시	300	12	실시 설계 용역 중 추가 검토사항 발생으로 인한 예산 증액요인 발생
	고양시	285	0	공사계획 지연 및 시비 추가 확보로 인한 지연, 정밀구조진단 결과 증축 관련 검토사항 발생
강원(3)	동해시	600	277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공사 지연
	영월군	300	0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공사 지연
	고성군	390	0	기존 사업부지 재검토 중
충북(1)	청주시	1,480	0	사업부지 내 문화재 시굴 및 부지 이전 관련 행정절차 지연
충남(4)	당진시	300	0	주민반대로 인한 사업부지 변경 및 행정절차 지연
	공주시	300	0	마을주민총회 반대로 사업부지 변경
	보령시	300	0	민원 발생으로 사업 불가(사업포기)
	홍성군	300	2	공공건축심의보완처리 지연
전남(1)	담양군	120	0	건물 리모델링으로 인한 구조진단 절차 이행 및 예산 추가 확보 등으로 사업 지연
경북(1)	김천시	147	138	설치 완료
경남(3)	창원시	280	0	반려동물지원센터와 동일 부지 내 신축으로 공동 실시설계 진행에 따른 집행 지연
	거제시	24	20	기존 동물보호센터 철거 후 해당 부지에 신축으로 인한 철거 기간 소요
	함양군	60	1	실시설계(공모) 지연
제주(1)	제주시	1,200	350	사전행정절차 이행, 실시설계 등 기간 소요로 '23.12월말 공사착공으로 사업비 집행 지연
합 계	16개소	6,386	80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동 사업은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및 동물의 반환, 동물의 기증·분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농식품부는 동 사업의 집행부진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진행중인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분석을 통하여 개별사업별로 구체적인 사업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특히, 주민반대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다수 있으므로, 추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동물보호센터 신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지자체 동물보호센터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 참여·대면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158]

□ 따라서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개별 사업별로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구체적인 집행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158) 이에 대하여 농식품부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없으나, 동물보호센터 입양 기능 활성화를 위한 입소동물 사회화 및 입양자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임.

한편, 추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6. 양곡관리특별회계

가. 개 요

1) 세입결산

□ 2023회계연도 양곡관리특별회계는 당초 미곡판매수입 4,113억 5,600만원, 부산물판매수입 43억 8,900만원, 기타경상이전수입 66억 900만원, 기타잡수입 97억 5,4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조 8,927억 4,000만원 등 총 2조 3,248억 4,8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징수결정액은 미곡판매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전년도세계잉여금 증가 등으로 1,041억 8,700만원이 증가한 2조 4,291억 700만원이 되었음.

□ 징수결정액 중 미곡판매수입 6,000억 9,900만원, 부산물판매수입 50억 3,100만원, 기타재산이자수입 15억 9,400만원, 기타경상이전수입 97억 8,500만원, 기타잡수입 28억 1,400만원, 전년도세계잉여금 397억 1,1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조 7,770억원, 전년도 이월금 100만원 등 총 2조 4,290억 3,500만원을 수납하였고, 납부지연 등으로 7,3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 2023회계연도 양곡관리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감 (C-A)
손익계정	**2,324,848**	**2,429,106**	**2,429,034**	**-**	**73**	**104,186**
미곡판매수입	411,356	600,169	600,099	-	71	188,743
부산물판매수입	4,389	5,032	5,031	-	1	64
기타재산이자수입	-	1,594	1,594	-	-	1,594
기타경상이전수입	6,609	9,785	9,785	-	-	3,176
기타잡수입	9,754	2,815	2,814	-	1	△6,940
전년도세계잉여금	-	39,711	39,711	-	-	39,711
일반회계전입금	1,892,740	1,770,000	1,770,000	-	-	△122,740
자본계정	**-**	**1**	**1**	**-**	**-**	**1**
전년도이월금	-	1	1	-	-	1
합 계	**2,324,848**	**2,429,107**	**2,429,035**	**-**	**73**	**104,187**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2023회계연도 양곡관리특별회계 세입결산의 특징은 예산액에 비해 미곡판매수입, 기타재산이자수입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전년도세계잉여금 등은 증가하였고,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잡수입은 감소했다는 점임.

□ 미곡판매수입은 4,113억 5,600만원을 수납할 예정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예산액보다 45.9% 증가한 6,000억 9,900만원으로, 이는 TRQ쌀 판매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기타재산이자수입은 수입예산 편성액은 없었으나, 15억 9,400만원을 수납하였는데, 이는 양특회계 사업비의 이자수익을 세입 조치하였기 때문임.

□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세입예산액은 66억 900만원이었으나, 97억 8,500만원을 수납하였는데, 이는 정부양곡매입비 및 정부양곡관리비 반납액 등 과년도 사업비를 정산하여 세입 조치하였기 때문임.

□ 기타잡수입은 세입예산액이 97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정부양곡 가공청산금 등 28억 1,400만원이 수납되었음.

□ 일반회계전입금의 경우 1조 8,927억 4,000만원원을 수납할 예정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예산액보다 6.5% 감소한 1조 7,700억원만 수납되었음

2) 세출결산

□ 2023회계연도 양곡관리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면, 본예산 및 예산현액은 2조 3,248억 4,800만원임.

□ 정부양곡매입비 1조 4,332억 200만원, 수입양곡대 4,796억 9,600만원, 정부양곡관리비 3,942억 4,000만원, 식량작물소비기반구축 105억 3,500만원, 쌀가루산업화지원 70억 8,500만원 등 총 2조 3,247억 5,800만원을 지출하였고, 5,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

며, 집행잔액 3,5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회계연도 양곡관리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이·전용	기타 증감				
손익계정	**2,324,848**	**-**	**-**	**133,075** **△133,075**	**11,364** **△11,364**	**2,324,848**	**2,324,758**	**55**	**35**
정부양곡 매입비	1,407,728	-	-	71,444 △45,970	-	1,433,202	1,433,202	-	-
수입양곡대	555,096	-	-	△75,400	-	479,696	479,696	-	-
정부양곡 관리비	348,112	-	-	57,908 △11,690	11,364 △11,364	394,330	394,240	55	35
식량작물 소비기반구축	6,812	-	-	3,723	-	10,535	10,535	-	-
쌀가루산업 화지원	7,100	-	-	△15	-	7,085	7,085	-	-
자본계정	**-**	**-**	**-**	**-**	**-**	**-**	**-**	**-**	**-**
합 계	**2,324,848**	**-**	**-**	**133,075** **△133,075**	**11,364** **△11,364**	**2,324,848**	**2,324,758**	**55**	**35**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수입양곡대 : 쌀 TRQ 물량 수입과정에서의 문제점 개선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양곡대 사업 예산 편성 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유보한 예산액,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 추이 등을 고려하여, 적정 유보액 규모 및 각 연분 수입 쌀의 계약·도입 시기와 가격 예측 등의 체계적 쌀 수입 관리를 위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수입양곡대 사업은 쌀 관세화 유예 종료('14년) 및 WTO 규정에 따라 확정된 쌀 TRQ[159] 물량(408,700톤)의 수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액 5,550억 9,600만원 중 전용(△754억원)을 반영한 예산현액 4,796억 9,6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160].

【 2023회계연도 수입양곡대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수입양곡대	555,096	-	△75,400	479,696	479,696	-	-	616,262

159) TRQ(Tariff Rate Quota, 저율관세할당물량) 제도: FTA 협정에서 정한 특정 품목 중, 일정 물량에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기본 관세를 적용하는 일종의 이중관세제도로, 저율관세할당물량 또는 시장접근 물량 등으로 불림

160) 회계(기금)-세부사업 : 양곡관리특별회계-수입양곡대(2131-362)

(나) 검토의견

□ 우리나라는 '9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두 차례(1995년~2004년, 2005년~2014년) 관세화를 유예하였음.

쌀 관세를 20년간 유예한 대신 TRQ(저율관세할당물량)[161]의 총량에 해당하는 40만 8,700톤 규모의 쌀을 매년 미국, 베트남, 중국, 태국, 호주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이하 "aT")가 수입쌀의 전담 수입대행기관이 되어 국영무역[162] 방식으로 TRQ 물량 전량을 수입하여, aT 및 한국쌀가공식품협회를 통하여 판매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TRQ 쌀 도입현황(2019~2023년) 】

(단위: 톤, 백미기준)

연 분	가 공	밥 쌀	합 계	비 고
2019	368,700	40,000	408,700	
2020	368,700	40,000	408,700	
2021	364,700	44,000	408,700	
2022	298,586	14,000	312,586	캘리포니아 가뭄에 따른 공급물량 부족으로 미국산 일부 미도입
2023.6.	364,700	44,000	408,70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161) TRQ(Tariff Rate Quota)란 설정된 한도 내의 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임. TRQ 총량은 1995년 5만 1,307톤에서 2004년 20만 5,229톤, 2014년 40만 8,700톤까지 증량시켜 왔으며, 관세율은 5%임

162) 국영무역이란 국가 기간품목에 대한 무역을 정부가 통제함으로써 국내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재정·식량안보 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국내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무역형태로, 지정기관이 양허관세 적용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권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아 수입·비축·판매하는 방식으로 수행됨

□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TRQ 물량의 수입에 필요한 대금 명목으로 2023회계연도 수입양곡대 내역사업에 저장품매입비(430-02목) 5,544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중 754억원은 타 사업[163]으로 전용하였으며 4,790억 9,6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음.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동 사업 예산 편성 시 해당연도에 수입하는 쌀 TRQ 물량(408,700톤) 전체에 대한 수입대금을 기준으로 예산 규모를 산정하는데,

2023회계연도의 경우에도 쌀 408,700톤을 톤당 1,051.8$(환율 1,290원/$)에 수입하는 것을 기준으로 본예산 5,544억 9,600만원을 편성한 것이었음.

□ 그러나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① (t-2)년도 계약물량의 (t-1)년 연말 도착으로 인한 유보금 등

② (t-1)년도에 계약하여 t년도에 도착하는 물량에 대한 수입대금

③ t년도에 계약하여 t년도에 도착하는 물량에 대한 수입대금이 집행[164]되고 있으며,

2023회계연도에도 2021년분, 2022년분, 2023년분 쌀에 대한 수입대금의 일정 부분이 각각 집행되었음.

163) 정부양곡매입비(2131-360), 정부양곡관리비(2131-366)
164) t년도에 계약한 t년분의 수입쌀은 t년도, (t+1)년도, (t+2)년도에 걸쳐서 수입대금이 수입국에 지급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대금지급액 및 부처 집행액 현황 】

(단위: 백만원)

집행 연도	집행액 (부처→aT)	대금지급액 (aT→수입국)	수입쌀의 연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	436,279	340,220	79,392				
2020	470,758	444,060	311,356	132,704	-	-	-
2021	447,851	479,930	3,156	269,677	207,097	-	-
2022	432,194	579,229	-	33	298,268	280,928	-
2023	479,096	355,775	-	-	7,419	163,206	185,15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동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직접수행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수입쌀의 전담 수입대행기관인 aT에 예산을 집행하고 aT에서 수입국에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동 사업 예산은 매년 예산현액 전액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수입국에 지급되는 대금지급액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집행액에 미치지 못하여 상당 규모의 예산이 aT에 유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 2019년도 aT에 누적된 유보액은 1,650억 5,400만원 규모로 매년 증감을 반복하였는데,

2023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가 aT에 4,790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 이 중 3,557억 7,500만원만이 수입국에 지급되면서, 차액인

1,233억 2,100만원이 aT에 유보되어 현재 누적 유보액은 1,359억 5,800만원에 이르렀음.[165]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유보액 발생 현황 】

(단위: 백만원)

집행연도	집행액 (부처→aT) (A)	대금지급액 (aT→수입국) (B)	차액(당해연도 유보액) (A-B)	누적 유보액 (C)	차액(A-B) 발생 사유
2019	436,279	340,220	96,059	165,054	당해연도 계약물량 중 차년도 도입 물량 결제대금 이월
2020	470,758	444,060	26,697	191,751	당해연도 계약물량 중 차년도 도입 물량 결제대금 이월
2021	447,851	479,930	△32,079	159,672	이상 기후, 팬데믹 등으로 인한 국제 곡물 및 해상운임 상승 등으로 예산 편성 시 단가 대비 실 도입 단가가 높아짐에 따라 예산 부족분 발생
2022	432,194	579,229	△147,035	12,637	이상 기후, 팬데믹 등으로 인한 국제 곡물 및 해상운임 상승 등으로 예산 편성 시 단가 대비 실 도입 단가가 높아짐에 따라 예산 부족분 발생
2023	479,096	355,775	123,321	135,958	당해연도 계약물량 중 차년도 도입 물량 결제대금 이월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165) aT는 누적 유보액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를 모두 반납하고 있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유보액 발생 현황 】

(단위: 백만원)

이자 발생연도	이자 반납연도	반납액 중 이자액	기타수입 등 반납액	비고
2019	2020	2,279	4,011	이전년도 발생 이자 1,732백만원 ('17년:458, '18년:1,274) 포함
2020	2021	1,281	2,413	1,132백만원 구상금 포함
2021	2023	1,509	1,509	
2022	2024	4,867	4,867	
2023	2024	13,944	13,944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양곡관리특별회계는 목적사업[166]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설치되었음에도 지출 대비 자체수입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이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aT에 유보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의 다른 목적사업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 추이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미곡판매수입	677,027	381,887	1,121,198	424,315	600,098
(비중)	27.1	18.1	40.2	19.1	24.7
일반회계 전입금	1,766,916	1,580,953	1,615,355	1,180,247	1,770,000
(비중)	70.8	75.0	58.0	53.0	72.9
기 타	52,342	144,300	49,305	622,434	58,936
(비중)	2.1	6.8	1.8	27.9	2.4
합 계	2,496,285	2,107,140	2,785,858	2,226,996	2,429,034

※ 주 : 기타는 기타재산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잡수입, 부산물기타판매수입료 등으로 구성됨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166)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양곡의 원활한 수급 및 관리에 필요한 양곡의 판매, 매입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을 의미

□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당해 연분의 쌀은 당해연도 예산으로 구매하는데, 당해 연분의 쌀이 차년도에 도착하는 경우 대금지급도 차년도로 넘어가므로 aT는 이에 대한 예산을 이월(유보)시켰다는 입장이나,

예산은 해당 연도에 집행될 수 있는 만큼만 편성되어야 한다는 점, 매년 상당한 양의 쌀이 차년도에 도착하고 있어 차년도에 대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점, 이미 당해연도 예산이 당해연분의 쌀에 대한 대금지급에만 집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수입양곡대 집행 행위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최근 3년간 각 연분 수입 쌀 예산 편성액 대비 대금지급액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167],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향후 수입국에 대한 대금지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168]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정 유보액 규모 및 각 연분 수입 쌀의 계약·도입 시기와 가격 예측 등 체계적 쌀 수입 관리를 위한 면밀한 계획이 필요한 상황임.

---

167) 2021년분 수입 쌀은 649억원, 2022년분 수입 쌀은 126억원, 2023년분 수입 쌀은 548억원 가량 대금지급액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즉 최근 3년간 계약물량의 경우 예산액 대비 대금지급액은 총 1,323억원 많음을 의미함. 이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전세계적인 식량가격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168)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도 예산액 중 754억원을 타 사업으로 전용하여 수입양곡대 예산의 부족 상황을 심화시킨 측면이 있음.

【 수입양곡대 부족 현황(누계) 】

연분	예산(백만원)	대금지급액(백만원)	잔액(백만원)
'15년분	305,368	424,585	-119,217
'16년분	324,857	376,223	-51,366
'17년분	356,626	362,992	-6,366
'18년분	386,505	401,391	-14,886
'19년분	436,279	393,902	42,377
'20년분	470,758	402,414	68,344
'21년분	447,851	512,784	-64,933
'22년분	432,194	444,801	-12,607
'23년분(추정)	479,096	533,882	-54,786
합계	3,639,534	3,852,975	-213,441
'24년분(추정)	616,262	464,423	151,839
합계	4,255,796	4,317,398	-61,602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동 사업 예산 편성 시 aT 유보액,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 추이 등을 고려하여, 적정 유보액 규모 및 각 연분 수입 쌀의 계약·도입 시기와 가격 예측 등의 체계적 쌀 수입 관리를 위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식량작물 소비기반구축 : 행사 추진 방식의 적절성 등을 고려한 집행 관리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타 사업에서 식량작물 소비기반구축 사업으로 20억원을 전용하여 행사를 추진하였는데, 사업의 중복성 및 사업 추진 방식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이와 같은 집행이 없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식량작물 소비기반구축 사업은 식량작물 소비기반구축을 통하여 식량 자급기반을 유지하고 국민건강의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액 68억 1,200만원과 전용(37억 2,3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 105억 3,5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169].

【 2023회계연도 식량작물 소비기반구축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식량작물 소비기반구축	6,812	-	3,723	10,535	10,535	-	-	8,258
- 쌀 소비기반구축	4,212	-	3,723	7,935	7,935	-	-	3,412

169) 회계(기금)-세부사업 : 양곡관리특별회계-식량작물 소비기반구축(2131-369)

(나) 검토의견

□ 식량작물 소비기반구축 사업의 내역사업인 쌀 소비기반구축 사업은 쌀 중심의 식습관 형성, 쌀·쌀 가공품에 대한 긍정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실질적인 쌀·쌀 가공품 구매 유도 등을 통하여 쌀·쌀 가공품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

① 식습관 형성 사업 ② 소비 촉진 홍보 사업 ③ 소비·마케팅 지원 사업의 3개 내내역사업으로 구성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65억 8,500만원 교부)과 한국쌀가공식품협회(13억 5,000만원 교부)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운영됨.

【 2023회계연도 쌀 소비기반구축 내역사업 개요 】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쌀 소비기반구축을 통한 식량 자급기반 유지 및 소비 촉진 유도 - (식습관 형성) 초등학생 대상 쌀맛나는 학교, 식량정보센터 운영, 대학생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 추진으로 쌀 중심 식습관 형성에 기여 - (소비 촉진 홍보) 매체 활용 홍보, 쌀 관련 콘텐츠 발굴, 소비 촉진 행사 등을 통해 쌀·쌀가공품 인지도 향상과 쌀의 긍정적인 가치 확산 유도 - (소비·마케팅 지원) 쌀가공품 품평회, 산업대전 등 실질적인 쌀 소비 연계 사업 추진을 통한 쌀 가공산업 소비시장 확대 및 경쟁력 강화
예·결산 현황	- (예산) 예산액 42억 1,200만원, 전용액 37억 2,300만원 - (결산) 집행액 79억 3,500만원, 실집행액 66억 6,700만원
지원형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쌀가공식품협회 민간경상보조(국비 100%)
기대효과	쌀 중심의 식습관 형성, 쌀·쌀 가공품에 대한 긍정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실질적인 쌀·쌀 가공품 구매 유도 등을 통해 신규 소비 창출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도 쌀 소비기반구축 사업계획」에 따르면, 내내역사업인 소비 촉진 홍보 사업은 ‘밥맛 좋은 한식당’, ‘아이디어 공모전’, ‘매체 활용 홍보’, ‘단체 캠페인 홍보’, ‘현안 홍보’ 등 각종 행사, 매체 홍보, 공모전, 캠페인 등을 추진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쌀 및 쌀 가공품 등의 소비를 홍보할 계획이었음.

【 2023회계연도 소비 촉진 홍보 사업 계획 】

사업명	내 용	추진주체
밥맛 좋은 한식당	○ 밥맛 좋은 한식당을 발굴·홍보하여 쌀 소비 확대에 기여 ○ 국민체험단, 전문평가단을 활용하여 ‘밥맛 좋은 한식당’을 선정하고, 선정명패를 전달하여 지속적인 홍보 효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아이디어 공모전	○ 국산 쌀·밀·콩에 대한 영양학적 가치 홍보,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대국민 홍보 콘텐츠 등 아이디어 공모로 다양한 홍보 방안 발굴 ○ 공모전에서 홍보 콘텐츠 및 아이디어를 선정, 장관상 및 상금 지급 - 자료집을 발간하여 관계기관 등에 배포, 온라인 홍보자료로 활용	
매체 활용 홍보	○ 방송, 신문, 온라인 홍보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쌀소비 촉진 홍보를 통해 쌀의 영양학적 가치 확산 ○ 온라인 매체(전자신문, 유튜브, SNS, 챌린지 등)를 활용해 집중 홍보	
단체 캠페인 홍보	○ 쌀 관련 기념일, 마라톤 행사 등 민간단체와 연계한 소비자 홍보를 통해 쌀의 영양학적 가치를 확산하고 자발적인 참여 유도 ○ 백설기·쌀·가래떡 등 각종 행사일에 맞춘 시식·홍보 행사와 생산자 단체, 지자체 참여를 통한 지역 쌀 소비 행사 추진 - 특색있는 쌀과 쌀 가공식품(크림치즈 떡 등)을 선정하여 집중 홍보	
현안 홍보	○ 가루쌀 홍보, 박람회 참가, 수확기 계기 홍보 등 쌀 관련 이슈 대응을 위한 현안 홍보 추진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도 쌀 소비기반구축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10월 정부양곡관리비 사업에서 공공요금및제세(210-02목) 20억원을 식량작물소비기반구축 사업 민간경상보조(320-01) 예산으로 전용하여,

① 집밥 소비 활성화를 위한 유통기업 협력 소비 촉진행사(8억 1,900만원)와 ② 국산 쌀·밀·콩 제품 할인지원 행사(11억 8,100만원) 추진에 집행하였음.

【 전용으로 추진한 행사(2개) 개요 】

행사명	내 용	추진주체
집밥 소비 활성화를 위한 유통기업 협력 소비 촉진행사	(목적) 대형 유통기업과 협업해 '23년도 출하된 햅쌀 판매전 운영, 좋은 밥맛 경험을 소비자에게 제공해 쌀에 대한 긍정인식 제고 (사업기간) 2023년 10월 20일 ~ 12월 15일 (추진내용) 대형유통할인마트의 대표 상품(햅쌀) 3,000원 할인지원 (참여기업) 유통기업 4개社(농협,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국산 쌀·밀·콩 제품 할인지원 행사	(목적) 쌀가공품에 대한 경험 확대 및 집밥 부재료(밀·콩·가공품) 활용한 밥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쌀의 긍정인식 제고 (사업기간) 2023년 12월 21일 ~ 2024년 2월 29일 (추진내용) 대형유통할인마트의 쌀가공품 및 잡곡 할인(20%) 지원 (참여기업) 유통기업 4개社(농협,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두 행사 모두 대형기업과 협업하여 쌀, 쌀 가공품, 잡곡 등의 할인판매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업 중 소비자로 하여금 할인된 가격에 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각 유통경로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170]이 존재하므로 사업의 중복적 운영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동 사업 참여 유통기업은 농협,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4개 대형유통기업으로 한정되어 상대적으로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사의 추진 방식도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171].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의 중복성 및 사업 추진 방식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이와 같은 집행이 없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170) 농식품 소비정책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 사업(3041-385)의 내역사업인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소비자로 하여금 할인된 가격에 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각 유통경로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171)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2년도에 진행한 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서 쌀의 주요 구매 장소가 대형 할인점으로 집중(35.7%)된 점과 소비자의 할인지원 혜택 체감도 제고 등을 고려하여 참여 유통기업을 한정하였다는 입장임.

7.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가. 개 요

1) 수입결산

□ 2023회계연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사업운용 수익으로 총 2조 3,273억 6,800만원을 수입계획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징수결정액은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관유물매각대 감소 등으로 인해 1,385억 3,200만원이 감소한 2조 1,888억 3,600만원이었음.

□ 징수결정액 중 경상이전수입으로 1,447억 7,300만원, 관유물매각대 수입으로 6,675억 7,700만원, 융자 및 전대차관 원금회수 수입으로 1조 3,249억 2,300만원 등 총 2조 1,885억 7,800만원을 수납하였고, 업체의 납부불능 등으로 인해 경상이전수입에서 미수납액 2억 5,800만원이 발생하였음.

【 2023회계연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수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수입계획 (A)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가 (C-A)
재산수입	**13,379**	**9,849**	**9,849**	**-**	**-**	**△3,530**
토지대여료	42	19	19	-	-	△23
기타민간이자수입	1,371	2,017	2,017	-	-	646
기타재산이자수입	11,966	7,813	7,813	-	-	△4,153
경상이전수입	**181,552**	**145,031**	**144,773**	**-**	**258**	**△36,779**
몰수금및추징금	23	-	-	-	-	△23
위약금	2,338	7,762	7,762	-	-	5,424
가산금	-	9	-	-	9	-
법정부담금	58,465	50,113	50,113	-	-	△8,352
기타경상이전수입	120,726	87,147	86,898	-	249	△33,828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117**	**117**	**-**	**-**	**117**
기타잡수입	-	117	117	-	-	117
관유물매각대	**789,248**	**667,577**	**667,577**	**-**	**-**	**△121,671**
기타고정자산매각대	-	-	-	-	-	-
재고자산매각대	789,248	667,577	667,577	-	-	△121,671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1,343,189**	**1,324,923**	**1,324,923**	**-**	**-**	**△18,266**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1,343,189	1,324,923	1,324,923	-	-	△18,266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	**41,339**	**41,339**	**-**	**-**	**41,339**
한국은행예치금회수	-	151	151	-	-	151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	41,188	41,188	-	-	41,188
정부내부수입및기타	**-**	**-**	**-**	**-**	**-**	**-**
특별회계전입금	-	-	-	-	-	-
기금예수금	-	-	-	-	-	-
합 계	**2,327,368**	**2,188,836**	**2,188,578**	**-**	**258**	**△138,79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

□ 2023회계연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수입결산의 특징은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관유물매각대,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등의 수납액 실적이 예산액 대비 감소하였다는 점임.

□ 재산수입의 경우 계획 수립 당시에는 133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예산액의 73.6%인 98억 4,900만원만 수납되었는데, 이는 여유자금 운용 규모 감소에 따른 것임.

□ 경상이전수입의 경우 1,815억 5,200만원을 수입계획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예산액의 79.7%인 1,447억 7,3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이는 보조금 정산 반납액 감소에 따른 것임.

□ 관유물매각대의 경우 7,892억 4,800만원을 수입계획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예산액의 84.5%인 6,675억 7,7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이는 참깨, 콩 등 주요품목 수요 감소에 따른 것임.

□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의 경우 1조 3,431억 8,900만원을 수입계획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예산액의 98.6%인 1조 3,249억 2,3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이는 금리 인상에 따른 정책자금 수요 증가로 계획대비 조기상환 규모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2) 지출결산

□ 2023회계연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당초 지출계획, 지출 계획현액은 2조 3,273억 6,800만원임.

□ 계획현액 2조 3,273억 6,800만원 중 농업신산업육성 사업 279억 4,800만원, 농산물수급안정 및 유통효율화 사업 1조 3,928억 800만원, 식품외식산업육성 사업 5,977억 9,400만원, 종자관리 659억 5,600만원, 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 566억 500만원, 예수이자상환 152억 1,100만원, 여유자금운용으로 322억 5,700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2조 1,885억 7,800만원을 지출하였음.

□ 농산물수급안정 및 유통효율화 사업 442억 3,200만원 등 총 453억 9,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주요 불용사유는 집행잔액 및 지급 사유 미발생 등이고, 식품외식산업육성 52억 8,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주요 이월 사유는 공사 추진 지연으로 인한 이월임.

【 2023회계연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지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지출 계획	계획 변경				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이용 (이체)				
농업 신산업 육성	28,000	-	-	-	-	28,000	27,948	-	52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효율화	1,437,040	-	-	-	-	1,437,040	1,392,808	-	44,232
종자관리	65,956	-	-	-	-	65,956	65,956	-	-
농림축산식품 행정지원	57,714	-	-	-	-	57,714	56,605	-	1,109
식품외식 산업육성	603,079	-	-	-	-	603,079	597,794	5,285	-
예수이자 상환	15,211	-	-	-	-	15,211	15,211	-	-
여유자금 운용	120,368	-	-	-	-	120,368	32,257	-	-
합 계	**2,327,368**	**-**	**-**	**-**	**-**	**2,327,368**	**2,188,578**	**5,285**	**45,393**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비축지원 : 저장품매입비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집행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비축지원 사업의 저장품매입비(430-02목) 예산을 통하여 납품단가 지원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동 비목 편성 목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바,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납품단가 지원 사업 추진 시 저장품매입비 예산을 통한 집행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비축지원 사업은 정부가 국내산 농산물을 수매하거나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 비축한 후 시장가격 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하여 농산물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계획액 6,867억 5,000만원 중 6,863억 5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4,500만원을 불용하였음[172].

【 2023회계연도 비축지원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비축지원	686,750	686,750	-	686,750	686,305	-	445	724,875

172)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산물가격안정기금-비축지원(3031-323)

(나) 검토의견

□ 비축지원 사업은 농산물 수급을 목적으로 농산물 수매·수입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저장품매입비(430-02목)를 편성하고 있는데,

2023회계연도의 경우 국내산 농산물 수매를 위하여 2,318억 3,500만원을 편성하여 1,500억 7,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외국산 농산물 수입을 위하여 4,105억 700만원을 편성하여 4,962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긴급가격안정자금 140억원을 편성하여 100억원을 집행하였음.

【 2023회계연도 저장품매입비(430-02목) 예·결산 현황 】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	2023회계연도 실집행내역
○ 저장품매입비 : 656,342백만원 가. 수매(231,835백만원) · 두류, 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밀 나. 수입(410,507백만원) · 콩, 팥, 참깨, 고추, 마늘, 양파 다. 긴급가격안정자금(14,000백만원)	○ 저장품매입비 : 656,342백만원 가. 수매(150,073백만원) · 두류, 마늘, 양파, 배추, 무, 밀, 감자 나. 수입(496,269백만원) · 콩, 팥, 참깨, 고추, 양파, 마늘, 감자 다. 긴급가격안정자금(10,000백만원)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작황 부진 등으로 인한 공급 부족 및 수요 증가로 소매가격이 상승하여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자 동 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납품단가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배추, 양파, 생강, 대파 등 4개 품목에 대하여 총 44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음.

【 2023회계연도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내역 】

(단위 : 톤, 백만원)

품목	물량	지원액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대상
배추	1,056	1,921	1,000원/포기	2023.11.2.~12.31.	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 4개사 납품업체
양파	1,171	1,171	1,000원/kg	2023.4.20.~5.3.	
생강	189	378	2,000원/kg	2023.10.30.~12.31.	
대파	1,864	932	500원/kg		
합계	4,280	4,402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납품단가 지원은 대형유통업체(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및 하나로마트[173]에 납품하는 농협, 영농조합법인 등의 유통업체에게 품목당 납품단가의 일부 지원하여 납품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농림축산식품부는 납품단가 지원을 통하여 양파 소매가격은 19.8%, 생강 소매가격은 10.9%, 대파 소매가격은 2.6%, 배추

173) 동 사업은 대형마트(4개사)에 납품하는 '유통업체'에 대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를 유통업체가 납품하는 대형마트 별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음.

지원 품목	업체명	지원금액(백만원)
배추, 양파, 생강, 대파	롯데마트	854
	이마트	1,411
	홈플러스	544
	하나로마트	1,593

소매가격은 44.0% 하락시키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동 사업의 예산은 특별회계의 양곡, 석탄 등 저장품 및 저장용품 등을 매입할 때 집행 가능한 예산인 '저장품매입비(430-02목)'로 편성되어 있는데,

동 비목을 특정 저장품을 매입하는 것이 아닌, 특정 업체 등에 대하여 사실상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집행한 것은 예산 편성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도에도 959억원 규모로 납품단가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동 지원은 여전히 저장품매입비를 통하여 집행되거나 여러 세부사업 예산의 일부를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국가재정법」 제45조[174]에서 규정하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납품단가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저장품매입비 예산을 통하여 집행하는 것을 지양하는 한편 별도의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174) 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2) 농산물온라인거래활성화 :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운영 방식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충돌하는 부분이 존재하여 현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의 지정기간 내에 관련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농산물온라인거래활성화 사업은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현물 거래 방식에서 온라인 중심의 상물 분리 거래방식으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도매유통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전국 단위 온라인도매시장 신규 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계획액 48억 6,2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175].

【 2023회계연도 농산물온라인거래활성화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농산물온라인 거래활성화	4,862	4,862	-	4,862	4,862	-	-	10,434

175)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산물온라인거래활성화(3033-360)

(나) 검토의견

□ 농산물온라인거래활성화 사업은 전국 단위의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시스템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통합플랫폼구축 예산 46억 2,200만원과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을 위한 이용자 유치, 정산관리, 고객지원 및 초기활성화 사업 등을 지원하는 온라인도매시장운영사업 예산 2억 4,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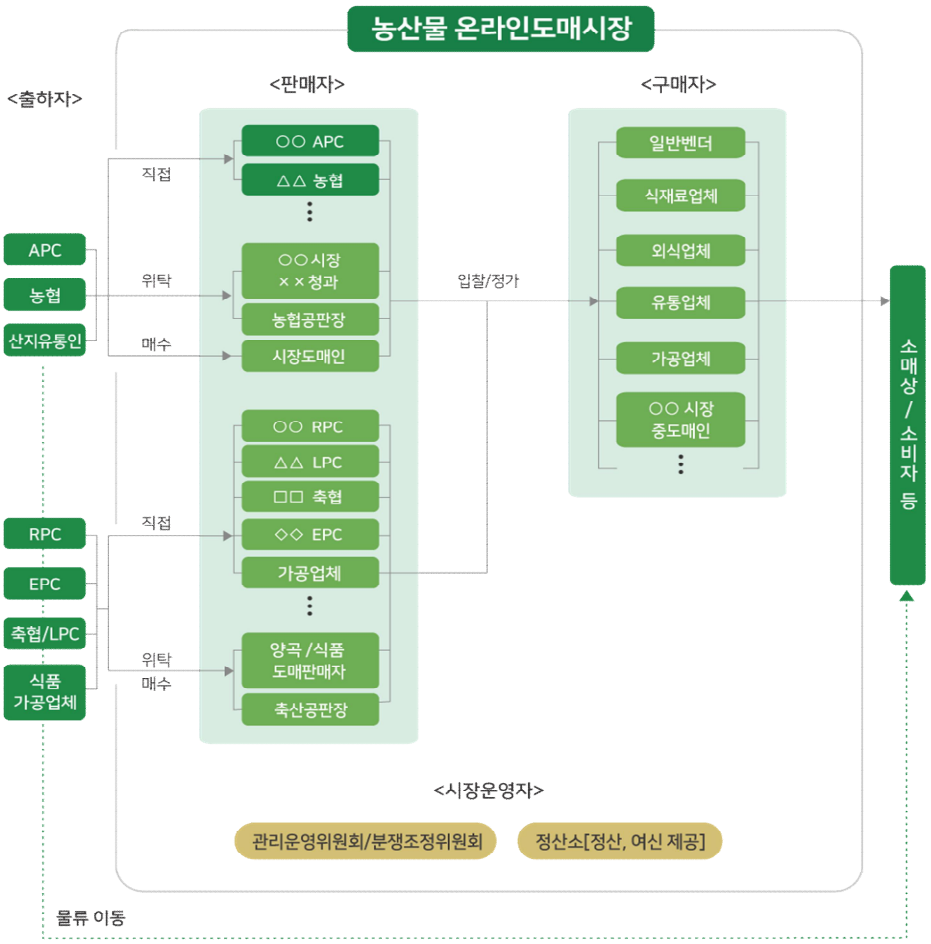
□ 동 사업이 구축 및 운영하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농산물 온라인거래플랫폼을 이용하여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양곡류·청과류 등의 품목을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에 따라 개설한 시장임.

정부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시스템 도입 추진을 국정과제[176]로 선정한 이후, 파일럿 사업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23년 11월 30일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으며,

2024년 5월 기준 거래실적 719억원을 달성하였음.

176) 국정과제 "71.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 (2022년 5월 선정)

【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요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운영방식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제3자 판매금지, 중도매인 직접 집하금지 등의 규정과 충돌[177]하는 부분이 존재하므로 안정

177) **도매시장법인 제3자 판매금지 관련 조항** : 제34조(거래의 특례) 도매시장 개설자는 입하량이 현저히 많아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한정하여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의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②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운영방식 관련 충돌 사항 : 법 제34조 거래의 특례는 특별한 사유가

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법 제정을 통하여 법적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는데,

제21대 국회에서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되었음.

□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규제샌드박스[178] 실증특례 지정을 통하여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운영 중임.

【 온라인도매시장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적용내용 】

□ 사업명 :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 □ 실증특례 지정번호 : 2023-19-2호 □ 실증특례 지정사실 ○ 유효기간 : 2023.10.04.~2025.10.03. ○ 해당 기술·서비스의 내용 :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판·구매자가 참여 가능한 온라인 도매거래 시스템 □ 이용자 유의사항 ○ (지역) 전국 어디서든 거래주체 간 거래 ○ (이용주체) 농수산물 도매거래 사업자 간 거래 (* 단,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거래 확보를 위해 각 거래주체는 각각 “온라인도매판매자”와 “온라인도매구매자”로 승인받아야 함) ○ (품목) 청과부류, 축산부류, 양곡부류, 수산물 및 가공식품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별도 정책 수립 □ 이용자 보호방안 ○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전자상거래배상책임보험 가입 ○ 이의 및 민원 처리를 위한 고객지원센터 운영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발생한 날에 한정하여 시장개설자의 허가를 통해 가능한 거래 형태로 보아야 함. 그러나 도매법인은 중도매인, 유통업체, 외식업체, 가공업체 등 온라인도매시장에 가입된 구매자와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며, 중도매인의 경우 산지출하조직 등으로부터 직접 농산물을 구매하여 거래 가능

178) 규제샌드박스 개요

○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상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법령규정이 모호・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기존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2년간(최대4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산업융합촉진법 등 규제 샌드박스 4法* 근거법에 근거하여 시행

* ① 산업융합촉진법 ② 정보통신융합법 ③ 금융혁신지원특별법 ④ 지역특구법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의 지정기간은 2025년 10월 3일까지로 한시적[179]이므로, 법률 미제정 시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우며,

사업 지속성에 대한 불확신성으로 거래주체가 적극적인 참여를 꺼릴 수 있어 시장 정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또한, 행정처분이나 과징금 처분은 행정기관이 법률에 의거하여 처리 가능하므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이용자가 이용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행정처분 및 과징금 처분 등이 불가하여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발생하여도 이에 대한 제재[180]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의 지정기간 내에 관련 법[181]을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179)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의 지정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간이며, 2년 내 사업근거 미확보 시 1회 연장하여 최대 4년간 가능함.
180) 현재는 위반사항 발생 시에 업무규정에 근거한 플랫폼 이용정지만 가능함.
181) 현재 김현정의원이 대표발의(2024. 6. 5.)한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164)과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2024. 6. 28)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109)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및 계류 중임.

8. 농지관리기금

가. 개 요

1) 수입결산

□ 농지관리기금은 당초 재산수입 1,871억 9,300만원, 경상이전수입 1조 1,881억 1,300만원, 관유물 매각대 479억 5,300만원, 융자및 전대차관원금회수 5,403억 6,400만원, 전년도 이월금 3,167억 7,200만원,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1조 4,415억 8,900만원으로 총 3조 7,219억 8,400만원을 수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징수결정액은 법정부담금 부과 증가에 따른 경상이전수입 증가, 재산수입 증가, 관유물 매각대 증가 등으로 4,573억 4,000만원이 증가한 4조 1,793억 2,400만원이 되었음.

□ 징수결정액 중 재산수입 1,168억 5,800만원, 경상이전수입 8,074억 4,300만원, 관유물매각대 674억 300만원,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수입으로 3,374억 7,400만원, 전년도이월금 3,898억 2,500만원,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1조 4,342억 8,600만원으로 총 3조 1,532억 8,900만원이 수납되었고, 농지보전부담금 및 재고자산매각대 납기미도래에 따른 미납금 등으로 인해 1조 260억 3,500만원이 미수납 되었음.

【 2023회계연도 농지관리기금 수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수입계획 (A)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가 (C-A)
재산수입	**187,193**	**197,853**	**116,858**	**-**	**80,995**	**△70,335**
관유물대여료	14,083	10,458	10,458	-	-	△3,625
기타이자수입	173,110	187,395	106,400	-	80,995	△66,710
경상이전수입	**1,188,113**	**1,698,011**	**807,443**	**-**	**890,568**	**△380,670**
가산금	5,581	1,844	1,844	-	-	△3,737
법정부담금	1,182,532	1,694,615	804,047	-	890,568	△378,485
기타경상이전수입	-	1,552	1,552	-	-	△1,552
관유물매각대	**47,953**	**121,875**	**67,403**	**-**	**54,472**	**19,450**
재고자산매각대	47,953	121,875	67,403	-	54,472	19,45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540,364**	**337,474**	**337,474**	**-**	**-**	**△202,890**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540,364	33,7474	337,474	-	-	△202,890
전년도이월금	**316,772**	**389,825**	**389,825**	**-**	**-**	**73,053**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441,589**	**1,434,286**	**1,434,286**	**-**	**-**	**△7,303**
기금예탁원금수입	1,383,795	1,383,795	1,383,795	-	-	-
기금예탁이자수입	57,794	50,491	50,491	-	-	△7,303
합 계	**3,721,984**	**4,179,324**	**3,153,289**	**-**	**1,026,035**	**△568,695**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2023회계연도 농지관리기금 수입 결산의 특징은 예산액에 비해 관유물매각대, 전년도이월금은 증가한 반면,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융자원금회수 및 정부내부수입은 감소하였다는 점임.

□ 이를 과목별로 구분하여 분석해보면

○ 재산수입의 경우 예산액은 1,871억 9,300만원이었으나, 실제수입은 예산액보다 37.6% 감소한 1,168억 5,800만원으로, 재해발생에 따른 재해감면율 증가로 관유물대여료가 감소하고, 정책금리 선호에 따라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사업 등 융자사업의 융자금 조기회수가 감소하는 등의 사유로 원금과 함께 회수되는 이자가 감소한 데 기인함.

○ 경상이전수입의 경우 예산액은 1조 1,881억 1,300만원이었으나, 실제 수입은 예산액보다 32% 감소한 8,074억 4,300만원으로 공시 지가 하락, 농지전용 수요 감소 등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이 감소한 데에 기인함.

○ 관유물매각대의 경우 예산액은 479억 5,300만원이었으나, 실제 수입은 예산액보다 40.6%가 증가한 674억 300만원으로, 이는 매립면허권 이전수익 증가에 기인함.

○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의 경우 민간융자원금 회수로서 5,403억 6,400만원을 수납할 예정이었으나, 실제 수입은 예산액보다 37.5% 감소한 3,374억 7,400만원임. 이는 정책금리 선호로 경영회생사업 조기환매 감소 등 사업 유지건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융자금 회수 감소에 기인함.

○ 또한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수입의 경우 예산액은 1조 4,415억 8,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실제 수입은 0.5% 감소한 1조 4,342억 8,600만원이었음. 이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조기 회수(12월→9월)에 따른 예탁 이자 감소에 기인함.

2) 지출결산

□ 2023회계연도 농지관리기금의 당초 지출계획은 3조 7,219억 8,400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시 총 지출계획은 변경 없었으나 사업별 지출 계획이 변경됨.

□ 계획현액 3조 7,219억 8,400만원 중 농가경영안정 2,907억원, 농업인력육성및창업지원 8,859억 1,100만원, 농업생산기반정비 2,926억 6,700만원, 농촌복지및지역활성화 2,905억 9,900만원, 국제협력협상 69억 6,600만원, 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 629억 5,700만원,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1,717억 9,700만원, 기금간거래(예탁금) 9,200억원, 여유자금운용 2,316억 9,200만원으로 총 3조 1,532억 8,900만원을 지출하였고, 기금관리비 2,200만원, 해외진출지원 융자 40억 3,400백만원, 공자기금 예탁 4,000억원 불용 및 대단위농업개발 연구용역비 5억원 이월 처리하였음.

【 2023회계연도 농지관리기금 지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지출계획	계획 변경				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전용	이용(이체)				
농가경영안정	290,700	-	-	-	-	290,700	290,700	-	-
농업인력육성 및 창업지원	898,744	-	-	△12,811	-	885,933	885,911	-	22
농업생산기반정비	293,167	-	-	-	-	293,167	292,667	500	-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	255,776	-	-	34,823	-	290,599	290,599	-	-
국제협력협상	11,000	-	-	-	-	11,000	6,966	-	4,034
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	62,959	-	-	-	-	62,959	62,957	-	1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171,797	-	-	-	-	171,797	171,797	-	-
기금간거래(예탁금)	1,320,000	-	-		-	1,320,000	920,000	-	400,000
여유자금운 용	417,841	-	-	△22,012	-	395,829	231,692	-	-
합 계	**3,721,984**	**-**	**-**	**-**	**-**	**3,721,984**	**3,153,289**	**500**	**404,057**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맞춤형농지지원(융자) : 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 사업의 청년농업인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등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사업 수행 시 청년농업인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맞춤형농지지원(융자) 사업은 고령·은퇴·직업전환·이농 및 상속 등에 의한 비농업인의 소유농지 등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가 매입·임차하고, 이를 2030세대 등 젊은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계획액 8,577억 2,600만원 중 128억 1,100만원이 자체 계획변경으로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계획현액 8,449억 1,5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182].

182)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지관리기금-맞춤형농지지원(융자)(1160-350)

【 2023회계연도 맞춤형농지지원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맞춤형농지지원	857,726	844,915	-	844,915	27,539	-	-	1,241,260
-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	5,448	5,448	-	5,448	5,448	-	-	30,000

(나) 검토의견

□ 맞춤형농지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 사업은 2023회계연도에 새로 도입·시행된 사업으로, 집단화된 유휴부지, 국·공유지 등을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생산기반을 정비한 후 청년농에게 장기임대하거나 임대 후 매도하는 사업임

【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 사업의 지원방식】

지원방식	세부 내용
①30년 임대	• (임대료) 지역별 표준임대료의 50% * 10년간 임대 후 10년씩 2회 연장
②매입조건부임대	• (임대료) 10년간 임대, 지역별 표준임대료의 50% • (농지대금) 임대 후 감정가로 매도(10년간 균등분할납부, 연리 2%)
③선임대후매도	• (임대료) 최대 10~30년간 임대, 지역별 표준임대료의 50% • (농지대금) 최초 감정가로 매도(임대 중 균등분할납부, 연리 1%)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 사업의 추진 실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14명 모집에 16명이 지원하였고 최종적으로 청년농업인 13명이 선발되었음.

【 2023회계연도 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 사업 추진 실적 】

총 면적	모집인원	신청인원	최종 선발인원	사업 포기	계약 완료인원
6ha	14명	16명	13명	5명	8명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그런데 스타트업단지 조성 완료('24.2.) 후 계약 체결 시점에 청년농업인 개인 사정으로 5명이 사업 참여를 포기함에 따라 8명만이 계약 체결을 완료('24.4.)하였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참여 포기 사유에 대해 청년농업인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기존 지역에서의 청년농 지원 혜택을 포기해야 하는 점과 스마트팜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자금 마련이 어려운 점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183]하고 있는데,

이는 청년농업인이 동 사업 참여를 신청하기 전에 충분히 고려할 수 있던 요소로서 동 사업의 대상자 선발과정에서 청년농업인의 실제 사업 참여 의사에 대한 확인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고, 이는 당초 신청 인원이 16명에 불과한 데 기인하는 측면도 있어 보임.

183)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6월 잔여부지 6개소를 대상으로 지원대상자 추가 모집을 진행하여 7월초 지원대상자 6명을 선정하였음.

□ 2024회계연도에는 동 사업의 부지 조성 계획 면적이 6배 이상 증가(6ha→40ha)되었는바,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업인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이용관리지원 : 조사원 인력 수급 원활화 노력 등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 조사원의 업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고 사업의 불용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한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대장 정비를 위한 보조인력의 고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계획액 275억 3,9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184].

【 2023회계연도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농지이용관리지원	27,539	27,539	-	27,539	27,539	-	-	15,091
- 농지이용관리지원	17,238	17,238	-	17,238	17,238	-	-	15,091

184)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지관리기금-농지이용관리지원(4130-412)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하나인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은 지자체 경상보조 사업[185]으로서, 「농지법」 제49조제3항[186] 및 제54조[187]에 근거하여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위반행위의 적발·시정 등을 통하여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며 농지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대장 신규등재 물량 조사에 필요한 보조인력인 조사원[188]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그런데 동 사업의 최근 실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집행률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185) 자치단체보조 70%

186) **「농지법」 제49조(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③ 시·구·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을 작성·정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87) **「농지법」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농지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농지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일정기간 내에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88) 농지이용실태조사 보조원은 연간 채용인원이 약 4,000명으로 조사기간 등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채용하고 있고, 농지조사 및 DB 구축 보조원은 채용인원이 연간 약 470명임.

【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지자체 경상보조) 실집행 내역 】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집행액 (B)	실집행액 (C)	집행률 (B/A)	실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2019	4,445	-	4,445	4,445	100.0	100.0	-	-
2020	9,942	-	9,942	8,560	100.0	86.1	-	1,382
2021	18,395	-	18,395	16,740	100.0	91.0	-	1,655
2022	13,535	-	13,535	12,093	100.0	89.3	-	1,442
2023	17,238		17,238	14,504	100.0	84.1	-	2,734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기 채용된 조사원은 대부분이 단기 계약직으로 중도 퇴사 시에 최저임금제 적용, 농촌의 노동력 부족 등으로 희망자를 찾기가 쉽지 않고, 공고·계약 등 공식 채용 절차를 재추진하는 일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되고 있어 잔여기간에 대한 즉각적인 신규 채용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조사원의 중도 퇴사 원인으로 낮은 임금 대비 어려운 업무(현장조사 시 농업인 반발, 업무 숙지 미흡 등)가 꼽히고 있는 점[189]을 고려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는 조사원의 업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고 사업의 불용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189) 지자체 교육, 담당자 워크숍 및 유선 연락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결과

9.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가. 개 요

1) 수입결산

□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은 당초 재산수입 8억원, 경상이전수입 61억 9,000만원, 정부내부수입 2조 8,218억 7,200만원 등 총 2조 8,575억 9,600만원을 수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 사업운용 수입 및 여유자금회수액은 증가하였으나, 정부내부수입 감소로 2조 7,831억 1,1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2조 7,816억 9,100만원을 수납하였음.

【 2023회계연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수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수입계획 (A)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가 (C-A)
사업운용 수입	7,190	55,273	41,570	-	13,704	32,580
- 재산수입	800	7,184	7,143	-	42	6,343
- 과태료	2,000	-	-	-	-	△2,000
- 경상이전수입	6,190	48,089	34,427	-	13,662	28,237
정부내부수입	2,821,872	2,671,872	2,671,872	-	-	△150,000
여유자금회수	26,734	68,249	68,249	-	-	41,515
합 계	2,857,596	2,783,111	2,781,691	-	13,704	△75,905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2023회계연도 여유자금 운용금액 증가로 재산수입이 63억 4,300만원, 전년도 사업 정산 잔액 등 경상이전수입이 282억 3,700만원 증가하면서 사업운용수입이 증가하였으나 정부내부수입은 감소하였음.

□ 여유자금회수는 계획액 대비 415억원 1,500만원 증가한 682억 4,900만원을 수납 완료하였음.

2) 지출결산

□ 2023회계연도 지출계획 2조 8,575억 9,600만원 중 전년도 이월액 1억 7,800만원을 포함하여 2조 7,816억 9,100만원을 지출하였음.

□ 지출계획 현액 2조 8,577억 7,400만원 중 일반지출 2조 5,448억 3,900만원, 정부내부지출 659억 7,900만원, 여유자금 운용 1,708억 7,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집행 잔액 등으로 2,195억 2,400만원을 불용하고, 연구용역 기간연장으로 3,600만원을 이월하였음.

□ 특히, 세부내역 정부내부지출 중 예수금원금(공자기금 예수금)을 654억원을 조기상환 하였음

【 2023회계연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지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	계획 변경				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이용 (이체)				
일반지출	**2,763,632**	**178**	**-**	**-**	**-**	**2,763,810**	**2,544,839**	**36**	**218,935**
- 사업비	2,763,403	178	-	-	-	2,763,581	2,544,610	36	218,935
- 기금운영비	229	-	-	-	-	229	229	-	-
정부내부지출	**66,568**	**-**	**-**	**-**	**-**	**66,568**	**65,979**	**-**	**589**
- 예수금원금상환	65,400					65,400	65,400	-	-
- 예수금이자상환	1,168	-	-	-	-	1,168	579	-	589
여유자금운용	**27,396**	**-**	**-**	**-**	**-**	**27,396**	**170,873**	**-**	**-**
합 계	**2,857,596**	**178**	**-**	**-**	**-**	**2,857,774**	**2,781,691**	**36**	**219,524**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공익기능증진직불 : 전략작물직불제 지적사항 등 보완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이나 지적사항 등을 보완함으로써 전략작물직불 사업이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라는 목표 달성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공익기능증진직불사업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급대상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기본형공익직불제도와 경관보전·친환경·전략작물 재배 등 향상된 공익기능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선택형공익직불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임.

2023회계연도 계획액 2조 7,268억 8,400만원 중 2조 5,081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 2,187억 5,500만원을 불용하였음[190].

190)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공익기능증진직불(1071-302)

【 2023회계연도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공익기능증진직불	2,726,884	2,726,884	-	2,726,884	2,508,129	-	218,755	2,870,184
- 전략작물직불	112,100	116,900	-	116,900	107,999	-	8,901	186,450

(나) 검토의견

□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의 내역사업 중 하나인 전략작물직불 사업은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양곡의 수급을 안정시키며, 논 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논에 벼 대신 가루쌀이나 콩·조사료[191], 밀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논활용직불 사업을 확대·개편하여 2023년부터 도입·시행하게 된 사업임.

【 논활용직불 사업과 전략작물직불 사업 비교 】

구분	논활용직불	전략작물직불('23년)
목 표	이모작 활성화를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	식량자급률 제고 + 양곡 수급안정 등
지급대상	논 재배 동계 식량·사료 작물	(동계) 논활용직불과 동일 (하계) 논콩, 가루쌀, 하계조사료
지급단가	50만원/ha	(단작) 동계작물 50만원/ha 콩·가루쌀 100만원/ha 하계조사료 430만원/ha (이모작) 250만원/ha[192]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191) 조사료란 건초나 짚처럼 지방, 단백질, 전분 따위의 함유량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임.
192) 동계(밀·조사료) 50만원/ha + 하계(논콩·가루쌀) 100만원/ha + 이모작 인센티브 100만원/ha

□ 도입 첫 해인 2023회계연도 전략작물직불 사업의 이행 실적을 살펴보면, 2023회계연도 전략작물직불 사업 이행면적은 12만 5,200ha로 당초 목표했던 면적(12만 7,000ha)의 99%를 달성하였음.

【 2023회계연도 전략작물직불 사업 품목별 이행 실적 】

(단위 : 천ha)

구분	합계	하계작물				동계작물			
		소계	가루쌀	논콩	조사료	소계	밀	조사료	기타
목 표	127.0	27.0	2.0	18.0	7.0	100.0	12.0	60.0	28.0
신 청(A)	133.1	29.7	2.2	20.1	7.4	103.4	9.0	68.2	26.1
미이행(B)	7.9	3.7	0.2	1.5	2.1	4.2	0.1	2.1	1.9
최종 이행(A-B)	125.2	26.0	2.0	18.6	5.3	99.2	8.9	66.1	24.2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또한 벼, 밀, 논콩, 가루쌀, 조사료의 재배면적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23년 벼 재배면적은 감소하였고, 밀과 논콩, 가루쌀, 조사료의 재배면적은 증가하였음.

【 최근 5년간 품목별 재배면적 추이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벼(천ha)	730	726	732	727	708
밀(ha)	3,736	5,224	6,224	8,259	11,600
논콩(ha)	11,471	10,078	10,660	12,590	18,314
가루쌀(ha)	11	21	25	95	2,042
조사료(천ha)	123	134	140	134	17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생산량의 경우에도 밀이나 논콩의 경우 2022년 대비 2023년도 생산량이 각각 50%, 18% 증가하였는데, 수입 의존성이 큰 밀과 콩의 생산량 증가로 식량자급률의 향상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193].

【최근 5년간 품목별 생산량 추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쌀(천톤)	3,744	3,507	3,882	3,764	3,702
밀(톤)	15,024	16,985	26,324	34,562	51,809
논콩*(톤)	15,703	20,648	14,815	21,636	25,558

* 논콩 생산량의 경우 재배면적에 평균 생산단수를 곱하여 추정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도 전략작물직불 사업 시행 결과 2022년 대비 밥쌀용 벼 재배면적 1만 3,400ha가 가루쌀, 콩, 조사료 등 전략작물 재배로 전환되어 약 7만톤의 쌀 생산을 감축함으로써 쌀 수급 안정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쌀 과잉생산으로 인한 재정손실(5,413억원으로 추산)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 바 있음[194].

193) **【 식량자급률 추이 】**

(단위 : %)

년도	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서 류	기 타
'18	50.3	97.3	32.1	1.2	3.3	25.3	104.1	9.6
'19	49.3	92.1	47.7	0.7	3.5	26.7	104.3	10.8
'20	49.3	93.1	38.2	0.8	3.6	30.4	104.5	14.1
'21	44.4	84.6	33.3	1.1	4.2	23.7	104.0	12.0
'22	49.3	104.8	27.2	1.3	4.3	28.6	103.1	10.7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194)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전략직불, 쌀수급안정, 농가소득·자급률 제고 기여」, 2023.11.28.

□ 다만, 전략작물직불 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먼저, 밀 재배에 대한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단가가 낮다는 지적이 있음.

밀의 경우 종전 논활용직불 사업 때와 그 지급 단가(50만원/ha)가 같아 추가적으로 밀을 재배할 유인이 낮은 상황이며, 실제로 2023회계연도 전략작물직불 사업 중 밀의 재배 실적을 살펴보면 목표 대비 74%에 그쳐, 전략작물직불 사업 대상 품목 중 가장 낮은 이행 실적을 보였음.

또한, 동계작물로 밀을 재배하기로 한 농가가 밀을 계속해서 재배하기 위해서는 농가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밀 재배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음.

특히 2024회계연도 전략작물직불 사업 예산 편성 시 논콩에 대한 지급 단가는 2배로 인상(100만원/ha→200만원/ha)된 반면, 밀에 대한 지급 단가는 변동이 없는바, 추후 예산 편성 시에는 밀에 대한 지급 단가 인상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임.

□ 다음으로, 벼 재배면적을 감축시키고 이를 전략작물 재배로 전

환하여 밀·콩 등 전략작물 생산량을 늘리는 데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전략작물의 소비를 촉진하는 전략작물산업화, 두류·밀 계약재배자금 등의 사업 확대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임.

□ 2024회계연도에는 지급 단가 상향이나 품목 확대 등으로 그 예산도 확대·편성된 만큼, 농림축산식품부는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이나 지적사항 등을 보완함으로써 전략작물직불 사업이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라는 목표 달성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2) 친환경농업 관련 사업

○ 친환경직불금의 지급상한(5ha)을 타 직불금 수준(30ha~50ha)으로 상향하고, 유기지속 직불금의 단가가 보다 완만히 조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면서 그 단가를 상향하는 한편, 친환경인증 쌀 생산 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 단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현행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련 사항 중 친환경농업인들의 권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친환경농업인들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친환경농업 관련 사업은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업직불사업,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사업 등 친환경농업 관련 사업 예산 821억 200만원을 편성하여 802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1,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8억 1,600만원을 불용하였음[195].

195)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공익기능증진직불(1071-302)
회계(기금)-세부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친환경농업기반구축(2274-384)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조성(2273-305) 등

【 2023회계연도 친환경농업 관련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친환경농업직불	22,832	-	-	22,832	21,020	-	1,812	22,832
친환경농업기반구축	5,071	-	-	5,071	5,071	-	-	4,237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조성	11,300	-	-	11,300	11,300	-	-	7,300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지원	28,000	-	-	28,000	27,948	-	-	22,800
친환경산물디지털 유통정보플랫폼 구축	80	-	-	80	80	-	-	-
유기농업자재 지원	6,896	-	-	6,896	6,896	-	-	6,206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5,450	-	-	5,450	5,450	-	-	5,020
친환경직불 이행점검	100	-	-	100	100	-	-	100
국가인증농식품지원	465	-	-	465	447	14	4	221
유기농식품 유통활성화지원	215	-	-	215	215	-	-	150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실태조사	335	-	-	335	335	-	-	335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1,358	-	-	1,358	1,358	-	-	1,430
계	82,102	-	-	82,102	80,220	14	1,816	70,631

(나) 검토의견

(1) 친환경농업직불 제도개선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하면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가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하 “친환경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음(「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21조)[196].

【친환경직불금 종류】

구 분	친환경직불금 지급조건 등
유기	-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 - 지급기한 : 없음. 다만, 1년차~3년차는 무농약 단가, 4년차~5년차는 유기 단가, 6년차부터는 유기지속 단가 적용
무농약	-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농촌진흥청장 등이 권장하는 성분량의 1/3 이하만 사용하여야 함 - 지급기한 : 3년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196) 친환경직불금의 지급단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있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①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는 지급대상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이하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친환경농업은 생물·토양·수질 보전 등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농업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 정책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어, 친환경농업을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최근 5년간 친환경 인증 면적이 81,717ha에서 69,412ha(△15%)로, 친환경 인증 농가 수가 58,055호에서 49,520호(△17.2%)로 감소하는 등 친환경농업 규모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친환경농업 현황】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인증면적(ha)	81,717	81,827	75,435	70,127	69,412
농가 수(호)	58,055	59,249	55,354	50,722	49,52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특히, 친환경농업은 합성농약[197] 등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관행농업[198] 대비 생산량은 감소하는 반면, 병해충 방제비, 인건비 등과 같은 생산비용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소득 보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197) 합성농약 : 병해충 방제(防除)에 사용하는 살균제·살충제·제초제를 뜻하며, 농약의 유효성분이 농축되어 있는 원제(原劑)를 합성하여 제조

198) 관행농업 : 화학비료와 합성농약 등을 사용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일반 관행적인 농업 형태를 뜻함

친환경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한 친환경직불금 예산 규모는 다른 직불금과 달리 수년간 동결되어 왔으며[199], 지급기준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바, 다음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임.

【직불금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기본직불제	2,280,487	2,280,487	2,580,487	2,633,487
경관보전직불제	9,880	9,880	9,880	16,830
전략작물직불제	46,200	46,200	112,100	186,450
친환경농업직불제	22,832	22,832	22,832	22,832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첫째, 친환경직불금은 그 지급상한을 5ha로 제한하고 있는데[200],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급상한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

199) 정부 측의 공익직불금 예산 증액 방침에 따라 2024년도 예산 편성 시 타 공익직불금 예산은 증액되었으나, 친환경직불금 예산은 증액되지 못한 바 있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24 예산증액 사유
	2023년	2024년	
기본직불제	2,580,487	2,633,487	- 소농직접지불금 단가 인상 (120만원 → 130만원)
경관보전직불제	9,880	16,830	- 경관보전직불 사업 신청 수요 고려 (15천ha → 24천ha)
전략작물직불제	112,100	186,450	- 두류·가루쌀 지급단가 인상 (100만원/ha → 200만원/ha) - 품목 추가(하계 옥수수) 등
친환경농업직불제	22,832	22,832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0)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산물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직불금의 지급 및 확인·점검 등) ② 직불금 지급시 이행점검 등의 확인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지급한도(5ha) 초과 여부

친환경직불금은 '99년 제도 도입 당시 상수원 보호구역 등 환경규제지역에 위치한 농가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지급됨에 따라 농가당 지급상한을 5ha로 제한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지급조건이 '02년에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직불금 지급상한은 '24년 현재까지 5ha로 제한되어 있음.

이에 따라 대다수의 친환경 농가가 친환경농업 면적을 5ha 이상으로 확대할 유인을 갖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동 규제가 친환경농업의 확대 및 규모화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보임.

또한 타 직불금의 경우 30ha~50ha까지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친환경직불금의 지급상한만 5ha로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친환경직불금의 지급상한을 타 직불금 수준으로 상향하여 친환경농업의 확대 및 규모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어 보임.

【직불금별 지급상한】

구 분	기본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농 업 인	30ha	30ha	30ha	5ha
농업법인	50ha	50ha	50ha	5ha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둘째, 친환경직불금 중 유기지속 직불금[201]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임.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업의 경우 영농 기간에 따라 직불금 단가에 차등을 두고 있는 바, 6년차 이후부터는 직불금 지급액이 대폭 축소되는데,

이는 친환경 농법 도입 초기에는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농가의 소득 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일정 기간 이후부터는 판로 구축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의 친환경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202].

【유기농업 시 연차별 친환경직불금 적용 현황】



【유기농업 시 친환경직불금 단가】

(단위 : 천원/ha)

구 분		무농약 (유기 1~3년차)	유기 (유기 4~5년차)	유기지속 (유기 6년차 이후)
논		500	700	350
밭	과수	1,200	1,400	700
	채소·특작·기타	1,100	1,300	65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 유기지속 직불금 :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유기농업 6년차부터 지급되는 직불금으로서 유기직불금 보다 5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되고 있음.

202) 친환경 농가가 유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3년간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에 따라 1년차~3년차 기간 동안에는 “무농약” 단가를 적용받게 되며, 4년차~5년차에는 “유기” 단가를, 6년차 이후부터는 “유기지속” 단가를 적용받게 됨.

이에 따라 유기농업 6년차부터는 직불금 지급액이 50% 감액된 유기지속 직불금 단가를 적용받게 되는데, 이와 같은 급격한 직불금 감액이 최근 친환경 농가의 중도 이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실제, 최근 유기농업 5·6년차 직불금의 지급 면적을 살펴보면, 직불금 지급 단가가 50% 감액되는 6년차에 중도 이탈하는 친환경농업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

【유기농업 직불금 지급 면적】

유기농업 직불금 지급 면적		5년차 → 6년차 중도 이탈 면적
['18년 5년차] 2,968ha	['19년 6년차] 2,961ha	△7ha
['19년 5년차] 3,637ha	['20년 6년차] 3,412ha	△225ha
['20년 5년차] 3,865ha	['21년 6년차] 3,643ha	△222ha
['21년 5년차] 4,735ha	['22년 6년차] 3,863ha	△872ha
['22년 5년차] 4,181ha	['23년 6년차] 3,522ha	△659ha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참고로 EU는 유기 직불금의 평균 80% 수준을 유기지속 직불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바[203],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농가의 연차별 소득 구조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유기지속 직불금의 단가를 상향하는 한편, 직불금 단가가 보다 완만히 조정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셋째, 친환경인증 쌀 생산 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 단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최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실시한 친환경농산물 농업소득 조사에 따르면 논농사의 경우 친환경농업 농가와 관행농업[204] 농가 간 농업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는 바,

'21·'22년 농업소득 평균값 기준, 1ha당 약 138만원의 농업소득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3) EU 유기직불 대비 유기지속직불 단가 비율(2021 국제유기농연맹)

유기 대비 유기지속 직불금 단가 평균 비율					
오스트리아	100%	프랑스	0%	말타	46%
벨기에	67%	독일	80%	네덜란드	-
불가리아	71%	그리스	104%	폴란드	87%
코로아티아	83%	헝가리	87%	포르투갈	88%
사이프러스	100%	아일랜드	58%	로마니아	84%
체코	90%	이탈리아	84%	슬로바키아	100%
덴마크	55%	라트비아	34%	슬로베니아	77%
에스토니아	91%	리투아니아	96%	스페인	91%
핀란드	100%	룩셈부르크	96%	스웨덴	100%
EU 평균 8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4) 관행농업 : 화학비료와 합성농약 등을 사용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일반 관행적인 농업 형태를 뜻함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농가당 농업소득】

(단위 : 천원/ha)

구 분		친환경농산물 (A)	일반농산물 (B)	농업소득 격차	
				(A-B)	(A/B)
벼	2021년	6,929	7,859	△930	88.2%
	2022년	4,225	6,056	△1,831	69.8%
	평균	**5,577**	**6,958**	**△1,381**	**80.2%**
밭작물 (고구마·무·양파·양배추 평균)	2021년	14,767	17,459	△2,692	84.6%
	2022년	20,286	15,580	4,706	130.2%
	평균	**17,527**	**16,520**	**1,007**	**106.1%**

※ 자료 : 2022·2023년 친환경농산물 농업소득조사 결과보고서(aT) 자료를 재구성

그러나 친환경인증 쌀 생산 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 단가는 1ha당 35만원~7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동 직불금 단가는 2018년 이후 동결되어 왔음.

【친환경인증 쌀 생산 농가에 지급하는 친환경직불금 단가】

(단위 : 천원/ha)

무농약	유기	유기지속
500	700	35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 농가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충분히 보전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생산비 및 소득 구조 변화에 맞추어 직불금 단가도 변동되어야 하나,

직불금 단가가 지난 7년간 동결됨에 따라 친환경 농가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인증 쌀 생산 농가의 생산비 및 소득 구조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직불금 단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친환경농업 관련 법령 정비 필요

□ 「친환경농어업법」은 친환경농산물이 친환경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친환경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와 세부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친환경농어업법」 제24조[205]).

2023년 기준 1,421건의 인증 취소 처분 중 1,259건(88.5%)이 농약사용 기준 위반으로 인한 것이었음.

【친환경 인증 취소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농산물	1,425	1,473	2,067	2,299	1,349
축산물	119	173	90	76	62
취급자	7	6	11	5	7
가공인증*	5	6	2	5	3
계	**1,556**	**1,658**	**2,170**	**2,385**	**1,421**

* 가공인증 :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23년도 유기식품 등 인증통계)

20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인증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전업(轉業),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세부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처분원인별 인증취소 현황(2023년 기준)】

(단위 : 건)

구 분	농산물	축산물	취급자	가공인증	계
농약사용 기준위반	1,251	-	5	3	1,259
경영관련자료 기준위반	3	5	-	-	8
화학비료사용 기준위반	87	-	-	-	87
동물약품사용 기준위반	-	53	1	-	54
기타 기준위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등)	8	4	1	-	13
계	1,349	62	7	3	1,421

※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23년도 유기식품 등 인증통계)

□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기준 및 인증 취소 기준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동 시행규칙은 2023년까지 친환경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불검출”로 규정하고 있었던 바, 친환경농산물에서 미량의 농약 성분이라도 검출될 경우 친환경 인증 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 것임.

그런데 우리나라 농지 여건상 관행농업 농지와 친환경농업 농지가 인접해 있어 친환경 농가의 의도와 무관하게 인근 관행농업 농지에 뿌려진 농약이 바람이나 물을 통해 친환경 농가로 흘러들어 농약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바,

특히, 최근에는 농업용 드론을 사용한 항공방제가 증가됨에 따라 인근 관행농업 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이 바람에 의해 친환경

농가로 유입되는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친환경 인증 취소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친환경 농업인들은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친환경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불안정한 환경에서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실정임.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현장에서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는 바,

첫째,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친환경 농가가 재심사를 요청하면서 비의도적 농약 오염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재심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둘째, 친환경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불검출”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206]의 20분의 1 이하”로 완화하였음(시행규칙 별표 4).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구 분	주요 개정내용
2023.05.10. 주요 개정사항	◦ 다음의 경우 친환경인증 재심사 신청에 대해 의무적으로 재심사 하도록 함 - 농가가 바람에 의한 비산 등 비의도적 농약 오염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인증기관이 심사에 대한 오류를 인정한 경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심사에 대한 오류를 확인한 경우
2023.12.13. 주요 개정사항	◦ 친환경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불검출”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로 변경

206) 잔류허용기준 : 1일 섭취허용량 기준으로 사람이 일생 동안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허용량

□ 현재 우리나라 농지 여건상 대부분의 친환경농가가 비의도적 오염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현행 「친환경농어업법」이 농약 및 화학비료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건강한 농산물의 공급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업 실천 과정에서 파생되는 농업 생태계 보전 효과에 대해서도 친환경 농업의 가치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207], 친환경농업인이 농업 생태계 유지·보전을 위한 영농활동을 충실히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바,

이번 농림축산식품부의 제도개선은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로 보임.

□ 다만, 농림축산식품부가 2023년에 추진한 2건의 제도개선은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해당 내용들이 친환경농업인들의 권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

207) **「친환경농어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어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먼저,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재심사 의무화”의 경우 친환경농업인들의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위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23년 시행규칙 개정 이전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던 것인 바, 법률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로 보이고,

또한 “친환경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경우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도입 시 일반 농산물에 적용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 이하”로 설정되었던 것이 2011년에 “20분의 1 이하”로, 2019년에 “불검출”로 강화되었다가 2023년에 다시 “20분의 1 이하”로 완화된 것으로, 친환경농업인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일관성 없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 보임.

【친환경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

구 분	친환경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 4)
2001.07.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 이하
2011.1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
2019.07.	합성농약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을 것
2023.1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이는 현행 「친환경농어업법」이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준, 재심사 기준 등 친환경인증과 관련된 중요 사항들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함에 따라[208]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의 심사 없이 언제든지 친환경인증 기준 등을 개정할 수 있기 때문인데,

최근 항공방제의 증가로 비의도적 농약 오염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영농 환경의 변화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준 등이 친환경농업인들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를 현행과 같이 시행규칙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보임.

따라서 현행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련 사항 중 친환경농업인들의 권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친환경농업인들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어 보임[209].

---

208)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과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⑥ 제5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9) **「행정기본법」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10.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가. 개 요

1) 수입결산

□ 2023회계연도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은 당초 재산수입 289억 300만원, 경상이전수입 1,341억 300만원,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 2,653억 8,000만원,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823억 4,800만원 등 총 5,107억 3,400만원을 수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 실제 징수결정액은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 및 경상이전수입 감소로 4,261억 9,900만원이었음.

【 2023회계연도 FTA기금 수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수입계획 (A)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가 (C-A)
재산수입	**28,903**	**12,487**	**12,487**	**-**	**-**	**△16,416**
기타민간이자수입	25,705	8,008	8,008	-	-	△17,697
기타재산수입	3,198	4,479	4,479	-	-	1,281
경상이전수입	**134,103**	**98,257**	**98,257**	**-**	**-**	**△35,846**
위약금	-	217	217	-	-	217
법정부담금	89,998	68,759	68,759	-	-	△21,239
기타경상이전수입	44,105	29,281	29,281	-	-	△14,824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265,380**	**152,985**	**152,985**	**-**	**-**	**△112,395**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82,348**	**162,470**	**162,470**	**-**	**-**	**80,122**
한국은행예치금회수	-	-	-	-	-	-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	-	-	-	-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82,348	162,470	162,470	-	-	80,122
정부내부수입및기타	**-**	**-**	**-**	**-**	**-**	**-**
기타특별회계전입금	-	-	-	-	-	-
합 계	**510,734**	**426,199**	**426,199**	**-**	**-**	**△84,535**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2023회계연도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수입결산의 특징은 당초 계획액에 비해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금액이 감소했다는 점과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가 증가했다는 점임.

□ 재산수입의 경우 289억 300만원을 수납할 예정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124억 8,700만원임.

세부내역별로 보면 기타민간이자수입은 기존 정책자금 상환에 따른 잔액 감소로 융자이자수익이 예산대비 176억 9,700만원 감소한 80억 800만원을, 기타재산수입은 여유자금 운용 수익 증가로 인해 예산대비 이자 회수액이 12억 8,100만원 증가한 44억 7,900만원을 수납함.

□ 경상이전수입의 경우 1,341억 300만원을 수납할 예정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982억 5,700만원임.

세부내역별로 보면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경우 441억 500만원을 수납할 예정이었으나 292억 8,1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법정부담금은 899억 9,800만원을 수납할 예정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예산액의 76.4%인 687억 5,900만원을 수납하였는데, 이는 한중 FTA 참깨 수입권 공매 응찰단가 감소 등으로 법정부담금이 감소했기 때문임.

□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는 2,653억 8,000만원을 수납할 예정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예산액의 57.6%인 1,529억 8,500만원인데, 이는 시중 고금리 등 정책자금 실수요 증가에 따라 반납금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는 823억 4,800만원을 수납할 예정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예산액의 197.3%인 1,624억 7,000만원임. 이는 2022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법정부담금(수입권공매납입금) 등이 계획을 초과하여 여유자금 운용액이 증가하고 2023년 여유자금 회수금액이 반영되었기 때문임.

2) 지출결산

□ 2023회계연도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지출 계획액은 5,107억 3,400만원임.

□ 농가경영안정으로 45억 4,700만원, 농업인력육성및창업지원 400억원, 농업신산업육성 94억 4,800만원, 농산물수급안정및유통효율화 1,189억 1,300만원, 축산업진흥으로 1,493억원 7,700만원, 여유자금운용으로 994억 1,200만원 등 총 4,261억 9,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비 지급요건 불충족 등으로 262억 8,8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회계연도 FTA기금 지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지출계획	계획 변경				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이용(이체)				
농가경영안정	22,627	-	-	-	-	22,627	4,547	-	18,080
농업인력육성 및 창업지원	40,000	-	-	-	-	40,000	40,000	-	-
농업신산업육성	9,448	-	-	-	-	9,448	9,448	-	-
농산물수급안정 및유통효율화	118,941	-	-	-	-	118,941	118,913	-	28
축산업진흥	157,525	-	-	-	-	157,525	149,377	-	8,148
농림축산식품 행정지원	4,534	-	-	-	-	4,534	4,502	-	32
여유자금운용	157,659	-	-	-	-	157,659	99,412	-	-
합 계	**510,734**	**-**	**-**	**-**	**-**	**510,734**	**426,199**	**-**	**26,288**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실제 집행소요를 고려한 예산 편성 및 국고보조금 정산 철저 필요

○ 동 사업은 실제 집행소요가 없어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는바,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실제 사전수요조사 및 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의견조회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이 연례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보조금 집행잔액의 미반납이 장기간 지속됐던 경과·사유 및 책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향후 보조금 집행잔액의 미반납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현재 미반납된 보조금 집행잔액이 조속히 반납 완료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축사시설현대화(보조, 융자) 사업은 축사시설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축사시설개선 사업,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 스마트축산단지조성 사업,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 지원사업 등 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3년도 계획현액 1,485억 2,500백만원 중 1,403억 7,700만원을 집행(집행률 94.5%)하고 81억 4,800만원을 불용하였음[210].

【 2023년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축사시설현대화(보조·융자)	148,525	148,525	-	148,525	140,377	-	8,148	139,643
축사시설 개선	58,900	58,900	-	58,900	58,854	-	46	71,675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	75,481	85,725	-	85,725	80,998	-	4,727	63,193
스마트축산단지조성	13,344	3,100	-	3,100	525	-	2,575	1,575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 지원	800	800	-	800	-	-	800	3,200

내역사업인 젖소 육성우[211] 전문목장 지원 사업은 체계화된 육성우 사양관리를 통해 젖소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육성우 전문목장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 8억을 편성하여 전액 불용하였음.[212]

210) 회계(기금)-세부사업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축사시설현대화(융자, 보조)(3760-332, 346)
211) 농가에서 생산한 송아지 ~ 출산직전(23~25개월령)의 소
212) 회계(기금)-세부사업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축산물유통 및 소비촉진 제고(3731-306)

(나) 검토의견

(1) 실제 집행소요를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 지원 사업은 유제품 시장개방 확대 및 사료가격 인상 등에 따라 우유 생산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 속에서 낙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2023년에 시작된 사업으로, 3년간 총 사업비 100억원의 80%를 융자 지원하며, 2년차에는 40%인 32억원 그리고 3년차에는 50%인 4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음.

〈 사업개요 요약 〉

□ 사 업 명 :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 지원사업

□ 목 적 : 육성우를 전문 관리하는 목장을 지원하여 공태기간 단축, 착유우 집중관리 등으로 낙농가의 우유 생산비 저감 도모

□ 사업기간 : 2023~2025년(3년)

□ 예 산 : 10,000백만원(연차별 비율 10%, 40%, 50%)

○ 지원조건 : 융자 80%, 자부담 20%

□ 지원내용 :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 건립에 필요한 설계비, 공사비용 등

□ 사업자 선정방법 : 지자체 공모(1개 지자체)

□ 그런데, 사업 시행 첫해인 2023년의 사업추진 경과 현황을 살펴보면, 동 사업은 지자체 사전 수요조사 없이 2023년 8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여 2023년 1월 경에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공모를 추진하였으나 응모 지자체가 없어 3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모를 재추진하였음. 그러나 2회에 걸친 공모에도 응모하는 지자체가 없었음.

이후, 현장의견 수렴을 위하여 낙농진흥회[213] 등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 전남낙농농협 등의 사업참여 의지를 확인하였으나, 전남낙농농협은 부지확보, 각종 인허가 등과 사업 신청 시기 지연에 따른 어려움으로 축사시설 신설이 아닌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건의하였음.

【추진 절차 및 일정】

구 분	주 체	내용
사업공모 1차 신청(1.30~2.28) 사업공모 2차 신청(3.27~6.30)	낙·축협 지자체	○ 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공모 신청(없음)
⇩	⇩	⇩
유관기관[214] 간담회(8.1/9.14.)	농식품부	○ 현장의견 수렴(2회)
⇩	⇩	⇩
전남낙농농협 기존 축사 매입방식으로 시행지침 개정 건의	전남낙농농협	○ 사업계획, 신청서 검토·확인
⇩	⇩	⇩
시행지침 개정(10.24.)	농식품부	○ 기재부와의 협의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13) **「낙농진흥법」**
제5조(낙농진흥회의 설립) ①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낙농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진흥회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중앙회”라 한다)와 낙농관련단체 등으로서 진흥회 구성에 참여하려는 자로 구성한다.
③ 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진흥회는 정관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214) 낙농진흥회, 농협경제지주, 전국 낙·축협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2023년 10월 12일에 사업자금의 용도 변경(축사시설 신설 → 축사 매입)까지 하였으나, 전남낙농농협의 최종 사업참여 포기의사[215]에 따라 동 사업의 예산을 전액 불용하였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사업은 2021년 각 계가 참여하는 낙농산업 발전위원회[216]에서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강화대책으로 동 사업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축사 신축에 따르는 민원과 허가의 어려움 등으로 수요가 부진하였다는 설명임.

□ 그러나, 동 사업 예산이 전액 불용되어 사업성과가 전무했던 것은 사업방식 및 내용에 대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없이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실제 수요기관이 선호하지 않는 사업방식으로 설계되는 등 신규사업 편성이 체계적으로 수립·관리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신규사업 편성 시 지자체 의견조회 등의 절차를 통한 실제 현장 수요를 파악하는 한편, 사업

215) 전남낙농농협은 최종 의사결정을 위해 대의원 총회를 진행하였으나, 대의원들의 반대로 인하여 사업참여가 무산됨.(2023.12.6.)

216)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하여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생산자, 수요자, 학계,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19인)를 구성하여 '21.8~12월까지 낙농산업 발전방안 논의

방식 결정 시 실제 수요기관의 의견을 고려함으로써 예산 불용에 따른 재정 효율성 저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 국고보조금 정산 철저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적시에 반납받는 등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217] 및 동법 시행령[218]에 따르면 보조사업이 완료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산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을 반납기한을 정하여 반납받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219]

---

217)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8)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19)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의 경우 연례적으로 집행잔액을 사업완료 다음연도가 경과한 후에 반납받거나, 그 이후에도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동 지침을 위반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한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서 468억 100만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반납받았어야 했으나,

이 중 62.8%인 294억 100만원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른 반납기한이 경과한 후에야 반납이 완료되었으며, 1.3%인 6억 3,000만원은 반납기한이 장기간 경과한 2024년 7월말 현재까지도 반납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현황 】

(단위: 백만원)

보조금 교부		반납연도						미반납액
회계연도	집행잔액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5	
2018	14,436	901	1,456	7,345	4,658	-	4	72
2019	9,582	-	264	2,664	1,714	993	3,635	312
2020	12,901	-	-	1,140	2,352	8,680	653	76
2021	6,110	-	-	-	861	3,528	1,719	2
2022	3,772	-	-	-	-	2,267	1,337	168
2023	정산 중							
소계	46,801	기한 내 반납액 : 16,770						630
		기한 경과 이후 반납액 : 29,401						

주 1. 음영표시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른 반납기한을 경과한 집행잔액분임.
2. 미반납액은 2024년 7월말 현재까지 미반납된 집행잔액을 의미함.
3. 2022년이월, 2023년 사업은 정산 진행중임.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회계연도 종료 후 지자체에 정산 통보 시 집행잔액 반납을 요청해왔으나, 동 사업은 축사 신축·개보수 및 축산단지 조성 등 주로 시설공사업에 해당하여 장기 사업 추진에 따른 정산 지연 및 지자체 추경 지연 등으로 인한 미반납이 발생해 왔다는 입장임.

□ 그러나, 이와 같이 연례적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위반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된 것은 상기 지자체 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무부처로서 동 사업의 보조금 관리·감독에 미흡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보조금 집행잔액의 미반납이 장기간 지속됐던 경과·사유 및 책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향후 보조금 집행잔액의 미반납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현재 미반납된 보조금 집행잔액이 조속히 반납 완료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11.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가. 개 요

1) 수입결산

□ 2023회계연도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은 당초 기타재산이자 수입 21억 7,700만원,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438억원, 여유자금회수 444억 3,500만원 등 904억 5,100만원을 수입 계획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징수결정액은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수납액 등 증가로 계획 대비 3,096억 9,900만원 증가한 4,001억 5,000만원임.

□ 기타재산이자 수입으로 146억 9,800만원, 경상이전수입으로 1,900만원,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으로 1,735억 9,300만원, 여유자금회수로 2,118억 4,000만원 등 징수결정액 4,001억 5,000만원을 전액 수납하였음.

【 2023회계연도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수입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과 목	수입계획 (A)	징수결정액(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가 (C-A)
재산수입	**2,177**	**14,698**	**14,698**	**-**	**-**	**12,521**
- 기타재산이자수입	2,177	14,698	14,698	-	-	12,521
경상이전수입	**39**	**19**	**19**	**-**	**-**	**△20**
- 기타경상이전수입	39	19	19	-	-	△20
재화및용역판매수입	**43,800**	**173,593**	**173,593**	**-**	**-**	**129,793**
- 면허료및수수료	43,800	173,593	173,593	-	-	129,793
여유자금회수	**44,435**	**211,840**	**211,840**	**-**	**-**	**167,405**
합 계	**90,451**	**400,150**	**400,150**	**-**	**-**	**309,699**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2023회계연도 동 기금의 수입 결산 특징은 최근 원수보험[220] 단계에서 2022년 손해율(보험금 지급액/보험료 수입액)이 하락함에 따라, 재보험료(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여 계획 대비 수입이 증가하였다는 점임.

□ 기타재산이자수입은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계획액은 21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2년 이후 여유자금 운용 금액의 규모가 커져 실제 수납액은 146억 9,800만원으로 계획 대비 증가하였음.

220) 재보험(Reinsurance)이란 한 보험회사가 인수한 계약의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에 인수시키는 것으로 '보험을 위한 보험'이고, 원수보험(DIRECT BUSINESS)은 재보험계약의 대상이 되는 보험을 말함.

□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전년도 기금운영비 정산 후 잔여 운영비 반납액으로, 계획액은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22년 기금운영비 실집행률 증가에 따른 정산 반납액 감소로 인해 실제 수납액은 1,900만원임.

□ 면허료 및 수수료는 원수보험사와 정부 간 국가재보험 계약에서 발생하는 재보험료 수입으로, 계획액은 43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2년 원수보험의 손해율이 낮아짐에 따라 실제 수납액은 1,735억 9,300만원으로 계획 대비 증가하였음.

□ 여유자금회수는 전년도 기금 전체수입에서 재보험금, 기금운영비 등 지급 소요를 지출한 이후 당해 회계연도에서 회수하는 여유자금으로, 계획액은 444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22년 기준 기금 수입 2,131억 5,100만원 중 지급필요 재보험금 7억 1,400만원(양식수산물) 및 기금운영비 5억 9,700만원을 지급한 결과에 따라 실제 수납액은 2,118억 4,000만원임.

2) 지출결산

□ 2023회계연도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지출계획액은 904억 5,100만원임.

□ 재보험금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재해보험의 손해 발생 시 국가가 재보험으로 그 손해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자금으로, 재해로 인한 원수보험의 손해율이 낮아 재보험금의 집행액은 1억 1,900만원으로 감소하였고, 기금운영비는 5억 9,600만원을 집행하여 총 7억 1,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재보험금의 집행잔액인 698억 8,1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 2023회계연도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지출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	계획 변경				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이용 (이체)				
일반지출	70,596	-	-	-	-	70,596	715	-	69,881
- 재보험금 지급	70,000	-	-	-	-	70,000	119	-	69,881
- 기금운영비	596	-	-	-	-	596	596	-	-
정부내부지출	-	-	-	-	-	-	-	-	-
여유자금운용	19,855	-	-	-	-	19,855	399,435	-	-
합 계	90,451	-	-	-	-	90,451	400,150	-	69,881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12. 축산발전기금

가. 개 요

1) 수입결산

□ 2023년도 축산발전기금은 당초 재산수입 79억 3,800만원, 경상이전수입 832억 9,100만원, 관유물매각대 295억 7,700만원, 융자원금회수 4,467억 8,700만원, 여유자금 497억 1,000만원,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4,455억원을 수입계획으로 편성하였으나,

□ 계획액 대비하여 재산수입 증가(45억 1,500만원), 경상이전수입 증가(99억 8,000만원), 관유물매각대 감소(49억 100만원), 융자원금회수 감소(174억 500만원) 등 총 549억 3,100만원이 증가한 1조 1,177억 3,400만원을 징수결정 하였음.

□ 재산수입으로 124억 4,700만원, 경상이전수입으로 923억 8,600만원, 관유물매각대 246억 7,600만원, 융자원금회수 수입으로 4,293억 8,200만원 등 총 1조 1,168억 4,300만원을 수납하였고, 납기미도래로 인해 재산수입 600만원, 기타경상이전수입 8억 8,5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 2023년도 축산발전기금 수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수입계획 (A)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가 (C-A)
재산수입	**7,938**	**12,453**	**12,447**	**-**	**6**	**4,509**
관유물대여료	10	14	14	-	-	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7,928	12,439	12,433	-	6	4,505
경상이전수입	**83,291**	**93,271**	**92,386**	**-**	**885**	**9,095**
위약금	0	418	418	-	-	418
법정부담금	2,832	2,978	2,978		-	146
민간출연금	49,952	77,280	77,280		-	27,328
기타경상이전수입	30,507	12,595	11,710	-	885	△18,797
관유물매각대	**29,577**	**24,676**	**24,676**	**-**	**-**	**△4,901**
고정자산매각대	864	245	245	-	-	△619
재고자산매각대	28,713	24,431	24,431	-	-	△4,282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446,787**	**429,382**	**429,382**	**-**	**-**	**△17,405**
융자원금회수	446,787	429,382	429,382	-	-	△17,405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49,710**	**151,452**	**151,452**	**-**	**-**	**101,742**
정부예금회수	49,710	151,452	151,452	-	-	101,742
정부내부수입및기타	**445,500**	**406,500**	**406,500**	**-**	**-**	**△39,000**
전입금	145,500	145,500	145,500	-	-	-
예수금	300,000	261,000	261,000	-	-	△39,000
합 계	**1,062,803**	**1,117,734**	**1,116,843**	**-**	**891**	**54,04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2023년도 축산발전기금 수입결산의 특징은 정부예금회수가 계획 대비 1,017억 4,200만원, 민간출연금 납입이 계획대비 273억 2,800만원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임.

□ 융자원금회수액은 계획액 4,467억 8,700만원 대비 174억 500만원 감소한 4,293억 8,200만원이 수납되었는데, 이는 기금 융자사업 중 중도상환, '22년도 회기경과후반납액 규모가 계획액 대비 감소하였기 때문임.

□ 재산수입은 계획액 79억 3,800만원 대비 45억 900만원 증가한 124억 4,700만원이 수납되었는데, 이는 융자대여금이자 등 기타민간이자수입이 감소(36억 2,500만원)한 반면 보조금 반납이자 등 기타재산이자수입이 크게 증가(81억 3,100만원)하였기 때문임.

□ 경상이전수입은 계획액 832억 9,100만원 대비 90억 9,500만원 증가한 923억 8,600만원이 수납되었는데, 이는 기타경상이전수입이 감소(187억 9,700만원)한 반면, 민간출연금 등이 증가(273억 2,800만원)하였기 때문임.

□ 관유물매각대는 계획액 295억 7,700만원 대비 49억 100만원 감소한 246억 7,600만원이 수납되었는데, 이는 계획 대비 고정자산매각대 감소(6억 1,900만원)와 계획 대비 재고자산매각대 감소(42억 8,200만원)가 주된 요인임.

2) 지출결산

□ 2023년도 축산발전기금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축산물 수급관리 309억 6,200만원 증액, 친환경축산(축발) 52억 2,300만원 증액, 가축방역(축발) 49억 6,500만원 증액, 기금운영비 1억 6,000만원 증액, 여유자금운용 413억 1,000만원 감액 등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계획현액은 1조 628억 300만원임.

□ 축산물수급관리 1,673억 7,200만원, 축산기술보급 524억 1,800만원, 축산업경쟁력제고(축발) 4,387억 6,000만원, 친환경축산(축발) 1,682억 8,100만원, 축산물품질관리(축발) 593억 8,000만원, 축산물위생안전성(축발) 224억 2,600만원, 가축방역(축발) 687억 8,200만원, 기금운영비 18억 5,500만원, 공자기금이자상환(축발) 179억 6,400만원, 여유자금운용 1,196억 500만원 등 총 1조 1,168억 4,300만원을 지출하였음.

□ 축산물수급관리 24억 100만원, 축산업경쟁력제고(축발) 5억 7,500만원 등 총 29억 7,6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축산물수급관리 91억 9,300만원, 축산물품질관리(축발) 10억 9,800만원, 축산업경쟁력제고(축발) 2억 2,900만원, 친환경축산(축발) 1억 4,900만원 등 총 129억 200만원 불용하였음.

【 2023년도 축산발전기금 지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지출 계획	계획 변경					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초과 지출	예비비	전용	이용(이체)				
일반지출	951,669	-	-	-	41,310	-	992,979	979,274	2,976	10,729
- 축산물수급관리	148,004	-	-	-	30,962	-	178,966	167,372	2,401	9,193
- 축산기술보급	52,428	-	-	-	-	-	52,428	52,418	-	10
- 축산업경쟁력 제고(축발)	439,564	-	-	-	-	-	439,564	438,760	575	229
- 친환경축산 (축발)	163,207	-	-	-	5,223	-	168,430	168,281	-	149
- 축산물 품질관리(축발)	60,478	-	-	-	-	-	60,478	59,380	-	1,098
- 축산물 위생안전성 (축발)	22,436	-	-	-	-	-	22,436	22,426	-	10
- 가축방역(축발)	63,817	-	-	-	4,965	-	68,782	68,782	-	-
- 기금운영비	1,735	-	-	-	160	-	1,895	1,855	-	40
정부내부지출	20,137	-	-	-	-	-	20,137	17,964	-	2,173
여유자금운용	90,997	-	-	-	△41,310	-	49,687	119,605	-	-
합 계	1,062,803	-	-	-	-	-	1,062,803	1,116,843	2,976	12,902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축산발전기금 소관 사업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의 수납관리 철저

○ 동 사업에서 연례적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금 집행잔액의 미반납이 장기간 지속됐던 경과·사유 및 책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향후 미반납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미반납된 보조금 집행잔액이 조속히 반납 완료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축산발전기금은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 동 사업은 축산물수급관리, 가축개량지원 사업 등 14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상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민간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축산발전기금 사업의 국고보조금 결산의 경우 2022년 계획현액 3,756억 7,700만원 대비 154억 2,700만원이 반납대상 금액이며, 이 중 110억 1,000만원을 기한 내에 반납받았으며, 2024년 7월 현재 44억 1,700만원을 반납받지 못하였음.

【 2022년도 축산발전기금 중 국고보조금 미반납 현황 결산 】

(단위 : 백만원)

보조금 교부(2022년)		반납연도(수납액)		미반납액 (A-B-C)
예산액*	반납대상액 (A)	2023 (B)	2024 (C)	
375,677	15,427	2,572	8,438	4,417

* 축산국 소관 축산발전기금 국고보조금 총예산
※ 농림축산식품부

(나) 검토의견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2023-241호) 제26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하고,

반납기한은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최소한 사업이 완료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음.[221]

□ 그러나, 축산발전기금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현황을

221)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살펴보면, 일부 지자체에서 연례적으로 집행잔액 등의 반납이 기한 내 완료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실제 2024년 7월 기준으로 축산발전기금의 국고보조금 교부연도별 집행잔액 등 미수납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반납대상 국고보조금 중 2024년 7월까지 장기간 미반납된 집행잔액 등의 규모는 44억 1,700만원(5개 세부사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2020년, 2021년 반납대상 국고보조금 중 2024년 7월까지 장기간 미반납된 집행잔액 등의 규모도 각각 13억 8,700만원(4건), 32억 3,500만원(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축산발전기금 중 교부연도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미반납 현황 】

(2024년 7월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19년 이전(누계)		2020		2021		2022	
	사업 수	금액	사업 수	금액	사업 수	금액	사업 수	금액
축산발전기금	4[222]	5,542	4[223]	1,387	6[224]	3,235	5[225]	4,41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22) 말산업육성지원, 가축개량지원, 가축분뇨처리지원, 축산물직거래활성화
223) 가축개량지원, 말산업육성지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 가축분뇨처리지원
224) 축산물수급관리, 가축개량지원, 말산업육성지원,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조사료생산기반확충, 가축분뇨처리지원
225) 축산물수급관리, 말산업육성지원,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조사료생산기반확충, 가축분뇨처리지원

□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말산업육성지원 및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은 2019년부터 계속해서 4년 동안, 가축개량지원 사업은 2019년부터 3년 동안,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은 2020년부터 3년 동안 미반납이 발생함.

□ 이 중 2024년 7월 기준으로 지자체별 축산발전기금의 국조보조금 집행잔액 등 미수납 현황을 살펴보면, 강원, 충남 등의 지자체에서는 최근 3년간(2020～2022년) 각 연도에 징수결정된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 등을 연례적으로 미반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의 경우 2019년 이전에 징수 결정된 55억 4,2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장기간 미반납되었음.

【 축산발전기금 중 지자체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체납 현황 】

(2024년 7월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이전[226]	2020	2021	2022	계
지방자치단체 보조	부산	-	-	-	72	72
	광주	-	-	-	14	14
	세종	-	-	11	49	60
	경기	110	2	-	922	1,034
	강원	-	4	8	101	113
	충북	-	-	52	144	196
	충남	3,182	9	490	331	4,012
	전북	397	217	330	1,273	2,217
	전남	59	260	1,145	673	2,137
	경북	1,206	352	183	301	2,042
	경남	-	350	688	189	1,227
	제주	588	11	55	243	897
민간보조	공공/민간	-	182	273	105	560
계		5,542	1,387	3,235	4,417	14,581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의 반납이 장기간 지연되는 이유를 지자체의 반납예산 미편성 등으로 설명하면서,

향후 조속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월 사업부서와

226) (말산업육성지원) 지자체 집행 지연으로 지자체에서의 자체 이월 발생 등 633백만원이 반납 지연되었으나, 향후 지자체 추경을 거쳐 '24년 내 반납 완료 예정
(가축개량지원) 지자체 추경 편성 지연으로 58백만원 반납 지연, 향후 지자체 추경을 거쳐 '24년 내 반납 완료 예정
(가축분뇨처리지원) 미반납액 중 '17년 공동자원화시설 사업대상자의 행정소송에 따라 사업비 3,180백만원은 반납 유예 중이며, 나머지 미반납액 1,626백만원은 지자체 추경 편성 지연으로 반납 지연, 향후 지자체 추경을 거쳐 '24년 내 반납 완료 예정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지자체 추경 편성 지연으로 45백만원 반납 지연, 향후 지자체 추경을 거쳐 '24년 내 반납 완료 예정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미납사유 및 납부 예정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촉할 예정이라고 밝힘.

□ 그러나, 이와 같이 연례적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현재 기준 145억 8,100만원이 미반납되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위반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된 것은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무부처로서 동 사업 보조금 관리·감독에 미흡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보조금 집행잔액의 미반납이 장기간 지속됐던 경과·사유 및 책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향후 보조금 집행잔액의 미반납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현재 미반납된 보조금 집행잔액이 조속히 반납 완료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말산업육성지원 사업: 보조금 관련 법령 준수 필요 및 예산 조정을 통하여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용역 사업 집행 부적절 등

○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보조금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부적절한 보조금 교부로 인하여 예산이 이월 또는 불용되는 등 동 사업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마사회는 향후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본예산 편성 당시 반영하지 않고 연도 중 예산 조정을 통해 추진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금 교부 관련 예산교부시스템 전용 절차에 대한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예산집행 시 「국가재정법」 등의 이월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마사회는 향후 연구용역 수요를 사전에 발굴하여 계획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과도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말산업육성지원 사업은 승마체험지원 등 말산업 저변확대, 승마시설확충 등의 기반조성, 우수 승용마 개량지원 등의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과 말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컨설팅 등의 말산업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2023년도 계획액 197억 2,500만원 중 189억 6,200만원을 집행(집행률 96.1%)하고 5억 7,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

억 8,800만원을 불용하였음.[227]

【 2023년도 말산업육성지원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말산업육성지원(보조융자)	19,725	19,725	-	19,725	18,962	575	188	17,922

(나) 검토의견

(1) '말산업역량강화지원 사업'의 보조금 관련 법령 준수 필요

□ 말산업육성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말산업역량강화지원 사업은 말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정책연구, 통계조사, 컨설팅 및 말산업 인식제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중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말산업 종합정보지원체계 구축, 전담기관 운용 및 기능강화사업(내내역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 한국마사회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고 있음.[228]

227) 회계(기금)-세부사업 : 축산발전기금-말산업육성지원(3700-315, 321)
228) 한국마사회는 2012년 「말산업육성법」 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에 따라 말산업육성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말산업육성에 관한 정부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 한국마사회가 수행하고 있는 동 사업 보조금의 실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상당한 금액의 이월 및 불용액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2023년도에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30억 7,800만원 중 21억 6,300만원이 집행되었고, 7억 5,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6,2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말산업역량강화지원 사업(내역사업) 실집행현황 결산 】

(단위: 백만원)

연도별		농식품부			사업시행주체(마사회)						
		예산		집행액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 (b)	교부 현액 (a+b)	실집행액 (c)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 (a+b)
		당초	수정								
2021	취업지원센터 인턴쉽	569	530	530	530	211	741	335	306	182	45.2%
	말산업종합 정보시스템	350	253	253	253	46	299	209	44	47	69.9%
	전담기능강화 및 컨설팅	1,400	1,144	1,144	1,144	387	1,531	859	426	346	56.1%
소계		2,319	1,927	1,927	1,927	644	2,571	1,403	776	575	54.6%
2022	취업지원센터 인턴쉽	569	569	569	569	306	875	533	209	133	60.9%
	말산업종합 정보시스템	650	410	410	410	44	454	239	215	-	52.6%
	전담기능강화 및 컨설팅	1400	1,253	1,253	1,253	426	1,679	1,053	486	140	62.7%
소계		2,619	2,232	2,232	2,232	776	3,008	1,825	910	273	60.7%
2023	취업지원센터 인턴쉽	562	562	562	562	209	771	562	205	5	72.9%
	말산업종합 정보시스템	460	416	416	416	215	631	400	169	62	63.4%
	전담기능강화 및 컨설팅	1,270	1,540	1,190	1,190	486	1,676	1,201	380	95	71.7%
소계		2,292	2,518	2,168	2,168	910	3,078	2,163	754	162	70.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앞의 표와 같이,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의 전년도 이월액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당해연도 예산으로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였는데, 교부된 보조금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친 교부현액 기준 실집행률은 최근 3년간 약 55% ~ 70%로 상당 규모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연례적으로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업지원센터 인턴쉽 사업과 말산업 종합정보지원체계 구축사업의 경우 사업특성 상 이월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임.

【취업지원센터 인턴쉽 사업(내내역 사업)】

- 말산업 사업체에 고용된 인턴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최대 9개월간 고용 유지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반기 중 채용된 인력에게도 동일하게 9개월 지원금 지급 필요하므로, 이월하지 않는 경우 1~2월에 예산 공백으로 인건비 지급 불가능함

< '23년 말산업 인턴십 지원사업 개요 >

◇ **사업내용 :** 인턴고용계약, 고용유지 시 인건비 및 취업유지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말산업 사업체 및 전문인력
◇ **신청기간 :** '23.1월 ~ 12월(지원사업 신청 및 대상선정)
◇ **지원금 :** (말산업체) 70만원/월, (인턴) 30만원/월
- 9개월 간 고용 유지 시 지원금 960만원/1인 지급(장기근로 인센티브 포함)

【말산업 종합정보지원체계 구축사업】

- 말산업 종합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용역비를 지급하는 예산으로서 연중 운영되는 정보시스템 특성상 축발기금의 교부시기가 매년 2~3월임을 감안 시 부득이하게 연중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이월이 불가피하고, 말산업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계약도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3년단위로 계약되고 있으며 최근 계약은 '23.5월~'26.4월임

< '23년 말산업종합정보지원체계 구축 사업 개요 >

◇ **사업기간 :** '23.1월 ~ 12월(지원사업 신청 및 대상선정)
◇ **지원대상 :** 말사육농가, 외부등록심사원 등 말산업관계자
◇ **사업내용 :** 말산업 시스템 개발·유지관리, 외부등록심사원 운영, 말 이력정보 현행화

□ 그러나,「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보조금의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기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잔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여부 결정 시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함으로써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229)]

□ 또한, 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한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도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도록 하는 등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엄격한 사전검토를 규정하고 있음.[230)]

---

229)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3. (생 략)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그런데, 이러한 보조금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연례적으로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보조금을 교부하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함에 따라 상당한 불용액 및 이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음.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보조금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부적절한 보조금 교부로 인하여 예산이 이월 또는 불용되는 등 동 사업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230)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P 97)

(6) 보조금 교부 시 유의사항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되, 자금부족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3분기까지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 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이를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및 자부담 부분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연도 중 예산 조정을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말산업역량강화지원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전담기능강화 및 컨설팅 사업’의 2023년도 실집행현황을 살펴보면, 한국마사회가 당초 계획되지 않았던 사업인 ‘치유승마 도입 및 활성화 실증 연구’, ‘말복지 사각지대 실태조사 및 말복지 제고 실증 연구’를 연도 중 신규 반영하여 추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2023년 전담기능강화 및 컨설팅 사업(내내역사업)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당초 수행기간	수행 기간	사업 계획	배정 예산	교부액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이월 사유
					23	24					
승마교육 동영상 제작	’23. 7.~ ’24. 1.	좌동	o	90	90	-	90	70	20	정산중	선행연구가 ‘23년 5월 종료되어 후속조치로 추진된 연구로서 연구 완성도를 위해 이월
우수 승마시설 지정제	’23. 5.~ ’23.12.	’23.10.~ ’24. 4.	o	50	50	-	50	-	50	정산중	연구용역 2회 유찰로 지연
창업경진대회	’23.8.~ ’23.12.	‘23.8.~ ’24. 1.	o	50	50	-	50	13	37	정산중	‘23년말 사업완료 후 정산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1개월 이월
승마 소비자 모집 기초연구	’23.8.~ ’23.12.	‘23.8.~ ’24. 3.	o	45	45	-	45	16	29	정산중	해당연구 진행 중 말산업실태조사가 병행되면서 관련 연구원이 실태조사에 투입되어 해당 연구 기간 연장 및 이월 결정
말산업 실태조사	’23.6.~ ’24. 4.	좌동	o	450	450	-	450	332	118	정산중	국가통계 발표시기 고려 * ‘23년 통계 ’ 24. 3월 공표 (계약: ‘23.8.3.~ ‘24.3.31.)
치유승마 도입 및 활성화 실증 연구	’23.12.~ ’24.12.	좌동	X (신규)	100	-	100	100	-	100	진행중	연구과제의 불용예산을 활용하여 사회적 이슈인 말복지, 치유승마 관련 신규 과제 발굴 및 연구 진행
말복지 사각지대 실태조사 및 말복지 제고 실증 연구	’23.12.~ ’24.12.	좌동	X (신규)	200	-	200	200	-	200	진행중	
기타 연구 및 운영비	’23. 3.~ ’24. 2.	좌동	o	265	265	-	265	125	140	정산중	기타연구 불용액 및 운영비 집행잔액이 이월됨(내내역사업 이월로 동시 이월됨)
전담기관 (정책수립, 컨설팅, 심사평가)	’23. 3.~ ’24. 2.	좌동	o	290	240	50	290	254	36	정산중	내내역사업 이월로 인해 동시 이월됨
합 계				1,540	1,190	350	1,540	810	730	-	-

주) 자료 : 한국마사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그런데, 해당 사업의 재원은 연말에 추진 예정인 말산업 간담회 및 어린이박람회 참가를 위해 동 내역사업(말산업저변확대지원, 말산업경쟁력강화) 및 내내역사업(말산업 지속발전지원체계 구축)간 예산 조정을 통해서 마련하였음.[231]

□ 동 연구용역은 퇴역경주마 복지 관련 동물보호단체[232] 문제 제기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증가한 말 복지 현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퇴역경주마 복지 관련 문제'는 2019년에 제기되어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쟁점화되었다는 점[233]에서 본예산 편성 시 준비가 가능하였음을 고려할 때, 사전에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였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마사회는 향후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본예산 편성 당시 반영하지 않고 연도 중 예산 조정을 통해 추진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

231) ① 말산업저변확대(내역사업): 1억 9,900만원(감액)
② 말산업경쟁력강화(내역사업): 7,200만원(감액)
③ 말산업역량강화지원(내역사업) 중
I)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사업(내내역사업) 2,100만원(감액)
ii) 말산업종합정보지원체계 구축 사업(내내역사업) 5,800만원(감액)

232) 동물자유연대 등

233) 연합뉴스, 2019. 05. 09. <은퇴 경주마 비극적 최후 논란…경찰 학대행위 수사 착수>
KBS뉴스, 2021. 7. 19. <'경주마 학대 논란' 마사회, 도축 정보 고의 삭제 의혹>
한계레신문, 2022. 1. 23. <42%만 살아서 촬영장, 승마장으로...퇴역경주마 잔혹사>

의할 필요가 있음.

(3) 「국가재정법」 등 이월원칙 준수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를 통해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① 치유승마 도입 및 활성화 실증연구와 ② 말복지 사각지대 실태조사 및 말복지 제고 실증연구라는 2개의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과 내내역사업간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였는데, 해당 추진절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용역사업 추진 절차 】

기 간	사업 추진 경과
~'23.11.28.	농식품부 집행상황 점검
'23.11.30.	마사회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
'23.12.01.	연말('23.12)에 추진 예정인 말산업 간담회 및 어린이박람회 참가를 위해 동 내내역사업(말산업 지속발전지원체계 구축)간 예산 전용
'23.12.~	퇴역경주마 복지 관련 언론보도 및 말 복지 관련 동물보호단체 문제 제기 등
'23.12.08.~	농림식품부 말 복지 제고, 치유승마활성화 등 실증연구 용역(안) 마련
'23.12.10.	마사회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 - 마사회 소관 민간경상보조금 불용액을 말산업역량강화지원 연구용역사업에 배정
'23.12.12.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
'23.12.21.	마사회: 말 복지 제고, 치유승마활성화 등 실증연구 용역계획 수립[234] *내역사업별 예산 재배정을 위한 보조금 반납(마사회→농식품부, 12.21.)
'23.12.27.	**＊ 마사회: 연구용역 입찰 공고** **＊ 농식품부[235]: 내내내역 사업간 예산 전용을 위해서는 예산 반납 및 재교부 절차 필요 인식**
'23.12.28.	세부 내내내역사업별 예산 배정 수정 통보 및 보조사업자에게 반납고지서 발급을 위한 절차(고지서 발급 등) 수행[236]
'23.12.29.	**사업비 이월을 위한 보조금 반납(마사회 → 농식품부, '23.12.29) 및 이월**
'24. 2. 8.	**실증연구용역 계약체결(마사회, '24.2.8)**, 착수보고회('24.2.16)
'24. 3.29.	**이월사업비 교부(농식품부 → 마사회, '24.3.29)**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234) 용역계획 수립 일정 : 원가조사('23.12.20~22), 발주계획 및 규격사전공개(12.21~26), 입찰공

□ 먼저, 위의 2개 실증연구용역 사업은 농식품부의 내역 및 내내역사업 증액 과정에서 적절한 예산 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237] 농림축산식품부단계에서 해당 예산이 이월됨.

그러나, 한국마사회는 교부받은 보조금 없이 2023년 12월 27일 입찰공고를 진행하였고, 동 실증연구용역 사업은 2024년 2월 8일 및 2월 21일에 각각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해당 사업비는 2024년 3월 29일에서야 농식품부로부터 전년도 이월된 사업비를 교부받았음.

□ 그런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에 대해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238]

고(12.27~'24.1.10), 제안서 평가(1.19), 계약체결(2.8), 연구 용역 수행('24.1~12), 착수보고회(2.16)

235) 이나라도움(시스템) 질의 결과 해당 절차를 통해 예산 배정이 가능하며, 보조사업자가 내역사업 내 자체 조정 불가 회신

236) 보통 고지서 발급은 하루 내 가능하나, 기금사무국의 처리 지연으로 인해 당일 4시 이후에 고지서 발급, 마사회는 보조금 반납 업무 수행시 은행 업무 시간에 처리해야 하는데 고지서 발급 시간이 이미 4시가 넘어 당일(28일) 반납 불가

237) 내내역 사업간 예산전용 시에도 내역 사업간 전용 절차와 동일하게 기 교부된 보조금의 반납과 재교부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절차 이해 부족에 따라 절차 미진행

238)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한국마사회는 교부받은 예산과 실증연구용역 사업의 계약체결(지출원인행위) 행위가 없었음에도 마치 보조사업의 이월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실증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8조상의 보조사업비의 이월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보임.

□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내역 사업간 예산전용 시에도 내역 사업간 전용 절차와 동일하게 기 교부된 보조금의 반납과 재교부 절차를 진행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채 한국마사회로부터 반납받은 전용액을 한국마사회에게 연내 재교부하지 못해 중앙정부 단계에서 이월이 발생하였다는 설명임.

□ 그러나,「국가재정법」 제48조[239]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의 세출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39)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법 제4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예산은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고, ①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②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등의 경우에만 이월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한국마사회가 추진한 2개 실증연구용역 사업의 계약은 2023년 12월 27일에 공고만 있었고 실제 계약은 각각 2024년 2월 8일과 2월 21일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실상 지출원인행위 없이 해당 예산을 이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국가재정법」 세출예산의 이월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보조금 교부 관련 예산 교부 시스템 전용절차에 대한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예산집행 시 지출원인행위 없이 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국가재정법」상의 이월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부대입찰 또는 같은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4.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4) 연구용역 계약 지연에 따른 연례적인 이월 방지 필요

□ ‘말산업역량강화지원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전담기능강화 및 컨설팅 사업’의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수행결과를 살펴보면, 상당수의 연구용역과제가 조기에 계약되지 못함으로써 예산의 이월이 연례적·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2021년도에는 총 7개 과제 중 6개 과제, 2022년도에 총 6개 과제 중 6개 과제, 2023년도에 총 7개 과제 중 6개 과제의 예산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음.

【 전담기능강화 및 컨설팅 사업 최근 3년간 이월집행 연구용역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용역 과제명	용역기간	용역 수행기관	이월금액 /용역금액
2021	학교체육 승마편입을 위한 승마의 교육적 효과 분석 연구	21.11.1.~22.4.30.	말산업연구소	43/43
	말 생산농가 경영실태 조사연구:제주마 한라마 등을 중심으로	22.1.1.~22.10.31.	말산업연구소	39/39
	제주산 마유의 대량 분리정제 공정 개발 연구	21.5.1.~21.10.31	제주대 산단	-/46
	말산업 저변확대 위한 체계적·정기적 승마대회 운영체계 구축 연구	21.12.15.~22.9.30.	한국농수산대 산단	13/66*
	제3차 말산업 종합계획 수립 위한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21.8.25.~22.3.31.	한국능률협회	165/165
	말산업 특구 활성화 방안 연구	21.9.30.~22.2.27.	경북대 산단	58/58
	새만금 개발부지를 활용한 말산업 추진 타당성 조사 연구	21.11.11~22.6.30.	㈜일비	12/12
2022	승마교육 동영상 개발전략 수립연구	22.12.1~23.4.30.	말산업연구소	48/48
	말산업 콘텐츠 활용 민간기업 파트너십 구축 방안연구	22.10.4.~23.2.10.	㈜일비	8/39*
	말 사육농가 부업 규모 기준설정 법제화 등 지원방안 연구	22.12.15.~23.5.13.	(사)한국축산경제연구원	39/39
	말복지 분야 법 제도 개선방안 연구	22.12.23.~23..4.21	경북대 산단	40/40
	말복지 향상 과학적 말 훈련법 발굴 및 개선	22.11.1.~23.4.19.	말산업연구소	48/48
	말 건강관리 사양시스템 연구	22.10.20.~23.7.17	말산업연구소	24/51
2023	말복지 증진을 위한 망아지 순치 효과 분석	23.7.1.~24.4.30.	제주한라대 산단	53/53
	학교체육 승마활성화 위한 승마교육 동영상 제작	23.7.12.~24.1.27.	말산업연구소	30/78
	농촌체험 휴양마을 말체험 활성화 방안	23.7.1.~23.12.30.	㈜일비	-/49
	승마 소비자조사 도입 기초연구	23.8.1.~24.3.31.	말산업연구소	45/45
	우수 승마시설 지정제 도입	23.12.1.~24.5.31.	말산업연구소	40/40
	치유승마 도입 및 활성화 실증연구	23.12.21.~24..9.9.	청주대 산단	79/79
	말복지 사각지대 실태조사 및 말복지 제고 실증연구	23.12.21.~24.12.20.	㈜매트릭스	195/19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음영: 이월된 연구용역 과제

* 21,22년 코로나 기간 중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선급금 최대 80% 지급 가능하도록 한시적 시행

□ 이와 같은 연례적이고 반복적인 연구용역 예산의 이월로 인해 연구결과의 적기 활용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출예산의 이월은 「국가재정법」 제3조[240]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로서 제한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마사회는 향후 연구용역 수요를 사전에 발굴하여 계획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과도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40)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3) 공동자원화시설 사업: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므로 사업관리 철저 및 보조금 관련 법령 준수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자 선정 시 지자체가 주민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동 사업의 사전절차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보조금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부적절한 보조금 교부로 인하여 예산이 이월되는 등 동 사업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은 안정적 분뇨처리 기반 구축을 통하여 개별 농가 분뇨처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한 시설·기계·장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계획액 768억 4,800만원이 전액 교부(교부율 100%)되었음.[241]

【 2023년도 공동자원화시설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가축분뇨처리지원	76,848	76,848	-	76,848	76,848	-	-	68,946
공동자원화시설	22,811	21,275	-	21,275	21,275	-	-	25,010

241) 회계(기금)-세부사업 : 축산발전기금-가축분뇨처리지원(3735-330, 329)

(나) 검토의견

□ 공동자원화시설 사업(내역사업)은 국고보조 40~50%와 융자 20~30%를 지자체에 지원하여 가축분뇨의 에너지화시설(바이오에너지)과 퇴액비화시설[242]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243]으로, 실집행실적이 최근 3년 평균 집행률이 53.3% 연례적으로 부진하였음.[244]

【 2023년도 공동자원화시설 사업(보조) 실집행현황 결산 】

(단위: 백만원, %)

연도별	농식품부			사업시행주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당초	수정								
2021	17,895	15,027	15,027	15,027	11,557	26,584	12,460	13,735	389	46.9
2022	13,946	13,758	13,758	13,758	13,735	27,493	14,075	13,418	0	51.2
2023	15,731	15,292	15,292	15,292	13,418	28,710	17,756	10,546	408	61.8

242) 가축분뇨(반입 총량의 70% 이상) 등 1일 70톤 이상의 반입 원료를 활용하여 퇴비·액비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243) [공동자원화시설 사업(내역사업) 2023년 예산안 세부내역]

- ○ 퇴액비화: 개보수 5개소 2,800백만원
- ○ 바이오연계: 1년차 1개소 434백만원
- ○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1년차 2개소 700백만원
- ○ **에너지화: 민간형 2년차 3개소 6,640백만원,** 1년차 2개소 5,237백만원
  공공형 2년차 1개소 7,000백만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44) 지역주민 민원해소 및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확보 장기간 소요, 원자재값 상승 등에 따른 설계·시공사 선정 지연 등

□ 공동자원화시설 사업(내역사업) 중 가장 비중높은 내내역사업인 에너지화 부문사업은 민간형과 공공형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민간형의 경우 2023년도 2년차 사업 3개소(함평, 고성, 익산)와 1년차 사업 1개소(담양) 모두 사업 첫해인 2022년·2023년부터 지연되기 시작하여 매년 연례적으로 이월액이 발생하였음.

【 에너지화 민간형 사업 실집행현황 결산 】

(단위: 백만원, %)

구분		사업시행주체(지자체)						
		교부액 (교부일자)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A)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함평	2022	802 (6.22/8.11/10.13)	-	802	-	802	-	0
	2023	2,405 (6.22/7.26)	802	3,207	-	3,207	-	0
소계		3,207	0	802	-	802	-	0
고성	2022	1,050 (6.24/8.11/10.13)	-	1,050	750	300	-	71.4
	2023	2,625 (3.3/6.22)	300	2,925	-	2,925	-	0
소계		3,675	0	802	0	802	-	35.7
익산 (사업 포기)	2022	644 (6.23/8.11)	-	644	-	644	-	0
	2023	1,610 (3.3/6.22)	644	2,254	-	2,254	-	0
소계		2,254	644	2,925	-	2,925	-	0
담양	2023	1,372 (3.3/7.26)	-	1,372	-	1,372	-	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따라 2022년에 개시한 에너지화 민간형 사업은 2022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였던 당초 계획과는 달리 2023년 말이나 2024년 초에 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에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2024년도 3년차 에너지화 민간형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설계시 공사 선정공고	설계시공사 선정 및 설계착수	실시설계 승인	공사착공
2023년도 2년차	전남 함평	2022. 5.	2022. 6.	2023. 7.	2024년 연내착공 예정
	경남 고성	2022. 8.	2022. 10.	2024. 3.	2024년 연내착공 예정
	전북 익산	**2023. 3.**	**2023. 5.**	-	**중도포기**
2023년도 1년차	전남 담양	2024. 1.	2024. 3.	2024. 7.(예정)	2024년 연내착공 예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사업비는 대부분 인허가 지연 또는 지역주민 반대로 인해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임.

이와 관련하여 전북 익산의 경우 2022년·2023년부터 교부된 22억 5,400만원이 전액 이월되었음에도 2024년에 6억 2,100만원이 교부되었으나, 원자재·인건비 지속 상승 등에 따른 추가 자부담에 대한 우려로 2024년 3월에 사업을 중도 포기하였음.[245)]

245) '24년 3년차 사업에 해당하는 전북(익산)은 원자재·인건비 지속 상승 등에 따른 추가 자부담에 대한 우려로 '24년 3월 사업 포기
- '24년 교부액(621백만원) '24.4월 반납 완료, '22~'23년 사업비('22년 644백만원, '23년 1,610백만원)는 '24년 12월 중 전액 반납 예정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악취 우려 등에 따른 민원 발생으로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완료 시까지 사업추진이 지연될 수 있으나, 그 이후부터는 준공까지 원활하게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설명임.

□ 그런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보조금의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기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잔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여부 결정 시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함으로써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246]

246)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3. (생 략)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또한, 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한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도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도록 하는 등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엄격한 사전검토를 규정하고 있음.[247]

그런데, 동 사업 대상 지자체[248] 모두 2023년도 예산집행이 전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교부하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함에 따라 동 사업 예산이 전부 이월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음.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동 사업의 사업자 선정 시 지자체가 주민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에너지화 민간형 사업 건립 관련 사전절차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한편,

보조금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부적절한 보조금 교부로 인

247)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P 97)
(6) 보조금 교부 시 유의사항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되, 자금부족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3분기까지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 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이를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및 자부담 부분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48) 함평·고성·익산·담양

하여 예산이 이월 또는 불용되는 등 동 사업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4) 가축위생방역지원 : 가축방역사업 효율 향상을 위한 드론 방역사업의 체계적 운영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드론 방역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적 인력·장비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업무절차별로 필요한 방역이력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가축위생방역지원 사업은 민간방역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민·관 공동방역체계를 확립하고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249] 및 농협 공제방제단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23년도는 본예산 638억 1,700만원에 추경으로 49억 6,500만원 증액된 687억 8,2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250]

【 2023년 가축위생방역지원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가축위생방역지원	63,817	68,782	-	-	68,782	68,782	-	-	64,837

249)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에 근거하여 2003년 설립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가축질병근절사업, 축산물 안전제고 사업, 수입식용축산물 검역업무 등을 수임하고 있음.

250) 회계(기금)-세부사업 : 축발기금-가축위생방역지원(3941-342)

(나) 검토의견

□ 2023년 1년 동안 총 26건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신규 발생하였고, 경기·강원 지역의 양돈농장에서 총 10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다수의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는데,[251]

이에 따라 축산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살처분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나타났음.

【 2023년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

발생월	건수	발생지역	가축의 종류 및 규모
1월	6건	경기 고양·김포·평택, 경남 김해, 전남 보성·영암	육계·산란계· 육용오리 등 375,002수
2월	3건	경기 연천, 경북 상주, 전북 정읍	육계·산란계· 토종닭 등 156,956수
3월	2건	인천 강화, 전북 정읍	토종닭·육용오리 등 40,008수
12월	15건	전북 김제·부안·익산, 전남 고흥·무안·보성·영암·장흥	산란계·육용종계· 육용오리 등 777,881수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2023년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현황 】

농장 소재지	발생일	가축의 종류 및 규모
경기 포천	2023. 1. 5.	양돈, 8,444두
강원 철원	2023. 1. 11.	양돈, 1,976두
경기 김포	2023. 1. 22.	양돈, 2,009두
강원 양양	2023. 2. 11.	양돈, 1,956두

251)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s://www.mafra.go.kr/FMD-AI2/index.do) 등에서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경기 포천	2023. 3. 19.	양돈, 12,741두
경기 포천	2023. 3. 29.	양돈, 10,218두
경기 포천	2023. 3. 31.	양돈, 9,724두
경기 포천	2023. 4. 13.	양돈, 6,118두
강원 철원	2023. 7. 18.	양돈, 6,077두
강원 화천	2023. 9. 25.	양돈, 1,246두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이와 같은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가축전염병의 조기 검색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오염지역과 오염 예상지역 소독 방역, 철새 기피제와 멧돼지 기피제 살포 등 선제적인 방역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드론은 농업 분야의 방역관리 및 가축 질병 확산과 피해를 막기 위한 새로운 대응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멧돼지 서식지나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대·습지·철새 서식지 등 위험하거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서 정밀한 방제·방역 작업을 수행하여 저비용으로 방역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농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는 2020년 8월부터 드론을 활용하여 농장 주변지역 소독, 울타리 방역실태 확인, 야생멧돼지 포획 등 선제적인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2023년 드론운용전담팀 주요 임무 】

구 분	주요내용
야생동물 흔적 추적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열화상 드론을 통한 야생멧돼지 이동경로 추적 및 포획 지원 (농장으로의 유입차단)
방역 지형정보 수집을 통한 통계생산·점검	질병발생시(AI·ASF·FMD 등) 발생농장 및 농장주변 항공촬영(3D) 이미지를 통한 현황분석
철새도래지예찰	겨울철새 도래시기(9월~다음해 3월) 철새도래지, 가금농장 인근 소하천・저수지・농경지 등의 야생조류 예찰을 통한 차단방역 추진
드론방역(소독)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지역(방역대 500m) 내 축산농장에 대해 기존 소독장비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구역(산비탈, 농장 지붕, 밀집 사육농장 등)에 대해 드론을 이용한 소독 추진

※ 자료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2023년 드론운용전담팀 월별 주요 임무 실적 】

구 분	월별 실적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야생동물 흔적 추적	917	8	74	-	-	-	68	148	92	92	146	231	58
방역 지형정보 수집을 통한 통계생산·점검	547	-	-	-	-	-	-	23	97	93	141	107	86
철새도래지예찰	149	2	2	2	15	2	4	-	6	23	38	28	27
드론방역(소독)	1050	88	133	138	28	80	97	104	87	72	73	86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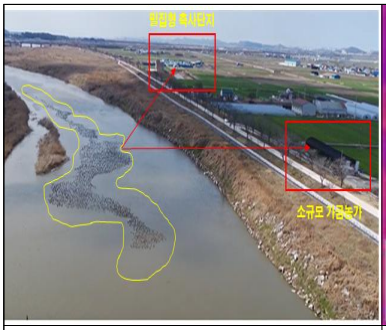
※ 단위 : 두(야생동물 흔적 추적), 호(방역 지형정보 수집을 통한 통계생산·점검 및 드론방역(소독)) 개소(철새도래지예찰)
※ 자료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2023년 드론운용전담팀 지역본부별 주요 임무 실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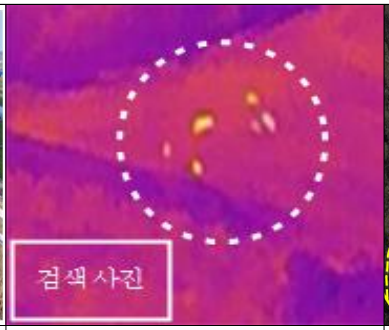
구 분	지역본부별 실적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야생동물 흔적 추적	917	-	-	-	-	917	-	-	-
방역 지형정보 수집을 통한 통계생산·점검	547	17	38	135	80	-	58	12	207
철새도래지예찰	149	14	14	16	36	5	47	15	2
드론방역(소독)	1050	136	139	232	133	23	234	144	9

※ 단위 : 두(야생동물 흔적 추적), 호(방역 지형정보 수집을 통한 통계생산·점검 및 드론방역(소독)) 개소(철새도래지예찰)
※ 자료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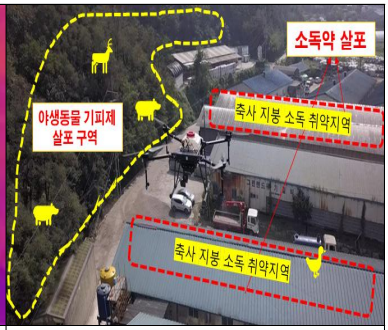
【 2023년 드론운용전담팀 드론 활용 사진 】



드론 모니터링으로 철새 위험지역 차단방역



열화상 드론을 통한 야생 멧돼지 포획



스마트한 방역정보 및 사각지대 방역 추진

※ 자료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그런데, 현재 드론을 활용한 방역 활동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데 그치고 있어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인력 측면에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드론 운용전담인력을 기간제근로자(2023년 18명)로 채용하여 가축방역 업무에 투입하였는데,

10개월의 짧은 계약기간으로 인하여 전문성과 업무 노하우를 축적하는 데 한계가 있고, 신규 교육 및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업무공백이 발생함.

□ 또한 드론 운용전담인력이 지역본부별로 1~2명에 불과하여 가축전염병이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드론운용 인력, 드론 유지·보수 인력 및 드론운용팀 관리 인

력이 부족한 상황인바,

드론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기반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임.

【 2023년 드론운용전담팀 인력 운영현황 】

(단위 : 명)

구분	계	본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정원	18	2	2	2	2	2	2	2	2	2
현원 ('23. 12)	17	2	1	2	2	2	2	2	2	2

※ 자료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둘째, 드론 장비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2023년 12월 기준 소독용 드론 9대와 예찰용 드론 18대를 포함한 총 27대의 드론을 운용하고 있는데,

그중 과반수인 14대를 임차[252]하여 운용하고 있고, 보유 중인 13대 중 예찰용 드론 9대의 경우 열화상카메라 미장착 등 기기 제원 문제 및 정보유출 가능성 등 보안성 문제로 인하여 사용이 어려운 상황으로서,

드론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드론 운용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253]

252) 임차 드론은 최신 기종의 손쉬운 도입 등의 이점이 존재하나, 수급상황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임차 기종·가능성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존재함.

253) 현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국내 드론산업이 보다 활성화된 이후에 국산 드론 자산을 보유하는 방

【 2023년 드론운용전담팀 장비 운용현황 개요 】

구 분	모델명 (제조사, 제조국)	용도	대수	관리형태
소독용 드론	케레스10S (헬셀, 대한민국)	약제 살포	4대	보유
	E610P (위메이크 드론, 대한민국)	약제 살포	5대	임차
예찰용 드론	인스파이어2 (DJI, 중국)	지형정보 수집, 철새 도래지 예찰	9대	보유
	매빅3 (DJI, 중국)	지형정보 수집, 철새 도래지 예찰, 야생동물 추적감시	4대	임차
	에보2 (Autel robotics, 중국)	지형정보 수집, 철새 도래지 예찰, 야생동물 추적감시	5대	임차

※ 자료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2023년 드론운용전담팀 장비 지역별 운용현황 】

(단위 : 대)

구분		계	본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소독용 드론	보유	4	-	1	1	-	1	1	-	-	-
	임차	5	-	-	-	1	1	-	1	1	1
예찰용 드론	보유[1)]	9	1	1	1	1	1	1	1	1	1
	임차	9	1	1	1	1	1	1	1	1	1
합계		27	2	3	3	3	4	3	3	3	3

1) 단, 보유중인 9대의 예찰용 드론(인스파이어2)은 열화상카메라 미장착 및 보안성 문제로 사용이 어려운 상황임

※ 자료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셋째, 방역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 기존의 사업 관리시스템이 드론을 통한 방역 활동기록을 기록·관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방역에 투입되는 약제, 방역의 면적 등 드론 방역에 관한 일련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고,[254)]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임.

254)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는 기존의 자체 사업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출장일자, 위치, 동원인원 등 기본적인 이력관리만 하고 있고, 드론 방역에 특화된 세부 정보는 사용한 소독제의 사용량(소독), 검색마

전용 데이터 시스템(서버)의 부재로 외부 클라우드 서버를 사용함에 따라 보안성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등 드론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방역이력정보 관리에 관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이는 산림청에서 산림병해충 방제에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 업무절차별로 방제업무에 대한 이력관리를 하고 있어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음.[255]

릿수 및 예찰결과(예찰) 등을 비고란에 기입하는 정도로만 관리하고 있음.

255) 드론을 이용한 산림병해충 방제업무 이력관리(산림청)

업 무 절 차	이 력 관 리
방제대상지 선정/확인	○ 실시지역의 기관장이 정한 해당기관의 담당자
주민 등 협의 및 계도	○ 실시지역의 기관장이 정한 해당기관의 담당자
드론방제 계획 수립	○ 실시지역의 기관장이 정한 해당기관의 담당자 ○ 방제구역예정도(좌표관리) 및 실행계획 DB화
경계 표지	○ 실시지역의 신청자 및 산림소유주 또는 해당기관의 담당자
방제구역 숙지	○ 해당기과의 담당자 ○ 작업 감독자 ○ 드론 조종자, 부조종자 ○ 관련 작업자
방제 실시	○ 작업 감독자 ○ 드론 조종자, 부조종자 ○ 관련 작업자 ○ 계약사항, 실행내역, 방제구역도(CAD/GIS파일), 방제 사진 또는 영상, 비행궤적도 등 관련 DB자료 구축
실시상황 통보	○ 해당기관의 담당자 ○ 작업 감독자 ○ 방제 관련 DB자료 제출 및 DB자료 보관(관리)

□ 따라서 농식품부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드론 방역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전문인력[256]과 필요한 장비의 중·장기적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방역업무절차별로 필요한 방역이력정보를 적절한 프로그램[257] 및 서버[258]등을 통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256) 드론조종사, 드론 유지 보수 관리 인력 등

257) 예를 들면 전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출장위치, 동원인원, 소독제 사용량, 예찰 결과 등뿐만 아니라 투입약제, 방역 면적 등의 세부 정보를 입력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함.

258)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정, 정부의 클라우드 도입사업 추진 상황, 향후 AI·IoT 등 지능정보화 기술 활용 가능성, 시스템의 중장기적인 방향성, 시스템의 중요도 분류 및 보안성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내부 스토리지·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등 다양한 방안 속에서 드론 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적절한 데이터 시스템 구축방식을 결정하는 작업이 요구될 것으로 생각됨.

13. 양곡증권정리기금

가. 개 요

1) 수입결산

□ 2023회계연도 양곡증권정리기금은 당초 사업운용수입 2억 8,700만원, 정부내부수입 1조 934억 200만원, 여유자금회수 451억 9,500만원 등 총 1조 1,418억 8,400만원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징수결정액은 공자기금의 예수 규모 감소 등으로 856억 2,200만원이 감소한 1조 562억 6,200만원이 되었으며, 징수결정액을 전액 수납하였음.

【 2023회계연도 양곡증권정리기금 수입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과 목	수입계획 (A)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가 (C-A)
사업운용 수입	287	3,317	3,317	-	-	3,030
- 이자수입	287	3,317	3,317	-	-	3,030
정부내부수입	1,093,402	993,402	993,402	-	-	△100,000
- 공자기금예수금	932,500	832,500	832,500	-	-	△100,000
- 일반회계전입금	160,902	160,902	160,902	-	-	-
여유자금회수	45,195	59,543	59,543	-	-	11,348
합 계	1,141,884	1,056,262	1,056,262	-	-	△85,622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2023회계연도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수입결산의 특징은 수입계획액에 비해 사업운용 수입과 여유자금 회수액은 증가하였고, 공자기금 예수금은 감소하였다는 점임.

□ 사업운용 수입의 경우 예산액은 2억 8,700만원이었으나 실제 수입은 33억 1,700만원으로, 이는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익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정부내부수입의 경우 예산액은 1조 934억 200만원이었으나, 실제 수입은 예산액보다 9.1% 감소한 9,934억 200만원으로, 이는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공자기금 1,000억원을 예수하지 않았기 때문임.

2) 지출결산

□ 2023회계연도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지출결산을 보면, 당초 지출계획액 및 지출현액은 1조 1,418억 8,400만원임.

□ 정부내부지출 1조 185억 8,000만원과 여유자금운용 376억 8,200만원 등 1조 562억 6,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상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공자기금예수금 1,000억원 및 공자기금이자상환 집행잔액 35억 8,9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음.

【 2023회계연도 양곡증권정리기금 지출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출계획	계획 변경				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이용(이체)				
일반지출	-	-	-	-	-	-	-	-	-
정부내부지출	1,122,169	-	-	-	-	1,122,169	1,018,580	-	103,589
-공자기금예수금 원금상환	1,032,500	-	-	-	-	1,032,500	932,500	-	100,000
-공자기금예수금 이자상환	89,669	-	-	-	-	89,669	86,080	-	3,589
여유자금운용	19,715	-	-	-	-	19,715	37,682	-	-
합 계	1,141,884	-	-	-	-	1,141,884	1,056,262	-	103,589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소관]

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1.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 2023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소관 일반회계 등 4개 회계의 세입 예산은 159억 4,300만원이며, 118억 7,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105억 2,300만원이 수납되고, 13억 5,2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 2023회계연도 세입 결산 총괄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수입계획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대비 수납증감 (B-A)
예 산	15,943	11,875	10,523	-	1,352	△5,420
기 금	-	-	-	-	-	-
총 계	15,943	11,875	10,523	-	1,352	△5,420

※ 자료: 농촌진흥청

□ 세출예산 규모는 총지출 기준 1조 2,546억 6,800만원이나, 전년도 이월액 58억 7,6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2,605억 4,4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1조 2,330억 9,200만원(97.8%)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55억 6,800만원(0.5%)과 불용액 218억 8,400만원(1.7%)이 각각 발생하였음.

【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 총괄표 】

(단위: 백만원)

구분	세출 예산액 (지출 계획액)	예산(지출)결정후 증감액					예 산 (지출) 현 액	지출액	다음 년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 이월	초과 지출	예비비	이·전용	기타 증감				
예산	1,254,668	5,876	-	-	11,904 △11,904	-	1,260,544	1,233,092	5,568	21,884
기금	-	-	-	-	-	-	-	-	-	-
총계	1,254,668	5,876	-	-	11,904 △11,904	-	1,260,544	1,233,092	5,568	21,884
총지출	1,254,668	5,876	-	-	11,904 △11,904	-	1,260,544	1,233,092	5,568	21,884

* 총지출: 총계-내부거래(회계간·회계기금간·회계내계정간 거래)-여유자금

※ 자료: 농촌진흥청

2. 세입·세출 개요

가. 세 입

□ 농촌진흥청 소관 일반회계 등 4개 회계의 2023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159억 4,300만원이며, 118억 7,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105억 2,300만원이 수납되고, 13억 5,2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 2023회계연도 세입 결산 총괄표 】

(단위: 백만원)

회계명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감 (C-A)
일반회계	12,458	10,464	9,391	-	1,073	△3,067
농특회계 259)	1,295	904	847	-	57	△448
혁특회계 260)	-	-	0.1	-	-	-
지특회계 261)	2,190	507	285	-	222	△1,905
합계	15,943	11,875	10,523	-	1,352	△5,420

※ 자료: 농촌진흥청

□ 수납액은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연구비 정산금 감소 등으로 전체적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54억 2,000만원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3억 5,2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주요 발생 사유는 납기 미도래 등임.

259)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60)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26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나. 세 출

□ 2023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1조 2,546억 6,8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8억 7,6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2,605억 4,400만원임.

【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 총괄표 】

(단위: 백만원)

회계명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이월액	불용액
		전년이월	초과지출	예비비	이·전용	기타증감				
일반회계	1,151,416	5,876	-	-	11,904 △11,904	-	1,157,292	1,129,949	5,568	21,775
농특회계	22,777	-	-	-	-	-	22,777	22,691	-	86
혁특회계	-	-	-	-	-	-	-	-	-	-
지특회계	80,475	-	-	-	-	-	80,475	80,452	-	23
총계	1,254,668	5,876	-	-	11,904 △11,904	-	1,260,544	1,233,092	5,568	21,884
총지출	1,254,668	5,876	-	-	11,904 △11,904	-	1,260,544	1,233,092	5,568	21,884
내부거래	-	-	-	-	-	-	-	-	-	-

* 총계: 총지출 + 내부거래(회계간·회계기금간·회계내계정간 거래액)
※ 자료: 농촌진흥청

□ 이·전용액은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등으로 기정예산에서 충당하였음.

□ 예산현액 1조 2,605억 4,400만원 중 1조 2,330억 9,200만원을 지출하고, 계약체결 및 설계 지연 등으로 55억 6,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등으로 218억 8,4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3. 재무회계

가. 재정상태

【 2023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재정상태표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2년	증 감	
			금 액	비 율
자 산	3,207,495	3,073,045	134,450	4.4
부 채	3,067	2,905	162	5.6
순자산	3,204,428	3,070,140	134,288	4.4

※ 자료: 농촌진흥청

□ 2023년 말 현재 농촌진흥청의 자산은 3조 2,074억 9,5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44억 5,000만원 증가(4.4%)하였음.

□ 유동자산은 미수채권(보조금 집행잔액 미회수분) 등으로 9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고, 투자자산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장기융자금 회수 및 유동성 대체로 10억 6,700만원이 감소하였음.

□ 일반유형자산은 토지 기부채납, 인수 및 건물·구축물 취득 등으로 1,327억 9,400만원 증가하였음.

□ 무형자산은 치유농업정보망구축 및 농업 R&D 데이터플랫폼 구축 사업 등으로 12억 7,600만원 증가하였고, 기타 비유동자산은 4억 8,100만원 증가하였음.

□ 2023년 말 현재 농촌진흥청의 부채는 30억 6,7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억 6,200만원 증가(5.6%)하였음.

□ 유동부채는 유동성금융리스부채의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5,300만원 감소하고, 장기차입부채는 금융리스부채로 2억 2,400만원 증가하였음.

□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023년 말 현재 3조 2,044억 2,8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42억 8,800만원 증가(4.4%)하였음.

나. 재정운영

【 2023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재정운영표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2년	증 감	
			금 액	비 율
Ⅰ. 프로그램순원가	979,977	975,261	4,716	0.5
Ⅱ. 관리운영비	149,749	147,806	1,943	1.3
Ⅲ. 비배분비용	-	8	△8	△100.0
Ⅳ. 비배분수익	10,689	15,485	△4,796	△31.0
Ⅴ. 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1,119,037	1,107,590	11,447	1.0
Ⅵ. 비교환수익 등	-	-	-	-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1,119,037	1,107,590	11,447	1.0

※ 자료: 농촌진흥청

□ 2023년 중 프로그램 순원가는 프로그램 총원가 9,814억 1,400만원에서 프로그램 수익 14억 3,700만원을 차감한 9,799억 7,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7억 1,600만원 증가(0.5%)하였음.

□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17억 2,800만원 증가, 외주용역비 14억 4,300만원 증가, 보조비 11억 700만원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19억 4,300만원 증가(1.3%)하였음.

□ 비배분비용은 프로그램에 직접 대응되지 않는 비용으로 전년 대비 순감 되었음.

□ 비배분수익은 프로그램에 직접 대응되지 않는 수익으로 종전 부동산 매각에 따른 자산처분이익 26억 4,300만원 감소, 유형자산재평가에 따른 자산재평가손실환입 등의 기타수익 20억 4,900만원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47억 9,600만원 감소(△31.0%)되었음.

□ 재정운영결과(재정운영순원가)는 전년 대비 114억 4,700만원 증가(1.0%)한 1조 1,190억 3,700만원임.

다. 순자산변동

【 2023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순자산변동표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2년	증 감	
			금 액	비 율
Ⅰ.기초순자산	3,070,139	3,019,479	50,660	1.7
Ⅱ.재정운영결과	1,119,037	1,107,590	11,447	1.0
Ⅲ.재원의조달및이전	1,257,458	1,154,399	103,059	8.9
Ⅳ.조정항목	△4,132	3,851	△7,983	△207.3
Ⅴ.기말순자산 (Ⅰ-Ⅱ+Ⅲ+Ⅳ)	3,204,428	3,070,139	134,289	4.4

※ 자료: 농촌진흥청

□ 기초순자산은 2022년 말 순자산 대비 506억 6,000만원(1.7%) 증가한 3조 701억 3,900만원으로 인식하였으며, 2023회계연도 재정운영표의 재정운영결과는 1조 1,190억 3,700만원임.

□ 재원의조달및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의조달 1조 2,686억 5,200만원,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111억 9,400만원이며, 조정항목은 토지 가격평가 등에 따른 자산재평가이익 감소임.

□ 기초순자산에서 재정운영결과를 차감하고 재원의조달및이전과 조정항목을 더한 기말순자산은 3조 2,044억 2,800만원임.

2023년 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요약

회계 구분	세부사업명	'23년 예산 (백만원)	주제(제목)	지적사항	비고
일반회계	공통	3,518	낙찰차액을 이용한 계약 체결 문제 주의	농진청은 일부 용역 계약사업의 낙찰차액을 다른 용역 계약의 일반용역비 부족분에 집행하였는바,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할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등 예산의 자의적 집행을 방지할 것	
	치유농업연구소 기반구축	7,200	철저한 사업 공정 관리 필요	농진청의 치유농업연구소기반구축 사업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착공이 중지된 상황인바, 농진청은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할 것	'21년 시정요구 (제도개선)
	축산시험연구	57,151	시험연구비의 목적외 사용 지양 필요	농진청은 관리용역비(210-15) 비목으로 편성·집행하였어야 할 시설장비 유지관리 계약을 시험연구비(210-13) 비목에서 집행하였는바, 시험연구비의 목적외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신기술보급사업	55,519	식량자급률 향상 모델 기반조성 사업 일부 부실 추진 문제	식량자급률 향상 모델 기반조성 사업의실집행 부진은 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의 문제와 자격 요건 제약 요인에 대한 검토 부족 등에 기인하므로 농진청은 향후 사업 대상자에 대한 자격 요건 점검과 관리를 강화할 것	'22년 시정요구 (주의)
	스마트영농 지원체계구축	6,274	농업용 로봇 실증지원 사업의 전반적인 개선 필요	농진청은 원활한 자율주행 기능을 위한 농업용 로봇의 기능 향상, 로봇 선정 및 구입의 간소화, 안전사고 예방 등 사업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19,711	행정절차 이행 기간 단축 및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 필요	꿀벌자원 육성품종 증식장 구축사업은 사업 추진 실적이 매우 부진하였는바, 농진청은 향후 행정절차 이행 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업 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할 것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	43,788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적정 예산 확보를 통한 연례적인 대규모 이·전용 지양	농진청은 검역병해충 발생 추이를 감안하여 손실보상금의 적정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이·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광역단위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 성과 제고 필요	농진청은 광역단위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개선 필요 사항을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과정에 반영하여 사업 성과를 제고할 것	
	농업전문인력 양성	15,570	구축된 협업기반의 다양한 활용방안 강구 필요	청년농업인 협업기반 조성 사업 결과로 마련된 협업공간 및 시설의 활용 실적이 저조하므로 농진청은 기 조성된 협업기반 활용을 위한 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Ⅱ. 회계·기금별 검토의견

1. 일반회계

가. 개 요

1) 세입결산

□ 당초 재산수입 6억 8,900만원, 경상이전수입 86억 1,900만원,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9억 6,700만원, 수입대체경비수입 7,800만원, 관유물매각대 1억 500만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징수결정액은 경상이전수입 감소 등으로 19억 9,400만원 감소한 104억 6,400만원임.

□ 징수결정액 중 재산수입 14억 3,400만원, 경상이전수입 46억 9,200만원, 재화및용역판매수입 32억 1,900만원, 수입대체경비수입 200만원, 관유물매각대 4,400만원이 수납되고, 경상이전수입 등 10억 7,3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대비 수납증감 (B-A)
계	12,458	10,464	9,391	-	△1,073	△3,067
○ 재산수입	689	1,435	1,434	-	△1	745
- 토지대여료	17	29	29	-	-	12
- 건물대여료	29	47	47	-	-	18
- 기타관유물대여료	15	-	-	-	-	△15
- 기타재산이자수입	180	919	918	-	△1	738
- 기타재산이자외수입	448	440	440	-	-	△8
○ 경상이전수입	8,619	5,764	4,692	-	△1,072	△3,927
- 과태료	-	5	-	-	△5	-
- 과징금	-	4	4	-	-	4
- 변상금	-	2	-	-	△2	-
- 위약금	119	52	52	-	-	△67
- 가산금	-	5	3	-	△2	3
- 기타경상이전수입	8,500	5,696	4,633	-	△1,063	△3,867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967	3,219	3,219	-	-	252
- 면허료및수수료	29	28	28	-	-	△1
- 실습수입	2,700	2,975	2,975	-	-	275
- 기타잡수입	238	216	216	-	-	△22
○ 수입대체경비수입	78	2	2	-	-	△76
- 면허료및수수료	78	2	2	-	-	△76
○ 관유물매각대	105	44	44	-	-	△61
- 기타고정자산매각대	100	44	44	-	-	△56
- 유동자산매각대	5	-	-	-	-	△5

※ 자료: 농촌진흥청

2) 세출결산

□ 당초 예산액은 1조 1,514억 1,6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58억 7,6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1,572억 9,200만원으로, 이 중 1조 1,299억 4,900만원(97.6%)이 지출되고, 55억 6,800만원(0.5%)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17억 7,500만원(1.9%)이 불용되었음.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이월액	불용액
		전년이월	예비비	전용	이용				
계	1,151,416	5,876	-	9,901 △9,901	2,003 △2,003	1,157,292	1,129,949	5,568	21,775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	533,086	3,176	-	4,506 △4,506	△405	535,857	522,747	2,990	10,120
○농업과학기반연구	97,941	3,026	-	-	-	100,967	98,289	411	2,267
○ 작물연구	64,475	-	-	-	△405	64,070	62,773	-	1,297
○ 지속가능한 농업연구	102,924	-	-	-	-	102,924	102,762	-	162
○ 농자재관리 및 평가	19,824	-	-	-	-	19,824	19,711	-	113
○ 차세대바이오그린21	4,511	-	-	-	-	4,511	4,453	-	58
○ 농업정책지원 및기반육성	168,105	150	-	4,506 △4,506	-	168,255	159,556	2,579	6,120
○ 농업신성장 동력연구	75,228	-	-	-	-	75,228	75,201	-	27
○민간연구개발지원	78	-	-	-	-	78	2	-	76
<농축산물 경쟁력 제고 기술개발>	300,771	2,290	-	4,958 △4,958	△1,598	301,463	292,485	2,578	6,400
○ 원예특작연구	119,207	-	-	2,194 △2,194	△989	118,218	115,588	108	2,522
○ 축산연구	181,564	2,290	-	2,764 △2,764	△609	183,245	176,897	2,470	3,878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이월액	불용액
		전년이월	예비비	전용	이용				
<농업신기술보급>	**64,753**	**-**	**-**	**-**	**-**	**64,753**	**64,712**	**-**	**41**
○신기술보급사업	64,753	-	-	-	-	64,753	64,712	-	41
<지역농업특성화>	**64,499**	**-**	**-**	**-**	**2,003**	**65,502**	**65,426**	**-**	**76**
○기술농업지원	64,499	-	-	-	2,003	65,502	65,426	-	76
<농가경영능력향상>	**39,150**	**410**	**-**	**127 △127**	**-**	**39,560**	**39,074**	**-**	**486**
○농업기술경영연구	10,653	-	-	20 △20	-	10,653	10,591	-	62
○농촌진흥사업정보화	19,068	410	-	82 △82	-	19,478	19,376	-	102
○농가경영지원	9,429	-	-	25 △25	-	9,429	9,107	-	322
<전문인력양성>	**18,816**	**-**	**-**	**15 △15**	**-**	**18,816**	**18,647**	**-**	**169**
○농업인력양성 및 지원	18,816	-	-	15 △15	-	18,816	18,647	-	169
<기관운영 및 사업 지원>	**131,341**	**-**	**-**	**295 △295**	**-**	**131,341**	**126,858**	**-**	**4,483**
○본청인건비	35,333	-	-	-	-	35,333	34,179	-	1,154
○소속기관인건비	70,616	-	-	-	-	70,616	67,648	-	2,968
○본청기본경비	10,057	-	-	174 △174	-	10,057	9,799	-	258
○소속기관기본경비	8,149	-	-	86 △86	-	8,149	8,119	-	30
○성과관리 및 능력개발	532	-	-	-	-	532	490	-	42
○농촌진흥사업지원	2,866	-	-	35 △35	-	2,866	2,861	-	5
○청사확보 및 시설개선	3,788	-	-	-	-	3,788	3,762	-	26

※ 자료: 농촌진흥청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공통 : 낙찰차액을 이용한 계약 체결 문제 주의

○ 농촌진흥청은 일부 용역 계약사업의 낙찰차액을 다른 용역 계약의 일반 용역비 부족분에 집행하는 등 원칙에 맞지 않는 집행을 하였는 바,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할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의 자의적 집행을 방지하고 당초 예산 편성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예산집행을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이 2023년도에 일반용역비(210-14)로 편성한 본예산은 35억 1,800만원이고, 이·전용 6억 1,1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1억 2,900만원으로, 이 중 39억 6,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6,4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회계연도 농촌진흥청(소속기관 포함) 일반용역비(210-14)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농촌진흥청 등 일반용역비 (210-14)	3,518	-	611	4,129	3,965	-	164	3,021

(나) 검토의견

□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일반용역비(210-14목)는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구매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62]에 따르면 일반용역비 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하되, 해당 용역의 수정계약 체결 시 추가소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농촌진흥청은 2023년 '농업기술', '그린매거진' 등 농업·농촌의 최신 소식을 전하는 소식지 제작과 K-농산어촌 한마당, 농업기술 박람회 등 행사 개최를 위하여 일반용역비를 집행하였는데, 일부 용역 계약사업의 낙찰차액을 다른 용역 계약의 일반용역비 부족분에 집행하는 등 원칙에 맞지 않는 집행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구체적으로 2022회계연도 재무결산 위탁용역의 낙찰차액으로는 퇴직 예정 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 교육 용역비 부족 재원에 집행하였고, 2023년도 그린매거진 제작용역과 온라인 홍보

262)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일반용역비 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한다. 다만, 해당 용역의 수정계약 체결시 추가소요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낙찰차액 사용내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163

위탁으로 발생한 낙찰차액은 농촌진흥청 대표 홍보 동영상 제작 재원으로 집행하였음.

농업기술박람회 행사 대행 용역의 낙찰차액은 농업과학기술 우수성과 홍보영상 제작에, 농촌진흥사업 성과공유대회 대행 용역의 낙찰차액은 지역 R&D 우수성과 공유를 위한 특별전시 대행 용역으로 각각 집행하였음.

【 타 사업 일반용역비 낙찰차액 이용 계약체결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 사업명	계약건명	배정 예산	발주 금액	계약 금액	낙찰 차액	낙찰차액 사용현황	낙찰차액 사용이유
1	기관운영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비대상)	2022회계연도 재무결산 위탁 용역	30	30	27	3	3	퇴직예정 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 교육 용역비 부족 재원 * 법적의무교육
2	농촌지원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비대상)	2023년 농업기술 제작 용역	190	190	152	38	38	운영비 부족 재원 (일반수용비 부족 재원)
3	농업기술 알림	2023년도 그린 매거진 제작 용역	200	200	196	4	4	농촌진흥청 대표 홍보 동영상 제작 부족 재원
4	시험연구활동지원 (R&D)	2023년 온라인 홍보 위탁 용역 계약	200	200	190	10	10	
5		2023 농업기술 박람회 행사 대행 용역	400	400	382	18	18	2023 농업과학기술 우수성과 홍보영상 제작 재원
6		2023 농촌진흥 사업 성과공유 대회 대행 용역	260	260	254	6	6	지역 R&D 우수성과 공유를 위한 특별전시 대행용역

※ 자료: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은 일반용역비 낙찰차액으로 집행한 금액의 계약금액이 각 300만원~3,800만원이어서 이·전용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입장임.

또한 재무결산 위탁용역의 낙찰차액 사용 경위에 대하여, 2021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263]를 2021~2022년에는 고용노동부의 무료컨설팅을 통해 지원할 수 있었으나, 2023년은 예산확보를 하지 못하여 타 사업 일반용역비 낙찰차액을 이용한 것이며, 홍보 영상은 소요 발생 시 제작하였던 것이어서 관련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낙찰차액을 불용처리하도록 한 집행지침의 의도는 불필요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목적으로 낙찰차액이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액의 예산일지라도 예산 집행 과정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농촌진흥청은 퇴직 예정 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 교육용역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 편성 시 각종 홍보영상 제작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관련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당초 예산

263)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50세 이상 퇴직예정자에게 진로 설계, 취업 알선 등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제도임. 사업주가 사업장 내 이직이 예정된 근로자에게 직접 또는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20.5.1.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되면서 도입·시행됨.

편성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 치유농업연구소기반구축 : 철저한 사업 공정 관리 필요

○ 치유농업연구소기반구축 사업은 2023년 토지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이로 인해 착공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도말 공사 계약업체에 선금을 지급하는 등 사업관리가 부실하였으므로 향후 농촌진흥청은 토지보상 협의를 원만히 완료하고,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동 사업은 2021년 3월 시행된「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2020.3. 제정)[264]을 근거로, 치유농업을 확산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사업임.

2023년도 예산 72억원 중 42억 4,500만원을 집행하고, 25억 7,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7,600만원을 불용하였음[265].

【 2023회계연도 치유농업연구소기반구축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치유농업연구소 기반구축	7,200	-	-	7,200	4,245	2,579	376	4,780

264)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65)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치유농업연구소기반구축(1136-330)

(나) 검토의견

□ 농촌진흥청은 2021년부터 경남 김해시에 부지 16,548㎡, 연면적 6,000㎡의 규모의 교육·연구기관인 치유농업연구소를 구축 중인데, 치유농업연구소는 치유농업의 연구성과 실증, 서비스 품질관리, 산업적 육성 지원,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을 수행할 계획임.

【 치유농업연구소기반구축 사업 결산개요 】

○ 사업위치 :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일원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6,548㎡(연면적 6,000㎡)
○ 사업시행방법 : 농촌진흥청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건립·소유) 농촌진흥청, (운영)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재원조달 : 국가(80%), 지자체(20%)
○ 사업 기간 : 2021년~2025년(5년), 기획재정부와 사업 1년 연장 협의 중
○ 총사업비 : 291억원[266]('24.5.)

□ 동 사업은 사업비 300억원(국비 240억원, 지방비 60억원) 규모로 구축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개년으로 추진되었는데, 2021년에 부지선정 지연, 건축기획업무 및 설계공모 지연 등으로 편성된 예산 대부분이 불용[267]되는 등 사업 초기부터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

2022년은 지연된 사업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설계비만을

266) 당초 320억원이었던 총사업비는「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낙찰차액 감액으로 인하여 2023년 5월, 291억원으로 조정됨
267) 2021년 예산 9억 6,400만원 중 기본·실시설계비로 200만원 집행

편성하였고, 전액을 집행하였음.

□ 2023년은 건설보상비 13억 9,900만원, 공사비 50억 7,300만원 등 7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공사비 중 24억 9,400만원을 집행하고, 25억 7,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감리비 3억 300만원 등 3억 7,6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회계연도 치유농업연구소기반구축 사업 세부 결산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							2024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치유농업연구소 기반 구축	7,200	-	-	7,200	4,245	2,579	376	4,780
건설보상비	1,399	-	-	1,399	1,399	-	-	-
기본조사설계비	39	-	-	39	38	-	1	-
실시설계비	209	-	-	209	184	-	25	-
공사비	5,073	-	-	5,073	2,494	2,579	-	4,300
감리비	400	-	-	400	97	-	303	450
시설부대비	80	-	-	80	33	-	37	30

자료: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23년 사업 전체 일정이 순연된 것[268]은 중간설계에 대한 조달청의 적정성 검토[269]('22.10.~'23.1.)와

268) 조달청의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 물가변동 등을 반영한 총사업비 협의와 사업부지 선정 및 설계용역 계약 관련 행정 소요일수 지연으로 인하여 사업기간 연장이 이루어짐('23.4.)
- 총사업비 : (당초) 29,282백만원 → (변경) 31,626(+2,344)
- 사업 기간 연장 : 현행('21~'24, 4년) → 변경('21~'25, 5년)

269) 적정성 검토(조달청) : 계획·중간·실시 등 설계단계마다 사업 목적에 맞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사업 예산 과다·과소 여부 등을 검토

기재부와의 총사업비 협의[270](’23.2.~’23.4)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됨에 따른 것이라고 함.

또한 감리비 불용은 조달청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단일 응찰로 유찰됨에 따른 것으로, 해당 계약은 ’24년 1월 완료되었다고 함.

□ 2023년 건설보상비로 편성된 예산 13억 9,900만원[271]은 토지보상 위탁 업무를 맡은 한국부동산원에 전액(지방비 포함 74억원) 집행(’23.1.)하였음.

그러나 일부 토지소유자의 보상 협의 거부로 부지매입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2024년 5월까지 15필지의 사업부지 중 9필지에 대해서만 보상이 완료되었고(토지보상률 44%), 잔여 6필지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24. 4)[272]하

---

270) 총사업비 협의조정(기재부) : 조달청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공사비 증액, 감액 등 총사업비 조정

271) 농진청 14억(’23년), 김해시 60억(’22년 30억, ’23년 30억) 예산 집행
- 치유농업확산센터 조성 기본계획에 따라 당초 총사업비 300억원에서 토지보상비 74억원 중 14억원은 건축물 부지로 국가(농촌진흥청)가 소유하여 건축을 진행하고, 건축물 외 부지는 지자체(김해시)에서 60억을 부담하여 소유하고 향후 국가에 무상임대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 중임

27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50조(재결사항)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2. 손실보상
3.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4.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②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증액재결(增額裁決)을 할 수 있다.

여 2024년 8월 8일 수용재결이 확정되었음.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대부분 민간 소유인 미보상 토지가 전체 부지의 중앙, 상단 부분을 차지하여 착공이 불가한 상황이어서 '24년 7월 현재 모든 공사의 착공이 중지된 상태라고 함.

□ 토지 매입으로 인한 사업지연과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은, 2024년 8월 8일 토지 수용재결이 확정되었으므로, '24년 10월~11월 무렵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고 함. 다만, 수용 재결 이후에도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탁[273]을 통해 토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함.

□ 한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11항[274]에 따르면, 계약 시 선금은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지급하여야 함.

---

27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供託)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③·④ (생 략)

27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적용범위)** ⑪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2023년 12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275]에 근거하여 건축공사 비용으로 총 공사비(50억 7,300만원)의 21.9%인 11억 1,600만원을 공사계약업체에 선금으로 지급하였음.[276]

【 2023년 치유농업연구소기반구축 공사비 선금 집행 경과 】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액	예산배정일	계약체결일	선금지급 요청일	선금지급일
건립공사(1차)	1,000	2023.01.02.	2023.12.28.	2023.12.28.	2023.12.29.
전기공사(1차)	50	2023.01.02.	2023.12.15.	2023.12.18.	2023.12.18.
통신공사(1차)	66	2023.01.02.	2023.12.15.	2023.12.18.	2023.12.18.

자료: 농촌진흥청

275)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적용범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1.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276)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당시 사업담당부서인 '치유농업추진단'과 공사·계약 담당부서인 '운영지원과' 협의 하에 선금 지급을 결정하였으며, 그 밖에 총 공사비의 27.6%인 13억 7,800만원은 관급자재 비용으로 계약업체에 직접 지급하지 않고 조달청에 대금을 미리 납부하여 조달청에서 계약업체에 지급하는 선고지 납부를 하였다고 함. 농촌진흥청은 선고지 납부 사유에 대하여 '러시아-우크라이나' · '이라크-하마스' 전쟁, 국내 건설업 불황 등 국내외 정세 불안으로 관련 자재의 가격 변동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조달청에 미리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가격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2023년 치유농업연구소기반구축 공사비 선금 및 선고지 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비목	예산	합계	종류	금액	세부내용
공사비	5,073	2,494	선금 (1,116)	1,000	치유농업확산센터 건립공사(1차) 선금지급
				50	치유농업확산센터 전기공사(1차) 선금지급
				66	치유농업확산센터 통신공사(1차) 선금지급
			선고지 (1,378)	709	치유농업확산센터 관급자재(철근) 구매 선고지 납부
				669	치유농업확산센터 관급자재(레미콘) 구매 선고지 납부

자료: 농촌진흥청

그러나 당시 토지보상 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점과 겨울철 공사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선금 지급 비중도 과도했던 측면이 있음.

□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미보상 토지 소유주가 소수(5인)이며 보상 및 착공과 관련하여 사전 논의되어 2024년 2월경 착공을 예상하고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277] 및 국가계약 특례[278]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것으로,

사전 논의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주들이 보상금액을 수용하지 않아 계약업체에 공사 중지를 요청('24.1.21.)하게 된 것이라는 입장임.

□ 그러나 착공시기를 예측할 수 없음에도 농촌진흥청은 연도 말에 전체 예산의 약 20%에 가까운 10억원의 건립공사 선금을 지급하였고, 2024년 8월 현재까지도 건축 공사가 시작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279].

---

277)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선급과 개산급)**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傭船料), 공사·제조·용역 계약의 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槪算)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선급) ① 법 제26조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5.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278) * 경제위기에 따른 내수·민생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한 공공구매 집행 및 조달기업 지원을 위한 지침 시행('24.6.30.까지)

⇒ 재정·투자집행률 제고를 위해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11항에도 불구하고 연도내 집행가능액 한도를 초과하여 선금 지급 가능(기재부)

279) 이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은 선금 전액에 대하여 보증에 가입되어 있어 업체에 문제가 있을 경

□ 또한 전기 및 통신 공사 등에 있어서도 착공이 확정된 후 선금을 지급했어도 무방했으나 1억 1,600만원의 선금이 집행되어 동 사업 추진에 있어 농촌진흥청의 사업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여짐.

□ 동 사업은 치유농업 산업화 및 조기정착을 견인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최초 계획에 따르면 2024년 12월 연구소를 완공하여 2025년부터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지연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025년 완공으로 기획재정부와 사업기간을 조정하게 되었음.

그러나 2024년 7월 현재,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연구소가 2026년 6월경 완공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고 있어 추가적인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우 보증사를 통해 전액 보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 치유농업연구소기반구축 사업 추진 현황 】

구 분	최초 계획일정 (2021년 편성기준)	실제 추진 현황	비 고 (변동 사유 등)
기본계획	’21.5	’21.5	
부지선정	’21.4	’21.7	
계획·중간설계	’21.10 ~ ’22.4	’22.1 ~ ’23.4	설계 입찰 재공고(유찰)
실시설계	’22.5 ~ ’22.8	’23.5 ~ ’23.11	중간설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 지연
공사 입찰 및 계약	’22.11 ~ ’22.12	’23.9 ~ ’24.1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재공고(유찰)
용지보상	’22.5 ~ ’23.3	’22.5 ~ ’24.10 예정	일부 토지소유주 보상 협의 거부 (보상금액 상향 요청)
착공	’23.1	’24.10 예정	
준공	’24.12	’26.6 예정	

※ 자료: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의 연구성과를 실증하고 산업적 육성을 지원하려는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하여 토지보상 협의를 원만히 완료하고, 사업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하여 후속 집행 절차 및 사업비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3) 축산시험연구 : 시험연구비의 목적외 사용 지양 필요

○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 3년간 관리용역비(210-15) 비목으로 편성·집행하였어야 할 소방 안전관리 대행, 전기 안전관리 대행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계약 예산을 시험연구비(210-13) 비목에서 집행하였는 바, 향후 관련 법령상 예산과목을 준수하여 집행하도록 주의하는 한편, 시험연구비의 목적외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축산시험연구 사업은 축산 신소재 물질 개발, 가축개량 및 품종개발, 가축유전자원 국가관리체계 구축, 한우 고급육 생산, 가금 품종개발 등 축산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은 571억 5,100만원이나 이·전용으로 6억 90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현액은 565억 4,200만원으로 555억 6,100만원을 집행하고, 9억 8,100만원을 불용하였음[280].

【 2023회계연도 축산시험연구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축산시험연구	57,151	-	△609	56,542	55,561	-	981	48,938

280)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축산시험연구(R&D, 책임운영)(1232-300)

(나) 검토의견

□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시험연구비(210-13목)는 국가시험연구기관 및 방위력개선 사업에서 시험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비로 ① 일용임금(110-04) ② 일반수용비(210-01) ③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④ 피복비(210-03) ⑤ 임차료(210-07) ⑥ 유류비(210-08) ⑦ 시설장비유지비(210-09) ⑧ 재료비(210-11) ⑨ 여비(220목) 등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경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시험연구비는 동일 세목(210-13) 내에서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여 시험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신축적으로 집행하게 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예산 편성 및 집행 통제는 미흡할 수 있음.

□ 축산시험연구사업의 시험연구비는 축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축산 신소재 물질 개발, 가축개량 및 품종개발, 한우 고급육 생산, 가금 품종개발, 제주 재래가축 증식·개량, 가축유전자원 국가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한 연구 비용으로 편성되었는데,

2023년 축산시험연구사업의 시험연구비는 287억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286억 7,3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3회계연도 축산시험연구 사업 비목별 결산 】

(단위 : 백만원)

2023								2024
비목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 시험연구비	28,700		△27	28,673	28,673		-	24,535
· 연구시설비	12,720		△609	12,111	11,498		613	9,250
· 연구장비비	2,959		-	2,959	2,959		-	1,863
· 기타연구비	12,772		27	12,719	12,431		368	13,290
합 계	57,151		△609	56,542	55,561		981	48,938

□ 한편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관리용역비(210-15목)는 청사의 시설관리용역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 3년간 소방 안전관리 대행, 전기 안전관리 대행, 무인 경비 시스템, 승강기 유지보수 등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된 경비가 아닌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계약 예산을 관리용역비가 아닌 시험연구비에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23회계연도 시험연구비에서 집행한 시설장비 유지관리 예산 】

(단위 : 천원)

항목	2021	2022	2023
소방 안전관리 대행	12,900	12,900	1,300
전기 안전관리 대행	19,800	19,800	6,600
무인 경비 시스템	6,204	6,204	1,551
통신(교환기) 유지보수료	290	2,904	759
오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9,600	10,200	3,400
승강기 유지보수	1,848	1,848	462
안전관리 업무 대행	12,124	12,124	5,742
연구원 보건관리 업무 대행	-	5,040	1,680
소 계	**62,766**	**71,020**	**21,494**

※ 자료: 농촌진흥청

□ 2023년 축산시험연구사업의 관리용역비는 축산생명환경부 연구실 안전관리 용역에 6,500만원, 연구장비 유지관리 용역에 3,500만원으로 약 1억원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은 자체감사(2023.7.)에서 해당 사실이 지적되기 전까지 각종 시설장비 유지관리 예산을 시험연구비로 집행하였음.

□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22년까지는 관리용역비(210-15) 비목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관례적으로 시험연구비에서 집행하였고,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대행 등이 시설장비유지 및 보수와 관련된 것이어서 시험연구비 내 시설장비유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하였다고 함.

□ 그러나 내역변경 절차 없이 목적과 무관한 비목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예산과목의 성격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국가재정법」 제45조[281]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임.

□ 농촌진흥청은 향후 관련 법령상 예산과목을 준수하여 집행하도록 주의하는 한편, 집행에 신축적인 측면이 있는 시험연구비의 경우, 목적외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시험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비로 집행하여야 할 것임.

또한 연례적으로 관리용역비 세목의 예산에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정규모의 관리용역비 예산을 편성하되, 예산의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정당한 내역변경 또는 이·전용 절차를 거쳐 집행해야 할 것임.

281)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4) 신기술보급사업 : 식량자급률 향상 모델 기반조성 사업 일부 부실 추진 문제

○ 식량자급률 향상 모델 기반조성 사업의 실집행이 부진한 것은 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의 문제와 자격 요건 제약 요인에 대한 검토 부족 등 사업 추진의 기본이 되는 요건을 철저히 점검하지 못한 데 기인하므로 농촌진흥청은 향후 사업 추진 시 사업 대상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자격 요건 점검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신기술보급사업은 농업신기술을 보급·확산하여 농촌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으로 555억 1,900만원을 편성하여 554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3,900만원을 불용하였음[282].

【 2023회계연도 신기술보급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신기술보급사업	55,519	-	-	55,519	55,480	-	39	64,275
-식량자급률 향상모델기반조성	7,600	-	-	7,600	7,600	-	-	8,600

282)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신기술보급사업(보조)(2131-300)

(나) 검토의견

□ 신기술보급사업의 내역사업인 식량자급률 향상 모델 기반조성 사업은 밀, 콩, 쌀가루의 이모작이 가능한 자립형 식량작물 특화단지를 구축하여 연중 생산·가공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향상하고 밭작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임.

□ 해당 내역사업의 2023년 예산은 총 76억원으로, 내내역사업으로는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4개소 조성 사업비 30억원, 쌀가루 지역 자립형 생산·소비 모델 8개소 구축 사업비 36억원, 콩 자립형 융복합 단지 2개소 조성 사업비 10억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음.

그런데 콩 자립형 융복합 단지 조성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두 내내역사업의 실집행률이 다소 부진한 측면이 있음.

【 2023년도 식량자급률 향상 모델 기반조성 사업 실집행률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사업시행주체(지자체)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A)	실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계	7,600	1,500	9,100	6,806	2,294	-	74.8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	3,000	1,500	4,500	3,146	1,354	-	69.9
쌀가루 지역 자립형 소비 모델	3,600	-	3,600	2,660	940	-	73.9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	1,000	-	1,000	1,000	-	-	100.0

※ 자료: 농촌진흥청

①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 사업

□ 내내역사업 중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 사업[283]은 2022년부터 추진된 2년차 사업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국산밀 생산 전문단지를 구축하고, 품질 균일화를 위한 건조·저장 및 가공시설을 조성하여 국산밀을 활용한 가공제품을 개발·유통하려는 사업임.

【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 사업 계획 】

- 사업목적 : 국산 밀 생산단지 및 국산 밀 품질고급화 산업 4개소 조성
- 사 업 비 : 30억원 (1,50백만원×4개소×국비 50%)
  * 2년 연속 사업/ 2년차(전북 김제, 전남 구례), 1년차(경북 구미, 경남 함양)
- 사업기간 : 2년 연속사업(2년차 : 2022~2023, 1년차 : 2023~2024)
- 사업내용 : 국산 밀 생산, 저장, 제분, 유통, 제품화 단계별 연계 시범모델 구축
  - (1년차) 대규모 원맥 생산 및 품질 균일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 (2년차) 국산밀 소비확대를 위한 1차 제분 및 가공제품 개발, 소비·유통 체계화
- 사업대상 : 밀 제분이 가능한 선도단지, 작목반, 연구회,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농협 등
  ※ 신청조건 : 100ha 내외 밀 계약 재배가 가능한 농업(법)인(단체)

※ 자료: 농촌진흥청

□ 2022년 사업이 시작된 지역 중 하나인 김제는 원자재 가격 및 외환 상승 등에 따른 사업비의 증가로 설계 변경을 하기 위하여 사업의 지연을 겪었음.

283)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쌀소비가 감소되고 밀가루 소비가 증가에 따라 밀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국산밀 생산·저장·제분·유통·제품화를 통한 시범모델을 구축하는 사업

구례는 사업 대상지가 세 차례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2개소 모두 2023년이 되어서야 제분시설 설계에 들어가게 되어 연내에 예산 집행이 완료되지 못하고 2024년 7월 집행 완료 예정이라고 함.

【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 사업 : 김제 및 구례('22～'23) 】

(단위: 백만원)

사업기간	지역	예산액		이월액	집행액	실집행률('23 기준)	집행일(예정)	집행 부진사유
		'22	'23					
'22～'23	김제	750	750	346	-	76.9	'24.. 7월 하순	- 준공(6.21.) 및 시험가동 완료 후 집행 예정
	구례	750	750	260	-	82.7	'24..7월 중순	- 준공 완료(5.16.), 현재 시험가동 중으로 완료 후 집행 예정

※ 자료: 농촌진흥청

□ 2023년 1년차 사업이 진행된 지역 중 구미는 밀 제분시설 구축 용역 입찰공고('23년 10월 하순), 업체 선정·계약(11월), 예산 집행(12월)을 연내 완료하여 예산을 전액 집행하였으나, 함양의 경우 실집행률이 0.3%로 매우 부진한 집행 실적을 보이고 있음.

【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 사업 : 함양 및 구미('23～'24) 】

(단위: 백만원)

사업기간	지역	예산액		이월액	집행액	실집행률('23 기준)	집행일(예정)	집행 부진사유
		'22	'23					
'23～'24	함양	-	750	748	2	0.3	'24..1월 일부 집행	- 계약금 집행 완료(1.26) 및 중도금 집행 예정(7월 하순)
	구미	-	750	-	750	100	-	-

※ 자료: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은 함양 사업의 실집행이 부진했던 사유로, ’23년 4월 함양군 사업 대상자 사전 협의 과정[284]에서 적정 업체로 판단되어 사업 시행 준비를 하고 있던 업체가, 입찰공고 추진과정에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소지에 대한 부적격 사항[285]이 파악되어 협상 계약 진행을 중지하였으며, 이후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자 변경과 공사 재설계를 추진하는 데 시일이 소요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밀산업밸리화시범단지 조성사업 사업진행 계약 및 집행 현황 】

구 분	구미	함양
입찰 공고 (제분시설 업체)	’23. 10. 25.	’23. 12. 5.(유찰) ’23. 12. 12.
업체 선정	’23. 11. 14.	’23. 12. 21.
업체 계약	’23. 11. 21.	’24. 1. 10.
제분시설 예산 집행	’23. 11. 28.	’24. 1. 26.

※ 자료: 농촌진흥청

□ 사업대상자와의 사전 협의 과정에서 사업 요건인 적격·부적격 사유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이 이를 소홀히 하여 불필요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였는 바, 향후 유사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284)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국내에 밀 제분시설 구축 가능 업체가 한정적이어서 사업설명회를 통해 업체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추진하였다고 함

285)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밀제분시설) 사업 함양 우리밀 전문 중소형 제분시설 구매 설치 입찰 공고> 중 “참가자격” 일부

> 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 가입하여 시공능력을 평가 받은 업체이며, 동시에 기계설비 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② 쌀가루 지역 자립형 생산·소비모델 구축 사업

□ 내내역사업 중 쌀가루 지역 자립형 생산·소비모델 구축 사업은 로컬푸드 등 지역단위로 가루쌀 및 가공용쌀을 소규모 제분하고 이를 활용한 가공품을 개발하여 지역 소비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2023년 신규사업임.

동 사업의 목적은 광역 거점별로 가루쌀 제분·가공·소비 모델을 조성하여 가루쌀 소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개소당 9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의 예산을 지원하여 쌀가루 제분기, 건조·저장·가공·유통에 필요한 시설, 가공제품 개발, 브랜드화, 유통·판매,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것임.

【 쌀가루 지역 자립형 소비 모델 구축 사업 계획 】

- 사업목적 : 쌀가루 품질 균일화를 위한 건조저장시설 및 가공·소비 모델 8개소 조성
- 사 업 비 : 36억원 (900백만원×8개소×국비 50%)
- 사업기간 : 1년 사업 (2023년)
- 사업내용 : 쌀가루 활용 지역 자립형 제분·저장·가공·유통 모델
  - 분질미 건식(진공) 제분기・포장라인・저온저장고 설치, 홍보·전시비 지원
  * (건식제분) 쌀가루 제분시설 확대, 건조·저장·제분 공정과정 구축 등
  ** (제분시설) 가루쌀 1차 가공 → (지역제빵업체) 소가공품 개발 판매(밀·쌀빵)

※ 자료: 농촌진흥청

□ 그런데 2023년 사업이 진행된 8개소(경북 포항, 충남 보령, 충남 당진, 전남 곡성, 전북 남원, 전북 고창, 충북 충주, 경남 산청)의 구축

경과를 살펴보면, 3개소(고창, 충주, 산청)만이 예산을 100% 집행하였고, 1개소(포항)는 사업 추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4개소(보령, 당진, 곡성, 남원)는 예산의 50~80%만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등 사업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보임.

□ 농촌진흥청은 실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포항의 경우, 당초 사업 추진 예정이었던 지역농협이 낮은 사업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였고,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사업대상자 공고 결과 2023년 9월이 되어서야 사업대상자가 선정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보령(실집행률 66.7%)의 경우, 사업대상자의 자격 요건에 제약이 있음을 뒤늦게 인지하여 가공품목을 쌀국수에서 증류주로 변경함에 따라 그에 걸맞은 세부 설비 구축이 필요하였으며,

당진(실집행률 66.7%), 곡성(실집행률 77.8%), 남원(실집행률 80%)의 경우에는 설치시설에 대한 성능시험 확인, 가공품 공정 표준화 기술 개발 지연, 사업 담당자의 휴직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2024년으로 예산을 이월하였다고 함.

【 쌀가루 지역 자립형 소비 모델 구축 사업 추진 현황 】

지역	당초 추진 계획	실제 추진 현황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실집행 저조 사유
포항	·2~3월 사업자선정 ·4~5월 행정절차 ·6~11월 시설구축 및 가공제품 개발	·2~9월 사업자 선정 ·10~12월 허가 및 설계 등 행정절차 ·'24년 1~6월 시설 구축 및 가공품개발	450	0	450	-	0	·최초 사업대상자 사업 포기에 따른 사업대상자 재선정('23년 9월)으로 사업추진시기 지연
보령	·2~3월 사업자선정 ·4~5월 행정절차 ·6~11월 시설구축 및 가공제품 개발	·2~3월 사업자선정 ·4~8월 사업계획 재수정(가공품등변경) ·9~11월 입찰 등 행정절차 ·'23. 11월~ '24 5월 시설구축 및 가공제품 개발	450	300	150	-	66.7	·사업 추진방향 변경(가공품목 변경:쌀국수 → 증류주)에 따른 세부 설비 구축 지연
당진	·2월 사업자선정 ·4~5월 행정절차 ·7~10월 시설구축 ·5~10월가공품 개발	·2~3월 사업자선정 ·4~7월 시설 설계 및 입찰 등 ·8~12월 시설 구축 및 가공품 개발 ·'24년 1~4월 성능 시험 및 시설보완	450	300	150	-	66.7	·설치시설에 대한 성능시험 확인 등에 대한 검수로 사업비 일부 미집행
곡성	·2~3월 사업자선정 ·3~6월 행정절차 ·6~9월 시설구축 ·5~11월 가공품개발	·2~3월 사업자선정 ·4~10월 행정절차 ·10~12월 시설구축 ·'24년 1~5월 가공품 개발 등	450	350	100	-	77.8	·가공품 공정 표준화(베이커리, 누룽지 등) 기술 개발 지연에 따른 가공품 개발 사업비 일부 미집행
남원	·2~3월 사업자선정 ·5~6월 입찰등추진 ·5~10월 시설구축 ·7~10월가공품 개발	·2~3월 사업자선정 ·5~10월 입찰 및 가공품 개발추진 ·10~12월 시설구축 ·'24년 1~4월 성능 시험 및 시설보완	450	360	90	-	80	·사업담당자 휴직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

지역	실제 추진 현황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실집행 저조 사유
고창	·2월 사업자선정 ·4~10월 행정절차 및 시설구축 ·5~10월 가공 및 브랜드 개발	450	450	-	-	100	-
충주	·2~3월 사업자선정 ·3~4월 입찰 등 추진 ·4~10월 시설구축 및 가공제품 개발	450	450	-	-	100	-
산청	·2~3월 사업자선정 ·3~5월 행정절차 ·5~7월 시설구축 ·7~9월 제품개발 컨설팅 등	450	450	-	-	100	-

※ 자료: 농촌진흥청

□ 이처럼 쌀가루 지역 자립형 생산·소비모델 구축 사업의 집행 부진 사유 역시 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의 문제와 자격 요건 제약 요인에 대한 검토 부족 등 사업 추진의 기본이 되는 요건을 철저히 점검하지 못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므로 농촌진흥청은 향후 사업 추진 시 사업 대상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자격 요건 점검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 : 농업용 로봇 실증지원 사업의 전반적인 개선 필요

○ 농촌진흥청은 농업용 로봇 실증지원 사업 관련하여 원활한 자율주행 기능을 위한 농업용 로봇의 기능 향상, 로봇 선정 및 구입의 간소화, 안전사고 예방 등 사업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 사업은 지방농촌진흥기관을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및 농업데이터 현장지원기관으로 육성하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의 농업적 활용 거점기반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스마트농업기술 모델을 확산하려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 62억 7,400만원을 편성하여 62억 7,2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을 불용하였음[286].

【 2023회계연도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스마트영농 지원체계구축	6,274	-	-	6,274	6,272	-	2	5,471
-농업용 로봇 실증단지 구축	3,000	-	-	3,000	3,000	-	-	3,000

286)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보조)(2131-306)

(나) 검토의견

□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가 농업·농촌의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AI, Big-data, 5G기술, 로봇 등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도모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가 되었음.

그간 농업분야에서의 디지털기술 확산은 주로 시설농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노지작물 등 농업 전반 및 생활 환경에서도 자동화, 지능화 혁신이 필요한 시점임.

□ 이에 농촌진흥청은 2023년, 농촌진흥청의 R&D를 기반으로 한 농업용 로봇을 재배 전주기에 대하여 실증하기 위한 '농업용 로봇 실증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음.

동 사업을 통해 국내 농업용 로봇의 기술력을 제고하고 현장 확산을 가속화함으로써 농업 부문의 고령화 현상 등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하려는 것임.

□ 사업의 내용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농업용 로봇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전문역량을 보유한 간접보조사업자(비영리기관·단체)와 실증 대상 주산단지의 농업단체를 선정하여 로봇 구축 및 임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용 로봇을 실증하고 보급하는 것임.

【 사업 주체별 주요 역할 】

주요 역할	담당기관	담당기능
기획 기술지원	농촌진흥청	○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배정(국고) ○ 실적점검 및 성과분석 ○ R&D 기반 로봇 기술지원 및 컨설팅
연계지원	도원 및 시군센터	○ 1차 선정지원 및 재배기술 컨설팅 ○ 기반조성 관련 시범사업 추진 ○ 실증 로봇 사업 후 활성화 지원
보조사업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보조사업세부계획 수립 ○ 성과관리기관 및 지원 농업단체 모집 ○ 사업홍보 및 개선 사항 도출 ○ 간접보조사업자, 농업단체 운영관리 및 점검
실증지원	간접보조사업자	○ 작목별 농업용 로봇 구축 및 임대지원 ○ 실증지 운영 및 관리 지원 ○ 로봇 유지·보수 및 사업 후 활용방안 마련
임대운영	지원 농업단체	○ 실증계획 수립 ○ 주산단지별 농업용 로봇 임대 운영 ○ 실증효과 및 개선사항 도출
성과관리	성과관리 전문기관	○ 보조금 관리, 경영·회계 지도 ○ 사업 성과에 대한 결과보고, 만족도 조사 등

※ 자료: 농촌진흥청 <2023 농업용 로봇 실증지원 사업 시행지침>

□ 2023년 농촌진흥청은 농업용 로봇 실증단지 3개소(채소, 벼, 과수)를 구축하기 위하여 30억원(1개소당 사업비 8억 8,000만원, 국비 100%)을 편성·집행하였고, 29억 1,900만원을 집행하고 8,100만원을 불용하여 97.3%의 실집행률을 보였음.

2023년 동 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은 관행작업

대비 작업시간은 10% 감소하고, 생산과 토지효율은 각각 5% 상승하였으며, 경제성과 편의성이 증대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287].

【 2023년 농업용 로봇 실증지원 사업 예산 세부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사업시행 주체 (기관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A)	집행액	교부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재원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예산 현액	집행액 (C)			
계		3,000	3,000	3,000	2,919	3,000	2,919	0	81	97.3
사업 운영	한국농업기술 진흥원	360	360	360	294	360	294	-	66	81.7
채소	대호지농협	880	880	880	867	880	867	-	13	98.5
벼	함양군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880	880	880	878	880	878	-	2	99.8
과수	한국미래농업 연구원	880	880	880	880	880	880	-	-	100

※ 자료: 농촌진흥청

□ 사업운영을 담당하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전문가 협의체 운영, 대상자 선정 평가 및 로봇 입찰, 행사·홍보 등을 추진하였는데 3억 6,000만원의 예산 중 2억 9,400만원을 집행하여 81.7%의 집행률을 보였음.

6,6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로봇관리를 수행할 간접보조사업자와 현장실증을 맡을 농업

287) 한국농업기술진흥원, "'23년 농업용 로봇 실증지원 사업 결과보고", p, 2024.1.

단체를 모집하고 선정하는 데에 4개월, 협약에 1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고, 실증로봇 구입을 위한 조달 절차와 구입 후 장비의 규격, 프로그램, 센서 등을 주산단지에 맞춤형으로 설정하는 데에 약 5달 이상 소요되어 현장실증이 지연되었으며, 이에 따라 교육과 유지보수비용 등이 미집행 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2023년 농업용 로봇 실증단지는 주산단지별로 재배작물(거창: 사과, 당진: 벼, 함양: 양파)을 나누어 구축되었고, 로봇 9종 50대를 포함하여 총 69대를 현장에서 실증하고 보급하였음.

농업용 로봇은 첨단 농기계, 지능형 농기계 및 부착형 농기계를 포함하며, 원격제어가 아닌 자율주행을 기준으로 운반로봇, 방제로봇, 제초로봇, 자율주행 트랙터, 드론 등을 도입·실증하였음.

【 2023년 농업용 로봇 실증지원 사업 도입 로봇의 제원】

제품명	회사명	모델명	사진	구입가 (백만원)
① 방제로봇	주식회사하다	HADA-SR500A		50
	성부산업	궤도형 무인 자율주행 방제기		50
	아세아텍	ES5TW (ASIA-500)		25
② 제초로봇	㈜한국쓰리축	KWR02-2000		44.5
③ 운반로봇	로봇웍스	T-BOT mini		15.2
④ 모니터링로봇	로보로	4륜형 로봇 플랫폼 및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42.2
⑤ 트랙터	LS엠트론	MT7.115-SmarTrek 2.5		150.4
⑥ 조향장치	주식회사하다	HADA-AST200		13.8
⑦ 드론	인투스카이	PREX9-Q20-K2		22.9
⑧ 이앙기	대동	DRP80MA		33.6
⑨ 콤바인	대동	DH6135-A		119

※ 자료: 농촌진흥청

농업용 로봇의 범위는 국산 및 상용화가 가능한 농업용 로봇을 우선 구축대상으로 선정하였고, <2023 농업용 로봇 실증지원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농촌진흥청 기술이전 제품을 우선으로 하되 대체품이 없을 경우 국산제품을 활용하였음.

【 2023년 농업용 로봇 실증지원 사업 추진 현황】

구분	로봇 농작업 모델 경남 거창/과수/사과	디지털 자동화 모델 충남 당진/식량/벼	스마트 기계화 모델 경남 함양/채소/양파
수행 주체	(단체) 거창다축사과연구회 (기관) 한국미래농업연구원	(단체) 해나루방제단 (기관) 대호지농협	(단체) GAP작목반 (기관) 함양군농협조합공동법인
투입 기종	▸로봇 4종 / 20대 ▸운반로봇, 방제로봇, 제초로봇, 모니터링 로봇	▸로봇 5종, 작업기 4종 / 24대 ▸자율주행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조향장치, 드론	▸로봇 3종, 작업기 5종 / 25대 ▸자율주행 트랙터, 드론, 조향장치 등

※ 자료: 농촌진흥청

□ 2023년 신규로 추진된 사업의 추진 경과를 바탕으로 개선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동 사업을 수행한 간접보조사업자의 사업 결과보고서[288]에 따르면, 작물별 3개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문제점은 자율 주행 성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음.

□ 농업용 로봇의 자율주행 기능은 GPS가 제공하는 위치 인식과 그 정확도에 비례하는데, 사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산간

288) 농업용 로봇 실증지원 사업(과수) 결과보고서(2023.12.15.), 농업용 로봇 실증지원 사업(식량) 결과보고서(2023.12.15.), 농업용 로봇 실증지원 사업(채소) 결과보고서(2023.12.15.)

지역 등 지리적 제약으로 인하여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증단지의 경우 통신장애 발생으로 로봇의 원활한 운행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였다고 함.

농촌진흥청은 GPS 수신이 불량하면 통신사에 통신상태 점검 및 보완 요청을 해야하고, 이 과정에서 기지국 설치 등에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경우 간접보조사업자가 자부담하여야 한다고 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은 통신 네트워크 기반조성을 위한 기지국 보강, 실증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실증사업에 활용되는 농업용 로봇의 기능 개선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로봇 도입 단계에서 방제로봇, 제초로봇, 모니터링 로봇 등의 주문과 동시에 제작이 이루어져 장비 도입에 2~4개월이 소요되었고, 이로 인해 농작업에 투입하여 효과성을 검증할 시간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농촌진흥청은 향후 로봇 선정 및 구입의 간소화를 위하여 조달청 혁신시제품[289] 지정 등 행정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289) **<혁신제품 개요**(※출처: 조달청 홈페이지)**>**
- 개념 : ①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된 R&D 결과물, ②상용화 전 시제품, ③기술인정 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되어 조달정책심의회에서 지정된 제품
: 혁신제품은 수의계약 대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이 되고, 각 기관의 구매자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농업용 로봇의 성능 검증 및 연구 환류를 목적으로 실증사업에 도입되는 로봇은 대부분 상용화 제품이 아닌 시제품으로, 농기계 등록 및 인증을 받기 전 제품임.

이로 인해 자율주행 농업기계의 안전사고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실증대상지를 정할 때 경사 등 로봇이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서 적합지를 선정하고, 농업인에 대한 안전 교육을 철저히 실시할 필요가 있음.

구매면책을 통해 보호(「조달사업법」 개정안)
- 혁신제품으로 지정 후, 3년 동안 수의계약 가능
- 종류 : ①유형1(국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인정 혁신제품(구 패스트트랙 Ⅰ,Ⅲ), ②유형2(혁신시제품(舊 패스트트랙Ⅱ)) 으로 구성

6)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 행정절차 이행 기간 단축 및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 필요

○ 꿀벌자원 육성품종 증식장 구축사업은 실집행률이 14%에 그치는 등 사업 추진 실적이 매우 부진하였는 바, 향후 행정절차 이행 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사업 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사업은 농업인이 정부 정책사업(공익직불, 가축분뇨, 친환경, GAP 인증, 잔류농약 분석 등)과 관련하여 영농현장에서 겪는 기술에 대한 어려운 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으로 197억 1,100만원을 편성하여 196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3,200만원을 불용하였음[290].

【 2023회계연도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19,711	-	-	19,711	19,679	-	32	15,668
-기후변화 대응 꿀벌 수급안정 지원	3,600	-	-	3,600	3,600	-	-	5,925

290)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보조)(2231-300)

(나) 검토의견

□ 최근 꿀벌 집단실종·폐사 등으로 농작물 생산량 감소, 먹이사슬 파괴로 인한 생태계 불균형 등 심각한 환경 문제가 우려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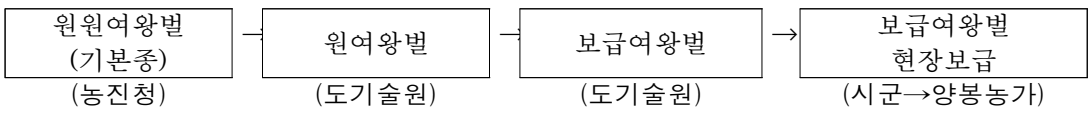
□ 이에 국내에서 우수여왕벌[291] 품종을 육성하여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생산·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농촌진흥청은 2023년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 꿀벌 수급안정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국내에서 개발한 우량 꿀벌 품종(장원벌, 한라벌 등 6종)을 증식·보급하고자 하였음.

해당 사업의 내용은 지자체 보조사업(국비 50%, 지자체 50%)으로 격리도서지역 3개소에 ① 꿀벌자원 육성품종 증식장 ② 인공사육실 등 꿀벌사육사 ③ 인공수정실, 저온실 등의 실험동 등 ICT기반의 스마트 사육시설의 구축을 지원하는 것임.

---

291) 우수여왕벌은 산란능력, 건강한 유전자 및 질병저항성, 번식능력, 생존력 등이 뛰어난 것을 의미하며 또한, 꿀벌의 생산성(벌꿀, 로열젤리, 화분, 프로폴리스 등)과 품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우수여왕벌 보급체계>



□ 그런데 2023년 농촌진흥청이 3개의 격리도서지역(삽시도, 낙월도, 사량도)에 36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한 꿀벌자원 육성품종 증식장 구축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액이 5억원(실집행률 14%)에 그치고 35억 2,200만원을 이월하는 등 사업 추진 실적이 매우 부진하였음.

□ 2023년 사업 추진 경과 및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지 선정에 4~7개월이 소요되고 사업 일정과 규모 등 전반적인 계획을 설정하기 위한 기획용역을 2023년 하반기인 7월~12월에 실시하는 등 전체적인 사업의 일정이 지연되었음.

충남 보령 삽시도의 경우, 2023년 사업 예산 12억원 중 기획용역과 실시설계 비용으로 3억원을 집행(실집행률 25%)하였는데, 당초 선정된 사업부지가 관광지 인근에 위치함에 따라 민원 발생 소지를 감안하여 부지를 변경하였고 지자체 및 도의회의 공유재산심의, 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에 시일이 소요되어 2024년 7월 증식장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함.

전남 영광 낙월도의 경우, 2023년 사업 예산 12억원 중 기획용역과 실시설계 비용으로 1억원을 집행(실집행률 8.3%)하였는데, 사업부지에서 무연고 묘지가 발견되어 묘지 이전 등 추가 행정절차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증식장은

2024년 4월에 이르러서야 착공하게 되었음.

경북 통영 사량도[292]의 경우에도 2023년 사업 예산 12억원 중 기획용역과 실시설계 비용으로 1억원을 집행(실집행률 8.3%)하였는데, 경북 내에 적합 지역이 없어 경남 지역에서 격리도서를 선정하기 위한 협의가 필요하여 사업이 지체되었으며, 증식장은 2024년 4월에 착공하게 되었음.

【 2023년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 구축 사업 추진 현황 】

(단위 : 백만원, %)

지역	당초 추진 계획	실제 추진 현황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충남	사업지 선정('23.3.)	사업지 선정('23.9.)	1,200	300	1,168	-	25%
	기획용역('23.4)	기획용역('23.12)					
	실시설계('23.5)	실시설계('24.3)					
	업체선정('23.10)	업체선정('24.7)					
	착공('23.10)	착공 예정('24.8)					
	준공('23.12)						
전남	사업지 선정('23.3.)	사업지 선정('23.4.)	1,200	100	1,154	-	8.3%
	기획용역('23.4)	기획용역('23.7)					
	실시설계('23.5)	실시설계('23.9)					
	업체선정('23.9)	업체선정('24.4)					
	착공('23.9)	착공('24.4)					
경북	사업지 선정('23.3.)	사업지 선정('23.6.)	1,200	100	1,200	-	8.3%
	기획용역('23.4)	기획용역('23.10)					
	실시설계('23.5)	실시설계('23.12)					
	업체선정('23.11)	업체선정('24.4)					
	착공('23.11)	착공('24.4)					
합 계			3,600	500	3,522	-	13.9%

※ 자료: 농촌진흥청

292) 지자체(경북-경남) 간 업무 협의에 따라 증식장 공동 사용

□ 2023년 이월액의 2024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충남의 경우 2024년 7월 현재까지도 인허가 지연으로 인하여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293],

2024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2개소(전북과 전남 진도)의 경우에도 부지 확보 문제로 인하여 2024년 12월 준공이 예상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여[294] 사업의 기본계획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농촌진흥청은 2023년 예산안 편성 당시, 동 사업의 연내 추진 가능성에 대하여 꿀벌 사육 증식장에 대한 시설 표준도면 등을 갖고 있고, 도별 보유부지를 활용하여 연구기반을 조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토지보상 등의 절차 생략이 가능하여 단년차 사업

293)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당초 충남의 꿀벌 증식장은 2024.7월에 착공 예정이었으나, 인허가 협의과정에서 지자체(보령시, 공주시)로부터 건축물인허가 사항에 대한 경관심의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추가 자료보완 요청이 있어 그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졌음. 8월 초 지자체로부터 인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며, 8월 중으로 착공 예정이라고 함.

294) **【 2024년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 구축 사업 추진(안) 】**

(단위 : 백만원, %)

지역	당초 추진 계획	실제 추진 현황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률	실집행 저조 사유
전북	사업부지확보('24.1~6.)	사업부지확보('24.10.)	1,200	15	1.2	도서지역 사업부지(교육청 폐교부지)선정 지연 ·교육청 부지사용 허가('23. 12.) 및 공유재산심의 완료('24. 5.) 연구소 내 양봉사 증축공사는 설계용역 진행중('24.6.)
	설계용역('24.6~8.)	설계용역('24.6~8.)				
	종합공사발주('24.8.)	종합공사발주('24.8.)				
	공사준공('24.12.)	공사준공('24.12)				
	양봉장비구입('24.6.)	양봉장비구입('24.7.)				
	장비납품완료('24.12.)	장비납품완료('24.12.)				
진도군	사업지 선정	사업지 선정 및 매입('24.7.)	1,200	0	0	도서격리지역(가사도) 활용가능한 사업 부지(군유지) 조사하였으나, 시설 구축을 위한 군유지 부재로 사유지 매입 추진
	기획용역('24.3.)	기획용역('24.7.)				
	실시설계('24.5.)	실시설계('24.8.)				
	업체선정('24.8.)	업체선정('24.10)				
	착공('24.8.)	착공('24.10.)				
	준공('24.12.)	준공('24.12.)				

으로 추진 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음.

또한 해당 사업의 낮은 실집행률의 주요 원인은 꿀벌 증식장을 도서지역에 설치해야 함에 따라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는 과정에 제약 요인이 있었다는 입장임.

□ 그러나 사업의 연속적인 집행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증식장 구축 과정과 절차에 대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업부지 선정에 지자체와의 협의, 공유재산심의, 도의회 승인, 투자심사, 주민협의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간과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음.

□ 한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295]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1차로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

295)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부를 결정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2023년 사업 추진 시 농촌진흥청은 1차 보조금 교부(3월) 후 사업지 선정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시기 등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2차 교부(5월)를 하였는 바,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점검 및 관리 역시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됨.

【 2023년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 지자체별 보조금 교부 일자 】

(단위: 백만원)

지 역	충남	전남	경북
1차 교부('23.3.15.)	700	700	700
2차 교부('23.5.19.)	500	500	500
합 계	1,200	1,200	1,200

※ 자료: 농촌진흥청

□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우수여왕벌의 국가보급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 맞춤형 품종을 증식함으로써 꿀벌 수급을 안정화하려는 동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절차 이행 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사업 계획 수립 시 일정을 현실성 있고 면밀하게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보조금 집행단계에서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보조금을 배정·교부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7)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 :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적정예산 확보 및 농업기상재해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사업 성과 제고 필요

○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지급 부족액을 연례적으로 대규모의 이·전용을 통해 충당해 왔는 바, 검역병해충 발생 추이를 감안하여 손실보상금의 적정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이·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농촌진흥청은 광역단위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개선 필요 사항을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과정에 반영하여 사업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사업은 병해충에 의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지역 여건에 적합한 예찰·방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돌발·외래병해충 방제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병해충 진단실 및 관찰포[296]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액은 437억 8,800만원이고 이·전용 등 20억 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57억 9,100만원인데, 이 중 457억 4,700만원을 집행하고 4,400만원을 불용하였음[297].

296) 농촌진흥청은 지역별 중요 작목(벼, 사과, 고추 등 14종)을 대상으로 농업인이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논, 과수원, 밭 등을 관찰포로 지정(작목·지역별 2~10개, 2,120개), 주기적으로(2~3회/월) 생육(초장, 개화·착과율 등) 및 병해충(112종) 조사하여 수집된 정보를 지자체에 공유(병해충 발생정보), 적기 방제 등 현장기술지원에 활용하고 있음

297)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보조)(2231-301)

【 2023회계연도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농작물병해충예찰 방제사업	43,788	-	2,003	45,791	45,747	-	44	47,671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15,108	-	4,179	19,287	19,287	-	0	15,108
-광역단위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	150	-	-	150	150	-	-	0

(나) 검토의견

(1)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적정 예산 확보를 통한 연례적인 대규모 이·전용 지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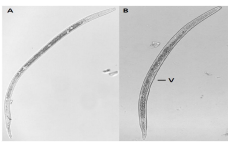
□ 「식물방역법」 제31조제1항[298]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병해충이 퍼져 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나 병해충으로 인하여 농·임산물이나 그 밖의 물품의 수출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병해충을 없애거나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제를 해야 하고, 방제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299]해 주어야 함.

298) **「식물방역법」 제31조(방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처음으로 국내에 유입되었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병해충이 퍼져서 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나 병해충으로 인하여 농·임산물이나 그 밖의 물품의 수출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병해충을 없애거나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의 병해충 방제 등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가 실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99) **「식물방역법」 제38조(손실보상)** ① 국가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제36조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식물의 소유자나 대리인 또는 토지나 토지 및 식물을 빌려 재

□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병해충은 배·사과 과수화상병, 과수가지검은마름병, 씨스트선충, 검역선충 등으로, 농촌진흥청은 방제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과원 소유자 등의 피해 보전을 목적으로 방제 대상 기주식물 소유자나 대리인, 농지 소유주, 임차인 등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300].

【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 병해충 현황 】

구분	병해충명	증상 등 현황	형태 및 증상
세균	과수화상병	○병원체 : Erwinia amylovora(외래종) ○'15년 국내 최초발견(안성) ○식물에 치명적인 세균병으로 잎·꽃·가지·과실 등이 불에 탄 듯 변하다가 식물 전체가 고사 함	
	과수가지 검은마름병	○병원체 : Erwinia pyrifoliae(토착종) ○사과, 배에 피해를 주는 병으로 증상은 화상병과 유사함	
선충	씨스트선충	○'11년 국내 발견(태백) ○식물에 기생하는 해충으로 주로 토양에 존재하여 뿌리 수가 감소 생육 불량, 심하면 고사하게 됨	
	검역선충 (바나나뿌리썩이선충)	○'22년 국내 발견(부천) ○관엽식물(화분)에서 확인	

※ 자료: 농촌진흥청

배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고의나 중과실로제30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제36조에 따른 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00) <2023년 과수화상병 예찰방제사업 지침>에 따르면, 손실보상금은 ① 농작물의 경우 「식물방역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손실보상 범위 등),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결정한 '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보상금액을 산출하거나, 감정평가사에 의뢰하여 감정을 받은 감정액으로 지급하고 ② 방제(매몰 등 폐기) 비용은 기주식물 매몰이나 소각 등에 지출한 실제 비용을 지급하되 상한액과 최소 기본경비를 적용하고 지급함.

□ 최근 4년간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 병해충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2021년은 길고 강한 장마의 영향 등으로 인해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의 피해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나, 2022~2023년 병해충 피해 규모는 다소 줄어든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최근 4년간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 병해충 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 ha)

발생 병해충	2020		2021		2022		2023	
	면적	지급 보상금	면적	지급 보상금	면적	지급 보상금	면적	지급 보상금
과수화상병	395.1	72,785	289.4	48,392	108.2	14,792	111.8	16,235
과수가지 검은마름병	27.4	5,655	2.2	482	0.01	5	0.2	18
(사탕무·클로버) 씨스트선충	97.6	1,264	108.9	1,631	118.1	1,221	199.9	1,965
붉은불개미	-	-	O	61	O	68	-	
검역선충	-	-	-	-	O	62	O	126
합계	**3종 520.1ha**	**79,704**	**4종 400.5ha**	**50,566**	**5종 226.3ha**	**16,148**	**4종 311.9ha**	**18,344**

※ 자료: 농촌진흥청

□ 지난 4년간 손실보상금 예산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과수화상병의 피해 규모 확산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2020년에 83억원을 이·전용하고 621억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으며, 2021년은 115억원을 이·전용 예산으로, 294억원을 예비비로 충당하였음.

2022년과 2023년은 예비비 집행은 없었으나 각각 약 100억원,

42억원을 타 사업 예산을 이·전용하거나 타 내역사업 예산을 내역변경하여 집행하였음.

2023년은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으로 162억 3,500만원, 그 외의 병해충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21억 900만원을 지급하여 총 183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음.

농촌진흥청은 2023년 예산 편성 시 손실보상금 증액을 재정당국에 지속 요청하여 대폭 증액된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 시 본예산 151억 800만원 외에 41억 7,900만원을 이·전용과 내역변경을 통해 집행하였음.

【 최근 4년간 손실보상금 예산 및 집행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본예산	이전용 및 내역변경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잔액
2020	9,588	8,291	62,091	79,970	79,704	266
2021	9,588	11,502	29,486	50,576	50,516	1
2022[301]	7,670	9,955	-	17,625	16,148	1,477
2023	15,108	4,179	-	19,287	18,344	943

※ 자료: 농촌진흥청

301) 2022년부터 국비 보조 비율이 100%에서 국비 80%, 지방비 20%로 조정
-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4조의2(손실보상 범위 등)** ④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지급한다.(2021.12.28. 개정)

□ 특히, 농촌진흥청은 2023년 손실보상금 부족분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작물시험연구, 원예특작연구(R&D), 축산시험연구(R&D) 사업의 공사비 낙찰차액을 이용하였는데,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집행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의 경우에도 설계비·공사비·감리비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용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3년 손실보상금 이용 내역 】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전용액
1132	작물연구	300	작물시험연구(R&D)	420	03	△405
1231	원예특작연구(책임운영)	300	원예특작시험연구(R&D, 책임운영)	420	03	△989
1232	축산연구(책임운영)	300	축산시험연구(R&D, 책임운영)	420	03	△609
2231	기술농업지원(일반)	301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사업(보조)	330	01	2,003
합 계						△2,003 2,003

※ 자료: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23년 10월 손실보상금 확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20억원의 예비비를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세수 결손으로 인한 자금 문제로 예비비 배정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음.

이에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에 관한 사항은 “예산집행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302], 재해대책비의 부족이 생겼을 경우 소관 내 타 비목으로부터 자체 이용할 수 있음[303]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집행지침에 근거하여

예산집행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304] 공사비 낙찰차액으로 손실보상금을 자체 충당하고 사후에 이를 기획재정부에 보고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임.[305]

---

302) 집행지침에 따르면,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에 관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국가재정법**」 **제98조(내부통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관리·재원사용의 적정성과 집행과정에서 보고된 자료의 신빙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예산집행심의회)**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법 제98조에 따른 내부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관계공무원 및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03) **<자체 이용권 위임범위** -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 2023년도 예산총칙에서 정한 아래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소관 내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나’항목 중 공공요금 및 제세, ‘다’ ‘라’ ‘사’ ‘아’ ‘자’ 항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타 비목으로부터 자체 이용할 수 있다.

   가.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나. 공공요금 및 제세, 급식비, 임차료
   다. 배상금, 국선변호금, 법정보상금, 법정포상금(민간)
   라. 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 경비
   마. 국제부담금,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바. 국제유가 변동으로 인한 군 및 해양경찰의 유류경비 부족액
   사. 기업특별회계의 양곡관리비용, 우체국예금 지급이자, 우편운송료
   아. 재해대책비(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자. 반환금
   차. 선거 및 국민투표 관련경비
   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급여, 장애인연금급여, 아동수당

304) 「2023년도 제2차 예산집행심의회 의결」(농촌진흥청 기획재정담당관실-2908, ‘23.12.4.)
305) 「2023년도 세출예산 자체이용 보고」(농촌진흥청 기획재정담당관실-2929, ‘23.12.7.)

□ 그러나 「2023년도 농촌진흥청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 따르면 이들 사업의 공사비는 노후시설 개·보수, 연구 및 기반시설의 신축·개선·현대화에 집행하도록 편성되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연구개발의 성과 제고를 뒷받침해야 할 기반시설 신축·개선 예산을 손실보상금의 부족분으로 대규모 집행하는 것은 국회에서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과도한 사업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향후 주의가 필요함.

□ 한편,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 사업 내 내역사업인 ‘과수화상병 전염원 사전제거’ 사업은 과수화상병 병원균이 잠복하고 있는 미발생 과원을 사전에 폐원하는 등 선제적으로 확산을 차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2022년부터 시행되었음.

2022년과 2023년은 화상병 발생 예상 면적의 30%를 감안하여 각각 53억 6,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22년은 36.4%, 2023년은 59.4%의 집행률에 그쳤는 바, 두 해 모두 손실보상금의 부족분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사전제거 사업의 불용액을 내역변경하여 집행하였음.

그런데 내역변경 금액이 각각 34억원, 22억원에 이르러 당초 과수화상병 전염원 사전제거를 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내역변경이라고 판단됨.

【 2022~2023 과수화상병 전염원 사전제거 사업 예산 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	본예산	내역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2022	5,362	△3,395	1,967	1,950	36.4%
2023	5,362	△2,176	3,186	3,186	59.4%

※ 자료: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의 발생 예측이 어려워 손실보상금의 부족분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발생하였고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타 사업의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내역변경 등 가용 가능한 예산을 최대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임.

□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은 당해연도 기상, 전염원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의 정도가 달라 병해충 발생 피해 정도와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고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나, 연례적으로 대규모의 이·전용과 내역변경을 통해 부족 예산을 충당하는 방식은 다른 사업의 당초 계획을 추진하고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

특히 거시적인 정책방향이 반영되어 있는 프로그램별 재원배분을

변경하는 대규모의 이·전용은 예산심의를 통하여 국회가 결정한 정책결정을 행정부가 임의로 수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음.

□ 향후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등 검역병해충 발생추이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적정예산을 확보하고,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하여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 예비비 편성을 우선 고려함으로써 「국가재정법」 제45조[306]에서 규정하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306) **「국가재정법」 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2) 광역단위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 성과 제고 필요

□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 사업의 내역사업인 광역단위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 사업은 광역(도)단위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2023년 1개소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억 5,000만원(국비 50%)이 편성·집행되었음.

□ 조기경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작물 40종, 기상 11종, 재해 15종에 대한 재해대응 지침(사전·즉시·사후)으로, 농장을 900제곱미터 단위로 나눠 지형에 따른 기상 특성과 작물별 특성을 분석해, 고온해·저온해·풍해·수해·일조부족 등 기상재해 발생 위험 여부를 농장주에게 인터넷과 모바일(문자, 웹, 알림톡)로 알려주어 작물별로 재해 사전예방과 농작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307].

□ 농촌진흥청은 2023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1억 5,000만원을 두 차례(2023년 3월과 4월)에 걸쳐 경상남도에 교부하였으나, 경남 도농업기술원은 이 중 1,5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억 3,500만원을 이월하여 10%의 낮은 실집행률을 보였음.

307) 온도 관련 기상·재해는 최대 9일까지, 그 외는 3일까지 예측정보 제공

【 2018~2023 광역단위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 예산 및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연도	광 역	예산현행	실집행액	비 고
2018 ~2019	전라북도	180	180	완료(출연금 연구과제) * 작부체계 및 위험관리체계 DB화
2022	전라남도	150	150	완료(데이터 시스템 구축 등) * 가상서버 클라우드, H/W 및 S/W도입
2023	경상남도	150	10	이월 135 불용 5(기상관측장비 구입 차액)

※ 자료: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사업 추진 방식 및 예산과목의 변경에 따른 사업의 지연으로 2023년 사업비가 이월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당초 경상남도는 동 사업을 서버 구축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2023년 9월 시작된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과의 정보화 사업 추진 협의에 시일이 소요되어 2023년 11월이 되어서야 서버 구축 방식이 아닌 클라우드[308] 구축 방식으로 변경할 것이 결정되었음.

또한 경상남도는 당초 동 사업 예산 편성 시 지방자치단체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에 사용하는 '연구용역비'로 예산과목을 설정하였는데,

308)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민간 기업이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하여 상용(商用)으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의미하는데, 이는 민간의 고품질서비스, 안전한 서비스 및 첨단 서비스를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혁신을 추진하려는 것임.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절차 진행 중 예산과목 설정이 잘못된 것을 파악한 후 2회 추경예산('23.6.)에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전산 개발비'와 '공공운영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음.

□ 이같은 2023년 경상남도의 사업 부진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농촌진흥청은 사업관리 시 관련 제도의 변경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사업 운영에 적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됨.

□ 행정안전부는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309]를 제정('22.3.31 제정)하였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 클라우드 기반을 우선 적용할 것을 의무화하였음.

해당 고시에 따라 2022년 전라남도의 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은 이미 클라우드 방식으로 구축한 바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농촌진흥청은 2023년 경상남도의 사업 추진 시 기획 단계에서 사업의 성격과 추진 방향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이 원활할

309)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제4조(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우선 검토)** 행정기관등의 장이 신규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운영·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교체할 때는 보안성, 안정성, 확장성 및 비용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수 있도록 지원하였어야 함.

□ 또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310]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1차로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농촌진흥청은 1차 보조금 교부(3월 15일, 9,000만원 교부) 후 시스템 구축 방식이 결정되지 않아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2차로 보조금을 교부(4월 25일, 6,000만원 교부)하였는데,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점검 및 관리 역시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동 사업은 농업기상재해 경보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농장 단위 상세 기상 정보 및 작물재해 예측정보·대응지침을 인터넷과

---

310)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모바일로 서비스하고 있는데[311], 2024년을 기준으로 전체 농가 대비 누적 조기경보 수신 신청 비율이 평균 6.6%에 불과하여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조기경보 서비스 수신 신청 현황 】

('24.5.20 기준)

행정구역	가입 농가수	전체 농가(통계청, 2020)	비고(가입률%)
전라북도	9,202	93,305	9.8
전라남도	8,561	113,669	7.5
경상남도	2,642	109,551	2.4
계	**20,405**	**316,525**	**6.6**

* 75개 시·군(전북14, 전남17, 경남16, 경북18, 충북5, 충남2, 경기2, 강원1), ('24년, 110시군 확대 예정)

□ 2018~2019년 연구 과제 방식으로 동 사업을 수행한 전라북도의 경우 전체 농가 대비 9.8%의 농가가 조기경보 서비스 가입을 신청하였고, 2022년 사업 대상 지역이었던 전라남도와 2023년 사업 대상 지역이었던 경상남도는 각각 7.5%, 2.4%의 농가만이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농촌진흥청은 이같은 낮은 성과가 나타난 이유에 대하여 조기경보 서비스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직접 서면

311)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24년 5월 기준, 전국 75개 시·군 농업인들에게 작물 40종의 생육 단계별 기상재해 예보와 농장 단위의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서비스 대상을 155개 시군으로 늘리고, 작목은 2027년까지 50종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함
※ 75개 시·군 : 전북 14(고창, 무주, 장수 등), 전남 17(광양, 순천, 해남 등), 경남 16(하동, 함양 등), 경북 18(의성, 상주, 안동 등), 충북 5(괴산, 음성 등), 충남 2(천안, 아산), 경기 2(안성, 평택), 강원 1(영월)

작성[312]·제출 등 가입 절차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입장으로, 2023년 서비스 신청을 모바일앱, 웹페이지의 경로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가입률 제고에 노력하였다고 함.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농업경영주[313] 중 60대 이상의 농업경영주의 비율이 82%에 달하고[314], 이들의 웹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비스 수신 신청률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광역별 농업인 대상 현장설명회 개최, 농업인의 생활과 교육 분야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민간·공공 플랫폼(농협,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과 연계한 적극적인 홍보 등 농가의

312) 농장단위 기상재해 예측 정보를 받고 싶은 농업인은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필지 주소, 재배 작목, 인적 사항 등을 적어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거주지 시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또는 농촌진흥청 기후변화평가과에 제출하거나 모바일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음.

313) "농업경영주"란, 농업경영체에 경영주로 등록된 사람을 의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 4.~8. (생 략)

314) < **최근 4년간 농업경영주 연령별 통계현황** (단위: 명)>

구분	39세미만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전체
2020	12,426	61,974	202,331	347,714	410,748	1,035,193
2021	8,477	49,683	175,386	357,003	440,659	1,031,210
2022	7,036	41,536	158,146	350,824	465,254	1,022,797
2023	5,439	32,862	141,421	341,976	477,323	999,022

※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자료(2023년까지 발표)

조기경보 서비스 신청 및 이용률 확대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임.

□ 한편, 동 내역사업은 2023년 종료되고 2024년에 ‘중앙-지방 연계 기상재해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광역단위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과 농촌진흥청의 통합관제를 결합하려는 것임.

농촌진흥청은 통합관제 시스템이 구축되면, 지방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광역단위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을 하지 못한 지역의 경우에도 중앙에서 신속하게 농업기상재해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임.

농촌진흥청은 광역단위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개선 필요 사항을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과정에 반영하는 한편, 농업인들에게 통합관제시스템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8) 농업전문인력양성 : 구축된 협업기반의 다양한 활용방안 강구 필요

○ 청년농업인 협업기반 조성 사업 결과로 마련된 협업공간 및 시설의 활용 실적이 매우 저조하므로 기 조성된 협업기반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비청년농업인과 일반농업인 등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농업전문인력양성 사업은 농업·농촌 변화에 대응하는 전문 농업인력을 양성하고, 청년농업인 기술성장을 위한 맞춤형 창업 교육 및 기술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으로 155억 7,000만원을 편성하여 155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 4,100만원을 불용하였음[315].

【 2023회계연도 농업전문인력양성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농업전문인력양성	15,570	-	-	15,570	15,529	-	41	6,363

315)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농업전문인력양성(2431-300)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청년농업인[316] 협업모델 시범구축 사업은 청년 커뮤니티, 공간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불안정한 영농초기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내 청년 커뮤니티 협업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협업기반 조성', 선도농가 농장의 기술 전수를 지원하는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청년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청년농업인 창농 활성화 지원'의 3개 내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3회계연도 청년농업인 협업모델 시범구축 결산 】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	사업 내용	'23	
		예산액	집행액
청년농업인 협업모델 시범구축	·청년농업인 협업기반 조성 (라이브커머스 공간,창업보육 공간)	300	229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선도농가 농장 모델링, 기술전수 등)	800	800
	·청년농업인 창농 활성화 지원 (청년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 운영)	200	200
합 계		1,300	1,229

※ 자료: 농촌진흥청

316)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청년농어업인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에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나이가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이 중 청년농업인 협업기반 조성 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협업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2년과 2023년 총 6개소의 시군농업기술센터에 각 1억원의 예산으로 사무실 리모델링과 라이브커머스 공간·창업보육 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방송장비 및 시제품개발 전문장비 등을 지원하였음.

□ 2023년은 충북 음성, 경북 영덕, 전남 강진에 협업기반을 조성하였는데, 전남 강진의 경우 협업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조직배양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 시기가 지연되었고, 그로 인하여 장비 구입 비용을 이월함으로써 34%의 부진한 집행률을 보였으며, 2024년 7월 현재 장비 변경으로 인한 계약 연장이 이루어져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상황임.

【 2022~2023년 청년농업인 협업기반 조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	도	시군	규모(㎡)	준공	주요시설	예산 편성 및 집행액	
						편성액	집행액
2022	강원	평창	98.23	'22.12월	커뮤니티룸, 라이브커머스 방송설비, 정보화실, 청년 소회의실 조성	100	94.4
	충남	서산	131	'22.12월	휴게공간, 스튜디오, 청년 소회의실 등	100	83.5
	전북	익산	120	'22.12월	창업보육센터, 라이브 스튜디오, 방송 설비 등	100	100
2023	충북	음성	160	'23.8월	라이브커머스 방송시설, 오픈형 네트워킹, 농업인 상담실 및 농촌지도사업 홍보시설	100	99.9
	경북	영덕	114.73	'23.12월	라이브커머스 방송시설, 오픈형 네트워킹	100	95.7
	전남	강진	59.85	'24.6월 (예정)	라이브커머스 방송시설 및 사무실, 청년 회의실 등	100	34

※ 자료: 농촌진흥청

□ 한편, 동 사업의 결과로 마련된 협업공간 및 시설 활용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구축 완료된 평창과 서산의 경우 2024년 6월 현재까지 제품개발 실적이 없고 라이브 커머스는 2~3회 실시하는 데 그쳤음.

익산의 경우 라이브 커머스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였고, 3개소의 라이브 커머스 촬영 교육 및 기자재 활용 교육 인원도 2년여간 35명~60명에 머무르는 등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2023년 8월 구축한 충북 음성의 경우 2024년 7월 현재까지

라이브 커머스 실적이 없고 제품개발과 회의 실적이 없으며, 경북 영덕의 경우에도 제품개발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22~2023년 청년농업인 협업기반 및 시설 활용 실적 】

연도	도	시군	주요내용				
			제품개발	라이브 커머스	교육	회의	모임체 활동
'22	강원	평창	-	3회	5회(40명)	8회(30명)	청년/민간단체4-H 활동(수시)
	충남	서산	-	2회	6회(60명)	3회(33명)	
	전북	익산	2건	-	7회(35명)	5회(76명)	
'23	충북	음성	-	-	2회(45명)	-	
	경북	영덕	-	3회	3회(40명)	12회, 40명	
	전남	강진	이월에 따른 실적 없음('24.6월 준공예정)				

※ 자료: 농촌진흥청

□ 동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농 육성 사업과의 유사·중복을 이유로 2023년을 끝으로 종료되었음.

【 2023년 이후 중단된 농촌진흥청의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 】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2022			2023			2024
		예산	결산	집행률	예산	결산	집행률	예산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청년농업인의 기술·경영상태 진단·분석 후 컨설팅 서비스 제공	450	422	93.8	450	331	73.5	0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사업	신기술+아이디어 사업으로 역량개발·기술교육·집중 컨설팅 실시	3,600	3,299	91.6	3,600	2,975	82.6	0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2022			2023			2024
		예산	결산	집행률	예산	결산	집행률	예산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정착초기 청년농업인의 영농 시행착오를 선도농가 연계 기술지원으로 최소화	800	719	89.8	800	800	100	0
청년농업인 협업기반 조성	청년농업인들간 협업공간의 공동체 활동을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	300	278	92.7	300	229	76.3	0

※ 자료: 농촌진흥청

그러나 시·도농업기술센터에 기 조성된 협업기반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함으로써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사업 대상자가 청년농으로 한정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해당 시·군의 청년농업인 외에 대학생, 귀농귀촌 예정자 등 예비청년농업인과 일반농업인들도 협업기반 공간과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 활용성을 제고하는 한편, 농업분야 청년 유입과 정착, 청년농업인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인접 시·군의 청년농 등에게도 공간과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업의 취지를 이어가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최근 5년간 농업경영주 연령별 통계현황 】

(단위: 명)

구분	39세미만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전체
2019년	6,859	45,192	169,863	323,712	461,531	1,007,158
2020년	12,426	61,974	202,331	347,714	410,748	1,035,193
2021년	8,477	49,683	175,386	357,003	440,659	1,031,210
2022년	7,036	41,536	158,146	350,824	465,254	1,022,797
2023년	5,439	32,862	141,421	341,976	477,323	999,022

※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자료(2023년까지 발표)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가. 개 요

1) 세입결산

□ 당초 재산수입 3,400만원, 경상이전수입 12억 6,1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징수결정액은 경상이전수입 감소 등으로 3억 9,100만원 감소한 9억 400만원이 되었음.

□ 징수결정액 중 재산수입 1,300만원, 경상이전수입 8억 3,400만원이 수납되고, 경상이전수입 5,7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 2023년도 농특회계 세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대비 수납증감 (B-A)
계	1,295	904	847	-	△57	△448
○ 재산수입	34	13	13	-	-	△21
- 기타재산이자수입	34	13	13	-	-	△21
○ 경상이전수입	1,261	891	834	-	△57	△427
- 위약금	-	74	74	-	-	74
- 기타경상이전수입	1,261	817	760	-	△57	△501

※ 자료: 농촌진흥청

2) 세출결산

□ 당초 예산액은 227억 7,700만원으로, 이 중 226억 9,100만원(99.6%)이 지출되고, 8,600만원이(0.4%)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농특회계 세출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 이월액	불용액
		전년 이월	예비비	전용	이용				
계	22,777	-	-	-	-	22,777	22,691	-	86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	17,298	-	-	-	-	17,298	17,298	-	-
○현장실용화농업기술	17,298	-	-	-	-	17,298	17,298	-	-
<지역농업특성화>	2,088	-	-	-	-	2,088	2,080	-	8
○농촌생활활력증진	2,088	-	-	-	-	2,088	2,080	-	8
<전문인력양성>	2,156	-	-	-	-	2,156	2,155	-	1
○영농기계화촉진	2,156	-	-	-	-	2,156	2,155	-	1
<기관운영 및 사업 지원>	1,235	-	-	-	-	1,235	1,158	-	77
○고객현장지원	1,235	-	-	-	-	1,235	1,158	-	77

※ 자료: 농촌진흥청

3.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가. 개 요

1) 세입결산

□ 당초 세입예산을 미편성하였고 실제 징수결정액도 없었음.

□ 세입 수납액은 재산수입(토지대여료) 총 8만 3천원임.

【 2023년도 혁특회계 세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대비 수납증감 (B-A)
계	-	-	0.1	-	-	-
○ 재산수입	-		0.1	-	-	-
- 토지대여료	-		0.1	-	-	-

※ 자료: 농촌진흥청

2) 세출결산 : 없 음

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가. 개 요

1) 세입결산

□ 당초 재산수입 4,800만원, 경상이전수입 21억 4,2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징수결정액은 경상이전수입 감소 등으로 16억 8,300만원 감소한 5억 700만원이 되었음.

□ 징수결정액 중 재산수입 200만원, 경상이전수입 2억 8,300만원이 수납되고, 경상이전수입 2억 2,2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 2023년도 지특회계 세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대비 수납증감 (B-A)
계	2,190	507	285	-	△222	△1,905
○ 재산수입	48	2	2	-	-	△46
- 기타재산이자수입	48	2	2	-	-	△46
○ 경상이전수입	2,142	505	283	-	△222	△1,859
- 기타경상이전수입	2,142	505	283	-	△222	△1,859

※ 자료: 농촌진흥청

2) 세출결산

□ 예산현액은 804억 7,500만원으로, 이 중 804억 5,200만원(99.97%)이 지출되고, 2,300만원(0.03%)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지특회계 세출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이월액	불용액
		전년이월	예비비	전용	이용				
계	80,475	-	-	-	-	80,475	80,452	-	23
지역자율계정	53,696	-	-	-	-	53,696	53,696	-	-
<지역농업특성화>	53,696	-	-	-	-	53,696	53,696	-	-
○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	53,696	-	-	-	-	53,696	53,696	-	-
지역지원계정	25,058	-	-	-	-	25,058	25,035	-	23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	17,219	-	-	-	-	17,219	17,205	-	14
○지역농업연구기반 및전략작목육성	17,219	-	-	-	-	17,219	17,205	-	14
<지역농업특성화>	7,839	-	-	-	-	7,839	7,830	-	9
○농식품 가공체험기술보급	7,839	-	-	-	-	7,839	7,830	-	9
제주특별자치도계정	1,721	-	-	-	-	1,721	1,721	-	-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	981	-	-	-	-	981	981	-	-
○지역농업연구기반 및전략작목육성	981	-	-	-	-	981	981	-	-
<지역농업특성화>	740	-	-	-	-	740	740	-	-
○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	650	-	-	-	-	650	650	-	-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 이월액	불용액
		전년 이월	예비비	전용	이용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	90	-	-	-	-	90	90	-	-

※ 자료: 농촌진흥청